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1/4년차):

한반도 평화 연구(2):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구축: 평화의 심리학

KINU 연구총서 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 김갑식 · 이민규 · 최훈석 · 박형인 · 현인애 · 권영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1/4년차):

KINU 연구총서 18-01

한반도 평화 연구(2):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구축: 평화의 심리학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연구책임자: 박주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형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초빙교수)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1/4년차):

한반도 평화 연구(2):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구축: 평화의 심리학 KINU 연구총서 18-01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저자 박주화, 김갑식, 이민규, 최훈석, 박형인, 현인애, 권영미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8-89-8479-935-6 93340
가격 19,0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 약	17
I. 서론 박주화	2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2. 분단의 심리: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을 중심으로	35
3. 평화의 심리: 화해(reconciliation)를 중심으로	46
4. 평화의 심리: 지속가능한 평화를 중심으로	54
5. 설문의 구성	59
6. 조사의 기본설계	82
II. 평화,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남북화해에 관한 태도 김갑식·박주화	83
1. 평화에 대한 표상	85
2. 한반도 평화와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개관	99
3.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114

4.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124
5.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문항별 분석	132
6. 화해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154
7.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81
III. 심층 분석: 남한주민을 중심으로 박형인·권영미·최훈석	189
1. 평화와 전쟁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우익권위주의를 중심으로	191
2.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226
3. 남북 화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문화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283
IV. 심층 분석: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이민규·현인에	325
1. 성격유형에 따른 평화와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 탐색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비교	327
2.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평화, 전쟁, 통일의식에 주는 영향 ...	384
V. 결론 박주화	405
참고문헌	420
최근 발간자료 안내	441

표 차례

〈표 II-1〉 남한주민이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비율과 빈도	86
〈표 II-2〉 북한이탈주민이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비율과 빈도	86
〈표 II-3〉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순위	89
〈표 II-4〉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2+3순위	90
〈표 II-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순위	91
〈표 II-6〉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2+3순위	91
〈표 II-7〉 평화와 연관된 단어의 범주화 결과	92
〈표 II-8〉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순위	94
〈표 II-9〉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2+3순위	95
〈표 II-10〉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순위	96
〈표 II-11〉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2+3순위	96
〈표 II-12〉 한반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3
〈표 II-13〉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7
〈표 II-14〉 화해, 제로섬 인식, 피해자 인식, 용서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10
〈표 II-1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15
〈표 II-1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16
〈표 II-1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18

〈표 II-4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58
〈표 II-4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0
〈표 II-4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1
〈표 II-4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3
〈표 II-4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4
〈표 II-5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5
〈표 II-5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7
〈표 II-52〉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8
〈표 II-53〉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69
〈표 II-5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1
〈표 II-5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2
〈표 II-5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3
〈표 II-5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5
〈표 II-5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6
〈표 II-5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7
〈표 II-6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79
〈표 II-6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180
〈표 III-1〉 평화/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8
〈표 III-2〉 성격 5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02
〈표 III-3〉 공감적 관심의 평균 및 표준편차	204
〈표 III-4〉 우익권위주의의 평균 및 표준편차	207
〈표 III-5〉 평화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210
〈표 III-6〉 전쟁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218
〈표 III-7〉 군사력/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246
〈표 III-8〉 사회지배경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249
〈표 III-9〉 북한에 대한 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1
〈표 III-10〉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2

〈표 Ⅲ-11〉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3
〈표 Ⅲ-12〉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5
〈표 Ⅲ-13〉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의 집단 별 평균 및 표준편차	256
〈표 Ⅲ-14〉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259
〈표 Ⅲ-1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및 국력 가치를 조합한 네 집단에서의 사회지배경향성 평균	261
〈표 Ⅲ-1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264
〈표 Ⅲ-17〉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266
〈표 Ⅲ-18〉 군사력/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268
〈표 Ⅲ-19〉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의 조합: 집단 별 군사력/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270
〈표 Ⅲ-20〉 남북 간 화해에 대한 인식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1
〈표 Ⅲ-21〉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의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2
〈표 Ⅲ-22〉 한민족 정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4
〈표 Ⅲ-23〉 남한 정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5
〈표 Ⅲ-24〉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5
〈표 Ⅲ-25〉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6
〈표 Ⅲ-26〉 가치지향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8
〈표 Ⅲ-27〉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	299
〈표 Ⅲ-28〉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 분류	300
〈표 Ⅲ-29〉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305
〈표 Ⅲ-30〉 남북화해 행동의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307
〈표 Ⅳ-1〉 북한이탈주민의 군집별 성격 5요인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336
〈표 Ⅳ-2〉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37
〈표 Ⅳ-3〉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38

〈표 IV-4〉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39
〈표 IV-5〉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41
〈표 IV-6〉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통일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42
〈표 IV-7〉 남한주민의 군집별 성격 5요인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345
〈표 IV-8〉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46
〈표 IV-9〉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47
〈표 IV-10〉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49
〈표 IV-11〉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51
〈표 IV-12〉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352
〈표 IV-1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차이	355
〈표 IV-14〉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356
〈표 IV-15〉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357
〈표 IV-16〉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359
〈표 IV-1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359
〈표 IV-18〉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차이	361

〈표 IV-1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362
〈표 IV-2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362
〈표 IV-21〉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364
〈표 IV-22〉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통일에 대한 태도 차이	365
〈표 IV-23〉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성격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요약	366
〈표 IV-24〉 남한주민 집단에서 성격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요약	370
〈표 IV-25〉 남북 최상형 성격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요약	376
〈표 IV-26〉 남북 평범형 성격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요약	379
〈표 IV-2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우익권위주의 성향 비교	389
〈표 IV-28〉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390
〈표 IV-29〉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 비교	392
〈표 IV-30〉 사회지배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93
〈표 IV-3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북한 인식 비교	395
〈표 IV-3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북한 이미지 비교	395
〈표 IV-33〉 북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	396
〈표 IV-34〉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 비교	397
〈표 IV-3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일외지 비교	398
〈표 IV-36〉 우익권위주의와 북한 남북관계 인식	399
〈표 IV-37〉 우익권위주의가 전쟁 평화인식과 방법에 주는 영향	400
〈표 IV-38〉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통일외지의 관계	401
〈표 IV-3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이 평화와 전쟁에 주는 영향	401

그림 차례

〈그림 Ⅰ-1〉 조사의 이론적 틀	33
〈그림 Ⅰ-2〉 설문조사 문항의 개념	34
〈그림 Ⅱ-1〉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2
〈그림 Ⅱ-2〉 한반도 전쟁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3
〈그림 Ⅱ-3〉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6
〈그림 Ⅱ-4〉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6
〈그림 Ⅱ-5〉 화해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09
〈그림 Ⅱ-6〉 남북관계를 제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12
〈그림 Ⅱ-7〉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12
〈그림 Ⅱ-8〉 용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113
〈그림 Ⅱ-9〉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14
〈그림 Ⅱ-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에 동의/ 비동의를한 비율	116
〈그림 Ⅱ-11〉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18
〈그림 Ⅱ-12〉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19
〈그림 Ⅱ-13〉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21
〈그림 Ⅱ-14〉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22
〈그림 Ⅱ-15〉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에 동의/ 비동의를한 비율	124

〈그림 II -16〉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25
〈그림 II -17〉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27
〈그림 II -18〉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28
〈그림 II -19〉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0
〈그림 II -20〉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1
〈그림 II -21〉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3
〈그림 II -2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4
〈그림 II -2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5
〈그림 II -2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7
〈그림 II -25〉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8
〈그림 II -26〉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39
〈그림 II -27〉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1
〈그림 II -28〉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2
〈그림 II -29〉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4
〈그림 II -30〉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5

〈그림 II -31〉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6
〈그림 II -32〉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8
〈그림 II -33〉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49
〈그림 II -34〉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0
〈그림 II -3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2
〈그림 II -36〉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3
〈그림 II -3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이미지	154
〈그림 II -38〉 2014년 이후 남한주민의 북한 이미지 변화 추이	155
〈그림 II -39〉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대부분 북한에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7
〈그림 II -40〉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8
〈그림 II -41〉 '북한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59
〈그림 II -42〉 '북한은 남한을 해하려 하는 존재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1
〈그림 II -43〉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2
〈그림 II -44〉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4
〈그림 II -45〉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배려한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5
〈그림 II -46〉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6
〈그림 II -47〉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168

〈그림 II-48〉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피해자이다'에 동의/ 비동의를한 비율	169
〈그림 II-49〉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0
〈그림 II-50〉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과 고통)가 북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2
〈그림 II-51〉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misdeed)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3
〈그림 II-52〉 '나에게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값음 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동의/ 비동의를한 비율	174
〈그림 II-53〉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6
〈그림 II-54〉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7
〈그림 II-55〉 '남북 간의 화합은 의미가 없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78
〈그림 II-56〉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180
〈그림 III-1〉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214
〈그림 III-2〉 성실성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220
〈그림 III-3〉 군사력/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응답 분포	247
〈그림 III-4〉 사회지배경향성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간의 이중매개모형	273
〈그림 III-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간의 이중매개모형 ...	276
〈그림 III-6〉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사회정체성,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경로분석	310
〈그림 III-7〉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남북화해 태도, 행동의도 간 매개경로에서 자기개념에 따른 조절효과	317
〈그림 IV-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연령별 우익권위주의 비교	391
〈그림 IV-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연령별 평등주의 성향 비교	393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 지향성,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심리적 정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 연구를 바탕으로 ‘분단의 심리’를 탐색하고, ‘분단의 심리’의 전환을 위해 ‘화해(reconciliation)의 심리’와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틀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심리’를 탐색하였다.

고질화된 분쟁에 사는 개인들은 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종의 심리적 적응기제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기제의 특징, 즉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는 내집단의 목표가 정당하다는 신념,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보에 대한 강조,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우월적 의식, 피해자 의식, 적대 집단의 인간성을 부정, 국가에 대한 애정, 충성, 희생을 강조, 집단의 결속을 강조, 집단의 최종적 목표로서 평화를 설정하는 것이다. 고질화된 갈등 하에서의 평화는 일상과 유리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평화이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성취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고질화된 분쟁의 해결의 핵심은 화해이다. 화해는 정치적, 제도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 이후 과거 적대적 집단 간 새로운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평화적 관계의 지속에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고질화된 분쟁 사회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화 지향성과 화해를 위한 심리적 지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이 평화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본 단어연합과제의 분석 결과와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인들이 고질적인 분쟁 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비둘기가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이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였다. 남한주민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관계,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관계, 폭력, 폭력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관계,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물리적 안정, 상징, 폭력의 부재, 폭력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평화는 비둘기라는 인식은 우리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것이다. 평화를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갈등이 고질화, 일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본 연구는 평화에 대한 표상과 더불어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역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평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소 놀라운 결과는 평화에 대한 태도,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평화 지향성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평화를 피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상한다는 단어연합과제 결과를 고려한다면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평화에 대한 태도를 ‘평화맹(平和盲)’이라고 지칭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한반도 차원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심리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를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 지표인 제로섬 관계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강했다. 남북관계에서 누가 더 피해자인가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모두 남한주민이 더 큰 피해자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화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아직까지는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한 인식 변화, 나에 대한 인식 변화,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준점으로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화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격, 타인 지향적인 정서와 불행한 사람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 그리고 수직적 관계, 권력에 의한 강제적 문제 해결 경향성, 관용에 대한 저항 경향성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평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의 평화에 대한 태도와 효과가 공감적 관심에 따라 달라졌다. 공감적 관심이 낮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아졌지만, 공감적 관심이 높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으며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성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다. 그 외에도,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협력을 통한 방식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응답자들의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인 반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남한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강했으며,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우세할수록,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개념이 조합되었을 때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넷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성격유형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와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분단 유지에 대한 태도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같은 성격유형이라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가 관찰된 것은 출신 지역과 성격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질화된 분쟁 개념에 기반을 둔 평화 담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질화된 분쟁이 말하는 평화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다. 고질화된 분쟁 속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과 같은 기존의 평화 담론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적극적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평화맹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평화를 이해하는 폭이 좁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평화를 남북관계에 투영하여 생각해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대부

분이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의식에 기반을 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생각해야만 하는(should) 평화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평화 담론과 관련된 또 다른 함의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 남북화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성경향성, 가치, 우익권위주의, 남한 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성격까지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선천적 기질이라고 여겨지는 성격조차도 평화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소 과장하자면 평화인식조차도 선천적인 것인가? 평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평화 담론의 폭과 깊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단순히 교과과정의 개편 혹은 증편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유토피아적, 상징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은 분단과 6·25 전쟁이 야기한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한국사회가 평화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갈등과 폭력에 대한 교육이다.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화교육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따라서 고질적인 분쟁을 넘어 극히 고질적인 분쟁 사회인 한국의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쟁과 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평화의 편익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현재 한국 평화교육의 과제는 한국사회가 갈등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상징으로서의 평화를 생활로서의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우리 삶에 내재된,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분단의 폭력들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이다. 평화교육이 자칫 불편하고 거북한 교육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함의는 평화교육은 안보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유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고려한다면 우리 국민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의 대체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군사력은 무엇인지,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군비경쟁의 속성에 대해 열린 토론을 요청한다. 동시에 군축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세 번째 함의는 평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대상은 20대와 30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였다.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근거는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혹은 인식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은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사회 전반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전생애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평화 담론을 형성·확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통일·평화교육센터의 설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통일·평화교육센터는 한반도 평화 담론과 평화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화 등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의 연관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 담론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평화교육은 그 기반이 취약하다. 정부, 학교교육, 시민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다양성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관성의 부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평화교육의 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다.

평화교육의 핵심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통일·평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의사소통 체계 속에서 평화교육 행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개정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9월 14일 시행)에 따라 공무원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기존의 학교 중심의 통일교육이 성인 대상 교육으로 확장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누구나 이수할 수 있는 평화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을 이수한 시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통일·평화교육의 제도적 확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교육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교육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과 더불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평화교육 이론 및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평화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주제어: 평화인식, 전쟁인식,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 고질화된 분쟁, 평화교육

Abstract

The Psychology of Peace: Korean's Perception on Peace

Park, Juhwa et al.

This study aims to reveal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orientation to peace and psychological attitudes to new inter-Korean ties. Authors adopted the intractable conflict theory to assess the Korean society at the moment.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culture and mindset surrounding the division of Kore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ractable conflicts according to the theory. In a bid to facilitate transforming the divided society's culture and mindset to those of a peaceful one, the authors focused on the psychology of reconciliation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on a prior study on intractable conflicts, psychology of reconciliation and sustainable peace, authors designed a survey to reveal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orientation to peace and to reconciliation. The survey's questions can be broken down to 1) perception of peace and war, 2) perception of North Korea (perception of enemy), 3) perception of inter-Korean ties (perception of relations), and 4) perception of Korea (perception of self).

Based on the survey, the authors conducted a variety of analyses. They include a descriptive analysis on the attitude to peace and war;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ttitude to peace and war;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ttitude to the realization of peace by military might or by cooperation;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ttitude to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the willingness to take actions required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lastly,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wards war and peace.

South Koreans are substantially inclined to have abstract, utopian ideas on peace. Overall, their attitude to peace is more positive than that to war. Interestingly, demographic variables correlated little with this attitude in contrast to their attitude to unification, which varies by age, region and ideology. This result implies South Koreans collectively have a superficial image of peace and insensitive to the so-called 'violence of division'. In other words, social violence and contradiction caused by the Korean war no longer seem violence or contradiction to Koreans. The authors named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peace "peace blindness."

While these variables deviate relatively little,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diverse psychological traits such as personality,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dividual value system, the attitude towards the DPRK,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dentity as a member of the Korean race and identity as a South Korean citizen affect the attitude to peace and war. Among them, people with stro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empathic concern influenced attitude to peace.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industriousness interacted with attitude to war.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threat/enemy and competitive victimhood are the variables that best predict a person's support for peace by military forc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competitive victimhood are the best indicator to predict a person's degree of support for peace by cooperation. Participants who have a less clear sense of identity as a South Korean citizen demonstrate stronger sense of identity as a member of the Korean race, more affirmative to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with greater willingness to make reconciliatory actions. Also, people who are strongly oriented to collectivist values and inclined to independent construal of self are more positive to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willing to make reconciliatory actions. The combination of collectivist values and to independent construal of self correlated with affirmative attitude to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willingness to make reconciliatory action. Lastly, the study discussed the outcome's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Attitude toward Peace, War and Realization of Peace, Intractable Conflict, Peace Education



I

.....

서론

박주화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실무급 회담 등 정부 간 협상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과 협력의 핵심 목표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체제보장, 비핵화 등 안보적 과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제도화된 한반도 평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담론은 관련국 간 합의(agreement)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남북,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합의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미치는 역사적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보 과제, 외교 관계에 대한 정부 간 합의는 평화 실현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지만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북미 수교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지만 그것들이 실현된다고 해서 평화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용어를 빌리자면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등과 분쟁 중인 국가들이 갈등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 즉 적대적 인식과 증오감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분쟁을 중지하거나 종식하는 협정(conflict settlement)은 가능하다.¹⁾

1)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eds. Arie Nadler, Thomas Malloy, and Jeffrey D. Fish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2~23.

다시 말해 남북 간 깊은 상처의 치유 없이도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안보 위협의 해소와 경제적 이익 담론을 넘어서는 남북, 북미관계의 본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4일 NSC 전체회의 발언에서 언급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안보문제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들이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평화 문화 형성이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한다.²⁾ 그렇다면 7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 주민, 더 좁히다면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떤 평화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 한국의 평화 담론은 거대 평화 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³⁾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를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인의 평화의식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⁵⁾ 하지만 이 연구들조차 소극적 평화와

2) 평화문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3)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1호 (2015), pp. 131~155;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3호 (2011), pp. 105~134.

4)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제99권 (2013), pp. 12~35;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pp. 123~152;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제17권 1호 (2009), pp. 113~136.

5)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pp. 21~33.

적극적 평화의 거대 담론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필요조건으로서 평화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당연해 보인다. 반면 지속가능한 평화의 근본적 동력인 국민들의 평화인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기존의 국민 인식 연구들이 ‘평화’가 아닌 ‘통일’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입체적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통일을 지지하는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지 등의 ‘통일 공감대’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지향성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내용보다는 평화적 남북관계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평화 인식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분단과 전쟁이 초래한 갈등과 분쟁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비평화 상태가 일상화,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비평화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현재의 비평화 상태가 불편하지 않으며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상적, 무형적, 유토피아적인 상상의 수준에서 평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및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 성장한 세대는 분쟁의 삶 이외에 다른 삶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삶, 평화의 삶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상상의 삶으로 치부되기 쉽다.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 그리고 일상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평화의 삶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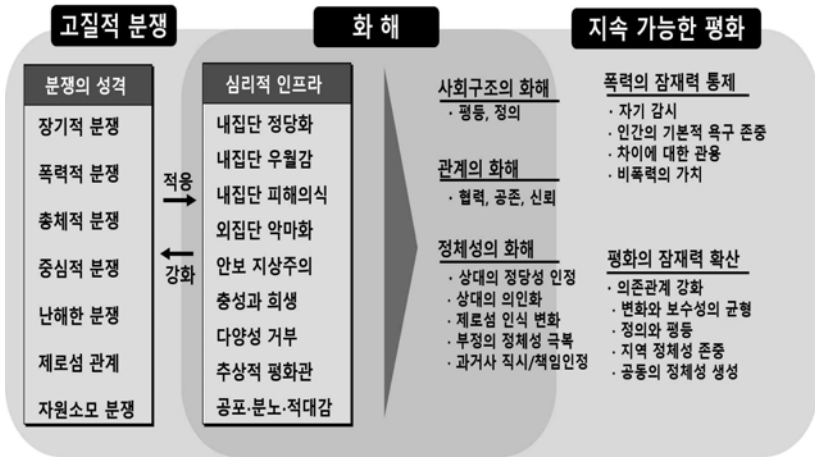
6) Daniel Bar-Ta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pp. 357~360.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 한국 국민들이 변해야 할 필요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분쟁의 시작과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한국 국민은 피해자이며, 한국은 북한에 대해 항상 선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은 감수할 수 있지만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변화만이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내집단 중심성, 한국 중심적인 사고는 분단과 갈등의 삶의 결과이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저해하는 핵심적 태도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국민의 인식, 평화의 심리적 토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분단과 분쟁의 삶이 초래하는 심리적 지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 심리학의 전통적 테제를 인용한다면 상황(분단)이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사람들은 상황(분단)의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개인적 신념, 태도, 정서, 기억, 사고 등을 지배하는, 그러나 한국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단의 폭력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분단이 야기한 심리적 비정상성’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 지향성,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심리적 정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 연구를 바탕으로 ‘분단의 심리’를 탐색하고, ‘분단의 심리’의 전환을 위해 ‘화해(reconciliation)의 심리’와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틀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심리’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 지향성과 화해를 위한 심리적 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1〉 조사의 이론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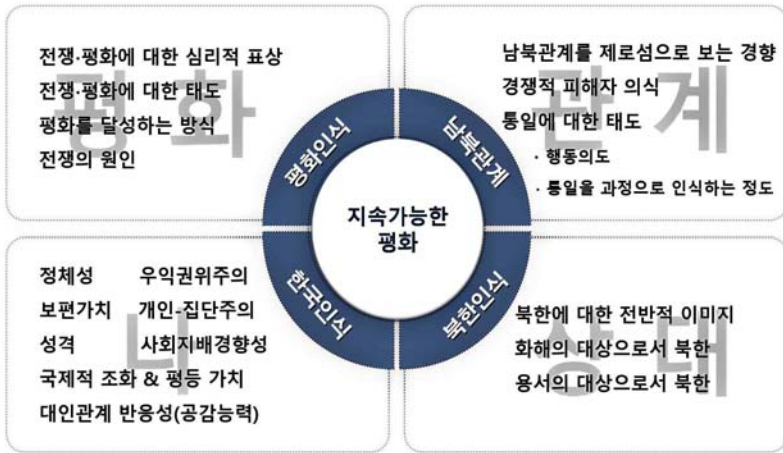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인식조사는 크게 (1)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 (2) 북한에 대한 인식(적에 대한 인식),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관계에 대한 인식), (4) 한국에 대한 인식(나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심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개방형 질문으로 해보았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는 평화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군사력 의존 vs. 협력적 방식)에 대해 일반적 수준과 한반도 수준에서 질문하였다. 또한 전쟁의 원인에 대해 개인적 차원, 지도자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관계 차원에서 질문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화해의 대상으로서 북한, 용서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분단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ness),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의 명분, 과정으로서의 통일 인식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가치 영역에서는 남한 정체감과 민족 정체감,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 개인의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1-2〉 설문조사 문항의 개념



출처: 저자 작성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평화에 대한 심층적인 국민여론조사는 본 연구가 최초로 실시하였다. 평화는 결과이자 과정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분단에 의한 심리적 결핍과 왜곡된 심리적 지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남북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의 통일을 넘어서는 심리 문화적 통일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는 의의를 가진다.

2. 분단의 심리: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을 중심으로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⁷⁾은 분쟁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했거나 평화적 합의를 위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으로 개념화된다.⁸⁾ 장기화된 분쟁(protracted conflict), 숙적관계(enduring rivalries), 악의적 분쟁(malignant conflict), 뿌리 깊은 분쟁(deep-rooted conflict)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⁹⁾ Bar-Tal은 7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¹⁰⁾

첫째, 고질화된 분쟁은 장기적(protracted)이다. 고질화된 분쟁은 적어도 한 세대(25년) 이상 지속된 분쟁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 세대는 분쟁 상황에서 출생했으며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출생한 세대는 적대 집단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포함한 분쟁의 삶이 일상화, 습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출생·성장한 세대는 분쟁의 삶 이외에 다른 삶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삶, 평화의 삶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상상의 삶으로 치부되기 쉽다.

7) Intractable conflict는 고질화된 갈등, 해결하기 힘든 갈등, 다루기 어려운 갈등, 난해한 갈등 등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질화된 갈등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8) Louis Kriesberg, "Intractable Conflicts," *Peace Review*, vol. 5, no. 4 (1993), pp. 417~419;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p. 1430~1431.

9) Edward E.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s: Theory and Cases* (Hampshire: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pp. 3~28;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Enduring Rivalries: Theoretical Constructs and Empirical Patter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1993), pp. 147~171.

10)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pp. 1432~1435.

둘째, 고질화된 분쟁은 폭력적(violent)이다. 고질화된 분쟁은 전면전, 국지전 및 테러 등 군인 및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 등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다. 특히 사망과 관련한 사건은 적대 집단에 대해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한다. 공동체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정치권에 상기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안보 유지를 위한 위협과 복수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실현 방안에 대한 압력이 공동체 전반에 작동하게 된다.

셋째, 고질화된 분쟁은 총체적(total)이다. 분쟁은 분쟁 중인 공동체와 개인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공동체의 생존, 유지를 위한 사회적 목표와 요구, 공동체 및 개인의 가치 형성, 참전 및 입대 등 삶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고질화된 분쟁은 개인과 집단의 삶에 있어 중심적(central)인 역할을 한다. 개인은 분쟁과 관련된 사건과 이슈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과 관련된 생각들이 현저화(salient)되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분쟁의 현저성은 개인의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과 동기화(motivational process)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쟁과 관련된 정보에 보다 많은 초점이 주어지며,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역시 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더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 제도와 기관 역시 분쟁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고질화된 분쟁은 제로섬 관계(zero-sum relation)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타협이나 절충,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승리가 아니면 패배라는 양자택일의 관계인 경우가 많다. 제로섬 관계는 상대

의 손해와 이익으로 나의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제로섬 인식에서는 윈-윈(win-win)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고질화된 분쟁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irresolvable) 분쟁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평화적 해결보다는 상대의 굴복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하지만 승리가 가능하지 않게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분쟁 관리에 집중하게 되며 장기간의 분쟁에 대비한 전략 및 사회구조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질화된 분쟁은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demand extensive investment) 분쟁이다. 군, 기술, 산업 전반, 심리적 자원 등 대규모의 사회적 자원이 분쟁 관리 및 분쟁에 승리하기 위해 투입된다.

남북한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심리적 지향은 고질화된 분쟁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북 분단은 70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전면전을 치렀으며 분단의 역사는 테러와 국지전으로 점철되어 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았다. 한국의 헌법은 암묵적으로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붕괴, 북한 흡수에 의한 통일이 지난 70년을 지배했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체제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동원되었으며 남북 분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동원과 결속의 명분으로 작동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해왔으며 대북정책 선호에 대한 남남갈등은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지배적 갈등으로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를 고질화된 분쟁으로 분류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질화된 분쟁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고질화된 분쟁의 해소와 전환의 밑바탕이다. 전쟁, 테러, 갈등과 같은 분쟁 상황은 공포감, 위협감, 적개심, 분노, 불확실성, 스트레스, 고통, 정신적 외상(trauma), 결핍 등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극도의 부정적 경험을 동반한다. 분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개인과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 상황에 적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고질적인 분쟁에 처한 개인은 생존을 위한 적응을 도모하며 이는 물리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포함한다. 고질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적응은 적어도 세 가지 목표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분쟁 상황에서의 박탈된 기본적 욕구(needs),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갈등상황이 유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죽음과 부상 등 물리적 폭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상황은 정신적 외상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대 집단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 적응이어야 한다. 즉, 적대 집단을 굴복시키거나 적어도 적대 집단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적응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고질적인 분쟁 속에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프리즘을 만든다. 이러한 프리즘은 분쟁의 기원, 분쟁의 책임, 그리고 적대 집단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분쟁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은 정보 해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분쟁

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건, 사람, 상징 등의 정보를 해석하고 정보를 조직화한다. 분단과 6·25 전쟁의 기원과 책임,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쟁에 기반을 둔 프리즘은 정보의 획득, 선택, 해석, 일반화하는 사회-인지적 틀(social-cognitive framework)로 고착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인지적 틀은 객관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편향(bias)되어 있다. 분쟁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회-인지적 틀은 분쟁 상황이 야기하는 강력한 자기 보호(safe)와 집단 안보에 대한 동기로 인해 분쟁 유지의 방향으로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¹¹⁾ 구체적으로 사회-인지적 틀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¹²⁾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분쟁에 관한 단서가 있다면 분쟁을 지지하는 신념(belief)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 분쟁을 지지하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억된다. 분쟁 유지에 반하는 정보는 많은 경우 무시된다.
-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분쟁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 분쟁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탐색한다.

11)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Conflict Resolution: A Cognitive Perspective," in *Preference, Belief, and Similarity*, ed. Eldar Shafir (London: MIT Press, 2003), pp. 729~746; Robert H. Mnookin and Lee Ross, "Introduction," in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eds. Kenneth Arrow et al. (New York: Norton & Company, 1995), pp. 2~25; Lee Ross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7, ed. Mark P. Zanna (New York: Academic Press, 1995), pp. 255~304.

12)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pp. 227~228.

- 분쟁을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 결정, 평가, 원인의 추론 등을 할 때 분쟁을 지지하는 신념만을 사용한다.
- 적대 그룹의 행동과 경험 등 분쟁과 관련된 일에 대해 예측을 할 때 분쟁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분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 개인과 집단의 행동 역시 분쟁을 지지하는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쟁의 강도가 강할수록 분쟁의 사회-인지적 틀과 개인·집단의 안보에 대한 동기와의 결합 강도는 더욱 강해지면서 편향의 강도 역시 강해진다. 또한 갈등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택되고 축적된 정보는 신념으로 강화된다. 고질화된 분쟁 속의 분쟁이 초래한 사회-인지적 틀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편향되고 왜곡된 신념은 분쟁 사회를 유지하는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된다.

분쟁 상황, 특히 고질화된 분쟁 상황에서 심리적·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는 집단 생존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개인의 희생,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며 분쟁의 승리를 위해 용기, 집요함, 투지, 통일성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동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안정화된다. 또한 고질화된 분쟁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적 규범에 반영되고 교육, 제도에 투영되어 구성원의 분쟁의 심리적 틀을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기제로 시작된 사회-인지적 틀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심리적·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는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구성원들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질화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 분쟁의 에토스(ethos of conflict), 그리고 집단적 정서지향성(collective emotional orientation).¹³⁾

집단적 기억은 분쟁에 대한 의미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⁴⁾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기보다는 집단의 현재 상황, 특히 존재 이유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집단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편향, 선택,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은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교과서에 공식적 기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분쟁, 특히 고질화된 분쟁에 관한 집단적 기억은 갈등의 역사를 흑백의 논리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갈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분쟁에 대한 집단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역사의 경험을 통해 외집단, 즉 적대 집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정하게 한다.¹⁵⁾ 또한 내집단, 즉 자신들이 장기간 겪었던 폭력과 고통을 상기시키면서 분쟁, 외집단의 폭력의 의한 희생자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¹⁶⁾

13)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pp. 1436~1438.

14) Daniel Bar-Tal, "Collective Memory of Physical Violence: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Violence," in *The Role of Memory in Ethnic Conflict*, eds. Ed Cairns and Mícheál D. Ro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pp. 77~93.

15) Roy F. Baumeister and Stephen Hastings, "Distortions of Collective Memory: How Groups Flatter and Deceive Themselves,"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eds. James W. Pennebaker, Dario Paez, and Bernard Rimé (Mahwah, N.J.: Lawrence Erlbaum, 1997), pp. 277~293.

16) John E. Mack, "The Psychodynamics of Victimization among National Groups in Conflict," in *The Psycho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oncepts and Theories*, eds. Vamik D. Volkan, Demetrios A. Julius, and Joseph V.

내집단 목표의 정당화, 긍정적 내집단 이미지, 적대 집단의 정당성 부정, 그리고 피해자 의식은 분단의 에토스의 요소이기도 하다.

집단적 정서지향성은 분쟁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정서적 경험으로서 집합적 행동의 암묵적인 기반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집합적 정서는 공포(fear), 증오(hatred), 불안(angst), 분노(anger)이다. 이러한 정서들은 적대 집단에 대한 공격적 정책과 행동을 촉진하거나(증오와 분노), 분쟁이 주는 위협과 위험을 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한다.¹⁷⁾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분쟁의 에토스는 집단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인프라스트럭처이다. 분쟁의 에토스는 집단의 현재 상황, 즉 집단이 처한 환경과 목표, 조건, 능력, 이미지, 그리고 적대 집단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의 생존 유지, 즉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하게 한다.

분쟁의 에토스는 8개의 신념으로 분쟁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신념이다. 첫 번째는 내집단의 목표가 정당하다는 신념이다. 분쟁을 대처하는 내집단의 방식, 특히 분쟁 해결과 분쟁을 지속하는 사회적 목표의 논리를 지지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어 왔고 그 방식에 대한 지지와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북한의 방식보다 더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이 한국사회에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둘째,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보에 대한 강조이다. 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동체의 생존이며 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장기간의 분쟁,

Montvill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0), pp. 119~129.

17) Maria Jarymowicz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pp. 367~392.

지속적으로 실존의 위협을 느끼는 고질화된 분쟁에서는 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안보적 가치를 조정이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체화시킨다.

셋째,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우월적 의식이다. 고질화된 갈등은 외집단(북한)에 비해 내집단(남한)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우월의식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관찰된다. 한국사람들에게 북한(사람)이 한국(사람)보다 우수한 점이 있는지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는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넷째, 피해자 의식이다. 내집단, 즉 자신의 집단이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서 분쟁의 삶을 영위한다. 분쟁의 피해는 외집단의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것이며 분쟁의 기억은 외집단의 긍정적 기억보다는 잔혹하고 악마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외집단의 인간성을 부정한다. 외집단을 악마화하며 존재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정하게 된다. 상대를 악마화한다는 것은 내집단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며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조장한다. 그리고 악의적인 상대의 모든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 되며 사악한 상대의 행위에 대한 내집단의 부도덕적인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인식을 넘어 도덕적 영웅감을 강화한다. 결국 악마화는 국가의 정당성을 보강하고 우월감을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인 것이다.

또한 악마화는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악마와의 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마의 제거가 목표로 인식된다. 악마와의 협상은 도덕적 범죄가 되며 협상의 과정 역시 불신으로 인해 진전될 수 없으며, 제3자의 중재는 악마와의 연대로 인식되기 때

문에 협상과 합의를 거부하게 된다.¹⁸⁾

여섯째, 국가에 대한 애정, 충성, 희생을 강조하며 이는 일곱 번째 에토스인 집단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외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 내부의 갈등,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용인하지 않는 태도가 팽배하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최종적 목표로서 평화를 설정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질화된 갈등 하에서의 평화는 일상과 유리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평화이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성취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고질화된 분쟁’의 연구 틀에서 본 분단의 심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한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세 영역의 심리적 지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남북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분단 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남한이 북한에 저지른 폭력 또는 과오에 국한되지 않는다. 분단의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폭력, 민간이 민간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폭력까지 포함한다. 동시에 북한 역시 북한주민에게, 그리고 남한주민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분쟁의 역사에 대한 남북의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공동 위원회, 분쟁 국가의 공식적 사과 등의 연구들이 분쟁에 대한 공동 기억을 통해 분쟁의 심리 문화적 해결을 탐색

18) 악마화의 함의는 다음을 참조. Linn Normand, *Demoniz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 Barrier to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하고 있다.¹⁹⁾

또한 고질화된 남북 분쟁 속에서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의 이익이 곧 한국의 손해라는 관점 속에서는 공존, 한국과 북한이 모두 이익이 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는 북한을 악마로 보는 심리적 지향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당성과 합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써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갈등과 모순은 헌법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부정합성에서도 관찰되듯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과 북한이 평화로운 관계, 평화 공존을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법적, 제도적 인정을 넘어 심리적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태도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의식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북한사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다. 국력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 지표의 측면에서 경제력, 군사력, 사회복지 수준 등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측면에서의 우월성이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심리 문화적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목표와 상황이 한국의 목표와 상황보다 더 정당하다는 인식과 편견, 더 나아가 차별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지만 피해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 북한의 남침으로 시

19) Craig W. Blatz, Karina Schumann, and Michael Ross, "Government Apologies for Historical Injustices," *Political Psychology*, vol. 30, no. 2 (2009), pp. 219~224.

작된 한국 전쟁의 역사는 한국인의 피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주민 역시 분단의 희생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 역시 북한이 분단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주민의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ness)을 극복하고 공동의 피해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가치지향성도 분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남북의 고질화된 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위계적, 획일적, 국가주의적 문화와 가치가 우선되었다. 군사문화, 권위주의적 문화, 안보우선 문화 등 애국심, 단결, 충성, 개인적 희생이 당연시되었다. 다양성과 갈등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분단 지향적 가치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3. 평화의 심리: 화해(reconciliation)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규정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이다. 약칭으로 불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식 명칭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하지만 화해보다는 교류와 협력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화해가 없는 교류와 협력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처럼 체제(제도) 인정·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를 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지는가? 화해의 메커니즘은 무기를 내려놓는 의미 있는 합의, 상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의를 촉진하고 적대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²⁰⁾

집단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괴리감과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화해(reconciliation)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고질화된 분쟁의 해결의 핵심은 화해이다.²¹⁾ 더 나아가 정치적, 제도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 이후 과거 적대적 집단 간 새로운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평화적 관계의 지속에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²²⁾ 하지만 화해가 과정(process)의 성격과 결과(outcome)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²³⁾

화해의 문화적 관점은 사회적 신념과 의미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폭력적 대결의 기억을 대치하는 새로운 내러티브의 구성 및 사회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화해의 정치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적대적 집단과의 공평한 공존 및 공평한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갈등 집단의 공통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화해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이행 정의(transitional justice) 메커니즘(진실 말하기, 자백, 기억, 용서, 처벌 및 보상, 과거사에 대한 인정)이 주요 관심사이다.

20)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pp. 23~36.

21) Daniel Bar-Tal, "Reconciliation as a Foundation of Culture of Peace," in *Handbook on Building Cultures of Peace*, ed. Joseph de Rivera (New York: Springer, 2008), pp. 363~377.

22) Nevin T. Aiken, "Learning to Live Together: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2 (2010), pp. 166~188.

23) Daniel Bar-Ta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 Yaacov Bar-Siman-Tov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1~38.

화해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인지적, 정서적 태도의 변화,²⁴⁾ 개인 또는 집단의 힐링,²⁵⁾ 집단 간 상호 이해를 방해하는 정서적 장애물의 제거,²⁶⁾ 적대적 집단의 존재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한다.²⁷⁾ 구체적으로 화해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화해를 사회 구성원의 동기, 목표, 신념, 태도 변화로 정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정, 상대에 대한 심리적 지향의 변화, 그리고 상대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Nadler는 화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사회구조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구분하였다.²⁸⁾ 사회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분쟁과 갈등의 원인, 그리고 분쟁의 고질성(intractability)을 고지위 집단과 저지위 집단 간의 불평등에서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는 국가 간 분쟁이 아닌 국가 내 인종 갈등, 종교적 갈등 등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 해결의 핵심은 제도적, 법률적으로 집단 간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²⁹⁾

24) *Ibid.*, pp. 11~13.

25) Karen Brounéus, "The Trauma of Truth Telling: Effects of Witnessing in the Rwandan Gacaca Courts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4, no. 3 (2010), pp. 408~437.

26) Arie Nadler,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 Linda R. Trop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91~292.

27) Ervin Staub, "Reconciliation after Genocide, Mass Killing, or Intractable Conflict: Understanding the Roots of Violence, Psychological Recovery, and Steps toward a General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6 (2006), pp. 867~894.

28) Arie Nadler,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pp. 293~295.

29) Nadim N. Rouhana, "Key Issues in Reconciliation: Challenging Traditional Assumptions on Conflict Resolution and Power Dynamics,"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pp. 291~314.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분쟁과 갈등의 원인, 그리고 분쟁의 고질성을 상대에 대한 불신,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의 치유는 긍정적, 협력적 경험을 증진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학습하고 부정적 견해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관계의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접촉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은 단순한 접촉 경험이 집단 간 긍정적 인식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쟁을 완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접촉 경험이었다.³⁰⁾ 접촉의 효과는 아일랜드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³¹⁾ 접촉의 양도 중요하지만 접촉의 질, 특히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적대 집단에 대한 인식 전환에 더 큰 효과를 가졌다. 또한 공통의 정체성(예: 유럽인, 지구시민 등)을 가지는 것이 관계의 회복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³²⁾ 단일한 정치체제를 추구하지 않는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적 화해만으로 충분하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단일한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경우, 또는 국가 내 집단 간 갈등의 경우는 관계적 화해를 넘어 정체성의 화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분쟁과 갈등이 초래하는 정체성의 위협을 분쟁과 갈등의 지속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한다. 정체성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분쟁과 갈등의 희생자로 생각하

30) James L. Gibson,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2004), pp. 201~217.

31) Tania Tam et al., "Postconflict Reconciliation: Intergroup Forgiveness and Implicit Bias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4, no. 2 (2008), pp. 303~320.

32) Masi Noor et al., "On Positive Psychological Outcomes: What Helps Groups with a History of Conflict to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no. 6 (2008), pp. 819~832.

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정체성의 위협을 가하는 적대 집단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위협 과정은 과거 지향적, 분쟁에 대한 집합적 기억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화해는 정체성의 변화, 즉 피해자의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과거사의 지식과 공통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³³⁾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연구한 Kelman은 고질화된 분쟁이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크게 이익과 권력의 조정에 초점을 둔 분쟁 합의(conflict settlement), 새로운 관계를 정의하는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하는 화해(reconciliation)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³⁴⁾ Kelman의 분쟁 합의, 분쟁 해결, 화해는 Nadler의 화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 관계적 관점, 정체성적 관점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Kelman은 분쟁 합의, 분쟁 해결, 화해가 서로 다른 과정임을 강조한다. 분쟁 합의와 분쟁 해결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만족하고 지속가능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인 반면 화해는 분쟁 합의와 분쟁 해결 이후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과정이 시간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만 비교적 구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먼저 분쟁 합의는 분쟁을 완전히 종식하거나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등 분쟁 당사국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분쟁 합의가 분쟁 해결, 또는 화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상대에 대한 공감(empathy), 또는 상대에 대한

33) Arie Nadler, "Post Resolution Processes: Instrumental and Socio-Emotional Routes to Reconciliation," in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eds. Gavriel Salomon and Baruch Nevo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2), pp. 127~143.

34)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pp. 24~27.

적대적 인식과 태도의 전환 없이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분쟁이 주는 호전성과 불확실성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분쟁 관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는 관련국의 힘(power)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메커니즘 역시 분쟁국의 억지력, 주변국의 힘, 또는 국제기구의 활동 등 감시활동(surveillance activity)에 달려 있다.

분쟁 해결은 힘의 논리보다는 관련국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다. 분쟁 해결은 양측의 근본적 요구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헌신(commitment)을 바탕으로 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분쟁 집단 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과 요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분쟁 해결은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 집단 간 필요와 제한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관계와 태도가 기존의 적대적 관계와 태도와 통합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즉 과거의 태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과 새로운 신뢰의 태도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규 태도의 공존은 분쟁 해결의 지속성에 치명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쟁과 관련한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거의 적대적 태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 합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동조(compliance)하는 것이라면 분쟁 해결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일체감(identification)

을 강조한다. 반면 화해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일체감,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의 내재화(internalization)를 강조한다. Nadler의 화해를 위한 정체성 변화가 피해자 의식의 전환에 있었다면 Kelman의 화해를 위한 정체성의 변화는 보다 본질적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였다.³⁵⁾ 즉 이스라엘 국민은 팔레스타인을 부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됨을 결정하는 요소로,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국민됨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정체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의 문제, 즉 양가적 태도의 불안한 공존이라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상대를 부정하는 정체성의 변화는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정(acceptance)은 동의(agreement)와 다르다. 상대의 내러티브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변화는 상대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Nadler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핵심은 각각의 집단이 상대의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은 상대를 부정하는 기존 정체성에 쉽게 통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의 변화는 기존의 핵심 가치를 유지할 때만 이루어진다. 정체성은 자신과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핵심적 질문이며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상대의 부정이라면,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신과 집단

35) Herbert C. Kelman, "The Interdependence of Israeli and Palestinian National Identities: The Role of the Other in Existential Conflic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pp. 581~600.

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지속하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⁶⁾

Bar-Tal의 화해에 대한 접근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 외집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화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Kelman과 Nadler의 접근과 대동소이하다.³⁷⁾ 하지만 Bar-Tal은 평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Bar-Tal은 고질화된 갈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상적, 무형적, 유토피아적인 상상의 수준에서 평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및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화해의 과정은 평화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 현실적 그리고 삶과 유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해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외집단에 대한 태도, 내집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일치된다. 먼저 외집단, 적대적 집단의 지위와 인간성,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적대 집단이 국가라면 상대국의 존재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 즉 국가로서의 지위, 자주권,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국의 정부와 국민이 악마가 아닌 인간이라는 인식,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 그들의 안보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적대 집단을 인정하는 다양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6)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pp. 30~31.

37) Daniel Bar-Ta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 29.

내집단에 대해서도 자신의 집단이 피해자이고 우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태도 변화는 집단 간 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공통의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가치,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덕적 가치를 생성해야 한다. 고질화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분쟁의 원인과 책임이 희석되면서 도덕적 책임과 가치 역시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내러티브, 신화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진실 규명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경험과 시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공공 보건, 환경, 의사소통, 교육, 과학,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양측의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상호 협력은 각각의 사회적 필요와 목표, 평등과 호혜(equality and reciprocity)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4. 평화의 심리: 지속가능한 평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화해는 상호 강력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관계는 단순히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아닌 번영과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믿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의존관계는 분쟁하는 집단들이 공동

의 정체성을 가지며, 각각의 집단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하며, 자원에 대한 공평성과 정의로움이 요구된다. 또한 평화적 의존관계를 위해서 폭력 사용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평화(peace)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Thomson Reuters Web of Knowledge Database에 2000년 이후 평화(peace)로 검색하면 평화에 대한 40개 이상의 다양한 속성들이 나타난다. 평화의 구분은 평화의 수준(개인 간 평화, 국가 간 평화, 지구적 평화), 평화의 방향(내적 평화, 외적 평화), 지속성(불안정한 평화, 안정적 평화), 평화의 조건과 방식(강압을 통한 평화, 민주주의적 평화, 경제적 보상에 의한 평화), 평화의 종류(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촉진적 평화), 평화의 범위(지역적 평화, 지구적 평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며 정의되고 있다.

Coleman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관심을 가졌다.³⁸⁾ 먼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시간적 지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개선의 역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개인, 관계,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진화하는 창조적 적응의 평화이며 변화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평화는 집단의 핵심가치는 유지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안정성과 역동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과 역동성은 부정적·파괴적 갈등, 긴장, 폭력을 제거하고 생산적 갈등, 조화,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중심으

38) Peter T. Coleman, "Conclusion: The Essence of Peace? Toward a Comprehensive and Parsimonious Model of Sustainable Peace," in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eds. Peter T. Coleman and Morton Deutsch (New York: Springer, 2012), pp. 353~369.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Coleman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파괴적인 갈등이나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능성(폭력의 잠재력)이 낮아지면서 협력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가능성(평화의 잠재력)이 사회 전반과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Coleman은 폭력의 잠재력을 제거하고 평화의 잠재력을 증진하는 요소를 개인적 수준에 초점을 둔 미시적 차원(micro-level), 정치, 사회 제도, 국가, 국가 수준에 초점을 둔 거시적 차원(macro-level), 가족, 학교, 기관, 그리고 사회 커뮤니티 수준에 초점을 둔 메조 수준(meso-level)로 구분하였다. 이 세 수준은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Coleman의 세 수준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미시적 차원의 요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폭력의 잠재력을 방지하는 심리적 요소

- 파괴적 갈등과 폭력의 원인, 결과 그리고 확산적 경향성(escalatory tendency)에 대한 자각
- 파괴적, 폭력적 행동에 대한 내적 본능을 조절, 억제하는 자기 감시 능력
- 물리적 욕구, 안전,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에 대한 만족
- 비폭력을 지지하는 가치, 태도, 행동
-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역량
- 차이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
- 용서를 할 수 있는 역량

평화의 잠재력을 증진하는 심리적 요소

- 나이 또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

-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 초월적 가치지향성
- 개인적 분노가 억울함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고양(self-enhancement) 지향성
-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성의 건강한 조화, 그리고 변화의 시점과 환경에 대한 반응성
- 협력과 신뢰를 증진하는 가치, 태도, 행동과 기술(skill)
- 생산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
- 정서와 행동, 그리고 사회정체성의 복잡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자아상
-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현실적 공감능력, 관용의 능력, 인간화의 능력
-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측은지심
- 지구의 자원과 환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
- 평화를 위한 언어: 협력과 평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표현의 사용
- 상위 수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지만 Coleman은 평화의 잠재력과 폭력의 잠재력이 공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평화에 대한 태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전쟁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지만 폭력의 잠재력을 방지하는 심리적 요소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행동을 과거의 패턴에서 분리하여 행동이나 정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집단의 행동을 과거의 패턴, 분쟁의 패턴 속에서 인식한다면 폭력의 잠재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³⁹⁾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평화만을 강조한다면 모든 것이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판단될 것이며 경제적 교류만을 강조한다면 모든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흑백론에 의한 판단, 문제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구조를 가진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흑백론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 다양한 접촉,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적대적 관계를 가진 두 집단이 협력의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과 개발에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강력한 의존관계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요소로 정의(justice) 역시 중요하다. 정의는 실제적 정의, 미래 정의, 절차적 정의, 정서적 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화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⁰⁾

39) Andrzej Nowak et al., "Attracted to Conflict: A Dynamical Perspective on Malignant Social Relations," in *Understanding Social Change: Political Psychology in Poland*, eds. Agnieszka Golec and Krystyna Skarżyńska (Haauppague: Nova Science Publishers Ltd, 2006), pp. 33~49.

40)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pp. 23~36.

5. 설문의 구성

가.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

Bar-Tal에 따르면 분쟁 국가의 국민들, 특히 고질화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일상의 삶과 괴리가 큰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평화와 전쟁을 어떻게 표상하는지,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이마저도 북미와 북유럽 등 고질화된 분쟁을 겪고 있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와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전쟁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은 국민들이 평화와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지, 전쟁과 평화가 제로섬 관계인지, 즉 전쟁의 부재를 평화의 존재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밝혀줄 것이다.

(1) 평화와 전쟁에 대한 심리적 표상

평화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하위 개념(예: 전쟁의 부재, 개인의 복지 등)들을 나열하고 선택하도록 질문하였지만,⁴¹⁾ 본 연구는 평화와 전쟁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단어 3개를 각각 기술하도록 질문하였다.⁴²⁾ 전쟁의

41)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pp. 24~28.

42)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3 (2011), pp. 225~226.

관점이 평화를 점화(prime)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평화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 후 전쟁에 대한 단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2)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쟁과 평화를 단일차원으로 간주하여 전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⁴³⁾ 다시 말해 전쟁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쟁에 대한 태도를 평화에 대한 태도와 구분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⁴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사용한 96개 문항을 수집하고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평화에 대한 태도 6개, 전쟁에 대한 태도 6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연구는 북미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 일반적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질문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분쟁 국가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분쟁과 갈등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반적 수준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맥락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질문을 일반적 수준과 한

43) J. Christopher Cohrs et al.,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War,"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3 (2005), pp. 311~312; Erin C. Dupuis and Ellen S. Cohn, "A New Scale to Measure War Attitudes: Construction and Predictors," *Journal of Psychological Arts and Sciences* (2011), p. 9; Gordana Kuterovac Jagodić, "Is War a Good or a Bad Thing? The Attitudes of Croatian, Israeli, and Palestinian Children toward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35, no. 6 (2000), p. 246; Ross Stagner, "Some Factors Related to Attitude toward War, 1938,"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6, no. 1 (1942), pp. 132~133.

44)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 677.

반도 맥락의 수준에서 질문하였다(예: 일반적 맥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vs. 한반도 맥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를 각각 두 수준 차원에서 질문하여 모두 2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설문 초기에 일반적 수준의 질문을 배치하고 설문 후기에 한반도 맥락의 질문을 배치하고 비교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응답은 9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 또는 전문가의 인식은 외교정책의 방향과 목표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militarism), 협력을 통한 평화(cooperationalism), 고립주의(isolationism)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립주의를 제외하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집한 후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⁴⁵⁾

45) J. Christopher Cohrs et al.,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War," p. 293; Guy Grossman, Devorah Manekin, and Dan Miodownik, "The Political Legacies of Combat: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mong Israeli Ex-Combata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9, no. 4 (2015), pp. 981~1009; Ole R. Holsti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among American Leaders,"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pp. 94~125; Melissa Jean Johnson, "Attitudes toward Achieving Peace: A Measur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Peace through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Attitudes with Affective, Coping, Personality, and Gender Correl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0); Joshua D. Kertzer et al.,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2014), pp. 825~840;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5 (2005), pp. 791~808; Mark Tessler and Jodi Nachtwey, "Islam and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Conflict: Evidence from Survey Research in the Arab Worl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5 (1998), pp. 619~636; Kenneth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일반적 수준과 한반도 맥락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반적 수준에서 힘을 통한 평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를 묻는 문항은 각각 6개, 한반도 맥락에서는 각각 8개, 모두 28개 문항이었다. 일반적 맥락에는 포함되지 않은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맥락에는 포함되지 않는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응답은 9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4)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가장 거대한 폭력인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쟁의 중단과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분단과 분쟁의 원인이 특정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류와 협력 또는 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지도자의 제거, 지도자의 변화를 통해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Hostli⁴⁶⁾가 사용한 9개 문항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공동연구진 논의를 통해 10개 문항으로 확장하였다. 크게 본다면 인

E. Vail and Matt Motyl, "Support for Diplomacy: Peacemaking and Militarism as a Unidimensional Correlate of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Attitud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6, no. 1 (2010), pp. 29~57.

46) Ole R. Holsti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among American Leaders," p. 105.

간 본성 차원, 개인 차원, 국가 차원, 국제관계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10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본성, ② 정책 결정집단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그로 인한 상대국의 국력과 안보전략에 대한 오해와 무지, ③ 특정 지도자(예: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 ④ 자신의 국가나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민족주의, ⑤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⑥ 군사력을 통해 외교문제를 해결하려는 권위주의적 정부체제, ⑦ 생존권과 인권의 심대한 위협을 받는 타국민의 보호와 정의 실현, ⑧ 국가들의 경제적 또는 영토적 이해관계(국익의 추구), ⑨ 문화, 인종, 종교, 이념의 차이, ⑩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 상위 권력(국가)이 없는 국제관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였다.

나. 외집단(북한)에 대한 인식

전술한 바와 같이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 즉 분단의 심리를 평화의 심리로 전환하고 남북의 화해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핵심이다. 통일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조사하였다.⁴⁷⁾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북한을 협력 대상, 지원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7)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제3권 1호 (2011), pp. 129~173;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p. 187~215.

(2) 화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분단의 심리, 특히 분쟁의 에토스와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분쟁 발발의 근본 원인과 지속의 이유를 적대 집단에게 돌리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대세력의 도덕성을 폄하하는 심리적 지향 역시 분단의 심리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단의 심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연구를 참고하여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⁴⁸⁾ 측정은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3) 용서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선행연구⁴⁹⁾를 바탕으로 북한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6개를 구성하였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가 밝힌 화해의 조건이자 관계 차원에서의 화해,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핵심적 과제인 적대 집단의 존재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은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48)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p. 791~808; Nurit Shnabel et al.,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8 (2009), pp. 1021~1030.

49) Masi Noor,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ospects for Intergroup Reconciliation: Social-Psychological Predictors of Intergroup Forgiveness and Reparation in Northern Ireland and Chile," in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From Violent Conflict to Peaceful Co-Existence*, eds. Arie Nadler, Thomas Malloy, Jeffrey D. Fish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97~114.

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1)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고질화된 분쟁의 특징은 분쟁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악마화가 협상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 역시 윈-윈 상황이 없는, 즉 협상을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에 대한 믿음(Belief in a Zero-Sum Game: BZSG)이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질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⁵⁰⁾ 이 개념은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갈등 상황을 다른 게임 이론(game theory)⁵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논리적으로는 자신이 얻게 되는 이득과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득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제로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이득은 곧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양측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게 되면 양측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제로섬 게임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높고, 협동을 피하며, 상대방의 경쟁 전략에 대해 더욱 강한 경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⁵²⁾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도움에 비해 받은 도움이

50)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pp. 525~548.

51) John Von Neumann and Oskar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pp. 46~51.

52) Joanna Rożycka, "Wiara W życie Jako grę o Sumie Zerowej: Wyznaczniki i

적다고 여기고, 사회 교환 관계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보고하였다.⁵³⁾

본 조사에서는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에 따라 남북 갈등 상황에 대한 해석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서의 선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남북 간 갈등 상황을 제로섬으로 보는 사람들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로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경쟁과 무력을 통해 북한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를 위해 12개 문항을 포함하는 원칙도를 참고하여 남북 관계에 맞추어 4문항을 구성하였다.⁵⁴⁾

(2) 경쟁적 피해자 의식

또한 고질화된 분쟁은 내집단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한국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⁵⁵⁾를 바탕으로 남북관

Konsekwencje społeczne (Zero-Sum Game Belief: Determinants and Social Con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Polish Academy of Sciences, Warsaw, 2008) quoted in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53) Bogdan Wojciszke, *Sprawczość i wspólnotowość. Podstawowe Wymiary Spostrzegania Społecznego* (Agency and Communion, Basic Dimension of Social Perception) (Gdansk: GWP Press, 2010), quoted in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54) Bogdan Wojciszke, Wiesław Baryła, and Joanna Różycka, “Wiara W życie Jako grę O Sumie Zerowej (Zero-Sum Game Belief),” in *Między Przeszłością a przyszłością. Szkice z Psychologiiipolitycznej*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Essays from Political Psychology], eds. U. Jakubowska and K. Skarżyńska (Warsaw: Polish Academy of Sciences Press, 2009), pp. 179~188. quoted in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경향성 4문항과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피해자로 인식하는 정도 4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연구원의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1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의도를 묻는 4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모두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통일의 명분, 통일의 이유를 묻는 문항은 기존 연구가 사용했던 5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확장하여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10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같은 민족이니까, ②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 ③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 ④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 ⑤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⑥ 주위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 ⑦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⑧ 한반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 ⑨ 한국이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해, ⑩ 특별한 이유 없음.

(4) 과정으로서의 통일 vs. 사건으로서의 통일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지 사건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55) Masi Noor et al., "When Suffering Begets Suffering: The Psychology of Competitive Victimhood Between Adversarial Groups in Violent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6, no. 4 (2012), pp. 351~374;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을 사건이자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는 통합의 과정, 공존의 과정이 아닌 승리 또는 패배의 흑백론적인 통합을 강요한다. 악마와의 공존은 불가능하며, 정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집단과의 공존 역시 불가능하다. 북한 흡수론, 북한 붕괴론 등은 분쟁의 심리에 부합하는 통일론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과정보다는 사건으로서 통일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다음 네 상태가 통일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첫 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 두 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 세 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남북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 마지막은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하여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이다.

모든 상태에 대해 통일로 인정하는 정도가 높은 응답자는 통일을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상태로 갈수록 통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응답자는 통일을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과정으로 보는지 사건으로 보는지에 따라 평화, 북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평화 실현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 내집단(한국)에 대한 인식

(1) 정체성

전술한 화해 연구들이 밝히는 화해의 핵심은 정체성의 변화이다. Nadler은 정체성 수준에서의 화해를 가장 상위수준에 놓고 있으며

화해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Kelman은 관계의 변화나 상대의 인정이 아닌 정체성의 변화만을 화해라고 주장한다. 결국 화해는 상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게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체성의 변화가 반드시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위수준, 즉 한국의 정체성과 북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질화된 갈등 연구자들은 종족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의 경우 상위 정체성이 너무 추상적이거나(예: 지구 시민), 하위 정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예: 기독교 vs. 가톨릭) 화해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의 경우 민족정체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 두 집단이 강하게 공유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민족정체성 효용이 수명을 다했다는 논의들이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통일의 명분으로 민족정체성을 꼽는 비율이 떨어진 것,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결과를 민족정체성 효용의 한계로 들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 명분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현재 통일의 명분을 묻는 질문의 선택지가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민족정체성이 아닌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일의 명분으로 응답한 것을 반드시 민족정체성의 효용이 약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한 이유이다. 설사 통일의 명분으로서 민족정체성의 효용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와 평화의 동력으로서 민족정체성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정체성이 약화된 이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인식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민족 감정이 약화되었는지,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민족 정체감이 약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의 심리,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에 따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분단의 심리의 극복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감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기반 하여 정의되는 정체성을 말한다.⁵⁶⁾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정체성에서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하도록 동기화되며, 내집단의 긍정적 특징을 통해 자기를 정의함으로써 자존감을 경험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지지증거를 축적하였으며 집단 간 갈등, 편견과 차별의 이해 및 해소는 물론 집단 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⁵⁷⁾ 사회정체성은 한국처럼 국가정체성(남한)과 민족정체성(한민족)이라는 이중 사회정체성(dual social identity)이 존재하는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태도를 다룬 최근 연구에서 개념적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정체성을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Jung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2차원 척도를 사용하였다.⁵⁸⁾ 국가정체성은 응답자들이 ‘남한국민으로서’ 자신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묻는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한민족으로서’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56) Henri Tajfel,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13, no. 2 (1974), pp. 65~93.

57) Marilynn Brewer, "Intergroup Relations," in *Advanced Social Psychology: The State of the Science*, eds. Roy F. Baumeister and Eli Fink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535~557.

58) Jj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pp. 341~350.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정도와 함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측정(각 3문항)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였다. 측정은 9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하위척도를 통해서 조사 참가자들의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의 구조를 분석하고, 두 가지 정체성의 수준 및 확실성의 구조에 따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평화와 전쟁, 통일에 대한 태도 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화해의 심리, 특히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화해는 정의, 평등의 제도적 실현을 강조한다. 제도적 실현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제도를 이행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우익권위주의는 수직적 관계, 권력에 의한 강제적 문제 해결 경향성, 관용에 대한 저항 경향성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와 화해의 심리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⁵⁹⁾

우익권위주의는 지배(dominance) 및 복종(submission)과 관련된 성격요인에서 출발한다.⁶⁰⁾ 우익권위주의자들은 지위가 확립된 권위자들과 이들이 지지하는 사회규범에 복종한다. 우익권위주의의 주요 특징은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그리고 권위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이다.⁶¹⁾ 관습주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의 고수로 정의되고, 권위적

59)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 677.

60) Bob Altemeyer,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pp. 47~92.

61)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pp. 863~872.

공격성은 규범 위반자에 대한 공격적 정서이며, 권위적 복종은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종속을 일컫는다.

우익권위주의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여러 가지 사회가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익권위주의는 정치적 경향성(political orientation)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우익권위주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 등 Ratazzi의 축약형 우익권위주의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문항 내용으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극단적 방식의 질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 사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극단적 문항의 수가 적은 Zakrisson의 축약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남상희의 번역본⁶²⁾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5개 문항이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우익권위주의가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 사회지배경향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⁶³⁾ 사회지배경향성이란 사회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사람마다 집단 간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 수준

62) 남상희, “정치성향의 세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 서울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논문, 2014, pp. 71~72.

63)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 677.

을 보일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이다.⁶⁴⁾ 즉,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집단들이 평등하지 않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상위의 서열에 위치한 것을 선호하는 반면, 이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집단들이 모두 평등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Pratto 등⁶⁵⁾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념들과 사회·정치적 정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경제적 보수주의(political-economic conservatism), 민족주의(nationalism), 애국주의(patriotism), 반-흑인 인종차별주의(anti-Black racism)와 같은 이념을 강하게 지지하였고, 군사계획(military programs)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소수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경향성은 또한 다른 개인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을 보였으며, 이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 걱정하는 성격(concern for others)이나 공동체주의(communality), 관용(tolerance), 이타심(altruism)이 낮았다. 한국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을 다룬 연구가 매우 드문데, 최근 황세영·강정석·강혜자⁶⁶⁾의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낮았으며,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더 강하게 반대하고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더 멀게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Ho 등⁶⁷⁾이 지배

64)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65) *Ibid.*, pp. 741~763.

66) 황세영·강정석·강혜자,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2017), pp. 181~206.

67)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성향(dominance)과 반평등주의(anti-egalitarianism)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배성향의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8문항은 집단 간 위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7점 척도로 측정하며, 반평등주의의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8문항은 폭력이나 공공연한 대립을 사용하는 대신 권력이나 자원을 집단들 간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들을 선호함으로써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집단 간 불평등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조사 참여자들의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지배성향과 반평등주의 하위차원 중 어느 차원에서 강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남북관계의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지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위계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반평등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을 본 조사의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였다.

(4) 보편가치(Basic Values)

가치는 심리학과 유관분야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가치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삶을 안내하고 주도하는 원칙으로 기능하며 시간에 걸쳐 안정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pp. 1003~1028.

적이고 다차원적 구조를 지님이 확인되었다.⁶⁸⁾ 또한 가치는 평등, 관용, 인정, 정의, 공감, 충성, 희생 등 고질화된 분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과 심리의 기저를 이룬다. 특히 경쟁 지향적 가치는 고질화된 분쟁을 악화시키는 반면 협력, 친사회적 가치는 화해의 심리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보편가치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가치지향성을 조사하였다.

보편가치의 내용과 구조는 Schwartz와 동료연구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자율, 자극, 쾌락주의, 성취, 그리고 권력 등 10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Schwartz의 가치체계는 하위 차원 별로 다소 간의 괴리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⁶⁹⁾ 다양한 문화와 국가를 포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포함되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World Value Survey에 포함된 10개 차원의 조사문항(단측판, 6점 척도)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변수로 활용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관한 태도, 통일,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5) 국제적 조화와 평등 척도 & 국력: 안전-조화 가치지향성 (Security-Harmony Value Orientation)

보편적 가치가 개인 차원에서 가치지향성을 측정한다면, 국제적 조

68) Shalom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ed. Mark P. Zanna (New York: Academic Press, 1992), pp. 1~65.

69)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pp. 1~16.

화와 평등 및 국력 척도는 국가의 외교정책, 국가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측정한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ies)의 구분은 좌파(left)와 우파(right), 또는 진보주의(liberal)와 보수주의(conservative) 간의 대비로 이루어졌으나, Rokeach⁷⁰⁾와 같은 연구자는 이러한 구분이 실제 사람들의 정치-관련 행동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치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으로,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Braithwaite는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가지의 가치들을 연구한 결과 이 가치들이 상위 수준의 독립적인 가치인 안전(security)과 조화(harmony)로 수렴되는 것을 발견하였다.⁷¹⁾ Braithwaite는 이후 가치균형모델(value balance model)을 통해 안전과 조화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좌파 또는 우파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⁷²⁾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Braithwaite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이나 국제적/국내의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선거 참여나 단체 가입과 같은 정치적 행동을 할 때 어떤 목표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18가지 목표들 중 4가지는 국가의 힘과 질서(national strength and order)로, 10가지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international harmony and

70)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83), pp. 11~16.

71)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no. 4 (1997), pp. 401~414.

72)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Balance Model of Political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89, no. 2 (1998), pp. 223~247.

equality)으로 수렴되었으며, 안전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조화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들 이외에 정치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수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정치적 이념과는 비교적 별개로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안전-조화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힘과 질서(안전 가치)를 중요한 목표로 보는 사람들에 비해 국제적 조화와 평등(조화 가치)을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Braithwaite⁷³⁾가 사용한 14가지 목표들 중 10개를 선정, 조사에 포함하여 두 가치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을 말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수준에서 국가 간 심리와 행동을 비교하는 것 뿐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 다양한 하위문화를 비교분석하거나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공동체의 이익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자기개념에서 개체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지 아니면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지를 반영하는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으로 대분할 수 있다.⁷⁴⁾ 개인주의-집

73) *Ibid.*, pp. 223~247.

단주의는 개인의 인지, 감정, 사회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특히, 남북관계, 평화와 전쟁, 통일에 관한 인식 등과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관한 개인의 지각과 신념에 의해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예측변수로 포함시켜 응답자들의 문화적 지향성과 준거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4문항 6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7) 대인관계반응성(Interspersonal Reactivity)

남북관계 차원에서 공감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이다. 화해의 심리 중 핵심적 요소이다.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공감(empathy)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⁷⁵⁾ 초기의 학자들은 공감을 인지적인 반응으로 개념화하는 학파와 정서적인 반응으로 개념화하는 학파로 나뉘었으나, 이후에는 공감이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다차원적인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대인관계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가 있다. 원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두 요인인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 지향적인 정서와 불행한 사람에 대한 걱정을 측정한다. 개인적 고통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에

74) Çiğdem Kağıtçıbaşı,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6, no. 4 (2005), pp. 403~422.

75) Mark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1983), pp. 113~126.

대한 자기 지향적인 정서를 측정한다.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잘 배려한다. 공감적 관심은 정서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북한과 같은 상대방의 처지를 더 고려하고자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고통을 높게 보고하는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사회불안이 높으며,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높다. 개인적 고통이 높은 사람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고, 동시에 특유의 수줍음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자면,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과 같은 대인관계반응성이 특정 정치적 견해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표현하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인관계반응성을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표상의 예측변수로 포함하였다. 5점 척도의 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8) 성격(Personality)

나라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섯 가지의 상위 성격 특질(trait)을 보인다는 것이 관찰된 후, 이 다섯 가지 특질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유형이라는 의미로 5요인 모형(five-factor model)이 개발되었다.⁷⁶⁾ ‘성격 5요인’이라고 불리는 이 다섯 가지 특질에는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경험에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 포함된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친화성이라고도

76) Robert R. McCrae and Oliver P. John,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vol. 60, no. 2 (1992), pp. 175~215.

번역이 되는 우호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정도이다. 성실성은 양심을 따르는 정도와 부지런하고 꼼꼼한 정도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정서적 안정성은 반대 극단인 신경증(neuroticism)으로도 불리는데, 세상이 위협적이지 않고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극, 변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하고, 줄여서 개방성으로도 많이 불린다.⁷⁷⁾

기본 성격 특질은 유전적인 영향을 토대로 형성된다.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적 기질(disposition)을 바탕으로 한다.⁷⁸⁾ 따라서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 사람의 나이, 출생지, 거주지,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정환경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보다도 먼저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⁷⁹⁾과 권위주의⁸⁰⁾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즉, 기질을 바탕으로 한 기본 성격 특질이 개인의 정치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성격이 전쟁과 평화 관련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⁸¹⁾

특히 우호성은 분쟁 상황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심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⁸²⁾ 우호성이 사회적 상황에서 분노나 짜

77)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 이해』, 제32권 1호 (2011), pp. 47~65.

78) Kerry L. Jang,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rn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4, no. 3 (1996), pp. 577~591.

79) Gian V. Capara, Claudio Barbaranelli, and Philip G. Zimbardo, “Personality Profiles and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1 (1999), pp. 175~197.

80) Bill E. Peterson, Kimberly A. Smirls, and Phyllis A. Wentworth,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no. 5 (1997), pp. 1202~1216.

81) William Eckhardt and Norman Z. Alcock,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ar/Peace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81 (1970), pp. 105~116.

증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발현되는 성격적 특성으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연대감, 공감에 낮은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 정서적 반응성이 높으며 도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³⁾ 또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강압이나 힘에 의한 압력에 대한 저항이 강하며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분쟁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성격요인이 화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에 앞서 기본적인 성격 특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각 종속변수에서 성격의 5요인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을 제외하고 난 후에도 우익권위주의 등이 실질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면 이들 독립변수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다른 독립변수가 성격을 넘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면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의 일정 부분이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hn⁸⁴⁾ 등이 제안한 44문항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15문항(5점 척도)으로 간편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⁸⁵⁾

82) William G. Graziano and Nancy Eisenberg,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eds. Robert Hogan, John Johnson, and Stephen Briggs (New York: Academic Press, 1997), pp. 795~824.

83) William G. Graziano et al.,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 × 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4 (2007), pp. 583~599.

84) Oliver P. John and Sanjay Srivastava,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eds. Lawrence A. Pervin and Oliver P. John (New York: Elsevier, 1999), pp. 102~138.

85)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pp. 47~65.

6. 조사의 기본설계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8년 5~6월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18년 3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8년 7~8월 진행되었다. 표본의 수는 400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비례할당표집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거주기간의 비율이 유사하도록 임의 표집하였다.

현장실사는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 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II

평화,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남북화해에 관한 태도

김갑식·박주화 (통일연구원)

1. 평화에 대한 표상

가. 연구 배경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저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단어 3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단어연합과제(word associ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단어연합과제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높거나 중요한 단어들 연결되어 기억 속에 표상(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의미적으로 관련이 높은 단어들은 거리적으로는 가깝게, 강도의 측면에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응어들의 군집은 제시어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이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⁸⁶⁾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하, 1순위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과제의 목표에 따라 많은 제시어에 대해 많은 반응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나. 단어수준 분석

전반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는 비둘기, 자유, 통일, 행복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경우 평화와 연합된 단어의 강도는 비둘기에 이어 통일, 행복, 안정 순이었다. 이러한 연합 강도의 순서는 1순위와 1+2+3순위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1순위 단어들의 순서는 통일, 비둘기,

86) George R. Kiss, "An Associative Thesaurus of English: Structural Analysis of a Large Relevance Network," in *Studies in Long Term Memory*, eds. Alan Kennedy and Alan Wilkes (London: Wiley, 1975), pp. 103~121.

자유, 행복, 전쟁의 부재 순이었다. 1+2+3순위에서는 통일, 자유, 행복, 비둘기, 안정, 전쟁의 부재였다.

하지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반응어의 연합강도, 즉 평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한주민의 경우(<표 II-1>) 비둘기가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표 II-2>)의 경우 통일이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였다. 이러한 경향은 1순위 단어에서 강력했으며 1+2+3순위 단어에서도 관찰되었다.

<표 II-1> 남한주민이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비율과 빈도

1+2+3순위(3000단어)		1순위(1000)		Linden 등 (2011) (2418)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비둘기	13.0(389)	비둘기	21.1(211)	자유(freedom)	7.9(192)
통일	9.9(297)	통일	17.5(175)	행복(happiness)	6.4(154)
자유	7.0(210)	자유	8.0(80)	조화(harmony)	5.8(141)
행복	5.9(176)	행복	4.9(49)	사랑(love)	5.4(130)
안정	3.8(113)	안정	3.8(38)	번영(prosperity)	4.8(116)
사랑	2.5(76)	안전	2.8(29)	협업(cooperation)	3.1(76)
편안함	2.4(73)	전쟁	2.7(27)	United Nations	3.0(73)
화합	2.4(72)	사랑	2.6(26)	안보(security)	2.6(62)
안전	2.2(66)	편안함	2.3(23)	평등(equality)	2.4(59)
전쟁	2.0(59)	화합	2.1(21)	전쟁부재(no-war)	2.3(56)

<표 II-2> 북한이탈주민이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비율과 빈도

1+2+3순위(1200단어)		1순위(400)		Linden 등 (2011) (2418)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통일	16.3(195)	통일	27.0(108)	자유(freedom)	7.9(192)
자유	7.1(85)	비둘기	10.8(43)	행복(happiness)	6.4(154)
행복	6.3(75)	자유	10.5(42)	조화(harmony)	5.8(141)
비둘기	4.9(59)	행복	5.0(20)	사랑(love)	5.4(130)

1+2+3순위(1200단어)		1순위(400)		Linden 등 (2011) (2418)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단어	비율(빈도)
안정	3.2(38)	전쟁부재	4.5(18)	번영(prosperity)	4.8(116)
전쟁부재	3.2(38)	안정	4.0(16)	협업(cooperation)	3.1(76)
평화	2.8(34)	전쟁	2.5(10)	United Nations	3.0(73)
사랑	2.3(28)	화합	2.3(9)	안보(security)	2.6(62)
민주주의	2.2(26)	평화	2.0(8)	평등(equality)	2.4(59)
편안	2.2(26)	기쁨	1.8(7)	전쟁부재(no-war)	2.3(56)

두 집단 간 또 다른 공통점은 평화와 경제적 가치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번영, 부유함 등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극히 드물었다. 경제적 번영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단어(경제, 돈, 번영, 풍요, 살기 좋음 등)는 3,000개 단어 중 36개, 즉 1.2%에 불과했다. 이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평화라는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비둘기와 통일이 평화와 연합된 강도의 차이를 빼면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은 평화와 관련하여 전쟁의 부재를 언급한 반면 남한주민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 상황으로 인식하는 소위 소극적 평화에 남한주민에 비해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주민 역시 1순위에서는 2.7%, 1+2+3순위에서는 2.0%가 전쟁을 평화와 연합시켰다. 북한이탈주민이 전쟁에 대한 언급(1순위: 2.5%)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전쟁의 부재를 평화와 관련시켰다는 점에서 남한주민이 보이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평화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가 크게 없었다는 점도 다소 놀라운 결과이다.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는 통일에 대한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식조사는 거의 매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은 대동소이하다(남한주민: <표 II-3>, <표 II-4>).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과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II-5>, <표 II-6>). 보수일수록 통일을, 진보일수록 자유를 언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과 비둘기를 언급한 비율은 감소하고 행복, 안정을 언급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II-3〉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비둘기	22.5(39)	24.6(42)	23.2(47)	13.4(27)	22.2(56)	23.2(54)	26.1(97)	15.2(60)
통일	18.5(32)	21.1(36)	15.3(31)	19.4(39)	14.7(37)	18.5(43)	18.6(69)	15.9(63)
자유	4.0(7)	7.0(12)	9.9(20)	8.5(17)	9.5(24)	6.4(15)	9.7(36)	7.3(29)
행복	5.2(9)	4.1(7)	3.4(7)	6.0(12)	5.6(14)	4.7(11)	4.3(16)	5.6(22)
안정	1.7(3)	2.9(5)	3.9(8)	4.5(9)	5.2(13)	4.7(11)	4.3(16)	2.8(11)
안전	4.0(7)	2.3(4)	3.0(6)	2.0(4)	3.2(8)	2.1(5)	1.6(6)	4.5(18)
전쟁	3.5(6)	2.9(5)	1.0(2)	4.5(9)	2.0(5)	1.3(3)	2.2(8)	4.0(16)
사랑	3.5(6)	2.3(4)	2.5(5)	3.5(7)	1.6(4)	.9(2)	3.2(12)	3.0(12)
편안함	1.2(2)	.0(0)	2.0(4)	3.5(7)	4.0(10)	3.9(9)	1.9(7)	1.8(7)
화합	2.3(4)	1.8(3)	2.0(4)	1.0(2)	3.2(8)	3.0(7)	1.1(4)	2.5(10)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비둘기	17.4(34)	26.6(80)	20.6(22)	21.2(21)	21.8(22)	13.5(21)	26.2(11)
통일	17.9(35)	22.9(69)	11.2(12)	13.1(13)	16.8(17)	12.3(19)	23.8(10)
자유	7.7(15)	8.6(26)	13.1(14)	9.1(9)	5.0(5)	7.1(11)	.0(0)
행복	6.2(12)	2.7(8)	3.7(4)	3.0(3)	9.9(10)	6.5(10)	4.8(2)
안정	1.0(2)	3.3(10)	3.7(4)	.0(0)	13.9(14)	4.5(7)	2.4(1)
안전	1.5(3)	1.7(5)	6.5(7)	5.1(5)	2.0(2)	4.5(7)	.0(0)
전쟁	4.1(8)	4.3(13)	.0(0)	.0(0)	.0(0)	1.3(2)	9.5(4)
사랑	4.1(8)	.7(2)	2.8(3)	7.1(7)	.0(0)	3.9(6)	.0(0)
편안함	.5(1)	2.3(7)	.9(1)	3.0(3)	5.9(6)	3.2(5)	.0(0)
화합	1.5(3)	1.7(5)	3.7(4)	2.0(2)	1.0(1)	2.6(4)	4.8(2)

〈표 II-4〉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2+3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비둘기	13.3(69)	13.1(67)	12.8(78)	11.8(71)	13.8(104)	13.7(96)	13.2(147)	12.3(146)
통일	10.4(54)	11.1(57)	8.2(50)	10.1(61)	9.9(75)	10.7(75)	10.2(114)	9.1(108)
자유	4.8(25)	6.4(33)	8.5(52)	6.6(40)	7.9(60)	6.2(43)	7.4(82)	7.2(85)
행복	5.4(28)	4.7(24)	6.1(37)	6.3(38)	6.5(49)	5.7(40)	6.0(67)	5.8(69)
안정	1.9(10)	3.9(20)	4.8(29)	4.3(26)	3.7(28)	5.2(36)	3.8(42)	2.9(35)
사랑	3.5(18)	3.7(19)	2.0(12)	2.5(15)	1.6(12)	1.3(9)	2.8(31)	3.0(36)
편안함	1.3(7)	1.8(9)	2.3(14)	2.7(16)	3.6(27)	2.7(19)	2.5(28)	2.2(26)
화합	1.7(9)	2.7(14)	2.1(13)	1.8(11)	3.3(25)	3.0(21)	2.2(25)	2.2(26)
안전	2.3(12)	2.1(11)	2.6(16)	1.5(9)	2.4(18)	1.7(12)	1.8(20)	2.9(34)
전쟁	2.1(11)	1.8(9)	1.3(8)	2.7(16)	2.0(15)	1.3(9)	2.2(24)	2.2(26)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비둘기	13.3(78)	13.1(118)	12.8(41)	13.8(41)	16.2(49)	9.5(44)	14.3(18)
통일	9.4(55)	11.8(107)	6.9(22)	10.8(32)	9.9(30)	7.1(33)	14.3(18)
자유	6.8(40)	6.0(54)	9.7(31)	8.8(26)	5.6(17)	8.8(41)	.8(1)
행복	5.8(34)	4.7(42)	5.9(19)	5.1(15)	10.2(31)	5.6(26)	7.1(9)
안정	2.1(12)	3.8(34)	3.4(11)	.3(1)	9.9(30)	5.2(24)	.8(1)
사랑	2.7(16)	2.0(18)	1.9(6)	5.4(16)	1.3(4)	3.0(14)	1.6(2)
편안함	.7(4)	2.1(19)	.9(3)	3.4(10)	8.3(25)	2.4(11)	.8(1)
화합	2.1(12)	3.0(27)	4.0(13)	.7(2)	2.0(6)	1.9(9)	2.4(3)
안전	1.0(6)	.9(8)	4.4(14)	6.1(18)	2.3(7)	2.4(11)	1.6(2)
전쟁	2.7(16)	1.8(16)	1.6(5)	.3(1)	1.3(4)	1.3(6)	8.7(11)

〈표 II-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년 이상
통일	28.6(10)	26.3(10)	25.2(29)	33.7(33)	22.8(26)	33.1(52)	23.4(29)	22.7(27)	27.2(22)	29.0(29)	33.0(33)	20.2(24)
비둘기	17.1(6)	13.2(5)	4.3(5)	16.3(16)	9.6(11)	10.8(17)	12.9(16)	8.4(10)	13.6(11)	10.0(10)	12.0(12)	8.4(10)
자유	2.9(1)	10.5(4)	16.5(19)	6.1(6)	10.5(12)	8.3(13)	11.3(14)	12.6(15)	9.9(8)	16.0(16)	6.0(6)	10.1(12)
행복	8.6(3)	2.6(1)	2.6(3)	5.1(5)	7.0(8)	7.0(11)	4.0(5)	3.4(4)	1.2(1)	3.0(3)	3.0(3)	10.9(13)
전쟁부재	2.9(1)	2.6(1)	3.5(4)	6.1(6)	5.3(6)	3.2(5)	4.8(6)	5.9(7)	6.2(5)	7.0(7)	2.0(2)	3.4(4)
안정	2.9(1)	2.6(1)	5.2(6)	4.1(4)	3.5(4)	3.8(6)	2.4(3)	5.9(7)	1.2(1)	2.0(2)	2.0(2)	9.2(11)
전쟁	2.9(1)	2.6(1)	3.5(4)	2.0(2)	1.8(2)	2.5(4)	3.2(4)	1.7(2)	2.5(2)	.0(0)	5.0(5)	2.5(3)
화합	5.7(2)	2.6(1)	2.6(3)	1.0(1)	1.8(2)	1.9(3)	1.6(2)	3.4(4)	3.7(3)	1.0(1)	3.0(3)	1.7(2)
평화	2.9(1)	2.6(1)	1.7(2)	3.1(3)	.9(1)	1.9(3)	1.6(2)	2.5(3)	1.2(1)	2.0(2)	1.0(1)	3.4(4)
기쁨	.0(0)	.0(0)	2.6(3)	2.0(2)	1.8(2)	1.3(2)	2.4(3)	1.7(2)	2.5(2)	1.0(1)	2.0(2)	1.7(2)

〈표 II-6〉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단어수준 표상: 1+2+3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년 이상
통일	16.2(17)	15.8(18)	15.4(53)	19.7(58)	14.6(50)	19.1(90)	14.5(54)	14.6(52)	18.1(44)	17.0(51)	16.0(48)	14.8(53)
자유	1.0(1)	6.1(7)	10.4(36)	6.5(19)	6.4(22)	7.2(34)	5.9(22)	8.1(29)	6.6(16)	8.7(26)	6.0(18)	7.0(25)
행복	6.7(7)	6.1(7)	5.2(18)	7.1(21)	6.7(23)	6.6(31)	5.6(21)	6.7(24)	5.3(13)	5.0(15)	5.3(16)	9.0(32)
비둘기	6.7(7)	5.3(6)	3.5(12)	6.1(18)	4.7(16)	5.1(24)	5.9(22)	3.6(13)	6.6(16)	5.0(15)	5.0(15)	3.6(13)
안정	6.7(7)	.9(1)	2.9(10)	2.4(7)	3.8(13)	2.8(13)	2.7(10)	4.2(15)	2.1(5)	2.7(8)	1.7(5)	5.6(20)
전쟁부재	2.9(3)	.9(1)	2.6(9)	3.7(11)	4.1(14)	3.2(15)	2.7(10)	3.6(13)	3.7(9)	5.0(15)	1.7(5)	2.5(9)
평화	3.8(4)	5.3(6)	1.7(6)	3.7(11)	2.0(7)	3.6(17)	1.6(6)	3.1(11)	1.6(4)	3.0(9)	3.0(9)	3.4(12)
사랑	1.0(1)	5.3(6)	1.4(5)	2.0(6)	2.9(10)	1.5(7)	4.3(16)	1.4(5)	2.5(6)	1.7(5)	2.3(7)	2.8(10)
민주주의	1.0(1)	.9(1)	3.8(13)	1.7(5)	1.8(6)	2.1(10)	1.9(7)	2.5(9)	2.1(5)	3.3(10)	2.7(8)	.8(3)
편안	1.0(1)	2.6(3)	2.3(8)	2.4(7)	2.0(7)	2.1(10)	2.4(9)	2.0(7)	2.5(6)	2.0(6)	2.0(6)	2.2(8)

다. 범주 수준별 분석

가장 많이 언급된 최빈(最頻)단어들을 범주별로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관계,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통일, 폭력, 폭력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⁷⁾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관계,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물리적 안정, 상징, 폭력의 부재, 폭력 순이었다.

평화와 연합된 단어를 범주화했을 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한주민은 평화를 상징, 그리고 행복과 같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표 II-7〉 평화와 연합된 단어의 범주화 결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1+2+3순위(3000)	1순위(1000)	1+2+3순위(1200)	1순위(400)
상징	23.8(713)	29.4(294)	6.9(83)	11.0(44)
긍정적 정서	14.7(440)	10.4(104)	12.5(149)	9.0(36)
통일	9.9(297)	17.5(175)	16.4(196)	27.0(108)
공공 권리	9.3(279)	9.4(94)	11.5(137)	13.3(53)
관계	7.8(234)	5.2(52)	15.1(181)	12.3(49)
물리적 안정	7.2(217)	7.1(71)	7.1(85)	7.2(29)
마음의 평온	6.1(183)	4.4(44)	3.3(40)	2.0(8)
폭력의 부재	3.7(112)	2.6(26)	4.9(59)	5.5(22)
폭력	3.1(94)	3.6(36)	2.8(33)	3.3(13)
부	1.8(55)	1.1(11)	2.4(29)	1.5(6)
협상	2.3(70)	2.3(23)	.7(8)	.3(1)

87) 상징: 비둘기, DMZ, 문제인, 김정은, 트럼프, 노벨평화상, 올리브, 올림픽, 판문점, 자연 등
 긍정적 정서: 기쁨, 따뜻함, 미소, 부드러움, 사랑, 아름다움, 안락, 여유, 즐거움, 행복 등
 공공 권리: 노력, 민주주의, 인권, 자유, 정의, 평등 등
 관계: 가족, 공존, 대화, 믿음, 소통, 이해, 존중, 한민족, 협력, 화합, 화해 등
 사회적 질서: 안보, 안심, 안전, 안정 등
 마음의 평온: 고요함, 잔잔함, 편안, 평온 등
 폭력의 부재: 갈등부재, 걱정부재, 비핵화, 전쟁부재, 휴전 등
 폭력: 6·25, 전쟁, 이산가족, 핵 등
 협상: 남북대화, 평화협정, 협상, 정상회담, 회담 등

큰 틀에서 본다면 범주화 결과 역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없었다. 남한주민의 경우(〈표 II-8〉, 〈표 II-9〉)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물리적 안정을 평화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40대와 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화와 통일의 연합 강도가 낮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상징을 언급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인천/경기 및 강원/제주가 통일을 언급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표 II-10〉, 〈표 II-11〉) 1순위 기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평화를 생각할 때 집단적 관점이 약화되고 개인적 관점이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상징, 통일, 관계를 언급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긍정적 정서, 물리적 안정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8〉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상징	30.6(53)	35.7(61)	33.0(67)	21.4(43)	27.8(70)	29.6(69)	32.1(119)	26.8(106)
통일	18.5(32)	21.1(36)	15.3(31)	19.4(39)	14.7(37)	18.5(43)	18.6(69)	15.9(63)
긍정적 정서	11.0(19)	8.8(15)	6.9(14)	13.9(28)	11.1(28)	9.4(22)	10.0(37)	11.4(45)
공공 권리	4.0(7)	8.2(14)	11.8(24)	9.0(18)	12.3(31)	7.3(17)	10.5(39)	9.6(38)
물리적 안정	5.8(10)	5.8(10)	6.9(14)	6.5(13)	9.5(24)	7.7(18)	6.2(23)	7.6(30)
관계	6.4(11)	3.5(6)	3.9(8)	5.5(11)	6.3(16)	6.4(15)	3.0(11)	6.6(26)
마음의 평온	5.2(9)	2.9(5)	2.5(5)	6.5(13)	4.8(12)	5.6(13)	4.6(17)	3.5(14)
폭력	5.2(9)	2.9(5)	2.5(5)	4.5(9)	3.2(8)	2.1(5)	3.0(11)	5.1(20)
폭력의 부재	3.5(6)	3.5(6)	3.4(7)	2.0(4)	1.2(3)	3.4(8)	2.2(8)	2.5(10)
협상	1.7(3)	1.2(2)	4.9(10)	2.0(4)	1.6(4)	3.0(7)	2.4(9)	1.8(7)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상징	26.2(51)	30.9(93)	29.0(31)	42.4(42)	25.7(26)	20.6(32)	45.2(19)
통일	17.9(35)	22.9(69)	11.2(12)	13.1(13)	16.8(17)	12.3(19)	23.8(10)
긍정적 정서	11.8(23)	6.3(19)	9.3(10)	13.1(13)	11.9(12)	16.1(25)	4.8(2)
공공 권리	9.2(18)	10.6(32)	13.1(14)	11.1(11)	6.9(7)	7.7(12)	.0(0)
물리적 안정	3.1(6)	5.0(15)	10.3(11)	5.1(5)	15.8(16)	11.0(17)	2.4(1)
관계	7.7(15)	3.7(11)	7.5(8)	5.1(5)	3.0(3)	4.5(7)	7.1(3)
마음의 평온	2.6(5)	3.3(10)	6.5(7)	4.0(4)	7.9(8)	5.8(9)	2.4(1)
폭력	4.1(8)	5.3(16)	3.7(4)	.0(0)	.0(0)	2.6(4)	9.5(4)
폭력의 부재	4.1(8)	3.7(11)	.9(1)	1.0(1)	2.0(2)	1.9(3)	.0(0)
협상	2.6(5)	3.3(10)	.9(1)	.0(0)	2.0(2)	1.9(3)	4.8(2)

〈표 II-9〉 남한주민의 연령, 이념, 지역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2+3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상징	25.0(130)	24.4(125)	26.3(160)	21.1(127)	22.5(170)	21.3(149)	23.4(260)	25.5(303)
긍정적 정서	15.0(78)	15.2(78)	13.5(82)	15.3(92)	14.6(110)	12.6(88)	16.4(182)	14.3(170)
통일	10.4(54)	11.1(57)	8.2(50)	10.1(61)	9.9(75)	10.7(75)	10.2(114)	9.1(108)
공공 권리	7.7(40)	8.2(42)	11.0(67)	9.0(54)	10.1(76)	7.9(55)	9.3(104)	10.1(120)
관계	7.1(37)	6.8(35)	6.7(41)	9.0(54)	8.9(67)	10.0(70)	6.7(75)	7.5(89)
물리적 안정	5.2(27)	7.2(37)	9.2(56)	6.5(39)	7.7(58)	8.2(57)	7.0(78)	6.9(82)
마음의 평온	5.6(29)	5.5(28)	3.8(23)	7.8(47)	7.4(56)	6.3(44)	6.5(72)	5.6(67)
폭력의 부재	3.1(16)	4.7(24)	3.3(20)	3.5(21)	4.1(31)	6.2(43)	3.4(38)	2.6(31)
폭력	3.3(17)	3.1(16)	2.8(17)	3.5(21)	3.0(23)	2.6(18)	3.2(36)	3.4(40)
협상	2.3(12)	3.3(17)	3.4(21)	3.0(18)	2.1(16)	3.0(21)	3.6(40)	1.9(23)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상징	24.3(142)	21.0(190)	23.4(75)	30.6(91)	22.1(67)	20.9(97)	39.7(50)
긍정적 정서	12.8(75)	15.2(137)	13.7(44)	17.2(51)	17.2(52)	14.6(68)	10.3(13)
통일	9.4(55)	11.8(107)	6.9(22)	10.8(32)	9.9(30)	7.1(33)	14.3(18)
공공 권리	9.4(55)	9.1(82)	10.9(35)	12.8(38)	7.3(22)	9.7(45)	1.6(2)
관계	9.6(56)	9.1(82)	9.0(29)	3.4(10)	4.3(13)	8.2(38)	4.8(6)
물리적 안정	5.3(31)	6.0(54)	8.1(26)	6.4(19)	12.2(37)	10.1(47)	2.4(3)
마음의 평온	3.8(22)	3.9(35)	8.4(27)	6.4(19)	11.9(36)	7.5(35)	7.1(9)
폭력의 부재	2.9(17)	6.3(57)	1.9(6)	2.0(6)	4.0(12)	3.0(14)	.0(0)
폭력	3.9(23)	3.0(27)	3.7(12)	1.0(3)	1.7(5)	2.2(10)	11.1(14)
협상	2.2(13)	5.0(45)	4.0(13)	.3(1)	1.0(3)	1.5(7)	1.6(2)

〈표 II-10〉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년 이상
통일	28.6(10)	26.3(10)	25.2(29)	33.7(33)	22.8(26)	33.1(52)	23.4(29)	22.7(27)	27.2(22)	29.0(29)	33.0(33)	20.2(24)
공공 권리	8.6(3)	13.2(5)	20.0(23)	7.1(7)	13.2(15)	8.9(14)	15.3(19)	16.8(20)	14.8(12)	18.0(18)	10.0(10)	10.9(13)
관계	17.1(6)	10.5(4)	13.9(16)	6.1(6)	14.9(17)	10.8(17)	16.1(20)	10.1(12)	14.8(12)	11.0(11)	14.0(14)	10.1(12)
상징	20.0(7)	13.2(5)	4.3(5)	16.3(16)	9.6(11)	10.8(17)	12.9(16)	9.2(11)	14.8(12)	10.0(10)	12.0(12)	8.4(10)
긍정적 정서	8.6(3)	5.3(2)	7.0(8)	8.2(8)	13.2(15)	10.2(16)	8.9(11)	7.6(9)	6.2(5)	5.0(5)	7.0(7)	16.0(19)
물리적 안정	5.7(2)	5.3(2)	9.6(11)	6.1(6)	7.0(8)	7.6(12)	4.8(6)	9.2(11)	1.2(1)	10.0(10)	4.0(4)	11.8(14)
폭력의 부재	2.9(1)	2.6(1)	5.2(6)	6.1(6)	7.0(8)	4.5(7)	4.8(6)	7.6(9)	7.4(6)	7.0(7)	4.0(4)	4.2(5)
폭력	2.9(1)	2.6(1)	3.5(4)	4.1(4)	2.6(3)	3.8(6)	3.2(4)	2.5(3)	2.5(2)	.0(0)	5.0(5)	5.0(6)
마음의 평온	2.9(1)	5.3(2)	1.7(2)	1.0(1)	1.8(2)	1.3(2)	.8(1)	4.2(5)	2.5(2)	2.0(2)	3.0(3)	.8(1)
부	.0(0)	2.6(1)	1.7(2)	2.0(2)	.9(1)	1.9(3)	2.4(3)	.0(0)	.0(0)	1.0(1)	2.0(2)	2.5(3)

〈표 II-11〉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이념, 남한 거주기간별 평화에 대한 범주수준 표상: 1+2+3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수	중도	진보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년 이상
통일	16.2(17)	16.7(19)	15.4(53)	19.7(58)	14.6(50)	19.3(91)	14.6(54)	14.6(52)	18.1(44)	17.3(52)	16.1(48)	14.8(53)
관계	16.2(17)	14.0(16)	16.0(55)	11.6(34)	17.3(59)	13.8(65)	17.3(64)	14.6(52)	15.6(38)	14.0(42)	17.7(53)	13.4(48)
긍정적 정서	10.5(11)	13.2(15)	11.6(40)	12.9(38)	13.7(47)	11.5(54)	14.6(54)	12.0(43)	11.1(27)	10.0(30)	10.4(31)	17.6(63)
공공 권리	3.8(4)	7.0(8)	16.6(57)	9.5(28)	11.7(40)	10.8(51)	10.0(37)	13.7(49)	10.3(25)	14.3(43)	9.0(27)	11.8(42)
물리적 안정	9.5(10)	3.5(4)	6.7(23)	6.1(18)	8.8(30)	6.8(32)	6.7(25)	7.8(28)	3.7(9)	8.0(24)	6.4(19)	9.2(33)
상징	14.3(15)	6.1(7)	4.9(17)	7.5(22)	6.4(22)	6.8(32)	7.5(28)	6.4(23)	9.5(23)	7.3(22)	6.7(20)	5.0(18)
폭력의 부재	3.8(4)	2.6(3)	5.5(19)	5.1(15)	5.3(18)	5.3(25)	4.3(16)	5.0(18)	4.9(12)	6.7(20)	4.3(13)	3.9(14)
마음의 평온	2.9(3)	4.4(5)	3.5(12)	3.7(11)	2.6(9)	2.5(12)	4.0(15)	3.6(13)	4.1(10)	3.0(9)	4.0(12)	2.5(9)
폭력	4.8(5)	1.8(2)	2.9(10)	3.4(10)	1.8(6)	1.9(9)	2.4(9)	4.2(15)	4.1(10)	.3(1)	3.0(9)	3.6(13)
부	.0(0)	1.8(2)	2.9(10)	1.7(5)	3.5(12)	3.0(14)	3.0(11)	1.1(4)	1.2(3)	3.0(9)	3.0(9)	2.2(8)

라. 소결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단어연합과제의 결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두 집단의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한주민이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북한이탈주민이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는 경향에 비해 강했다. 다시 말해 개인과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평화인식은 다르다는 결과를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평화를 비둘기로 생각하는 경향, 특히 남한주민의 경향은 보편적이지 않다. 평화를 비둘기와 같이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결과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대비된다. 미국인과 덴마크인 812명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단어연합과제를 실시한 연구에서⁸⁸⁾ 평화를 생각할 때 자주 언급된 고빈도 단어 중 상징적 단어는 없었다.⁸⁹⁾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가 언급된 경우는 24회로 단 1%에 불과했다. 한국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평화를 생각할 때 미국인과 덴마크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freedom)였으며, 행복(happiness), 조화(harmony), 사랑(love), 번영(prosperity)이 그 뒤를 따랐다. 범주화 결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포함한 ‘공공 권리’에 대한 단어가 1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II-1〉, 〈표 II-2〉).

평화를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갈등이 고질화, 일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이는

88)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p. 217~242. 전체 2,408 단어 중 14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33개, 1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425개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2,408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다.

89) UN을 상징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UN을 상징에서 제외하였다.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고질화된 갈등 속에서 출생·성장한 세대에는 적대 집단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포함한 분쟁의 삶이 일상화되었으며 분쟁 속에서의 삶 이외에 다른 삶을 알지 못한다.

고질화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집단은 평화를 공동체의 목표로 설정한다. 분쟁이라는 암흑 터널 속에서 평화는 터널 끝을 암시하는 목표와 상징으로 작동한다. 구성원에게 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희망을 제공하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과정이 생략된 목표로서의 평화는 실체가 없으며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하다. 삶과 유리되어 있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한국인들에게 평화가 비둘기인 이유이다.

한국인과 서구인의 평화인식의 유사점 역시 존재한다. 한국인이 언급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의 비중이 다소 크긴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공공 권리와 긍정적 정서를 평화의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뒤를 사회적 질서와 관계에 대한 단어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폭력, 폭력의 부재에 해당하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덴마크 국민과 미국 국민의 평화인식 차이를 연구한 Linden의 분석에 의하면 전술한 차이점을 제외한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덴마크 국민보다는 미국 국민의 평화인식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질화된 사회의 평화인식, 그리고 비교적 전쟁 경험이 부재했던 북유럽 국민의 평화인식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모순들, 소위 ‘분단 폭력’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속에서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된 공동체가 생각하는 평화인식에서 ‘폭

력'과 '폭력의 부재'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결과는 분단은 우리사회에 상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단의 폭력이 불편하지 않으며 항상 있어왔던 것, 그리고 감내해야 하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부분이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비평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평화 상태는 '비정상'의 삶이 아니라 '정상적', '일상적' 삶이 되어 버린 것이다. '평화는 비둘기이다'라는 명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낮은 관련성은 주목해야 한다. 최근 '평화는 경제다'라는 명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곧 경제적 번영으로 치환하거나, 평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화를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개인의 안정과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한국인의 평화인식 때문이다. 상징으로서의 평화를 생활로서의 평화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평화에 대한 단어연합과제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남북한 화해에 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한반도 평화와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개관

가.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6문항),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6문항), 협력을 통한 평화(8문항), 군사력을 통한 평화(8문항),

남북화해(4문항),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4문항), 경쟁적 피해자 의식(4문항), 용서(6문항)에 대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요약하였다. 남한주민에게는 일반적 차원에서 평화와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본 장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⁹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일반적 수준에서의 평화,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결과가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태도를 측정한 문항의 평균에 대한 분석으로도 본 연구가 목표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항별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반응 경향성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평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결과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히,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극단적 응답 경향성이 있었다. 즉 9점 척도 상에서 9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았다. 이는 주어진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의 측면에서는 비슷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낮더라도 평균은 북한이탈주민이 높아지는 경우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장을 집필한 두 연구자는 평균에 근거한 분석과 문항에 근거한 분석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자들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보다는 남한주민 내, 북한이탈주민 내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⁹¹⁾

90) 일반적 차원의 질문의 예는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며 한반도 차원의 질문의 예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이다.

91) 전반적 평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각 수준의 평균에서 관찰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

나.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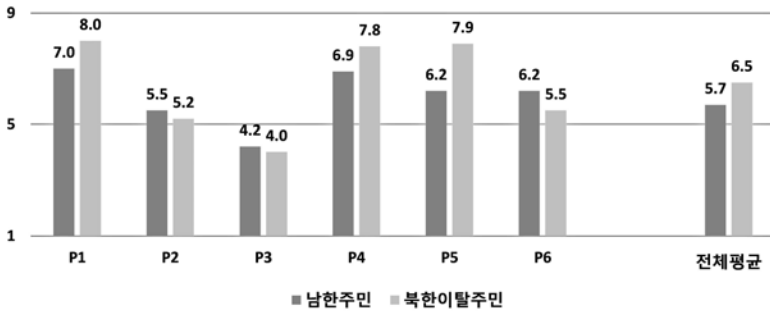
서론에서 이미 문항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문항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태도(P)와 전쟁에 대한 태도(W)는 각각 6개 문항,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II-1>과 <그림 II-2>, 그리고 <표 II-12>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 P1.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 P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 P3.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 P4.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P5.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 P6.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 W1.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 W2.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 W3.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 W4.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 W5.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 W6.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민 차이를 집단 간 근본적 차이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4장의 성격 유형에 따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에 대한 차이 결과에서 보듯이 심리·사회 문화적 변수에서 두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장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이 관찰될 수도 있다.

〈그림 II-1〉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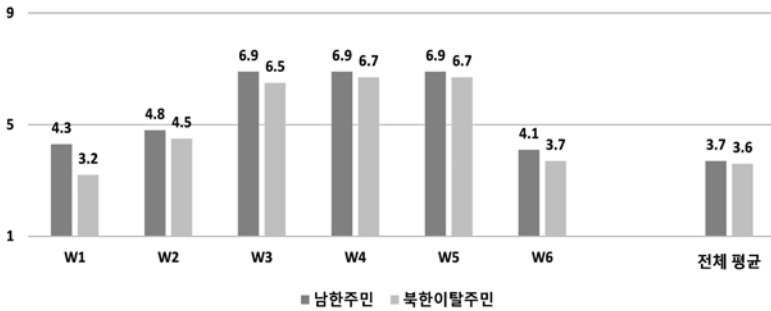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는 5.7점, 북한이탈주민은 6.5점으로 나와 중앙치인 5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화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진술한 명제(P1, P4, P5)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뚜렷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평화를 부정적으로 진술한 명제(P2, P3, P6)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평화에 대해서도 이익과 비용의 측면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평화의 가치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더 긍정적이지만 평화를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는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남한주민의 평화에 대한 태도는 평화에 대한 표상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도와 진보가 보수에 비해 평화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다른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적어도 피상적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

92) 전체 평균은 P2, P3, P6을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적 평화의 공감대는 오히려 평화맹(平和盲)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사회는 평화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림 II-2〉 한반도 전쟁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³⁾



〈표 II-12〉 한반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⁴⁾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평화	전쟁	구분	평화	전쟁
전체(1,000명)		5.7(.03)	3.7(.04)	전체(400명)	6.5(.07)	3.6(.09)
남성		5.7(.04)	3.8(.06)	남성	6.5(.15)	3.5(.18)
여성		5.7(.04)	3.7(.06)	여성	6.5(.08)	3.6(.10)
20대(173명)		5.7(.08)	3.7(.11)	20대(35명)	6.5(.25)	3.2(.30)
30대(171명)		5.5(.07)	3.8(.10)	30대(38명)	6.5(.25)	3.5(.30)
40대(203명)		5.8(.06)	3.6(.10)	40대(115명)	6.6(.14)	3.3(.16)
50대(201명)		5.8(.06)	3.7(.10)	50대(98명)	6.5(.15)	3.5(.18)
60세+(252명)		5.7(.05)	3.9(.09)	60세+(114명)	6.3(.13)	4.0(.17)
보수(233명)		5.6(.07)	3.9(.10)	보수(157명)	6.2(.12)	4.0(.15)
중도(371명)		5.7(.04)	3.8(.07)	중도(124명)	6.7(.11)	3.2(.14)
진보(396명)		5.7(.05)	3.7(.07)	진보(119명)	6.8(.13)	3.3(.17)

93) 전체 평균은 W3, W4, W5를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9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음영 처리하였다.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평화	전쟁	구분	평화	전쟁
-300만원(160명)	5.6(.07)	4.0(.11)	-3년(81명)	6.8(.16)	3.3(.19)
300-500만원(513명)	5.7(.04)	3.7(.06)	3-6년(100명)	6.3(.14)	3.8(.18)
500만원+(325명)	5.7(.05)	3.7(.08)	6-9년 (100명)	6.6(.14)	3.6(.19)
			9년+(119명)	6.5(.13)	3.5(.16)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전쟁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중앙치인 5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평화에 대한 태도가 전쟁에 대한 태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주민이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3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전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이념에 따른 차이, 연령대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전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진보와 증도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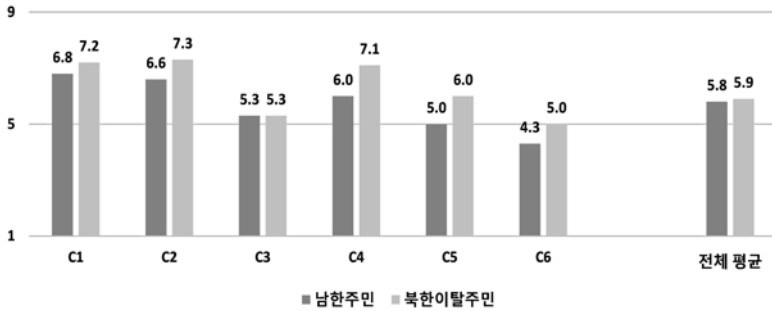
다.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협력을 통한 평화(C)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M)는 각각 8개 문항,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II-3>과 <그림 II-4>, 그리고 <표 II-13>에 제시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전쟁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6개 문항과 자문회의와 공동연구자회의를 통해 선정한 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문회의와 공동연구자회의를 통해 추가된 각 2개 문항은(C7, C8, M1, M2) 긍정과 부정의 속성이 뚜렷하지 않아 평균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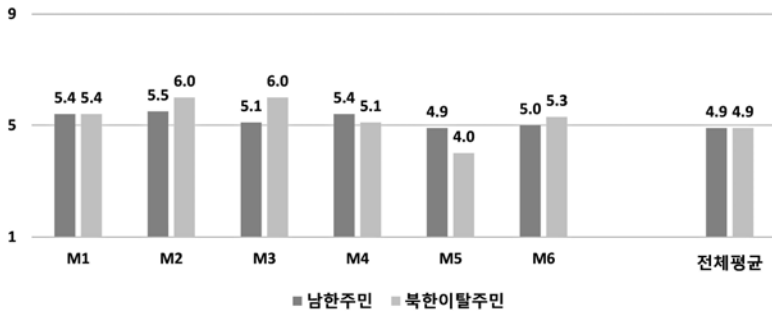
- C1.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C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C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 C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C5.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 C6.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 C7.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 C8.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M1.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 M2.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M3.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 M4.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M5.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 M6.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 M7.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M8.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그림 11-3〉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⁵⁾



〈그림 11-4〉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⁶⁾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선호가 군사력에 대한 선호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과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응답의 차이는 전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차이에 비해 작았다. 상대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한반도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

95) 전체 평균은 C2, C3, C6을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96) 전체 평균은 M2, M4, M6을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다는 반응이 절대적이지만(W3, 6.9점), 평화 실현에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반응(M1, 5.4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북한을 군사력으로 견제(억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이념적 지향에 따른 협력/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났다. 진보일수록 협력에 의한 평화를 선호했으며, 보수일수록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이념에 따른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군사력 사용에 호의적이었다. 성별,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13〉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협력	군사력	구분	협력	군사력
전체(1,000명)	5.8(.03)	4.9(.02)	전체(400명)	5.9(.07)	4.9(.07)
남성	5.8(.04)	5.0(.04)	남성	5.7(.16)	5.0(.14)
여성	5.8(.04)	4.9(.03)	여성	5.9(.08)	4.8(.08)
20대(173명)	5.9(.08)	4.9(.06)	20대(35명)	5.8(.23)	4.2(.22)
30대(171명)	5.7(.07)	5.0(.05)	30대(38명)	5.6(.24)	4.6(.19)
40대(203명)	5.9(.07)	4.9(.05)	40대(115명)	6.0(.15)	4.6(.14)
50대(201명)	5.8(.06)	4.9(.05)	50대(98명)	6.0(.13)	5.1(.13)
60세+(252명)	5.7(.05)	4.9(.05)	60세+(114명)	5.8(.12)	5.1(.11)
보수(233명)	5.7(.06)	5.1(.05)	보수(157명)	5.5(.13)	5.3(.10)
중도(371명)	5.7(.04)	4.9(.04)	중도(124명)	6.1(.11)	4.6(.11)
진보(396명)	5.9(.05)	4.8(.04)	진보(119명)	6.2(.12)	4.5(.14)
-300만원(160명)	5.7(.06)	4.9(.05)	-3년(81명)	5.8(.12)	4.7(.15)
300-500만원(513명)	5.8(.04)	4.9(.03)	3-6년(100명)	.0(.00)	4.8(.13)
500만원+(325명)	5.8(.05)	4.9(.05)	6-9년(100명)	.0(.00)	4.9(.14)
			9년+(119명)	.0(.00)	4.9(.13)

라. 화해, 제로섬 인식, 경쟁적 피해자 의식, 용서

기존의 설문조사 연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문항은 북한을 적대, 경계, 협력, 지원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R),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지(Z),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누가 더 피해자인지(V), 그리고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있는지(F)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 R1.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대부분 북한에 있다.
- R2.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이다.
- R3. 북한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 R4. 북한은 남한을 해하려 하는 존재들이다.

- Z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 Z2.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 Z3.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배려한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 Z4.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 V1.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 V2.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피해자이다.
- V3.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V4.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상
과 고통)가 북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

F1.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

F2. 나에게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갚음 하는 것은 중요
하다.

F3.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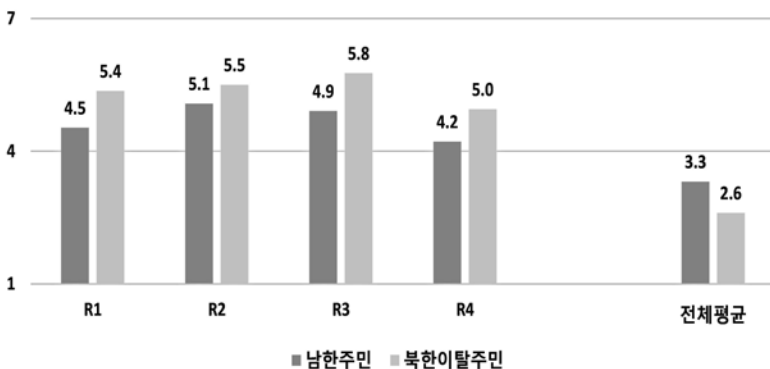
F4.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F5. 남북 간에 화합은 의미가 없다.

F6.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북한과 화해할 의도는 높았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중앙치인 4점에 유의하게 낮다는 점에서 아직
까지 한국 국민은 북한과 화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5〉 화해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⁹⁷⁾



97) 전체 평균은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수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II-14〉). 남한주민의 경우 성별을 제외만 연령, 이념, 소득수준에 따라 화해 태도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화해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통일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세대라고 알려진 20대가 북한에 대한 화해 의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II-14〉 화해, 제로섬 인식, 피해자 인식, 용서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화해	제로섬	피해자	용서	구분	화해	제로섬	피해자	용서
전체(1,000명)	3.3(.04)	4.1(.04)	4.9(.02)	4.2(.02)	전체(400명)	2.6(.08)	4.6(.08)	5.4(.05)	3.8(.05)
남성	3.3(.05)	4.1(.05)	4.9(.04)	4.1(.03)	남성	2.7(.16)	4.5(.16)	5.3(.09)	3.6(.10)
여성	3.4(.05)	4.1(.05)	4.9(.03)	4.2(.03)	여성	2.6(.09)	4.7(.10)	5.5(.05)	3.8(.06)
20대(173명)	3.6(.09)	4.0(.09)	4.8(.05)	4.2(.06)	20대(35명)	3.9(.26)	4.0(.26)	5.1(.12)	4.4(.18)
30대(171명)	3.4(.10)	4.1(.08)	4.9(.06)	4.2(.06)	30대(38명)	3.0(.24)	4.2(.24)	5.2(.15)	3.6(.16)
40대(203명)	3.3(.08)	4.0(.08)	4.8(.05)	4.2(.05)	40대(115명)	2.7(.14)	4.6(.16)	5.4(.08)	3.8(.11)
50대(201명)	3.3(.09)	4.1(.07)	4.9(.05)	4.2(.05)	50대(98명)	2.4(.16)	4.8(.17)	5.4(.10)	3.7(.12)
60세+(252명)	3.1(.07)	4.3(.07)	4.9(.05)	4.0(.04)	60세+(114명)	2.1(.13)	4.9(.16)	5.7(.10)	3.7(.09)
보수(233명)	3.2(.08)	4.2(.08)	4.9(.05)	4.0(.05)	보수(157명)	2.1(.11)	5.1(.13)	5.6(.08)	3.3(.08)
중도(371명)	3.3(.06)	4.1(.06)	4.9(.04)	4.2(.04)	중도(124명)	2.9(.14)	4.3(.14)	5.4(.08)	4.1(.08)
진보(396명)	3.4(.05)	4.0(.05)	4.8(.03)	4.2(.03)	진보(119명)	2.9(.15)	4.4(.16)	5.4(.08)	4.0(.10)
-300만원(160명)	3.1(.08)	4.4(.09)	5.0(.07)	4.0(.06)	-3년(81명)	3.0(.21)	4.6(.19)	5.3(.11)	4.0(.14)
300-500만원(513명)	3.3(.05)	4.1(.05)	4.9(.03)	4.1(.03)	3-6년(100명)	2.6(.15)	4.4(.16)	5.4(.11)	3.7(.09)
500만원+(325명)	4.6(.07)	3.9(.07)	4.8(.04)	4.2(.04)	6-9년(100명)	2.4(.16)	4.8(.18)	5.6(.08)	3.7(.12)
					9년+(119명)	2.5(.13)	4.7(.15)	5.4(.08)	3.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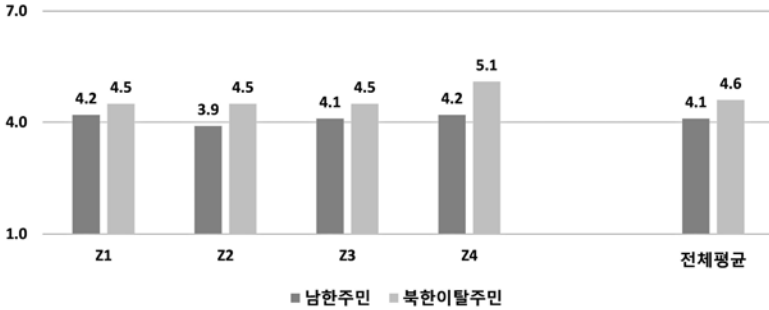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주민과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일수록 북한에 대한 화해 의도가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 거주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화해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비교경험이 누적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증가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떠난 시점의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해 의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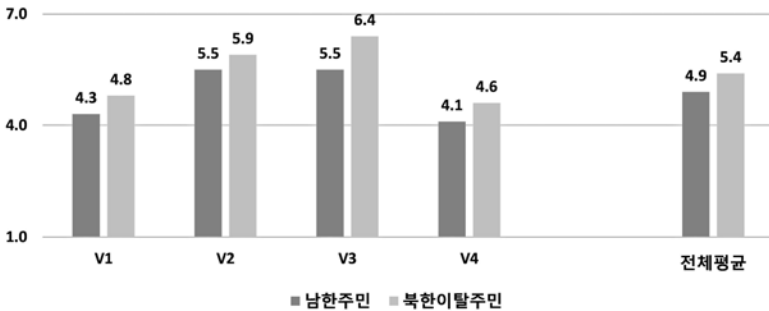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 전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은 화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가 관찰된 점이 평화와 전쟁,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결과에 시사하는 바이다. 일부는 평화, 전쟁,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문항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반응했다면 화해, 그리고 앞으로 제시될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 경쟁적 피해자 의식, 용서 태도 등에서 관찰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평화와 전쟁,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평화맹 경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로섬 관계는 단순히 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강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중앙치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앙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보수적일수록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한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제로섬 인식이 강했다.

〈그림 11-6〉 남북관계를 제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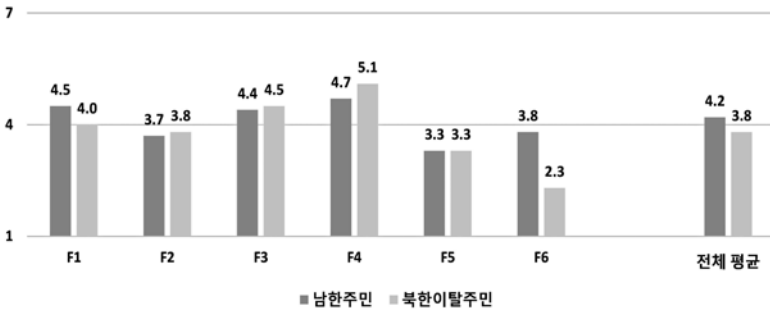
〈그림 11-7〉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남북관계에서 누가 더 피해자인가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모두 남한주민이 더 큰 피해자라고 응답하였다. 모두 중앙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이 어려운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한 점은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사회적 바람직성, 즉 남한주민이 더 큰 피해자라고 응답해야만 하는 암묵적 압력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남한에 의한 피해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북한

에 의한 피해를 강조하는 정보에 접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쟁적 피해자 의식 역시 증가하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감소하였다.

〈그림 11-8〉 용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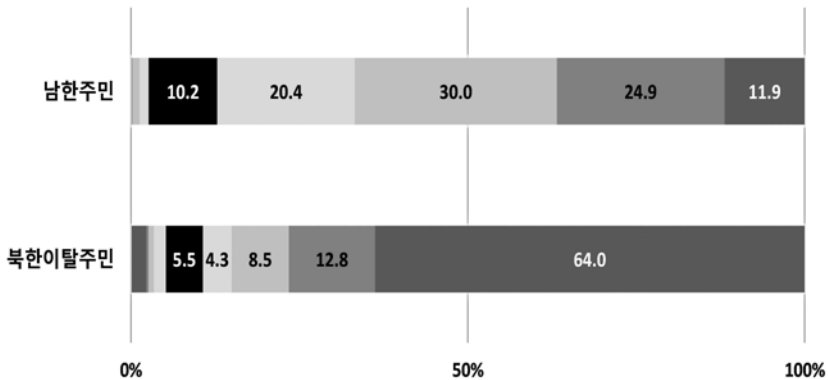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북한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한주민의 경우 중앙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앙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 연령일수록, 진보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용서하겠다는 태도가 강했다. 북한과의 화해 태도에서도 관찰되었지만 20대가 상대적으로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하다. 과거 10년 동안 20대와 30대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와 30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북한과의 화해와 용서에 더 적극적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연령대일수록, 그리고 보수보다 진보가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높았다.

3.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가.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남한주민의 87.2%, 북한이탈주민의 89.5%가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명제(命題)에 동의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동의 강도(평균)에서는 북한이탈주민(8.0점)이 남한주민(7.0점)보다 강했다.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64.0%가 9점 척도 상에서 9점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림 II-9〉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⁹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20대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가장 낮았다. 30대~60대 이상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치적 지향성에 따른 차이 역시 남한주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관찰

98) 중앙의 검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5점(중간)에 응답한 비율이다. 5점 영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6, 7, 8, 9 (매우 동의함)점의 순, 왼쪽으로 4, 3, 2, 1(전혀 동의하지 않음)점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표시하였다.

되지 않았다. 남한주민의 월수입에 따른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1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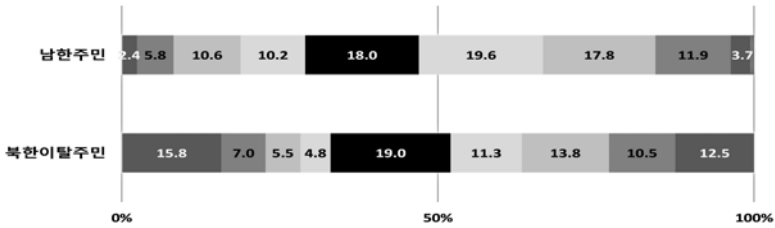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6	10.2	87.2	7.0(.04)	전체(400명)	5.0	5.5	89.5	8.0(.09)
20대(173명)	3.5	12.7	83.8	6.7(.10)	20대(35명)	11.4	14.3	74.3	6.9(.41)
30대(171명)	3.5	12.3	84.2	6.9(.10)	30대(38명)	.0	7.9	92.1	7.9(.22)
40대(203명)	.5	8.4	91.1	7.1(.08)	40대(115명)	5.2	3.5	91.3	8.1(.15)
50대(201명)	2.5	7.5	90.0	7.2(.09)	50대(98명)	4.1	5.1	90.8	8.1(.17)
60세+(252명)	3.2	10.7	86.1	6.9(.08)	60세+(114명)	5.3	4.4	90.4	8.2(.16)
보수(233명)	3.9	11.2	85.0	7.0(.09)	보수(157명)	5.1	3.8	91.1	8.1(.13)
중도(371명)	2.7	9.7	87.6	7.0(.07)	중도(124명)	4.8	8.9	86.3	7.9(.16)
진보(396명)	1.8	10.1	88.1	7.0(.06)	진보(119명)	5.0	4.2	90.8	8.1(.17)
-300만원(160명)	2.5	8.8	88.8	7.0(.10)	-3년(81명)	2.5	6.2	91.4	8.2(.16)
300-500만원(513명)	1.9	11.3	86.7	7.0(.06)	3-6년(100명)	6.0	5.0	89.0	8.0(.18)
500만원+(325명)	3.7	9.2	87.1	6.9(.07)	6-9년 (100명)	4.0	7.0	89.0	8.2(.17)
					9년+(119명)	6.7	4.2	89.1	7.9(.18)

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남한주민의 53%, 북한이탈주민의 48%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별, 이념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부정적 영향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과 동의 강도는 높았다.

〈그림 II-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표 II-1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9.0	18.0	53.0	5.5(.06)	전체(400명)	33.0	19.0	48.0	5.2(.13)
20대(173명)	33.5	22.0	44.5	5.2(.15)	20대(35명)	48.6	25.7	25.7	4.3(.40)
30대(171명)	24.0	16.4	59.6	5.7(.14)	30대(38명)	34.2	23.7	42.1	4.9(.40)
40대(203명)	28.6	15.8	55.7	5.4(.13)	40대(115명)	32.2	15.7	52.2	5.2(.25)
50대(201명)	29.4	17.4	53.2	5.5(.15)	50대(98명)	39.8	14.3	45.9	4.9(.29)
60세+(252명)	29.4	18.7	52.0	5.5(.12)	60세+(114명)	22.8	22.8	54.4	5.8(.23)
보수(233명)	26.6	18.5	54.9	5.6(.13)	보수(157명)	25.5	21.7	52.9	5.6(.21)
중도(371명)	27.5	19.4	53.1	5.5(.10)	중도(124명)	36.3	23.4	40.3	4.9(.23)
진보(396명)	31.8	16.4	51.8	5.4(.10)	진보(119명)	39.5	10.9	49.6	5.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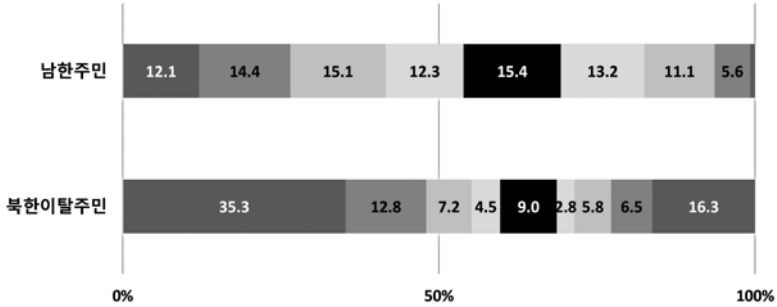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300만원(160명)	23.1	17.5	59.4	5.8(.16)	-3년(81명)	40.7	18.5	40.7	4.8(.30)
300-500만원(513명)	30.8	17.2	52.0	5.4(.09)	3-6년(100명)	26.0	22.0	52.0	5.5(.27)
500만원+(325명)	28.9	19.4	51.7	5.4(.11)	6-9년 (100명)	37.0	15.0	48.0	5.2(.28)
					9년+(119명)	30.3	20.2	49.6	5.2(.22)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주민과 유사하게 2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3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동의 비율(52.9%)과 동의 강도(5.6점)가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와 중도는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에서 이중 해리(double dissociation) 경향을 보였다. 동의 비율은 진보가 중도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지만 동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3년 미만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가장 낮았고 3~6년 거주자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7년 이상 거주자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가 있다는 명제에 대해 남한주민의 30.7%, 북한이탈주민이 31.3%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II-11〉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남한주민의 경우 통계적 차이가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수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도와 진보의 동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단 동의 강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도의 동의 강도가 진보의 동의 강도보다 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1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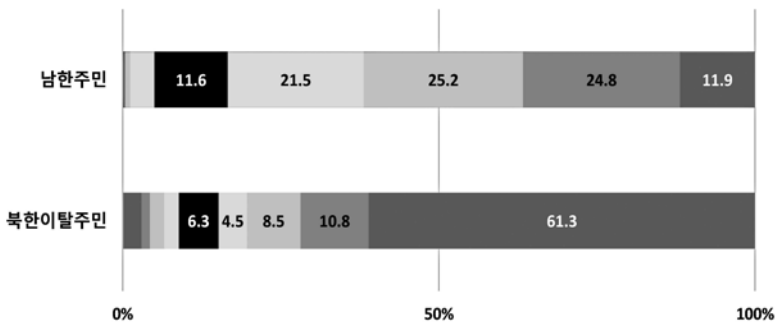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3.9	15.4	30.7	4.2(.07)	전체(400명)	59.8	9.0	31.3	4.0(.15)
20대(173명)	59.5	12.7	27.7	4.0(.16)	20대(35명)	77.1	5.7	17.1	2.9(.42)
30대(171명)	49.1	15.2	35.7	4.5(.16)	30대(38명)	68.4	13.2	18.4	3.3(.44)
40대(203명)	55.2	15.8	29.1	4.1(.15)	40대(115명)	61.7	7.0	31.3	3.9(.29)
50대(201명)	55.7	12.4	31.8	4.1(.16)	50대(98명)	54.1	8.2	37.8	4.4(.32)
60세+(252명)	50.8	19.4	29.8	4.3(.13)	60세+(114명)	54.4	11.4	34.2	4.4(.30)
보수(233명)	52.8	13.7	33.5	4.3(.15)	보수(157명)	48.4	9.6	42.0	4.7(.25)
중도(371명)	54.7	18.3	27.0	4.0(.11)	중도(124명)	62.9	12.9	24.2	3.8(.27)
진보(396명)	53.8	13.6	32.6	4.3(.11)	진보(119명)	71.4	4.2	24.4	3.3(.27)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300만원(160명)	45.6	20.0	34.4	4.5(.18)	-3년(81명)	60.5	8.6	30.9	3.9(.35)
300-500만원(513명)	56.7	15.2	28.1	4.1(.09)	3-6년(100명)	56.0	10.0	34.0	4.3(.32)
500만원+(325명)	53.2	13.5	33.2	4.2(.12)	6-9년(100명)	59.0	8.0	33.0	4.0(.33)
					9년+(119명)	63.0	9.2	27.7	3.8(.27)

라.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남한주민의 83.4%, 북한이탈주민의 85%가 평화적 방식의 갈등 해결 방식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평화적 방식의 갈등해결을 지지하는 강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강했다(남한주민: 6.9점, 북한이탈주민: 7.8점). 각 집단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념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중 보수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중도와 진보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에 비해 낮았다. 중도와 진보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12〉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1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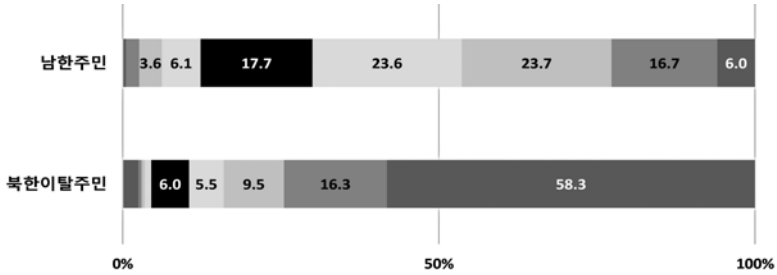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0	11.6	83.4	6.9(.04)	전체(400명)	8.8	6.3	85.0	7.8(.10)
20대(173명)	5.2	14.5	80.3	6.7(.11)	20대(35명)	11.4	5.7	82.9	7.5(.36)
30대(171명)	7.6	9.9	82.5	6.7(.11)	30대(38명)	10.5	5.3	84.2	7.4(.36)
40대(203명)	5.4	9.9	84.7	7.0(.10)	40대(115명)	11.3	7.8	80.9	7.6(.20)
50대(201명)	2.5	12.4	85.1	7.0(.09)	50대(98명)	7.1	6.1	86.7	7.9(.20)
60세+(252명)	4.8	11.5	83.7	6.9(.09)	60세+(114명)	6.1	5.3	88.6	8.0(.19)
보수(233명)	6.0	12.9	81.1	6.8(.10)	보수(157명)	12.1	9.6	78.3	7.4(.19)
중도(371명)	3.5	11.3	85.2	6.9(.07)	중도(124명)	5.6	6.5	87.9	7.9(.16)
진보(396명)	5.8	11.1	83.1	6.9(.07)	진보(119명)	7.6	1.7	90.8	8.1(.17)
-300만원(160명)	6.3	13.1	80.6	6.8(.12)	-3년(81명)	8.6	6.2	85.2	7.8(.22)
300-500만원(513명)	4.5	12.1	83.4	6.8(.06)	3-6년(100명)	10.0	8.0	82.0	7.5(.23)
500만원+(325명)	5.2	10.2	84.6	6.9(.08)	6-9년 (100명)	7.0	7.0	86.0	8.0(.20)
					9년+(119명)	9.2	4.2	86.6	7.7(.17)

마.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북한이탈주민의 89.5%가 한반도 평화가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는 명제에 동의하였다. 특히 절반이 넘는 58.3%가 9점 척도 상에서 9점에 응답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가 한반도 평화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20대와 30대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에 비해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이탈주민 20~30대의 응답은 남한주민의 응답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림 II-13〉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남한주민의 경우 70%가 평화가 사회적 삶의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동의하였다. 40대의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수의 응답이 진보의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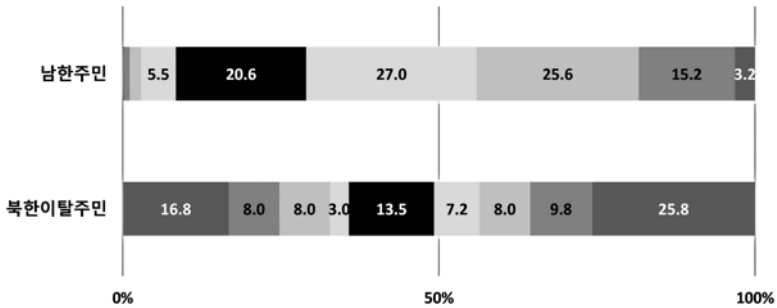
〈표 II-1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2.3	17.7	70.0	6.2(.05)	전체(400명)	4.5	6.0	89.5	7.9(.09)
20대(173명)	13.3	22.5	64.2	6.0(.12)	20대(35명)	8.6	14.3	77.1	7.1(.40)
30대(171명)	14.0	16.4	69.6	6.1(.12)	30대(38명)	5.3	7.9	86.8	7.3(.34)
40대(203명)	9.4	12.3	78.3	6.5(.10)	40대(115명)	4.3	7.8	87.8	8.0(.15)
50대(201명)	12.9	18.4	68.7	6.3(.12)	50대(98명)	2.0	5.1	92.9	8.1(.15)
60세+(252명)	12.3	19.0	68.7	6.2(.10)	60세+(114명)	5.3	1.8	93.0	8.1(.16)
보수(233명)	15.5	18.9	65.7	6.0(.12)	보수(157명)	5.7	7.0	87.3	7.8(.15)
중도(371명)	12.7	17.0	70.4	6.2(.08)	중도(124명)	4.0	6.5	89.5	8.1(.15)
진보(396명)	10.1	17.7	72.2	6.4(.08)	진보(119명)	3.4	4.2	92.4	8.0(.16)
-300만원(160명)	13.1	16.9	70.0	6.3(.13)	-3년(81명)	2.5	4.9	92.6	8.2(.17)
300-500만원(513명)	9.9	19.5	70.6	6.3(.07)	3-6년(100명)	5.0	9.0	86.0	7.9(.19)
500만원+(325명)	15.7	15.1	69.2	6.1(.09)	6-9년 (100명)	4.0	5.0	91.0	8.2(.16)
					9년+(119명)	5.9	5.0	89.1	7.6(.17)

바.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명제에 대해 남한주민의 동의 비율(70.0%)과 동의 강도(6.2점)가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비율(50.8%)과 동의 강도(5.5점)보다 강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동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의 강도는 차이가 없었다. 보수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중도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보다 강했다. 중도와 진보는 차이가 없었다. 월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1-14〉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우리 삶에서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는 남한주민과 유사하였다. 보수의 동의 비율과 강도가 중도와 진보보다 강하였으며 중도와 진보는 차이가 없었다. 남한에 3~6년 거주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6년 이상 거주자가 중간 수준, 3년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표 II-2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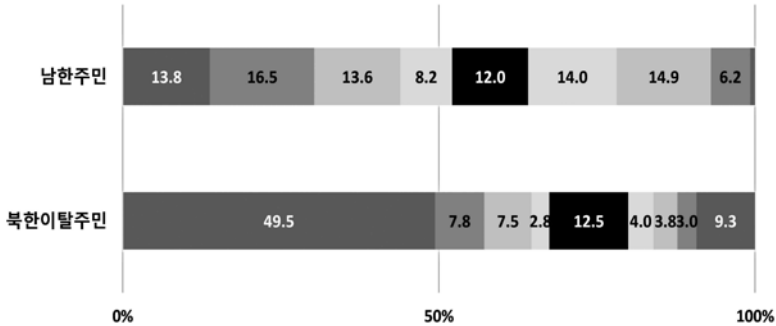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8.4	20.6	71.0	6.2(.04)	전체(400명)	35.8	13.5	50.8	5.5(.15)
20대(173명)	10.4	20.8	68.8	6.2(.11)	20대(35명)	37.1	14.3	48.6	5.2(.46)
30대(171명)	7.6	18.1	74.3	6.3(.10)	30대(38명)	28.9	26.3	44.7	5.2(.43)
40대(203명)	8.9	22.7	68.5	6.2(.10)	40대(115명)	44.3	11.3	44.3	4.9(.28)
50대(201명)	8.0	18.4	73.6	6.3(.10)	50대(98명)	33.7	17.3	49.0	5.6(.30)
60세+(252명)	7.5	22.2	70.2	6.2(.08)	60세+(114명)	30.7	7.9	61.4	6.1(.29)
보수(233명)	6.9	18.9	74.2	6.4(.09)	보수(157명)	28.7	11.5	59.9	5.9(.23)
중도(371명)	7.5	23.2	69.3	6.2(.07)	중도(124명)	37.9	20.2	41.9	5.0(.26)
진보(396명)	10.1	19.2	70.7	6.1(.07)	진보(119명)	42.9	9.2	47.9	5.3(.29)
-300만원(160명)	6.3	15.0	78.8	6.5(.10)	-3년(81명)	46.9	14.8	38.3	4.7(.33)
300-500만원(513명)	9.7	22.4	67.8	6.1(.06)	3-6년(100명)	24.0	19.0	57.0	6.0(.28)
500만원+(325명)	7.4	20.3	72.3	6.3(.08)	6-9년(100명)	34.0	14.0	52.0	5.6(.31)
					9년+(119명)	39.5	7.6	52.9	5.4(.27)

4.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가.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남한주민의 35.9%가 전쟁을 통해 남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20.0%가 동의한 것에 비하면 남한주민이 상대적으로 전쟁을 통한 갈등해결에 우호적이었다.

〈그림 II-15〉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의한 비율로 본다면 60대 이상, 50대, 30대가 20대와 40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동의의 강도로 본다면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며, 3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300만원 이상 소득자보다 전쟁이 남북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응답에 동의 비율과 동의의 강도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 및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전쟁을 통한 갈등해결에 우호적이었었다.

〈표 II-2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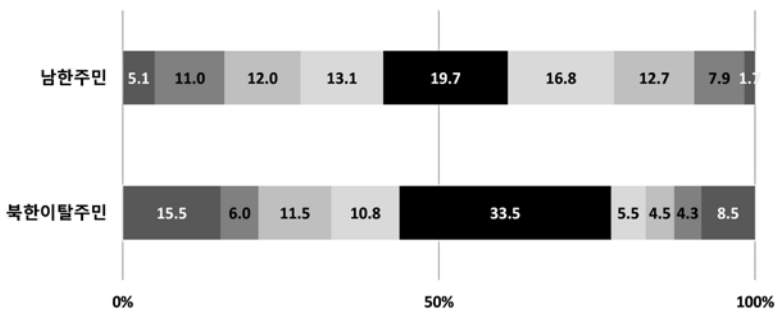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2.1	12.0	35.9	4.3(.07)	전체(400명)	67.5	12.5	20.0	3.2(.14)
20대(173명)	53.2	14.5	32.4	4.2(.16)	20대(35명)	74.3	17.1	8.6	2.9(.40)
30대(171명)	50.9	11.7	37.4	4.3(.18)	30대(38명)	65.8	13.2	21.1	3.3(.46)
40대(203명)	55.7	11.3	33.0	4.1(.16)	40대(115명)	73.0	10.4	16.5	2.8(.22)
50대(201명)	54.2	9.5	36.3	4.2(.16)	50대(98명)	69.4	7.1	23.5	3.2(.30)
60세+(252명)	47.6	13.1	39.3	4.4(.15)	60세+(114명)	58.8	17.5	23.7	3.6(.28)
보수(233명)	48.1	13.7	38.2	4.5(.15)	보수(157명)	56.7	14.6	28.7	3.8(.24)
중도(371명)	53.9	11.9	34.2	4.2(.11)	중도(124명)	71.8	16.1	12.1	2.9(.22)
진보(396명)	52.8	11.1	36.1	4.2(.12)	진보(119명)	77.3	5.9	16.8	2.7(.24)
-300만원(160명)	42.5	13.8	43.8	4.7(.18)	-3년(81명)	70.4	12.3	17.3	2.9(.28)
300-500만원(513명)	53.0	11.9	35.1	4.2(.10)	3-6년(100명)	63.0	18.0	19.0	3.4(.27)
500만원+(325명)	55.1	11.4	33.5	4.1(.13)	6-9년(100명)	67.0	10.0	23.0	3.3(.30)
					9년+(119명)	69.7	10.1	20.2	3.1(.25)

나.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전쟁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II-16〉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남한주민 응답자의 39.1%(4.8점),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22.8%가 전쟁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월 소득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해 합당한 관심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전쟁의 가치에 긍정적이었다.

〈표 II-22〉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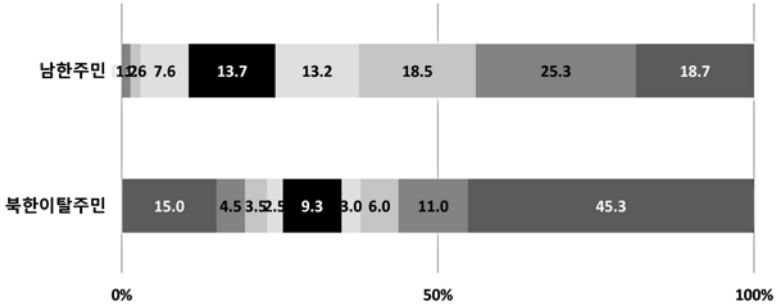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41.2	19.7	39.1	4.8(.06)	전체(400명)	43.8	33.5	22.8	4.5(.12)
20대(173명)	44.5	19.7	35.8	4.6(.15)	20대(35명)	42.9	51.4	5.7	4.1(.28)
30대(171명)	40.9	19.3	39.8	4.8(.15)	30대(38명)	44.7	28.9	26.3	4.4(.35)
40대(203명)	41.9	23.6	34.5	4.7(.14)	40대(115명)	47.8	27.0	25.2	4.2(.22)
50대(201명)	40.8	17.9	41.3	4.9(.14)	50대(98명)	43.9	37.8	18.4	4.4(.23)
60세+(252명)	38.9	18.3	42.9	5.0(.13)	60세+(114명)	39.5	32.5	28.1	4.9(.23)
보수(233명)	39.1	15.9	45.1	4.9(.14)	보수(157명)	36.9	33.1	29.9	4.9(.19)
중도(371명)	37.5	21.3	41.2	4.9(.10)	중도(124명)	37.9	42.7	19.4	4.5(.19)
진보(396명)	46.0	20.5	33.6	4.7(.10)	진보(119명)	58.8	24.4	16.8	3.9(.21)
-300만원(160명)	30.6	18.8	50.6	5.4(.16)	-3년(81명)	40.7	39.5	19.8	4.4(.24)
300-500만원(513명)	38.8	20.7	40.5	4.9(.09)	3-6년(100명)	42.0	37.0	21.0	4.4(.22)
500만원+(325명)	50.2	18.5	31.4	4.5(.11)	6-9년 (100명)	41.0	34.0	25.0	4.6(.24)
					9년+(119명)	49.6	26.1	24.4	4.4(.22)

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앞 두 문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전쟁에 대한 태도가 남한주민의 전쟁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에 동의한 비율은 남한주민이 더 높

았다. 남한주민 응답자는 75.7%, 북한이탈주민의 65.3%가 본 명제에 동의하였다.

〈그림 II-17〉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대별, 이념별, 소득별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지만 이념과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진보와 중도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보수에 비해 높았다. 남한에 9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 3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3~6년, 6~9년 거주한 응답자보다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응답 강도가 3~6년 거주자가 가장 높았다.

〈표 II-23〉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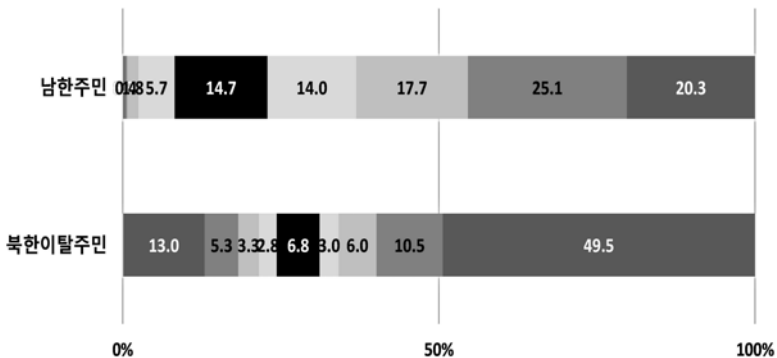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0.6	13.7	75.7	6.9(0.5)	전체(400명)	25.5	9.3	65.3	6.5(1.5)
20대(173명)	10.4	14.5	75.1	6.8(1.3)	20대(35명)	8.6	20.0	71.4	7.0(3.8)
30대(171명)	11.1	15.8	73.1	6.8(1.3)	30대(38명)	26.3	13.2	60.5	6.3(5.1)
40대(203명)	10.8	11.8	77.3	6.9(1.2)	40대(115명)	24.3	7.0	68.7	6.6(2.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9.0	14.4	76.6	7.0(12)	50대(98명)	25.5	8.2	66.3	6.5(31)
60세+(252명)	11.5	12.7	75.8	6.8(11)	60세+(114명)	31.6	7.9	60.5	6.1(31)
보수(233명)	11.2	11.2	77.7	6.8(12)	보수(157명)	29.9	11.5	58.6	6.1(25)
중도(371명)	10.0	15.1	74.9	6.8(09)	중도(124명)	20.2	12.1	67.7	6.8(25)
진보(396명)	10.9	13.9	75.3	6.9(09)	진보(119명)	25.2	3.4	71.4	6.6(29)
-300만원(160명)	12.5	12.5	75.0	6.8(14)	-3년(81명)	16.0	17.3	66.7	6.9(28)
300-500만원(513명)	10.5	13.6	75.8	6.9(08)	3-6년(100명)	34.0	11.0	55.0	5.8(33)
500만원+(325명)	9.8	14.5	75.7	6.8(10)	6-9년(100명)	28.0	7.0	65.0	6.4(32)
					9년+(119명)	22.7	4.2	73.1	6.7(28)

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전쟁은 자기파괴적인 행위라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77.1%,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69%가 동의하였다. 동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남한주민: 6.9점, 북한이탈주민: 6.7점).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9점 척도 상에서 9점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림 II-18〉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 이념, 소득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 패턴과 유사하다. 결국 남한주민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전쟁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의 차이만 관찰되었다. 보수에 비해 진보와 중도가 전쟁의 자기 파괴성에 동의한 비율과 강도가 높았다.

〈표 II-2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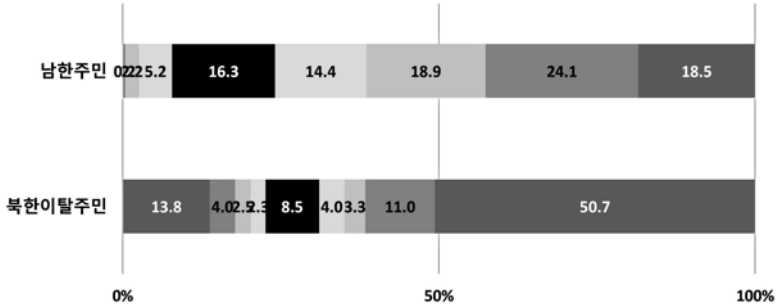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8.2	14.7	77.1	6.9(.05)	전체(400명)	24.3	6.8	69.0	6.7(.15)
20대(173명)	8.1	11.6	80.3	6.9(.13)	20대(35명)	11.4	14.3	74.3	7.2(.35)
30대(171명)	9.4	16.4	74.3	6.8(.13)	30대(38명)	18.4	7.9	73.7	6.9(.48)
40대(203명)	7.4	14.3	78.3	7.0(.12)	40대(115명)	24.3	3.5	72.2	6.9(.27)
50대(201명)	8.5	14.9	76.6	7.0(.12)	50대(98명)	21.4	8.2	70.4	6.8(.30)
60세+(252명)	7.9	15.9	76.2	6.9(.10)	60세+(114명)	32.5	6.1	61.4	6.1(.31)
보수(233명)	7.7	15.0	77.3	6.9(.11)	보수(157명)	28.7	8.9	62.4	6.2(.25)
중도(371명)	8.9	16.7	74.4	6.9(.09)	중도(124명)	16.1	8.9	75.0	7.3(.23)
진보(396명)	7.8	12.6	79.5	7.0(.08)	진보(119명)	26.9	1.7	71.4	6.7(.29)
-300만원(160명)	7.5	16.3	76.3	6.9(.13)	-3년(81명)	17.3	9.9	72.8	7.1(.29)
300-500만원(513명)	8.4	14.4	77.2	7.0(.07)	3-6년(100명)	22.0	16.0	62.0	6.5(.30)
500만원+(325명)	8.3	14.5	77.2	6.9(.10)	6-9년(100명)	32.0	2.0	66.0	6.4(.33)
					9년+(119명)	24.4	.8	74.8	6.8(.27)

마.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의 정당화, 한반도 전쟁의 자기 파괴성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한반도 전쟁의 이익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전쟁의 재앙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집단 모두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19〉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2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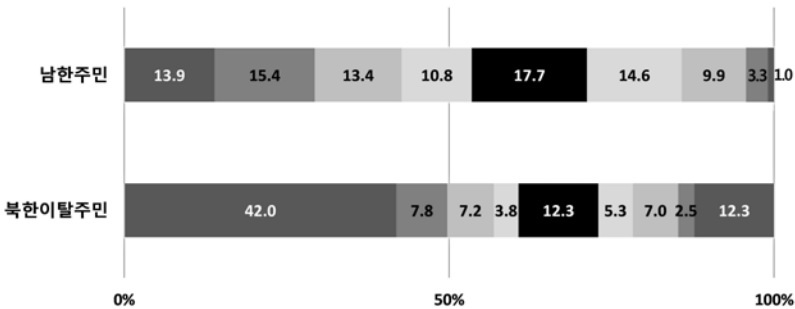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7.8	16.3	75.9	6.9(.05)	전체(400명)	22.5	8.5	69.0	6.7(.15)
20대(173명)	6.9	19.7	73.4	6.9(.13)	20대(35명)	25.7	8.6	65.7	6.8(.47)
30대(171명)	8.2	11.7	80.1	6.9(.12)	30대(38명)	21.1	7.9	71.1	6.8(.48)
40대(203명)	7.4	14.8	77.8	6.9(.11)	40대(115명)	18.3	8.7	73.0	7.0(.27)
50대(201명)	8.0	18.9	73.1	6.8(.12)	50대(98명)	22.4	8.2	69.4	6.6(.32)
60세+(252명)	8.3	16.3	75.4	6.8(.10)	60세+(114명)	26.3	8.8	64.9	6.5(.29)
보수(233명)	9.9	15.9	74.2	6.8(.12)	보수(157명)	25.5	9.6	65.0	6.5(.24)
중도(371명)	6.5	16.4	77.1	6.9(.08)	중도(124명)	15.3	8.9	75.8	7.2(.24)
진보(396명)	7.8	16.4	75.8	6.9(.08)	진보(119명)	26.1	6.7	67.2	6.6(.30)
-300만원(160명)	10.6	15.6	73.8	6.8(.14)	-3년(81명)	17.3	8.6	74.1	7.2(.29)
300-500만원(513명)	8.2	16.6	75.2	6.9(.07)	3-6년(100명)	21.0	10.0	69.0	6.7(.29)
500만원+(325명)	5.8	16.0	78.2	6.9(.09)	6-9년(100명)	23.0	9.0	68.0	6.7(.31)
					9년+(119명)	26.9	6.7	66.4	6.4(.29)

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반도에서 정의를 위한 전쟁이 가능한지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28.8%,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27.0%가 동의하였다. 양 집단 모두 약 75%의 응답자들은 정의를 위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없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의 차이만 관찰되었다.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정의를 위한 전쟁에 우호적이었다. 중도와 보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20〉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2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3.5	17.7	28.8	4.1(.07)	전체(400명)	60.8	12.3	27.0	3.7(.15)
20대(173명)	55.5	19.1	25.4	4.0(.15)	20대(35명)	65.7	17.1	17.1	3.3(.43)
30대(171명)	51.5	19.9	28.7	4.2(.16)	30대(38명)	57.9	13.2	28.9	3.6(.48)
40대(203명)	56.7	15.3	28.1	3.9(.14)	40대(115명)	63.5	13.9	22.6	3.4(.25)
50대(201명)	55.2	16.4	28.4	4.0(.16)	50대(98명)	63.3	13.3	23.5	3.4(.2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60세+(252명)	49.6	18.3	32.1	4.3(.13)	60세+(114명)	55.3	7.9	36.8	4.3(.31)
보수(233명)	50.6	18.5	30.9	4.2(.14)	보수(157명)	52.9	12.1	35.0	4.3(.24)
중도(371명)	53.1	18.3	28.6	4.1(.11)	중도(124명)	62.1	18.5	19.4	3.4(.25)
진보(396명)	55.6	16.7	27.8	4.0(.11)	진보(119명)	69.7	5.9	24.4	3.2(.26)
-300만원(160명)	50.6	15.6	33.8	4.3(.18)	-3년(81명)	54.3	16.0	29.6	3.7(.33)
300-500만원(513명)	56.5	18.3	25.1	4.0(.09)	3-6년(100명)	55.0	12.0	33.0	4.2(.30)
500만원+(325명)	50.2	17.5	32.3	4.2(.12)	6-9년(100명)	69.0	7.0	24.0	3.3(.30)
					9년+(119명)	63.0	14.3	22.7	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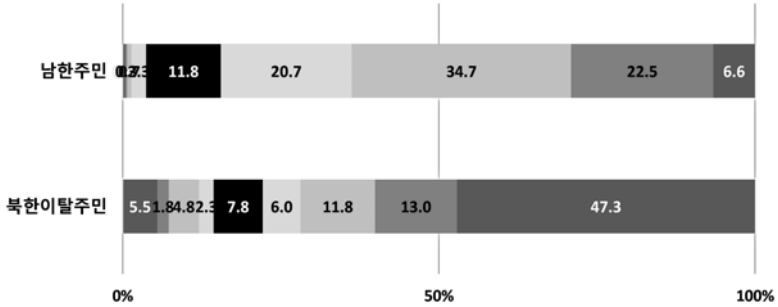
5.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문항별 분석

가. 협력에 의한 평화

(1)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84.5%,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8%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 이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20대, 보수와 중도의 동의 강도가 30대 이상, 그리고 진보의 동의 강도에 비해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의 차이만 관찰되었다. 보수보다는 중도가, 중도보다는 진보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남북협력 강화에 동의하였다.

〈그림 II-21〉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2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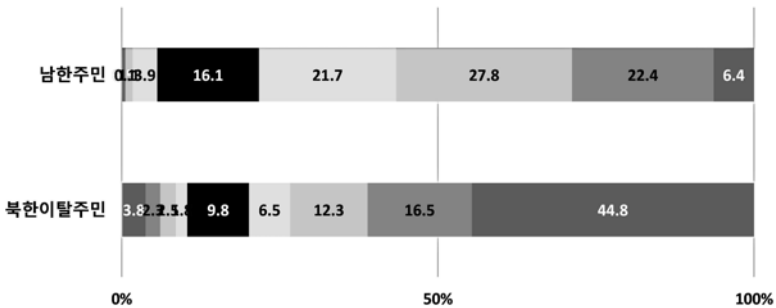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7	11.8	84.5	6.8(.04)	전체(400명)	14.3	7.8	78.0	7.2(.12)
20대(173명)	2.9	18.5	78.6	6.5(.10)	20대(35명)	17.1	2.9	80.0	7.0(.44)
30대(171명)	4.7	11.7	83.6	6.7(.10)	30대(38명)	18.4	18.4	63.2	6.7(.43)
40대(203명)	2.0	14.3	83.7	6.8(.09)	40대(115명)	12.2	7.0	80.9	7.2(.21)
50대(201명)	2.5	4.5	93.0	7.0(.08)	50대(98명)	17.3	9.2	73.5	7.0(.25)
60세+(252명)	6.0	11.1	82.9	6.8(.08)	60세+(114명)	11.4	5.3	83.3	7.6(.22)
보수(233명)	3.9	12.4	83.7	6.7(.09)	보수(157명)	24.2	8.3	67.5	6.5(.23)
중도(371명)	4.9	11.3	83.8	6.6(.07)	중도(124명)	7.3	12.1	80.6	7.4(.16)
진보(396명)	2.5	11.9	85.6	6.9(.06)	진보(119명)	8.4	2.5	89.1	7.8(.19)
-300만원(160명)	4.4	14.4	81.3	6.8(.11)	-3년(81명)	14.8	7.4	77.8	7.2(.27)
300-500만원(513명)	3.7	11.1	85.2	6.8(.06)	3-6년(100명)	18.0	11.0	71.0	6.8(.25)
500만원+(325명)	3.4	11.7	84.9	6.8(.07)	6-9년(100명)	11.0	8.0	81.0	7.6(.23)
					9년+(119명)	13.4	5.0	81.5	7.2(.21)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위한 제도화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한주민 응답자는 78.3%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경우는 80.0이었다. 동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지만 동의 강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극단치(9점)에 응답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50대가 20대, 30대, 60대 이상보다 남북관계 제도화에 더 긍정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북관계를 다루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 강화에 긍정적이었다. 이념의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

〈그림 II-2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2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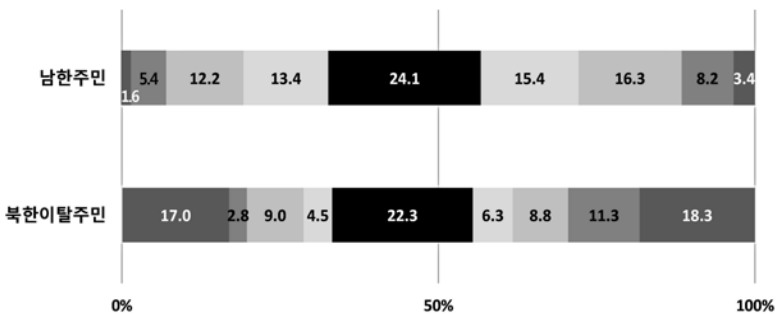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6	16.1	78.3	6.6(.04)	전체(400명)	10.3	9.8	80.0	7.3(.11)
20대(173명)	6.4	19.7	74.0	6.5(.11)	20대(35명)	11.4	11.4	77.1	6.9(.36)
30대(171명)	7.0	14.0	78.9	6.5(.11)	30대(38명)	15.8	18.4	65.8	6.5(.41)
40대(203명)	4.9	16.3	78.8	6.7(.10)	40대(115명)	8.7	9.6	81.7	7.5(.19)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2.0	17.4	80.6	6.8(.09)	50대(98명)	12.2	8.2	79.6	7.2(.22)
60세+(252명)	7.5	13.9	78.6	6.5(.09)	60세+(114명)	7.9	7.9	84.2	7.6(.20)
보수(233명)	6.0	16.3	77.7	6.6(.10)	보수(157명)	16.6	10.8	72.6	6.8(.21)
중도(371명)	5.4	15.4	79.2	6.6(.07)	중도(124명)	6.5	12.1	81.5	7.4(.16)
진보(396명)	5.6	16.7	77.8	6.7(.07)	진보(119명)	5.9	5.9	88.2	7.8(.17)
-300만원(160명)	5.0	11.9	83.1	6.7(.11)	-3년(81명)	9.9	13.6	76.5	7.3(.25)
300-500만원(513명)	6.2	17.0	76.8	6.6(.06)	3-6년(100명)	12.0	11.0	77.0	7.1(.23)
500만원+(325명)	4.9	16.9	78.2	6.6(.08)	6-9년(100명)	11.0	9.0	80.0	7.5(.22)
					9년+(119명)	8.4	6.7	84.9	7.4(.19)

(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남북 갈등이 남북 양측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명제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43.3%,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4.5%가 동의하였다. 동의 강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30대, 50대, 60대 이상이 20대와 40대보다 남북이익이 보장되는 남북 갈등 해결에 회의적이었다. 보수와 중도의 입장은 유사했으며 진보보다 본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도, 진보, 보수 순으로 본 명제에 동의하였다. 다른 변수의 수준별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2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2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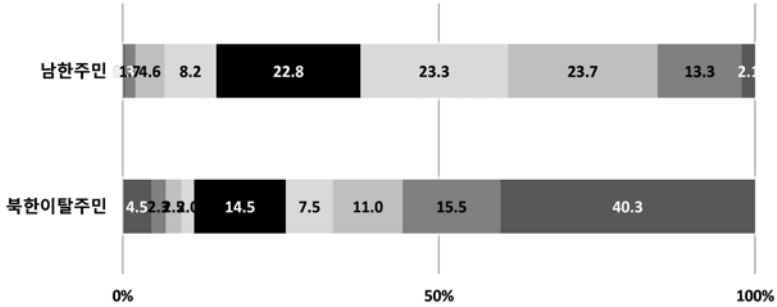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2.6	24.1	43.3	5.3(.06)	전체(400명)	33.3	22.3	44.5	5.3(.14)
20대(173명)	38.2	26.0	35.8	5.0(.14)	20대(35명)	28.6	40.0	31.4	4.9(.42)
30대(171명)	26.9	29.2	43.9	5.4(.13)	30대(38명)	28.9	23.7	47.4	5.3(.42)
40대(203명)	35.0	21.2	43.8	5.1(.14)	40대(115명)	34.8	18.3	47.0	5.2(.27)
50대(201명)	28.9	23.9	47.3	5.4(.13)	50대(98명)	38.8	21.4	39.8	5.2(.28)
60세+(252명)	33.7	21.8	44.4	5.3(.12)	60세+(114명)	29.8	21.1	49.1	5.6(.26)
보수(233명)	30.9	25.8	43.3	5.4(.13)	보수(157명)	24.8	22.9	52.2	5.9(.21)
중도(371명)	29.1	24.5	46.4	5.4(.09)	중도(124명)	37.1	30.6	32.3	4.7(.23)
진보(396명)	36.9	22.7	40.4	5.0(.09)	진보(119명)	40.3	12.6	47.1	5.3(.27)
-300만원(160명)	32.5	23.1	44.4	5.4(.15)	-3년(81명)	30.9	24.7	44.4	5.5(.31)
300-500만원(513명)	31.8	25.5	42.7	5.2(.08)	3-6년(100명)	31.0	25.0	44.0	5.5(.26)
500만원+(325명)	33.5	22.5	44.0	5.2(.10)	6-9년(100명)	34.0	18.0	48.0	5.4(.29)
					9년+(119명)	36.1	21.8	42.0	5.1(.26)

(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이 중요하다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62.4%,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4.3%가 동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6.0점)가 남한주민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7.1점)보다 강했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경우 이념의 차이만 관찰되었다. 진보와 중도가 보수에 비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경우 연령의 차이만 관찰되었다. 20대 30대가 40대, 50대, 60대 이상에 비해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50대의 동의 비율과 동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

〈그림 II-2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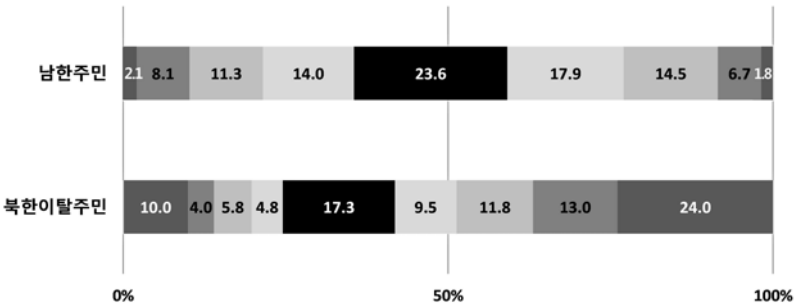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4.8	22.8	62.4	6.0(.05)	전체(400명)	11.3	14.5	74.3	7.1(.11)
20대(173명)	13.9	28.9	57.2	5.9(.11)	20대(35명)	20.0	14.3	65.7	6.3(.37)
30대(171명)	17.5	25.1	57.3	5.8(.11)	30대(38명)	21.1	15.8	63.2	6.4(.40)
40대(203명)	14.3	19.2	66.5	6.0(.11)	40대(115명)	12.2	15.7	72.2	7.0(.21)
50대(201명)	12.4	17.4	70.1	6.2(.10)	50대(98명)	6.1	9.2	84.7	7.4(.20)
60세+(252명)	15.9	24.2	59.9	5.9(.10)	60세+(114명)	8.8	17.5	73.7	7.2(.23)
보수(233명)	22.7	18.5	58.8	5.7(.11)	보수(157명)	12.7	14.6	72.6	6.9(.20)
중도(371명)	12.7	24.3	63.1	6.0(.08)	중도(124명)	11.3	15.3	73.4	6.9(.20)
진보(396명)	12.1	24.0	63.9	6.0(.07)	진보(119명)	9.2	13.4	77.3	7.3(.20)
-300만원(160명)	11.9	27.5	60.6	6.0(.12)	-3년(81명)	11.1	18.5	70.4	6.9(.25)
300-500만원(513명)	16.2	21.4	62.4	5.9(.07)	3-6년(100명)	11.0	16.0	73.0	7.1(.23)
500만원+(325명)	14.2	22.8	63.1	6.0(.08)	6-9년(100명)	11.0	17.0	72.0	7.0(.24)
					9년+(119명)	11.8	8.4	79.8	7.2(.20)

(5)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남북의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35.5%,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24.5%가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증진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⁹⁹⁾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20대가 느끼는 상호 사회문화 이해와 소통증진의 중요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없었다.

〈그림 II-25〉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5.5	23.6	40.9	5.0(.06)	24.5	17.3	58.3	6.0(.13)
20대(173명)	41.0	24.9	34.1	4.7(.14)	20.0	28.6	51.4	6.0(.35)
30대(171명)	35.1	24.6	40.4	5.1(.14)	26.3	18.4	55.3	5.7(.39)
40대(203명)	36.9	19.2	43.8	5.0(.13)	23.5	18.3	58.3	6.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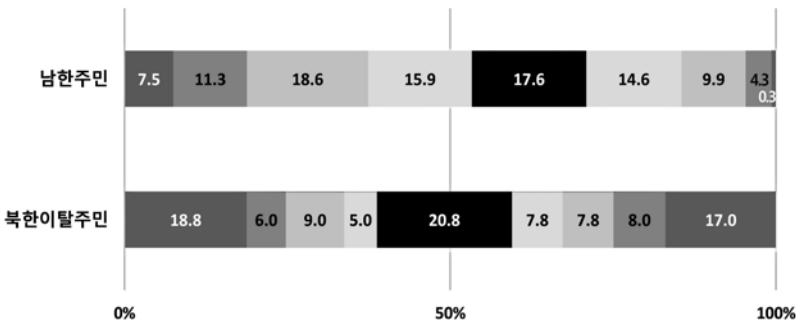
99)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명제에 대한 비동의 반응의 비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33.3	25.9	40.8	5.1(.13)	50대(98명)	27.6	14.3	58.2	5.8(.27)
60세+(252명)	32.5	23.8	43.7	5.2(.11)	60세+(114명)	23.7	14.9	61.4	6.3(.25)
보수(233명)	33.9	25.3	40.8	5.0(.12)	보수(157명)	19.7	16.6	63.7	6.3(.21)
중도(371명)	32.9	24.5	42.6	5.2(.09)	중도(124명)	22.6	25.0	52.4	5.8(.23)
진보(396명)	38.9	21.7	39.4	4.9(.09)	진보(119명)	32.8	10.1	57.1	5.8(.25)
-300만원(160명)	31.9	24.4	43.8	5.3(.14)	-3년(81명)	21.0	18.5	60.5	6.2(.28)
300-500만원(513명)	35.5	25.0	39.6	5.0(.08)	3-6년(100명)	27.0	17.0	56.0	6.0(.28)
500만원+(325명)	36.9	21.2	41.8	5.0(.11)	6-9년(100명)	30.0	17.0	53.0	5.6(.27)
					9년+(119명)	20.2	16.8	63.0	6.2(.22)

(6)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평화를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는 29.1%가 동의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는 40.5%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이념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에 긍정적이었다.

〈그림 II-26〉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2〉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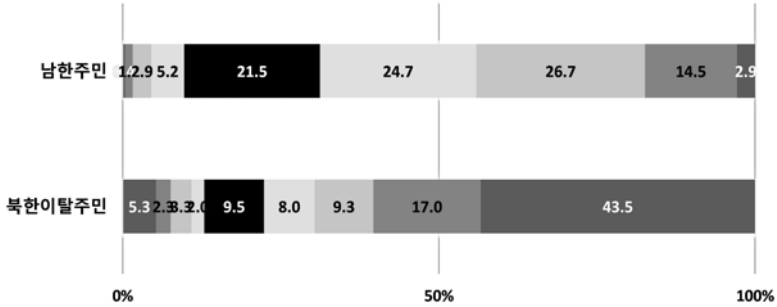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3.3	17.6	29.1	4.3(.06)	전체(400명)	38.8	20.8	40.5	5.0(.14)
20대(173명)	59.0	16.2	24.9	4.0(.15)	20대(35명)	40.0	22.9	37.1	4.6(.43)
30대(171명)	55.0	17.0	28.1	4.3(.15)	30대(38명)	39.5	21.1	39.5	5.1(.43)
40대(203명)	54.2	20.2	25.6	4.3(.13)	40대(115명)	41.7	20.0	38.3	4.8(.25)
50대(201명)	50.2	19.4	30.3	4.4(.13)	50대(98명)	41.8	18.4	39.8	4.8(.29)
60세+(252명)	50.0	15.5	34.5	4.5(.12)	60세+(114명)	32.5	22.8	44.7	5.5(.27)
보수(233명)	49.4	15.0	35.6	4.5(.13)	보수(157명)	33.8	19.1	47.1	5.4(.23)
중도(371명)	52.8	20.2	27.0	4.2(.10)	중도(124명)	42.7	24.2	33.1	4.6(.23)
진보(396명)	56.1	16.7	27.3	4.3(.09)	진보(119명)	41.2	19.3	39.5	4.8(.27)
-300만원(160명)	51.9	15.6	32.5	4.4(.15)	-3년(81명)	38.3	22.2	39.5	4.8(.31)
300-500만원(513명)	52.6	19.3	28.1	4.4(.08)	3-6년(100명)	41.0	19.0	40.0	4.9(.29)
500만원+(325명)	54.8	16.0	29.2	4.2(.11)	6-9년(100명)	44.0	20.0	36.0	4.7(.28)
					9년+(119명)	32.8	21.8	45.4	5.4(.25)

(7)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68.8%,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7.8%가 북한이 민주화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 민주화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경우 이념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중도, 진보, 보수의 순으로 북한 민주화가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27〉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표 II-33〉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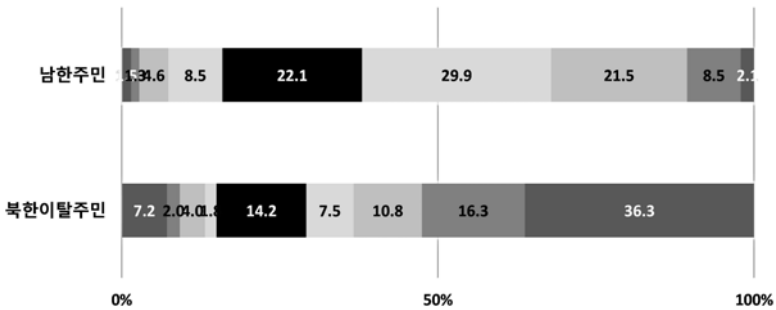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9.7	21.5	68.8	6.2(.05)	전체(400명)	12.8	9.5	77.8	7.2(.12)
20대(173명)	9.8	27.2	63.0	6.1(.11)	20대(35명)	20.0	22.9	57.1	6.3(.41)
30대(171명)	11.7	22.2	66.1	6.0(.11)	30대(38명)	10.5	13.2	76.3	6.9(.35)
40대(203명)	7.9	22.2	70.0	6.2(.09)	40대(115명)	10.4	7.8	81.7	7.4(.21)
50대(201명)	11.9	16.9	71.1	6.2(.11)	50대(98명)	13.3	9.2	77.6	7.0(.24)
60세+(252명)	7.9	20.2	71.8	6.3(.09)	60세+(114명)	13.2	6.1	80.7	7.4(.23)
보수(233명)	9.0	15.0	76.0	6.3(.09)	보수(157명)	8.9	7.6	83.4	7.6(.17)
중도(371명)	10.0	24.5	65.5	6.1(.07)	중도(124명)	16.1	16.1	67.7	6.6(.22)
진보(396명)	9.8	22.5	67.7	6.1(.07)	진보(119명)	14.3	5.0	80.7	7.2(.22)
-300만원(160명)	11.3	17.5	71.3	6.2(.13)	-3년(81명)	13.6	14.8	71.6	7.1(.26)
300-500만원(513명)	9.9	22.2	67.8	6.2(.06)	3-6년(100명)	15.0	9.0	76.0	7.1(.26)
500만원+(325명)	8.6	22.5	68.9	6.1(.08)	6-9년(100명)	12.0	9.0	79.0	7.2(.22)
					9년+(119명)	10.9	6.7	82.4	7.3(.21)

(8)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전쟁이 없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62.0%,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0.8%가 동의하였다. 한국인들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이념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중도에 비해 보수와 진보가 적극적 평화에 개념에 호의적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도, 보수, 진보 순이었다.

〈그림 II-28〉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5.9	22.1	62.0	5.8(.05)	전체(400명)	15.0	14.3	70.8	6.8(.12)
20대(173명)	15.6	24.3	60.1	5.7(.11)	20대(35명)	8.6	14.3	77.1	7.1(.40)
30대(171명)	19.3	23.4	57.3	5.6(.11)	30대(38명)	21.1	15.8	63.2	6.2(.43)
40대(203명)	13.3	24.1	62.6	5.9(.10)	40대(115명)	10.4	12.2	77.4	7.1(.20)
50대(201명)	19.4	19.4	61.2	5.7(.11)	50대(98명)	15.3	18.4	66.3	6.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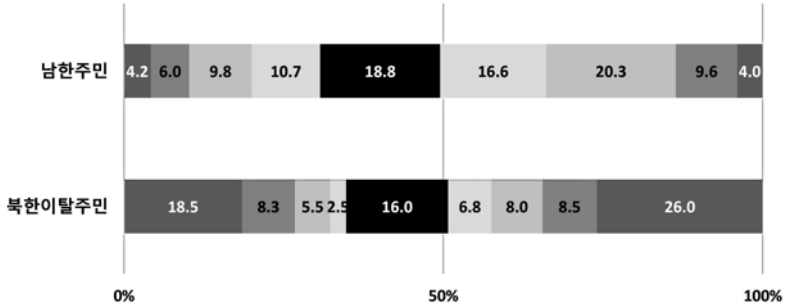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60세+(252명)	13.1	20.2	66.7	5.9(.10)	60세+(114명)	19.3	12.3	68.4	6.6(.25)
보수(233명)	12.9	19.3	67.8	6.0(.10)	보수(157명)	19.1	12.7	68.2	6.7(.21)
중도(371명)	17.0	25.6	57.4	5.6(.08)	중도(124명)	16.9	19.4	63.7	6.3(.23)
진보(396명)	16.7	20.5	62.9	5.8(.07)	진보(119명)	7.6	10.9	81.5	7.3(.19)
-300만원(160명)	14.4	21.3	64.4	6.0(.13)	-3년(81명)	12.3	17.3	70.4	7.0(.26)
300-500만원(513명)	16.8	22.8	60.4	5.7(.06)	3-6년(100명)	12.0	13.0	75.0	7.1(.24)
500만원+(325명)	14.8	21.5	63.7	5.9(.08)	6-9년(100명)	20.0	13.0	67.0	6.5(.26)
					9년+(119명)	15.1	14.3	70.6	6.6(.23)

나. 군사력에 의한 평화

(1)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군사력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50.5%,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9.3%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 이념,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 이념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50대 이하의 응답자들에 비해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더 긍정적이었다. 보수가 중도와 진보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군사력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29〉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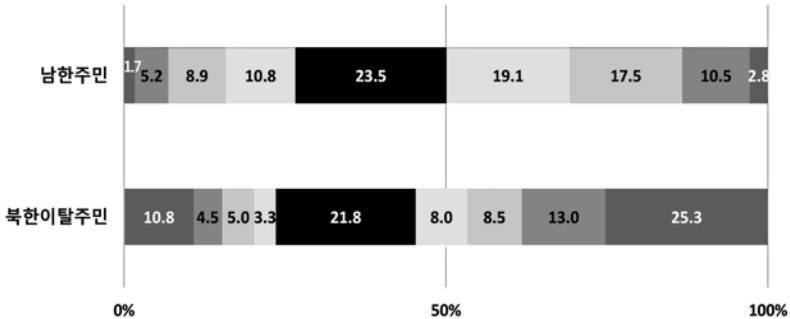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0.7	18.8	50.5	5.4(.06)	전체(400명)	34.8	16.0	49.3	5.4(.15)
20대(173명)	32.9	20.2	46.8	5.2(.16)	20대(35명)	45.7	20.0	34.3	4.4(.42)
30대(171명)	31.0	16.4	52.6	5.5(.15)	30대(38명)	39.5	18.4	42.1	5.1(.44)
40대(203명)	30.0	20.7	49.3	5.4(.14)	40대(115명)	38.3	22.6	39.1	5.0(.28)
50대(201명)	32.8	17.4	49.8	5.2(.14)	50대(98명)	36.7	10.2	53.1	5.4(.32)
60세+(252명)	27.8	19.0	53.2	5.5(.12)	60세+(114명)	24.6	12.3	63.2	6.2(.28)
보수(233명)	28.8	18.0	53.2	5.6(.14)	보수(157명)	24.8	10.2	65.0	6.3(.23)
중도(371명)	29.4	17.8	52.8	5.4(.10)	중도(124명)	39.5	25.8	34.7	4.7(.25)
진보(396명)	33.1	20.2	46.7	5.2(.10)	진보(119명)	42.9	13.4	43.7	5.0(.28)
-300만원(160명)	27.5	19.4	53.1	5.4(.15)	-3년(81명)	35.8	17.3	46.9	5.3(.34)
300-500만원(513명)	30.0	19.7	50.3	5.4(.09)	3-6년(100명)	31.0	17.0	52.0	5.5(.30)
500만원+(325명)	32.9	17.2	49.8	5.3(.12)	6-9년(100명)	35.0	19.0	46.0	5.3(.31)
					9년+(119명)	37.0	11.8	51.3	5.4(.27)

(2)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남북이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49.9%,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54.8%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이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보수에 비해 중도, 중도에 비해 진보가 본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강했다.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본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높았다.

〈그림 II-30〉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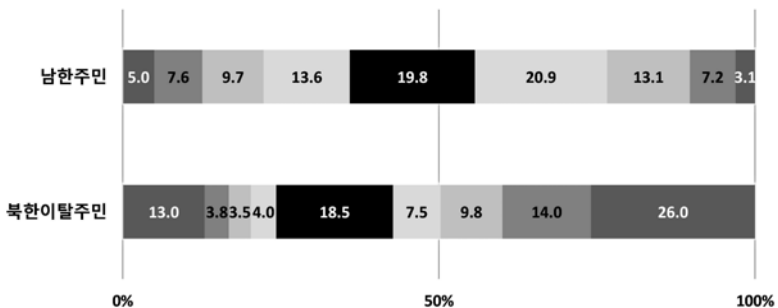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6.6	23.5	49.9	5.5(.06)	전체(400명)	23.5	21.8	54.8	6.0(.13)
20대(173명)	28.9	24.3	46.8	5.4(.13)	20대(35명)	11.4	25.7	62.9	6.5(.38)
30대(171명)	29.2	24.0	46.8	5.4(.15)	30대(38명)	23.7	26.3	50.0	5.9(.36)
40대(203명)	20.2	26.1	53.7	5.6(.12)	40대(115명)	19.1	17.4	63.5	6.4(.24)
50대(201명)	30.3	17.9	51.7	5.4(.13)	50대(98명)	30.6	20.4	49.0	5.4(.29)
60세+(252명)	25.4	25.0	49.6	5.5(.12)	60세+(114명)	25.4	24.6	50.0	5.9(.26)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보수(233명)	29.2	26.2	44.6	5.3(.13)	보수(157명)	25.5	21.0	53.5	5.9(.22)
중도(371명)	29.4	22.9	47.7	5.4(.09)	중도(124명)	21.8	29.8	48.4	5.8(.22)
진보(396명)	22.5	22.5	55.1	5.7(.09)	진보(119명)	22.7	14.3	63.0	6.2(.25)
-300만원(160명)	21.9	27.5	50.6	5.6(.14)	-3년(81명)	22.2	21.0	56.8	6.2(.30)
300-500만원(513명)	26.5	25.7	47.8	5.4(.08)	3-6년(100명)	24.0	28.0	48.0	5.9(.25)
500만원+(325명)	28.9	18.2	52.9	5.4(.10)	6-9년(100명)	27.0	19.0	54.0	5.7(.28)
					9년+(119명)	21.0	19.3	59.7	6.0(.24)

(3)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군사력 사용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44.3%가 동의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는 57.3%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중도나 진보에 비해 군사력 사용을 용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림 II-31〉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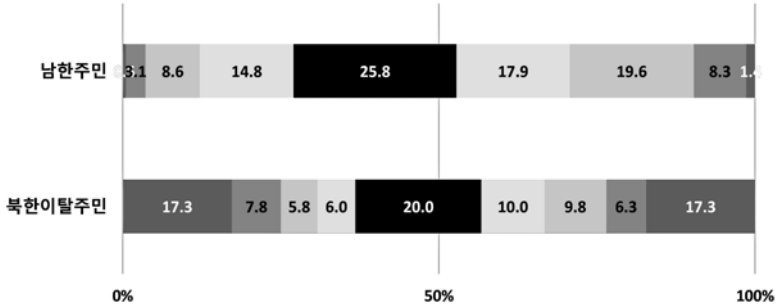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5.9	19.8	44.3	5.1(.06)	전체(400명)	24.3	18.5	57.3	6.0(.14)
20대(173명)	35.3	24.9	39.9	5.1(.14)	20대(35명)	31.4	25.7	42.9	5.0(.43)
30대(171명)	40.4	20.5	39.2	5.0(.15)	30대(38명)	31.6	21.1	47.4	5.6(.42)
40대(203명)	36.9	12.8	50.2	5.0(.14)	40대(115명)	25.2	13.9	60.9	5.9(.26)
50대(201명)	35.3	19.4	45.3	5.0(.14)	50대(98명)	22.4	18.4	59.2	6.1(.28)
60세+(252명)	32.9	21.8	45.2	5.1(.13)	60세+(114명)	20.2	20.2	59.6	6.4(.25)
보수(233명)	29.2	17.2	53.6	5.4(.13)	보수(157명)	18.5	14.0	67.5	6.7(.21)
중도(371명)	38.8	18.9	42.3	5.0(.10)	중도(124명)	28.2	25.0	46.8	5.4(.24)
진보(396명)	37.1	22.2	40.7	5.0(.10)	진보(119명)	27.7	17.6	54.6	5.7(.26)
-300만원(160명)	28.8	25.6	45.6	5.4(.15)	-3년(81명)	30.9	12.3	56.8	5.7(.32)
300-500만원(513명)	39.2	19.5	41.3	4.9(.09)	3-6년(100명)	19.0	24.0	57.0	6.2(.27)
500만원+(325명)	33.8	17.5	48.6	5.1(.11)	6-9년(100명)	26.0	15.0	59.0	6.1(.29)
					9년+(119명)	22.7	21.0	56.3	6.0(.23)

(4)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동의 비율(47.2%)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동의 비율(43.3%)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진보가 보수나 중도에 비해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의 평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 외 유의한 차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없었다.

〈그림 II-32〉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표 II-3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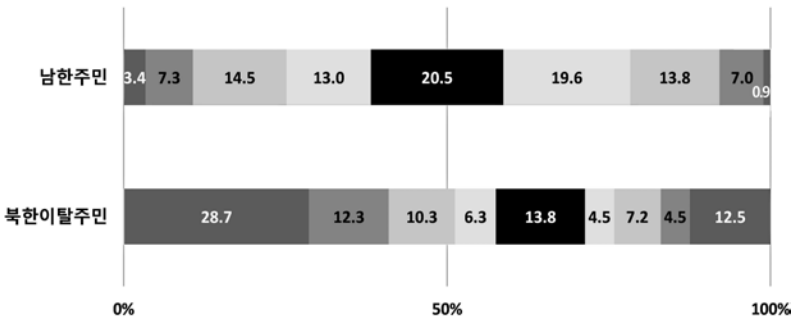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7.0	25.8	47.2	5.4(.05)	전체(400명)	36.8	20.0	43.3	5.1(.14)
20대(173명)	33.5	25.4	41.0	5.2(.13)	20대(35명)	28.6	25.7	45.7	5.5(.39)
30대(171명)	26.3	28.1	45.6	5.5(.12)	30대(38명)	31.6	23.7	44.7	5.2(.42)
40대(203명)	26.6	25.1	48.3	5.5(.11)	40대(115명)	35.7	13.9	50.4	5.3(.26)
50대(201명)	22.9	29.4	47.8	5.5(.11)	50대(98명)	39.8	25.5	34.7	4.6(.27)
60세+(252명)	26.6	22.2	51.2	5.5(.11)	60세+(114명)	39.5	18.4	42.1	5.1(.27)
보수(233명)	27.9	27.9	44.2	5.3(.10)	보수(157명)	50.3	11.5	38.2	4.5(.23)
중도(371명)	25.3	28.0	46.6	5.5(.08)	중도(124명)	24.2	38.7	37.1	5.2(.22)
진보(396명)	28.0	22.5	49.5	5.5(.09)	진보(119명)	31.9	11.8	56.3	5.7(.25)
-300만원(160명)	24.4	26.3	49.4	5.6(.13)	-3년(81명)	33.3	30.9	35.8	5.1(.29)
300-500만원(513명)	26.9	25.0	48.1	5.5(.07)	3-6년(100명)	33.0	21.0	46.0	5.4(.28)
500만원+(325명)	28.6	26.8	44.6	5.4(.09)	6-9년(100명)	38.0	15.0	47.0	5.0(.29)
					9년+(119명)	41.2	16.0	42.9	4.9(.25)

(5)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명제에 남한주민의 41.3%, 북한이탈주민의 28.8%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진보가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가장 낮았고, 중도, 보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패턴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33〉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3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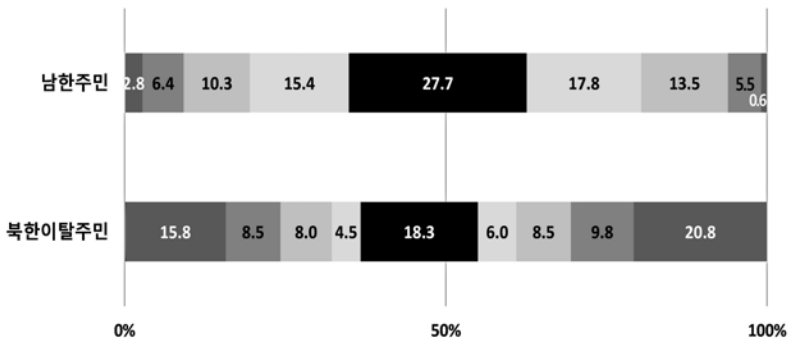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8.2	20.5	41.3	4.9(.06)	전체(400명)	57.5	13.8	28.8	4.0(.14)
20대(173명)	42.2	23.7	34.1	4.6(.15)	20대(35명)	57.1	22.9	20.0	3.5(.39)
30대(171명)	37.4	25.7	36.8	5.0(.14)	30대(38명)	68.4	10.5	21.1	3.6(.38)
40대(203명)	38.4	19.2	42.4	4.9(.13)	40대(115명)	60.9	16.5	22.6	3.7(.25)
50대(201명)	36.3	18.4	45.3	5.1(.13)	50대(98명)	56.1	11.2	32.7	4.2(.29)
60세+(252명)	37.3	17.5	45.2	5.0(.11)	60세+(114명)	51.8	11.4	36.8	4.5(.30)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보수(233명)	30.9	18.5	50.6	5.4(.12)	보수(157명)	52.2	12.1	35.7	4.5(.23)
중도(371명)	36.7	23.2	40.2	5.0(.09)	중도(124명)	58.1	16.9	25.0	3.9(.24)
진보(396명)	43.9	19.2	36.9	4.7(.10)	진보(119명)	63.9	12.6	23.5	3.6(.25)
-300만원(160명)	36.9	21.9	41.3	5.0(.15)	-3년(81명)	59.3	16.0	24.7	3.9(.30)
300-500만원(513명)	38.2	20.1	41.7	5.0(.08)	3-6년(100명)	61.0	9.0	30.0	4.1(.29)
500만원+(325명)	38.8	20.3	40.9	4.9(.11)	6-9년(100명)	56.0	15.0	29.0	4.1(.30)
					9년+(119명)	54.6	15.1	30.3	4.1(.25)

(6)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군사력 감축과 공동의 군사력 통제 기구 설치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37.4%,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5.0%가 군축과 군사력 통제기구가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동의 비율과 비동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동의 강도 역시 정확히 중앙치인 5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34〉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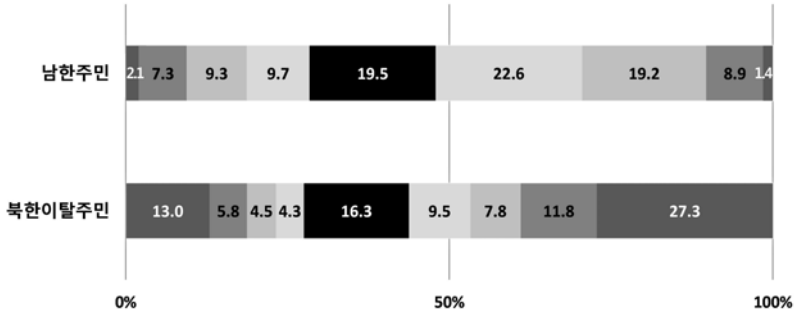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4.9	27.7	37.4	5.0(.05)	전체(400명)	36.8	18.3	45.0	5.3(.14)
20대(173명)	38.7	26.6	34.7	4.8(.14)	20대(35명)	20.0	45.7	34.3	5.5(.34)
30대(171명)	37.4	27.5	35.1	4.8(.13)	30대(38명)	28.9	23.7	47.4	5.4(.38)
40대(203명)	34.0	29.1	36.9	5.0(.12)	40대(115명)	35.7	16.5	47.8	5.3(.27)
50대(201명)	32.8	24.4	42.8	5.1(.12)	50대(98명)	43.9	15.3	40.8	4.8(.29)
60세+(252명)	32.9	30.2	36.9	5.1(.10)	60세+(114명)	39.5	12.3	48.2	5.5(.30)
보수(233명)	31.3	26.6	42.1	5.2(.11)	보수(157명)	42.0	15.3	42.7	5.1(.25)
중도(371명)	34.8	29.4	35.8	4.9(.08)	중도(124명)	33.9	25.8	40.3	5.2(.22)
진보(396명)	37.1	26.8	36.1	4.9(.09)	진보(119명)	32.8	14.3	52.9	5.5(.27)
-300만원(160명)	31.3	28.8	40.0	5.0(.14)	-3년(81명)	32.1	25.9	42.0	5.3(.31)
300-500만원(513명)	35.1	27.5	37.4	5.0(.07)	3-6년(100명)	35.0	15.0	50.0	5.6(.30)
500만원+(325명)	36.3	27.4	36.3	4.9(.10)	6-9년(100명)	38.0	19.0	43.0	5.1(.29)
					9년+(119명)	40.3	15.1	44.5	5.1(.26)

(7)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 남한주민의 52.1%, 북한이탈주민의 56.3%가 동의하였다. 이러한 동의 비율은 남한주민 응답자의 75.7%, 북한이탈주민의 65.3%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또는 전쟁은 불가하지만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믿음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념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수준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보수와

중도가 진보에 대해 동의 비율과 강도가 높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수, 중도, 진보의 순이었다.

〈그림 II-3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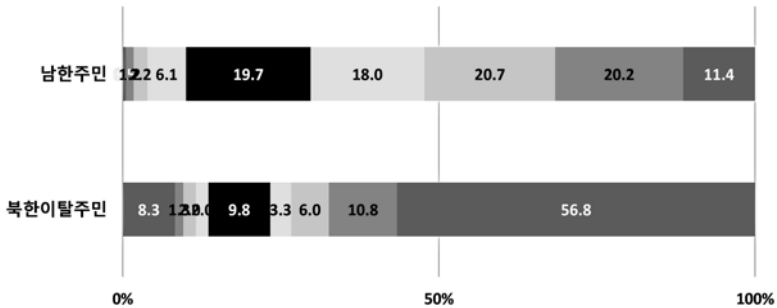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8.4	19.5	52.1	5.3(.06)	전체(400명)	27.5	16.3	56.3	5.9(.14)
20대(173명)	28.3	20.8	50.9	5.3(.13)	20대(35명)	25.7	25.7	48.6	5.7(.39)
30대(171명)	28.1	21.1	50.9	5.4(.14)	30대(38명)	23.7	18.4	57.9	6.0(.42)
40대(203명)	23.6	21.2	55.2	5.5(.13)	40대(115명)	33.0	14.8	52.2	5.6(.26)
50대(201명)	31.3	15.9	52.7	5.3(.13)	50대(98명)	24.5	13.3	62.2	6.1(.29)
60세+(252명)	30.2	19.0	50.8	5.3(.12)	60세+(114명)	26.3	16.7	57.0	6.0(.28)
보수(233명)	28.3	17.2	54.5	5.4(.12)	보수(157명)	24.8	11.5	63.7	6.3(.23)
중도(371명)	22.1	22.6	55.3	5.5(.09)	중도(124명)	24.2	25.0	50.8	5.8(.23)
진보(396명)	34.3	17.9	47.7	5.1(.10)	진보(119명)	34.5	13.4	52.1	5.4(.27)
-300만원(160명)	30.6	20.0	49.4	5.3(.15)	-3년(81명)	29.6	19.8	50.6	5.6(.31)
300-500만원(513명)	28.1	19.1	52.8	5.4(.08)	3-6년(100명)	21.0	14.0	65.0	6.4(.27)
500만원+(325명)	27.7	19.7	52.6	5.4(.11)	6-9년(100명)	34.0	13.0	53.0	5.6(.30)
					9년+(119명)	26.1	18.5	55.5	5.8(.26)

(8)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지속되는 한 실현될 수 없다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70.3%,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6.8%가 동의하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이념,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0대와 60대가 30대와 50대에 비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에 더 공감하였다. 또한 보수가 진보와 중도보다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림 II-36〉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2〉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0.0	19.7	70.3	6.5(.05)	전체(400명)	13.5	9.8	76.8	7.3(.13)
20대(173명)	13.9	20.2	65.9	6.2(.13)	20대(35명)	25.7	22.9	51.4	5.9(.42)
30대(171명)	8.8	20.5	70.8	6.6(.12)	30대(38명)	18.4	7.9	73.7	7.0(.42)
40대(203명)	11.3	19.2	69.5	6.5(.12)	40대(115명)	7.0	11.3	81.7	7.7(.18)
50대(201명)	9.0	18.9	72.1	6.6(.12)	50대(98명)	16.3	7.1	76.5	7.1(.29)
60세+(252명)	7.9	19.8	72.2	6.5(.10)	60세+(114명)	12.3	7.0	80.7	7.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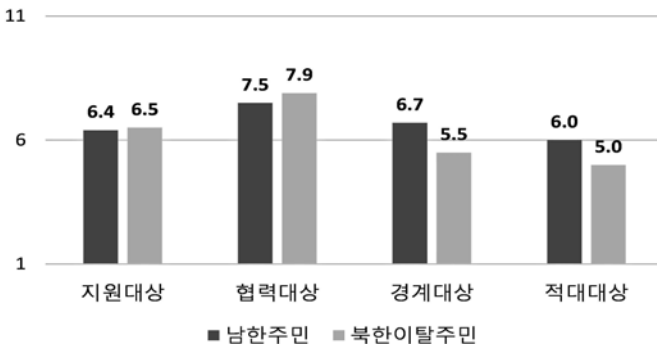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보수(233명)	9.0	18.5	72.5	6.6(.11)	보수(157명)	14.0	2.5	83.4	7.7(.21)
중도(371명)	7.5	21.6	70.9	6.6(.08)	중도(124명)	12.9	15.3	71.8	7.0(.23)
진보(396명)	12.9	18.7	68.4	6.4(.09)	진보(119명)	13.4	13.4	73.1	7.1(.23)
-300만원(160명)	7.5	23.1	69.4	6.5(.13)	-3년(81명)	14.8	17.3	67.9	7.0(.29)
300-500만원(513명)	9.6	18.9	71.5	6.5(.07)	3-6년(100명)	14.0	7.0	79.0	7.4(.26)
500만원+(325명)	11.7	19.1	69.2	6.4(.10)	6-9년(100명)	17.0	3.0	80.0	7.3(.28)
					9년+(119명)	9.2	12.6	78.2	7.5(.20)

6. 화해에 대한 태도-문항별 분석

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강했으며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약했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를 제외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보수는 북한을 경계 대상과 협력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다르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강도가 가장 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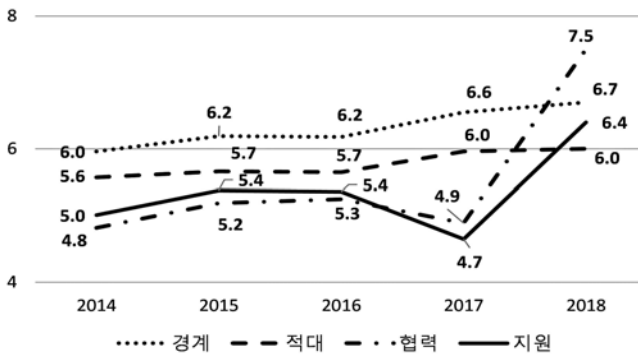
〈그림 II-3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이미지



〈표 II-43〉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구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전체(1,000명)	6.4(08)	7.5(07)	6.7(07)	6.0(07)	전체(400명)	6.5(19)	7.9(17)	5.5(19)	5.0(19)
20대(173명)	6.2(20)	7.3(17)	6.5(18)	6.0(17)	20대(35명)	6.6(52)	7.4(55)	5.1(60)	4.5(55)
30대(171명)	6.1(20)	7.4(18)	6.6(19)	6.0(18)	30대(38명)	6.4(54)	8.4(46)	5.6(52)	4.1(47)
40대(203명)	6.8(18)	7.8(14)	6.5(16)	5.8(16)	40대(115명)	6.5(37)	8.3(32)	5.4(34)	5.1(36)
50대(201명)	6.4(18)	7.8(15)	6.9(16)	6.0(16)	50대(98명)	6.4(40)	7.6(37)	5.7(41)	5.6(41)
60세+(252명)	6.2(17)	7.4(14)	7.1(14)	6.2(15)	60세+(114명)	6.7(35)	7.9(32)	5.5(36)	4.8(35)
보수(233명)	5.9(18)	7.1(16)	7.1(16)	6.4(17)	보수(157명)	5.6(32)	7.0(30)	6.3(31)	6.0(32)
중도(371명)	6.2(13)	7.5(12)	6.8(12)	6.0(12)	중도(124명)	6.9(30)	8.3(28)	5.1(30)	4.5(29)
진보(396명)	6.8(13)	7.8(10)	6.5(12)	5.8(11)	진보(119명)	7.4(33)	8.8(27)	4.9(35)	4.2(33)
-300만원(160명)	6.1(20)	7.1(20)	7.0(18)	6.3(19)	-3년(81명)	7.0(40)	8.4(37)	5.4(43)	4.6(42)
300-500만원(513명)	6.4(11)	7.5(09)	6.7(10)	6.0(10)	3-6년(100명)	5.9(38)	7.5(37)	5.8(38)	4.8(38)
500만원+(325명)	6.3(15)	7.8(11)	6.6(14)	5.9(13)	6-9년(100명)	6.7(39)	7.9(36)	4.8(38)	5.1(37)
					9년+(119명)	6.7(33)	8.0(29)	5.9(33)	5.4(33)

〈그림 II-38〉 2014년 이후 남한주민의 북한 이미지 변화 추이



2018년 남한주민의 북한 이미지 변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북한을 협력 대상, 지원 대상 보는 강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미대화 재개, 남북정상회담 등 2018년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의 결과일 것이다. 둘째, 북한을 협력 대상,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관찰되었지만 북한을 경계 대상, 적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화해와 협력의 인식이 곧 적대감과 경계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 즉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과 적대적 인식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추월했으며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특히 평양의 발전된 모습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북한을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모습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 또한 UN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¹⁰⁰⁾ 북한을 더 이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이 향후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나. 화해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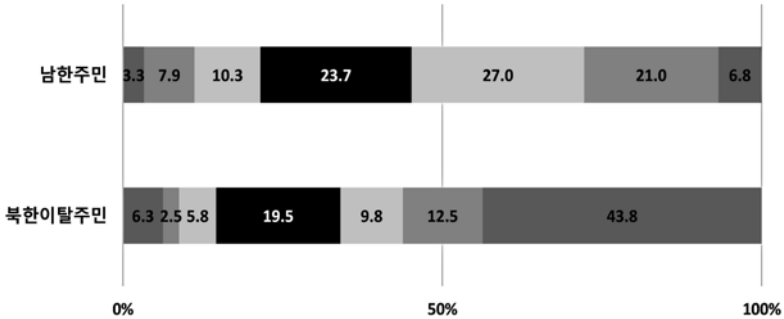
(1)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대부분 북한에 있다.

남북한 갈등의 책임이 대부분 북한에 있다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54.6%(4.5점),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66.0%(5.4점)가 동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북한의 책임이 남한주민이 느끼는 북한의 책임보다 더 컸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연령대

100) “유엔 “북한인구 40% 영양실조…식량공급 불안정,” 『연합뉴스』, 2018.10.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001800109.HTML>> (검색일: 2018.10.10.).

가 높을수록 북한이 남북 갈등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수적일수록 북한이 남북 갈등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1-39〉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대부분 북한에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11-4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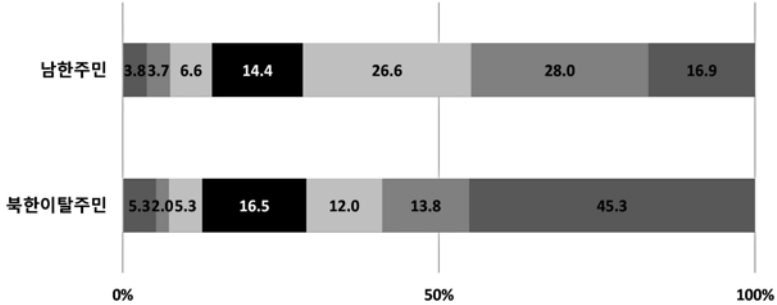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1.5	23.7	54.8	4.5(.05)	전체(400명)	14.5	19.5	66.0	5.4(.09)
20대(173명)	26.6	24.9	48.6	4.3(.11)	20대(35명)	42.9	25.7	31.4	3.9(.34)
30대(171명)	24.6	23.4	52.0	4.4(.12)	30대(38명)	10.5	23.7	65.8	5.2(.27)
40대(203명)	17.7	25.6	56.7	4.6(.10)	40대(115명)	15.7	24.3	60.0	5.2(.17)
50대(201명)	22.9	24.9	52.2	4.4(.10)	50대(98명)	8.2	17.3	74.5	5.6(.17)
60세+(252명)	17.9	20.6	61.5	4.8(.09)	60세+(114명)	11.4	13.2	75.4	5.8(.16)
보수(233명)	17.6	23.6	58.8	4.7(.10)	보수(157명)	8.9	18.5	72.6	5.8(.14)
중도(371명)	22.4	23.5	54.2	4.5(.08)	중도(124명)	15.3	25.0	59.7	5.1(.16)
진보(396명)	23.0	24.0	53.0	4.5(.07)	진보(119명)	21.0	15.1	63.9	5.1(.18)
-300만원(160명)	17.5	23.1	59.4	4.8(.11)	-3년(81명)	22.2	23.5	54.3	4.9(.23)
300-500만원(513명)	19.7	23.2	57.1	4.6(.06)	3-6년(100명)	9.0	21.0	70.0	5.5(.17)
500만원+(325명)	26.5	24.6	48.9	4.4(.09)	6-9년(100명)	12.0	21.0	67.0	5.5(.18)
					9년+(119명)	16.0	14.3	69.7	5.5(.16)

(2)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이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71.5%,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1.0%가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갈등 지속의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 도발을 남북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일수록,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관계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명제에 동의하였다. 이는 남한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도발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경험 역시 많아지며 북한의 관점이 아닌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해석하는 경험 역시 많아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40〉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이다'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표 II-4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를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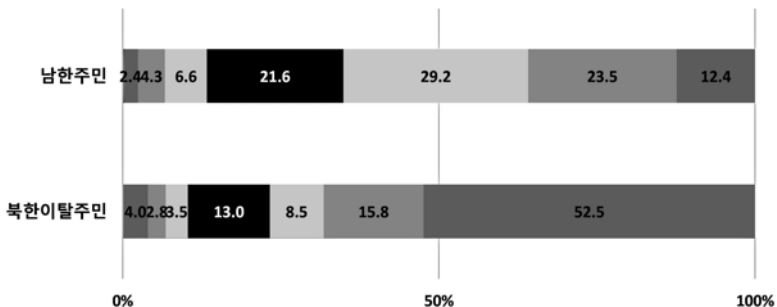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4.1	14.4	71.5	5.1(.05)	12.5	16.5	71.0	5.5(.09)
20대(173명)	17.9	19.1	63.0	4.8(.11)	37.1	25.7	37.1	4.2(.28)
30대(171명)	16.4	11.7	71.9	5.1(.12)	13.2	26.3	60.5	5.0(.28)
40대(203명)	11.8	15.3	72.9	5.1(.11)	12.2	18.3	69.6	5.4(.16)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16.4	10.9	72.6	5.1(.11)	50대(98명)	7.1	14.3	78.6	5.8(.17)
60세+(252명)	9.9	15.1	75.0	5.3(.09)	60세+(114명)	9.6	10.5	79.8	6.0(.15)
보수(233명)	12.9	11.2	76.0	5.2(.10)	보수(157명)	6.4	11.5	82.2	6.0(.12)
중도(371명)	12.7	14.6	72.8	5.1(.08)	중도(124명)	16.9	24.2	58.9	5.1(.15)
진보(396명)	16.2	16.2	67.7	5.0(.07)	진보(119명)	16.0	15.1	68.9	5.3(.18)
-300만원(160명)	9.4	13.8	76.9	5.4(.12)	-3년(81명)	22.2	21.0	56.8	5.0(.23)
300-500만원(513명)	13.8	14.2	71.9	5.1(.07)	3-6년(100명)	13.0	20.0	67.0	5.3(.17)
500만원+(325명)	16.9	15.1	68.0	4.9(.09)	6-9년(100명)	10.0	11.0	79.0	5.8(.18)
					9년+(119명)	7.6	15.1	77.3	5.7(.14)

(3) 북한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76.8%, 남한주민의 65.1%가 북한이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의 효과만 관찰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본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강도가 강했다.

〈그림 II-41〉 ‘북한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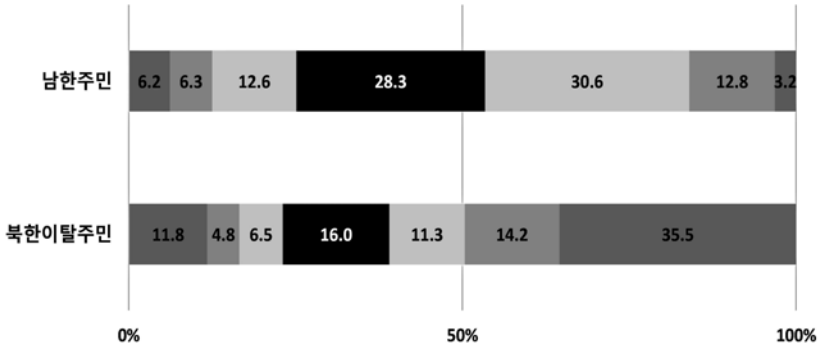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3.3	21.6	65.1	4.9(.04)	전체(400명)	10.3	13.0	76.8	5.8(.08)
20대(173명)	22.0	22.5	55.5	4.6(.12)	20대(35명)	22.9	28.6	48.6	4.6(.30)
30대(171명)	12.9	25.1	62.0	4.9(.11)	30대(38명)	5.3	21.1	73.7	5.5(.26)
40대(203명)	13.3	22.2	64.5	4.8(.10)	40대(115명)	8.7	15.7	75.7	5.8(.15)
50대(201명)	11.4	21.4	67.2	5.0(.10)	50대(98명)	10.2	11.2	78.6	5.7(.18)
60세+(252명)	9.1	18.3	72.6	5.1(.08)	60세+(114명)	9.6	4.4	86.0	6.2(.14)
보수(233명)	11.2	18.5	70.4	5.0(.09)	보수(157명)	7.0	4.5	88.5	6.3(.12)
중도(371명)	12.9	21.0	66.0	4.9(.07)	중도(124명)	10.5	21.8	67.7	5.4(.16)
진보(396명)	14.9	24.0	61.1	4.8(.07)	진보(119명)	14.3	15.1	70.6	5.5(.16)
-300만원(160명)	10.0	16.9	73.1	5.1(.10)	-3년(81명)	18.5	16.0	65.4	5.3(.23)
300-500만원(513명)	14.0	22.8	63.2	4.9(.06)	3-6년(100명)	9.0	17.0	74.0	5.7(.16)
500만원+(325명)	13.8	21.8	64.3	4.9(.08)	6-9년(100명)	8.0	9.0	83.0	6.0(.17)
					9년+(119명)	7.6	10.9	81.5	5.9(.12)

(4) 북한은 남한을 해하려 하는 존재이다.

북한은 남한을 해하려는 존재인가? 남한주민 응답자의 46.6%, 북한이탈주민의 6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반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남한의 경우 20대에서 50대까지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개심이 강했다. 두 집단 모두 보수의 동의 비율과 강도가 가장 강했으며 진보의 동의 비율과 강도가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거주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42〉 ‘북한은 남한을 해하러 하는 존재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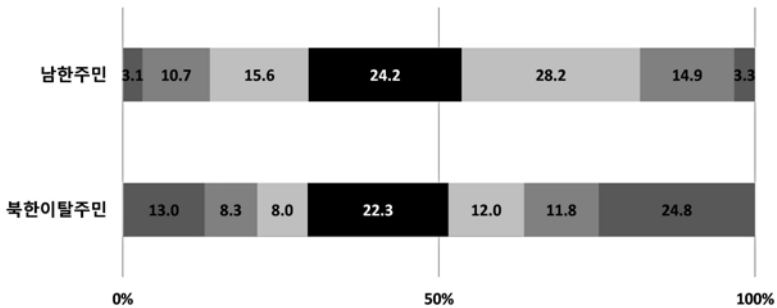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5.1	28.3	46.6	4.2(.04)	전체(400명)	23.0	16.0	61.0	5.0(.10)
20대(173명)	31.8	32.9	35.3	4.0(.11)	20대(35명)	45.7	28.6	25.7	3.6(.33)
30대(171명)	28.7	26.9	44.4	4.1(.11)	30대(38명)	28.9	18.4	52.6	4.3(.35)
40대(203명)	27.1	30.5	42.4	4.1(.09)	40대(115명)	22.6	15.7	61.7	4.9(.19)
50대(201명)	25.4	22.4	52.2	4.2(.11)	50대(98명)	21.4	14.3	64.3	5.1(.22)
60세+(252명)	16.3	29.0	54.8	4.5(.08)	60세+(114명)	15.8	13.2	71.1	5.5(.17)
보수(233명)	18.0	27.5	54.5	4.4(.10)	보수(157명)	13.4	13.4	73.2	5.7(.15)
중도(371명)	24.0	27.2	48.8	4.3(.07)	중도(124명)	25.8	19.4	54.8	4.6(.18)
진보(396명)	30.3	29.8	39.9	4.1(.07)	진보(119명)	32.8	16.0	51.3	4.4(.20)
-300만원(160명)	20.0	25.6	54.4	4.4(.11)	-3년(81명)	29.6	14.8	55.6	4.7(.25)
300-500만원(513명)	25.5	27.5	47.0	4.2(.06)	3-6년(100명)	26.0	15.0	59.0	4.9(.20)
500만원+(325명)	26.8	31.1	42.2	4.1(.08)	6-9년(100명)	21.0	11.0	68.0	5.2(.21)
					9년+(119명)	17.6	21.8	60.5	4.9(.18)

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

(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북한의 이익은 곧 남한의 손해라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46.2%,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8.5%가 동의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 29.3%임을 감안한다면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컸다. 남한주민의 경우 60대 이상 응답자가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강도가 강했다.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그림 II-43〉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4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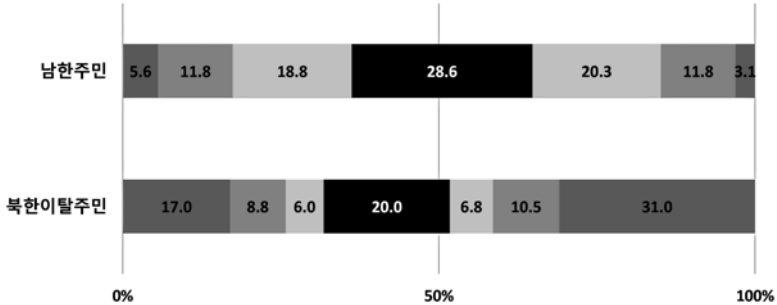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9.4	24.2	46.4	4.2(.04)	전체(400명)	29.3	22.3	48.5	4.5(.10)
20대(173명)	35.8	23.7	40.5	4.0(.11)	20대(35명)	48.6	22.9	28.6	3.7(.35)
30대(171명)	27.5	25.1	47.4	4.2(.10)	30대(38명)	39.5	15.8	44.7	4.1(.34)
40대(203명)	32.0	23.2	44.8	4.1(.10)	40대(115명)	33.0	20.0	47.0	4.3(.19)
50대(201명)	29.9	26.9	43.3	4.2(.10)	50대(98명)	23.5	29.6	46.9	4.6(.20)
60세+(252명)	23.8	22.6	53.6	4.5(.09)	60세+(114명)	21.1	20.2	58.8	4.9(.19)
보수(233명)	27.0	21.0	51.9	4.4(.10)	보수(157명)	21.7	18.5	59.9	5.0(.16)
중도(371명)	31.5	23.7	44.7	4.2(.07)	중도(124명)	32.3	30.6	37.1	4.2(.17)
진보(396명)	28.8	26.5	44.7	4.1(.07)	진보(119명)	36.1	18.5	45.4	4.1(.20)
-300만원(160명)	18.8	26.3	55.0	4.6(.10)	-3년(81명)	35.8	18.5	45.7	4.2(.23)
300-500만원(513명)	28.8	24.0	47.2	4.2(.06)	3-6년(100명)	30.0	25.0	45.0	4.4(.20)
500만원+(325명)	35.4	23.7	40.9	4.0(.08)	6-9년(100명)	30.0	16.0	54.0	4.6(.22)
					9년+(119명)	23.5	27.7	48.7	4.6(.18)

(2)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이익이 아닌 승리-패배의 관점으로 제시했을 때는 남한주민의 제로섬 인식이 다소 감소하였다. 남한주민의 35.2%, 북한이탈주민의 48.2%가 본 명제에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동의 비율과 비동의 비율이 비슷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념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북관계를 승리-패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수적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그림 II-44〉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4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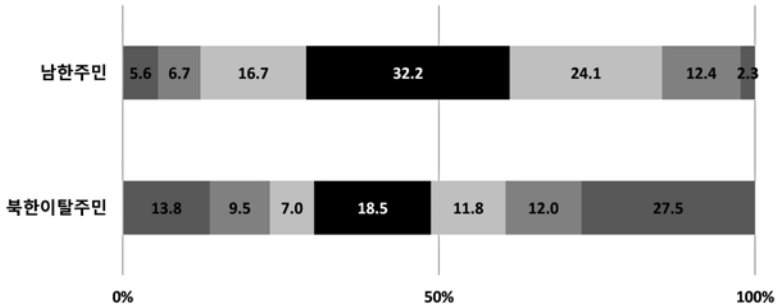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6.2	28.6	35.2	3.9(.05)	전체(400명)	31.8	20.0	48.3	4.5(.11)
20대(173명)	39.9	26.6	33.5	3.8(.11)	20대(35명)	48.6	14.3	37.1	3.8(.39)
30대(171명)	33.9	34.5	31.6	3.9(.10)	30대(38명)	36.8	18.4	44.7	4.2(.36)
40대(203명)	38.4	26.6	35.0	3.9(.11)	40대(115명)	35.7	18.3	46.1	4.3(.21)
50대(201명)	35.8	31.8	32.3	3.9(.09)	50대(98명)	23.5	27.6	49.0	4.7(.22)
60세+(252명)	33.7	25.0	41.3	4.1(.10)	60세+(114명)	28.1	17.5	54.4	4.8(.21)
보수(233명)	35.6	26.6	37.8	4.1(.10)	보수(157명)	24.8	15.9	59.2	5.0(.18)
중도(371명)	35.8	27.5	36.7	4.0(.08)	중도(124명)	36.3	25.8	37.9	4.0(.19)
진보(396명)	36.9	30.8	32.3	3.8(.07)	진보(119명)	36.1	19.3	44.5	4.2(.21)
-300만원(160명)	51.9	15.6	32.5	4.4(.15)	-3년(81명)	32.1	18.5	49.4	4.5(.26)
300-500만원(513명)	52.6	19.3	28.1	4.4(.08)	3-6년(100명)	39.0	18.0	43.0	4.2(.22)
500만원+(325명)	54.8	16.0	29.2	4.2(.11)	6-9년(100명)	30.0	17.0	53.0	4.7(.23)
					9년+(119명)	26.9	25.2	47.9	4.5(.20)

(3)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배려한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남북관계에서 배려한 측이 결국 손해라는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38.8%,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51.3%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배려가 손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연령과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45〉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배려한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려는 곧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보수적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진보와 중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5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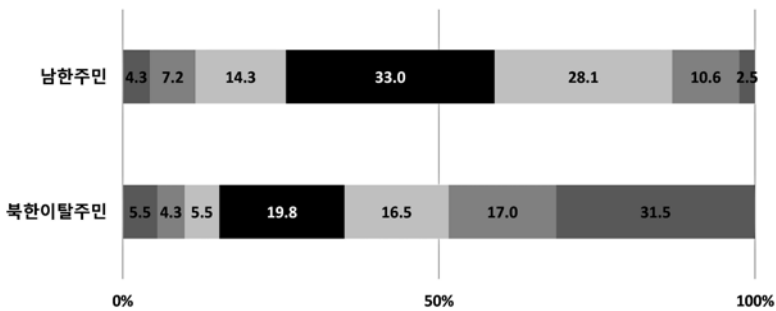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9.0	32.2	38.8	4.1(.04)	30.3	18.5	51.3	4.5(.11)	
20대(173명)	31.8	30.1	38.2	4.0(.11)	20대(35명)	28.6	42.9	28.6	4.0(.32)
30대(171명)	29.2	31.0	39.8	4.1(.11)	30대(38명)	42.1	15.8	42.1	3.8(.33)
40대(203명)	29.6	34.5	36.0	4.0(.10)	40대(115명)	30.4	18.3	51.3	4.5(.20)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28.9	32.3	38.8	4.1(.09)	50대(98명)	30.6	16.3	53.1	4.6(.23)
60세+(252명)	26.6	32.5	40.9	4.2(.08)	60세+(114명)	26.3	14.0	59.6	4.8(.19)
보수(233명)	26.2	33.9	39.9	4.2(.09)	보수(157명)	26.8	15.9	57.3	4.8(.17)
중도(371명)	28.6	31.0	40.4	4.1(.07)	중도(124명)	29.0	26.6	44.4	4.3(.18)
진보(396명)	31.1	32.3	36.6	4.0(.07)	진보(119명)	36.1	13.4	50.4	4.3(.20)
-300만원(160명)	21.3	30.0	48.8	4.4(.11)	-3년(81명)	27.2	24.7	48.1	4.6(.24)
300-500만원(513명)	28.5	33.1	38.4	4.1(.06)	3-6년(100명)	32.0	25.0	43.0	4.2(.20)
500만원+(325명)	33.2	32.0	34.8	3.9(.08)	6-9년(100명)	32.0	10.0	58.0	4.6(.21)
					9년+(119명)	29.4	16.0	54.6	4.6(.20)

(4)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마지막 질문은 남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충돌한다는 명제였다. 이 명제에 남한주민 응답자의 41.2%,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65.0%가 동의하였다. 앞선 문항과 같이 남한주민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연령과 이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거주기간에 따른 제로섬 인식 경향은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46〉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5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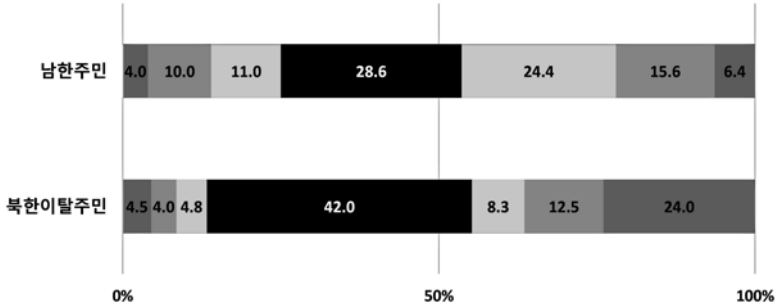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5.8	33.0	41.2	4.2(.04)	전체(400명)	15.3	19.8	65.0	5.1(.09)
20대(173명)	27.2	34.1	38.7	4.1(.10)	20대(35명)	22.9	37.1	40.0	4.4(.26)
30대(171명)	28.1	32.7	39.2	4.1(.10)	30대(38명)	18.4	18.4	63.2	4.8(.28)
40대(203명)	24.6	34.5	40.9	4.1(.09)	40대(115명)	9.6	19.1	71.3	5.3(.15)
50대(201명)	25.9	33.3	40.8	4.1(.09)	50대(98명)	15.3	20.4	64.3	5.2(.18)
60세+(252명)	24.2	31.0	44.8	4.3(.08)	60세+(114명)	17.5	14.9	67.5	5.2(.18)
보수(233명)	24.9	25.3	49.8	4.3(.09)	보수(157명)	13.4	12.7	73.9	5.5(.14)
중도(371명)	24.8	35.3	39.9	4.2(.07)	중도(124명)	16.1	29.0	54.8	4.8(.15)
진보(396명)	27.3	35.4	37.4	4.1(.06)	진보(119명)	16.8	19.3	63.9	5.1(.16)
-300만원(160명)	21.3	31.3	47.5	4.4(.10)	-3년(81명)	16.0	19.8	64.2	5.3(.21)
300-500만원(513명)	24.4	32.6	43.1	4.2(.06)	3-6년(100명)	17.0	24.0	59.0	4.9(.18)
500만원+(325명)	29.8	34.8	35.4	4.0(.07)	6-9년(100명)	17.0	13.0	70.0	5.2(.19)
					9년+(119명)	11.8	21.8	66.4	5.2(.14)

라. 경쟁적 피해자 의식

(1)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남북관계에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 남한주민 응답자의 46.4%,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4.8%가 남한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0%, 13.3%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피해자 의식이 약했다. 연령과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피해자 의식이 강했다. 남한 거주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II-47〉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52〉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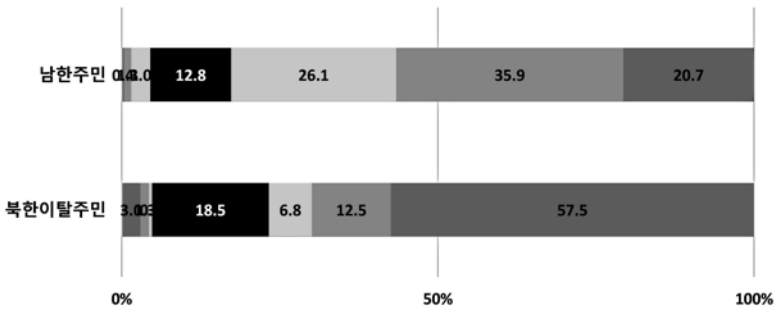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5.0	28.6	46.4	4.3(.05)	전체(400명)	13.3	42.0	44.8	4.8(.08)
20대(173명)	27.2	26.0	46.8	4.3(.11)	20대(35명)	20.0	65.7	14.3	3.9(.23)
30대(171명)	26.3	25.1	48.5	4.4(.11)	30대(38명)	21.1	50.0	28.9	4.1(.27)
40대(203명)	26.6	27.6	45.8	4.3(.11)	40대(115명)	13.0	47.8	39.1	4.6(.15)
50대(201명)	23.9	30.8	45.3	4.3(.11)	50대(98명)	11.2	46.9	41.8	4.7(.17)
60세+(252명)	22.2	31.7	46.0	4.4(.09)	60세+(114명)	10.5	21.9	67.5	5.5(.15)
보수(233명)	21.5	30.5	48.1	4.4(.10)	보수(157명)	8.3	35.7	56.1	5.2(.13)
중도(371명)	21.8	31.3	46.9	4.4(.08)	중도(124명)	14.5	47.6	37.9	4.6(.14)
진보(396명)	30.1	25.0	44.9	4.2(.07)	진보(119명)	18.5	44.5	37.0	4.5(.16)
-300만원(160명)	20.0	28.1	51.9	4.6(.12)	-3년(81명)	18.5	40.7	40.7	4.6(.20)
300-500만원(513명)	23.8	28.8	47.4	4.3(.06)	3-6년(100명)	10.0	42.0	48.0	5.0(.16)
500만원+(325명)	29.5	28.3	42.2	4.1(.08)	6-9년(100명)	10.0	39.0	51.0	5.0(.16)
					9년+(119명)	15.1	45.4	39.5	4.6(.15)

(2)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피해자이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피해자라는 명제에는 남한주민 응답자의 82.7%,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경우 76.8%가 동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대, 이념, 소득과 관계없이 남북이 분단으로 인한 공통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통의 피해자 의식이 강했다.

〈그림 II-48〉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피해자이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53〉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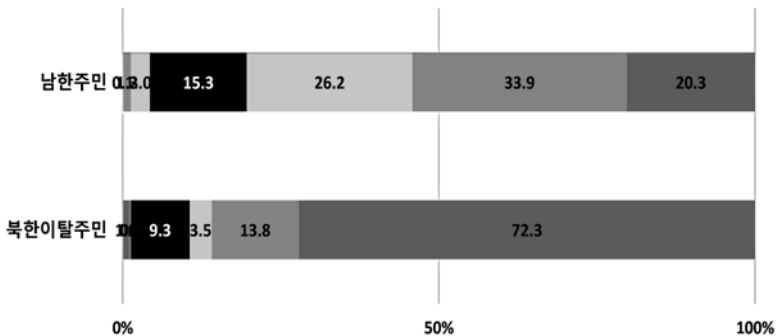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4.5	12.8	82.7	5.5(.04)	전체(400명)	4.8	18.5	76.8	5.9(.08)
20대(173명)	4.0	18.5	77.5	5.4(.09)	20대(35명)	2.9	14.3	82.9	6.1(.22)
30대(171명)	4.7	12.9	82.5	5.6(.08)	30대(38명)	2.6	5.3	92.1	6.3(.20)
40대(203명)	3.4	9.9	86.7	5.6(.07)	40대(115명)	2.6	14.8	82.6	6.2(.13)
50대(201명)	4.0	10.4	85.6	5.7(.08)	50대(98명)	6.1	25.5	68.4	5.6(.17)
60세후(252명)	6.0	13.1	81.0	5.5(.08)	60세후(114명)	7.0	21.9	71.1	5.7(.16)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보수(233명)	6.4	10.7	82.8	5.5(.08)	보수(157명)	7.6	21.0	71.3	5.7(.14)
중도(371명)	4.9	10.5	84.6	5.6(.06)	중도(124명)	2.4	17.7	79.8	6.0(.12)
진보(396명)	3.0	16.2	80.8	5.5(.05)	진보(119명)	3.4	16.0	80.7	6.1(.13)
-300만원(160명)	5.0	12.5	82.5	5.5(.10)	-3년(81명)	6.2	16.0	77.8	6.0(.19)
300-500만원(513명)	5.3	13.8	80.9	5.5(.05)	3-6년(100명)	6.0	23.0	71.0	5.7(.16)
500만원+(325명)	3.1	11.1	85.8	5.6(.06)	6-9년(100명)	6.0	16.0	78.0	5.9(.16)
					9년+(119명)	1.7	18.5	79.8	6.1(.12)

(3)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남북 간 갈등이 남북 모두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명제에 양 집단 모두 압도적인 비율로 동의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49〉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표 II-5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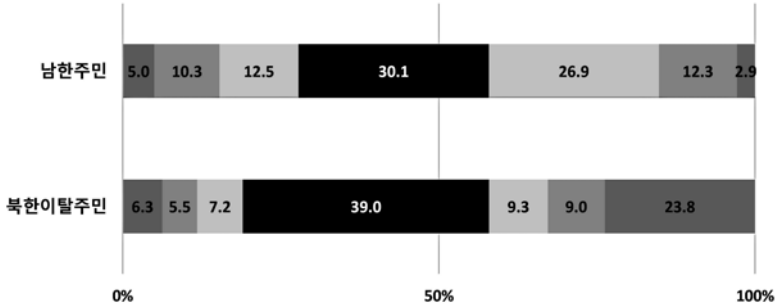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4.3	15.3	80.4	5.5(.04)	전체(400명)	1.3	9.3	89.5	6.4(.06)
20대(173명)	5.2	14.5	80.3	5.5(.09)	20대(35명)	.0	5.7	94.3	6.6(.14)
30대(171명)	4.1	15.8	80.1	5.5(.09)	30대(38명)	.0	7.9	92.1	6.6(.14)
40대(203명)	3.9	16.7	79.3	5.5(.08)	40대(115명)	1.7	7.0	91.3	6.5(.10)
50대(201명)	5.0	13.4	81.6	5.5(.08)	50대(98명)	1.0	13.3	85.7	6.3(.12)
60세+(252명)	3.6	15.9	80.6	5.5(.07)	60세+(114명)	1.8	9.6	88.6	6.4(.11)
보수(233명)	6.4	13.3	80.3	5.5(.08)	보수(157명)	2.5	8.9	88.5	6.4(.10)
중도(371명)	3.0	15.6	81.4	5.5(.06)	중도(124명)	.0	11.3	88.7	6.4(.09)
진보(396명)	4.3	16.2	79.5	5.5(.06)	진보(119명)	.8	7.6	91.6	6.5(.09)
-300만원(160명)	2.5	15.6	81.9	5.6(.09)	-3년(81명)	2.5	8.6	88.9	6.5(.14)
300-500만원(513명)	4.5	16.0	79.5	5.5(.05)	3-6년(100명)	1.0	13.0	86.0	6.3(.12)
500만원+(325명)	4.9	14.2	80.9	5.5(.06)	6-9년(100명)	.0	7.0	93.0	6.6(.08)
					9년+(119명)	1.7	8.4	89.9	6.4(.10)

(4)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과 고통)가 북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

남한주민 응답자와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모두 남북이 공통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남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42.1%,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2.0%가 남한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북한주민들의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 의식이 강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진보 또는 중도일 때 피해자 의식이 약했다.

〈그림 II-50〉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과 고통)가 북한사람이 겪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55〉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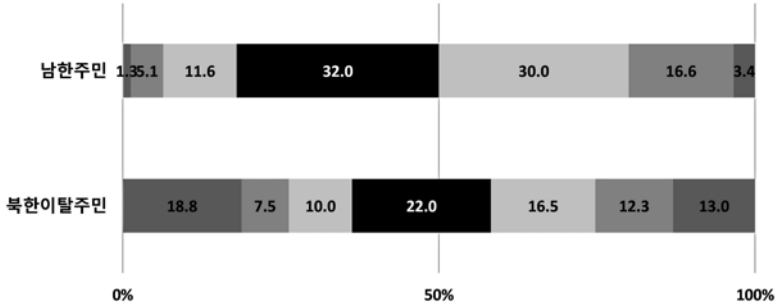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27.8	30.1	42.1	4.1(.04)	전체(400명)	19.0	39.0	42.0	4.6(.09)
20대(173명)	32.4	32.4	35.3	3.9(.11)	20대(35명)	31.4	42.9	25.7	3.7(.32)
30대(171명)	29.2	31.6	39.2	4.1(.11)	30대(38명)	26.3	52.6	21.1	4.0(.28)
40대(203명)	31.5	29.6	38.9	4.0(.10)	40대(115명)	20.9	45.2	33.9	4.3(.15)
50대(201명)	24.9	30.3	44.8	4.2(.10)	50대(98명)	18.4	37.8	43.9	4.8(.17)
60세+(252명)	23.0	27.8	49.2	4.3(.09)	60세+(114명)	11.4	28.1	60.5	5.3(.15)
보수(233명)	32.6	23.2	44.2	4.1(.10)	보수(157명)	14.6	36.3	49.0	4.9(.14)
중도(371명)	24.8	30.7	44.5	4.2(.07)	중도(124명)	19.4	42.7	37.9	4.5(.15)
진보(396명)	27.8	33.6	38.6	4.1(.07)	진보(119명)	24.4	38.7	37.0	4.3(.16)
-300만원(160명)	23.1	23.1	53.8	4.4(.12)	-3년(81명)	27.2	38.3	34.6	4.3(.21)
300-500만원(513명)	24.8	34.1	41.1	4.2(.06)	3-6년(100명)	13.0	43.0	44.0	4.7(.17)
500만원+(325명)	35.1	27.1	37.8	3.9(.08)	6-9년(100명)	15.0	36.0	49.0	4.9(.17)
					9년+(119명)	21.8	38.7	39.5	4.5(.16)

마. 북한에 대한 용서 의도

(1)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50.9%,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1.8%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명제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8.0%, 36.3%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이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보수보다는 중도, 중도보다는 진보가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수에 비해 중도와 진보가 명제에 대한 동의 강도가 강했다.

〈그림 II-51〉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misdeed)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표 II-56〉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意的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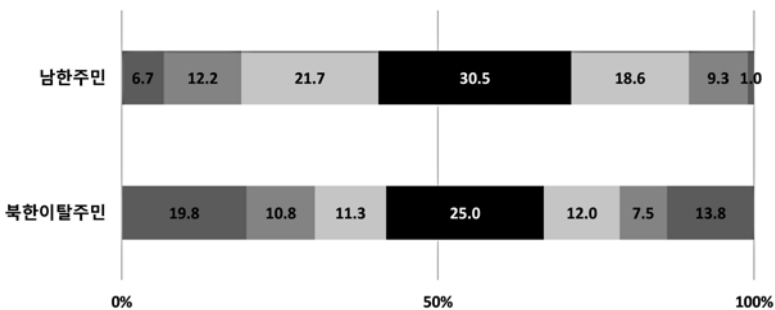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8.0	32.0	50.0	4.5(.04)	전체(400명)	36.3	22.0	41.8	4.0(.10)
20대(173명)	18.5	28.3	53.2	4.5(.09)	20대(35명)	37.1	34.3	28.6	3.7(.32)
30대(171명)	18.7	27.5	53.8	4.5(.09)	30대(38명)	47.4	18.4	34.2	3.6(.30)
40대(203명)	17.7	32.0	50.2	4.5(.09)	40대(115명)	35.7	24.3	40.0	4.0(.1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50대(201명)	14.9	36.3	48.8	4.5(.08)	50대(98명)	39.8	20.4	39.8	3.9(.22)
60세+(252명)	19.8	34.1	46.0	4.4(.08)	60세+(114명)	29.8	18.4	51.8	4.3(.19)
보수(233명)	24.5	34.8	40.8	4.2(.08)	보수(157명)	43.9	19.1	36.9	3.6(.16)
중도(371명)	18.6	33.4	48.0	4.4(.06)	중도(124명)	29.0	27.4	43.5	4.3(.17)
진보(396명)	13.6	29.0	57.3	4.7(.06)	진보(119명)	33.6	20.2	46.2	4.2(.18)
-300만원(160명)	18.8	28.8	52.5	4.5(.10)	-3년(81명)	29.6	21.0	49.4	4.3(.23)
300-500만원(513명)	17.5	34.5	48.0	4.4(.05)	3-6년(100명)	36.0	25.0	39.0	3.9(.19)
500만원+(325명)	18.5	29.5	52.0	4.5(.07)	6-9년(100명)	36.0	18.0	46.0	4.1(.21)
					9년+(119명)	41.2	23.5	35.3	3.8(.17)

(2) 나에게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갚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남한주민: 28.9%, 북한이탈주민: 33.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남한주민: 40.6%, 북한이탈주민: 41.8%)보다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강했으며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 해당된다. 남한주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도와 진보인 경우 북한에 대한 복수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그림 II-52> '나에게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갚음 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57〉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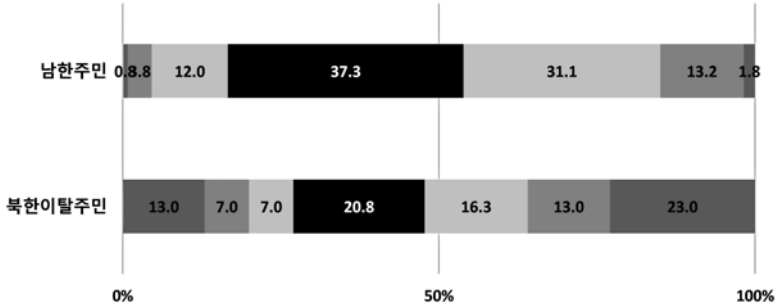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40.6	30.5	28.9	3.7(.04)	전체(400명)	41.8	25.0	33.3	3.8(.10)
20대(173명)	49.7	27.2	23.1	3.5(.10)	20대(35명)	68.6	20.0	11.4	2.5(.30)
30대(171명)	44.4	28.7	26.9	3.6(.11)	30대(38명)	36.8	31.6	31.6	3.8(.28)
40대(203명)	40.4	30.5	29.1	3.8(.09)	40대(115명)	46.1	26.1	27.8	3.5(.18)
50대(201명)	37.8	31.3	30.8	3.8(.09)	50대(98명)	34.7	26.5	38.8	4.1(.20)
60세+(252명)	34.1	33.3	32.5	4.0(.09)	60세+(114명)	36.8	21.9	41.2	4.1(.19)
보수(233명)	41.2	25.8	33.0	3.8(.10)	보수(157명)	36.9	24.8	38.2	4.1(.16)
중도(371명)	38.8	32.3	28.8	3.7(.07)	중도(124명)	42.7	26.6	30.6	3.6(.17)
진보(396명)	41.9	31.6	26.5	3.7(.07)	진보(119명)	47.1	23.5	29.4	3.5(.18)
-300만원(160명)	30.6	34.4	35.0	4.0(.11)	-3년(81명)	46.9	16.0	37.0	3.7(.24)
300-500만원(513명)	41.5	31.0	27.5	3.7(.06)	3-6년(100명)	44.0	26.0	30.0	3.7(.20)
500만원+(325명)	43.7	28.0	28.3	3.7(.08)	6-9년(100명)	36.0	30.0	34.0	3.9(.19)
					9년+(119명)	41.2	26.1	32.8	3.8(.17)

(3)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한주민의 절반 이하(46.1%),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정도(52.3%)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 북한 용서 의도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용서 의도가 높았다.

〈그림 II-53〉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표 II-58〉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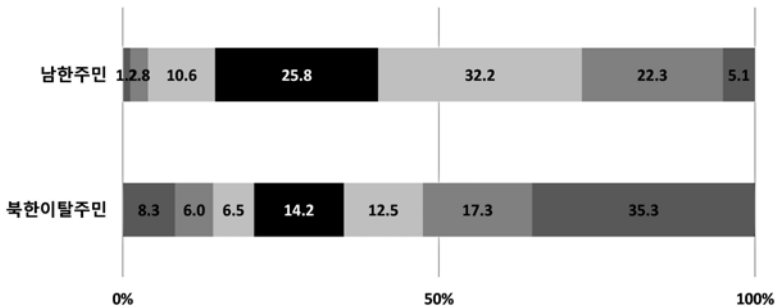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6.6	37.3	46.1	4.4(.03)	전체(400명)	27.0	20.8	52.3	4.5(.10)
20대(173명)	22.5	41.6	35.8	4.2(.09)	20대(35명)	22.9	22.9	54.3	4.8(.30)
30대(171명)	17.5	34.5	48.0	4.4(.09)	30대(38명)	39.5	26.3	34.2	3.7(.30)
40대(203명)	14.3	35.0	50.7	4.5(.08)	40대(115명)	30.4	18.3	51.3	4.4(.19)
50대(201명)	14.4	38.3	47.3	4.5(.07)	50대(98명)	26.5	26.5	46.9	4.4(.20)
60세+(252명)	15.5	37.3	47.2	4.4(.07)	60세+(114명)	21.1	15.8	63.2	4.9(.19)
보수(233명)	21.0	37.3	41.6	4.3(.08)	보수(157명)	33.8	20.4	45.9	4.2(.17)
중도(371명)	15.4	37.5	47.2	4.5(.06)	중도(124명)	19.4	25.8	54.8	4.8(.16)
진보(396명)	15.2	37.1	47.7	4.4(.05)	진보(119명)	26.1	16.0	58.0	4.7(.18)
-300만원(160명)	15.0	33.8	51.3	4.5(.08)	-3년(81명)	24.7	19.8	55.6	4.7(.22)
300-500만원(513명)	17.5	39.0	43.5	4.4(.05)	3-6년(100명)	29.0	23.0	48.0	4.5(.21)
500만원+(325명)	15.7	36.3	48.0	4.5(.06)	6-9년(100명)	27.0	19.0	54.0	4.5(.21)
					9년+(119명)	26.9	21.0	52.1	4.5(.18)

(4)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았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59.6%,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65.0%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수일수록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진보와 중도는 차이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년이 지난 이후 본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과 강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이런 경향이 유지되었다.

〈그림 II-54〉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표 II-59〉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를 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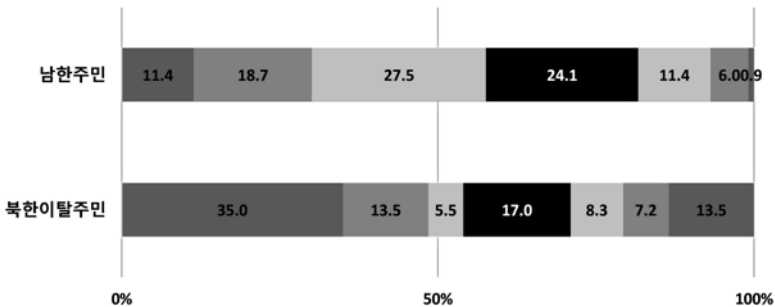
구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14.6	25.8	59.6	4.7(.04)	전체(400명)	20.8	14.3	65.0	5.1(.10)
20대(173명)	21.4	26.6	52.0	4.5(.09)	20대(35명)	40.0	25.7	34.3	4.0(.33)
30대(171명)	15.2	25.1	59.6	4.7(.10)	30대(38명)	23.7	13.2	63.2	4.8(.30)
40대(203명)	13.3	31.5	55.2	4.7(.09)	40대(115명)	19.1	14.8	66.1	5.1(.18)
50대(201명)	15.9	21.4	62.7	4.8(.08)	50대(98명)	16.3	17.3	66.3	5.3(.19)
60세+(252명)	9.5	24.6	65.9	4.9(.07)	60세+(114명)	19.3	7.9	72.8	5.3(.1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보수(233명)	12.4	22.7	64.8	4.9(.08)	보수(157명)	14.0	7.0	79.0	5.6(.15)
중도(371명)	12.7	27.2	60.1	4.7(.06)	중도(124명)	27.4	21.8	50.8	4.6(.17)
진보(396명)	17.7	26.3	56.1	4.6(.06)	진보(119명)	22.7	16.0	61.3	4.8(.19)
-300만원(160명)	11.3	23.8	65.0	4.9(.10)	-3년(81명)	37.0	14.8	48.1	4.4(.24)
300-500만원(513명)	15.6	26.3	58.1	4.7(.05)	3-6년(100명)	17.0	13.0	70.0	5.4(.18)
500만원+(325명)	14.5	25.8	59.7	4.7(.07)	6-9년(100명)	17.0	14.0	69.0	5.2(.20)
					9년+(119명)	16.0	15.1	68.9	5.2(.17)

(5) 남북 간의 화합은 의미가 없다.

남북화합이 의미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한주민 응답자의 경우 18.3%,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경우 29.0%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60대 이상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본 명제에 대한 동의 비율과 강도가 높았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보수가 중도보다 남북화합에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으며 중도는 진보보다 회의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50~60대 이상의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남북화합에 부정적이었다. 보수가 중도와 진보에 비해 남북화합이 의미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55〉 ‘남북 간의 화합은 의미가 없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60〉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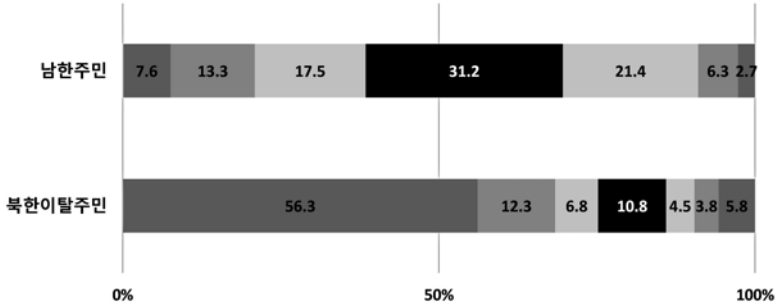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57.6	24.1	18.3	3.3(.04)	전체(400명)	54.0	17.0	29.0	3.3(.11)
20대(173명)	59.0	23.7	17.3	3.2(.11)	20대(35명)	80.0	8.6	11.4	2.4(.32)
30대(171명)	59.1	21.6	19.3	3.3(.11)	30대(38명)	57.9	18.4	23.7	2.9(.34)
40대(203명)	60.6	25.6	13.8	3.1(.09)	40대(115명)	59.1	14.8	26.1	3.0(.21)
50대(201명)	61.2	20.4	18.4	3.2(.10)	50대(98명)	50.0	19.4	30.6	3.4(.22)
60세+(252명)	50.4	27.8	21.8	3.5(.09)	60세+(114명)	43.0	19.3	37.7	3.8(.21)
보수(233명)	54.1	21.9	24.0	3.5(.10)	보수(157명)	41.4	17.2	41.4	3.9(.18)
중도(371명)	57.1	23.5	19.4	3.3(.07)	중도(124명)	60.5	19.4	20.2	2.9(.18)
진보(396명)	60.1	26.0	13.9	3.1(.07)	진보(119명)	63.9	14.3	21.8	2.8(.19)
-300만원(160명)	54.4	26.3	19.4	3.4(.11)	-3년(81명)	58.0	16.0	25.9	3.1(.25)
300-500만원(513명)	57.3	23.8	18.9	3.3(.06)	3-6년(100명)	52.0	22.0	26.0	3.3(.21)
500만원+(325명)	59.4	23.7	16.9	3.2(.08)	6-9년(100명)	51.0	15.0	34.0	3.4(.23)
					9년+(119명)	55.5	15.1	29.4	3.2(.20)

(6)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응답이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특히 이념에 따른 차이가 컸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30.4%가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38.4%는 존중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압도적으로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75.3%).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율은 14.0%에 불과했다. 양 집단 모두 보수가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율이 진보와 중도에 비해 높았다. 진보와 중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56〉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표 II-6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위 문항에 동의/비동의한 비율 및 평균

비동의/중간/동의: %, (): 표준오차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구분	비동의	중간	동의	평균
전체(1,000명)	38.4	31.2	30.4	3.8(.05)	전체(400명)	75.3	10.8	14.0	2.3(.09)
20대(173명)	35.8	32.9	31.2	3.8(.11)	20대(35명)	65.7	22.9	11.4	2.7(.28)
30대(171명)	35.1	31.0	33.9	3.9(.11)	30대(38명)	92.1	2.6	5.3	1.6(.21)
40대(203명)	38.9	33.5	27.6	3.7(.10)	40대(115명)	74.8	13.0	12.2	2.3(.17)
50대(201명)	40.8	29.9	29.4	3.8(.10)	50대(98명)	71.4	10.2	18.4	2.4(.20)
60세+(252명)	40.1	29.4	30.6	3.6(.10)	60세+(114명)	76.3	7.9	15.8	2.4(.18)
보수(233명)	45.9	26.6	27.5	3.5(.10)	보수(157명)	84.7	5.1	10.2	1.9(.13)
중도(371명)	34.2	31.3	34.5	3.9(.08)	중도(124명)	61.3	20.2	18.5	2.8(.18)
진보(396명)	37.9	33.8	28.3	3.8(.07)	진보(119명)	77.3	8.4	14.3	2.4(.17)
-300만원(160명)	40.6	25.0	34.4	3.7(.13)	-3년(81명)	67.9	21.0	11.1	2.4(.19)
300-500만원(513명)	40.9	31.4	27.7	3.7(.06)	3-6년(100명)	78.0	9.0	13.0	2.2(.18)
500만원+(325명)	33.5	33.8	32.6	3.9(.08)	6-9년(100명)	75.0	6.0	19.0	2.4(.20)
					9년+(119명)	78.2	9.2	12.6	2.2(.16)

7.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인이 평화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단어 연합과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는 비둘기, 자유, 통일, 행복과 관련이 높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경우 평화와 연합된 단어의 강도는 비둘기에 이어 통일, 행복, 안정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1순위 단어들의 순서는 통일, 비둘기, 자유, 행복, 전쟁의 부재 순이었다. 하지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반응어의 연합 강도, 즉 평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비둘기가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이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였다.

두 집단 간 또 다른 공통점은 평화와 경제적 가치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번영, 부유함 등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극히 드물었다. 경제적 번영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단어(경제, 돈, 번영, 풍요, 살기 좋음 등)는 3,000개 단어 중 36개, 즉 1.2%에 불과했다. 이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평화라는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비둘기와 통일이 평화와 연합된 강도의 차이를 빼면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은 평화와 관련하여 전쟁의 부재를 언급한 반면 남한주민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 상황으로 인식하는 소위 소극적 평화에 남한주민에 비해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어들을 범주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남한주민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통일, 공공 권리, 관계,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폭력의 부재, 폭력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관계,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물리적 안정, 상징, 폭력의 부재, 폭력 순이었다.

평화와 연합된 단어를 범주화했을 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한주민은 평화를 상징, 그리고 행복과 같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평화는 비둘기라는 인식은 우리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것이다. 평화를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갈등이 고질화, 일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고질화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집단은 평화를 공동체의 목표로 설정한다. 분쟁이라는 암흑 터널 속에서 평화는 터널 끝을 암시하는 목표와 상징으로 작동한다. 구성원에게 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희망을 제공하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과정이 생략된 목표로서의 평화는 실체가 없으며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하다. 삶과 유리되어 있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한국인들에게 평화가 비둘기인 이유이다. 동시에 한국인들의 평화인식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서구의 평화인식과 유사하다.

고질화된 사회의 평화인식, 그리고 비교적 전쟁 경험이 부재했던 북유럽 국민의 평화인식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모순들, 소위 '분단 폭력'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화에 대한 표상과 더불어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역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평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동의, 전쟁이라는 가치에 대한 반대는 일종의 도덕적 불문율이다. 다소 놀라운 결과는 평화에 대한 태도,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평화 지향성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평화를 피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단어연합과제 결과를 고려한다면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평화에 대한 태도를 ‘평화맹’이라고 지칭하였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보다는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과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응답의 차이는 전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차이에 비해 작았다. 상대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한반도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남북화해에 대한 남한주민의 평균은 중앙치인 4점에 못 미치는 3.6점,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은 2.6점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심리적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

록, 진보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화해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과 화해하겠다는 의향이 감소하였다. 남한 거주기간의 효과적 인지 탈북시점의 문제인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상대를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 지표인 제로섬 관계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강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중앙치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앙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보수적일수록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한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제로섬 인식이 강했다.

남북관계에서 누가 더 피해자인가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주민이 더 큰 피해자라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남한과 북한 모두 분단과 전쟁의 피해자이지만 남한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화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아직까지는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 연령일수록, 진보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용서하겠다는 태도가 강했다. 북한과의 화해 태도에서도 관찰되었지만 20대가 상대적으로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평화교육에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절실히 요청된다.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단순히 교과과정의 개편 혹은 증편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유토피아적,

상징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다. 평화교육의 기본적 가정은 ① 갈등과 폭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② 갈등과 폭력을 전환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¹⁰¹⁾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은 분단과 6·25 전쟁이 야기한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한국사회가 평화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갈등과 폭력에 대한 교육이다.¹⁰²⁾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화교육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인식이 장기간에 걸친 분쟁과 폭력, 즉 고질적인 분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평화롭지 않지만 평화롭다고 인식하는 일종의 자기기만(self-deception)의 사회에서 평화교육은 고통스럽지만 자기노출(self-disclosure)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분쟁을 넘어 극히 고질적인 분쟁 사회인 한국의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쟁과 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평화의 편익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현재 한국 평화교육의 과제는 한국사회가 갈등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야 한다.

상징으로서의 평화가 생활로서의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우리 삶에 내재된,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분단의 폭력들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이다. 평화교육이 자칫 불편하고 거북한 교육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101) 이언 해리스·메리 모리스 지음, 박정원 옮김, 『평화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3), pp. 51~52.

102) 위의 책, p. 27.

본 연구에서 탐색한 남북의 화해, 용서, 경쟁적 피해자 의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제로섬 인식은 분단의 폭력과 갈등이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영역들이다.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의 원인, 그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과 폭력의 구조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남북 간의 합의와 경제 협력도 한국의 손해로 인식되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윈-윈(win-win)합의와 경제적 협력 속에서 북한의 이익은 한국의 손해로 인식되며 이는 한국의 이익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제로섬 인식은 일반적으로 ‘악마화’의 소산이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용인하고 당연시했던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고찰과 반성이 없는 한 남북기본합의서 1장 1조가 규정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평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평화교육은 단순히 남북 공존·공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남북의 공존·공영이 한반도 평화라는 정당성을 강변해서도 안 된다. 제로섬 인식이라는 폭력적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상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로섬 인식의 근원과 그 결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직시가 평화교육의 시작인 것이다. 제로섬 인식이 아닌 윈-윈 인식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 이후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합의는 평화교육은 안보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유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고려한다면 우리 국민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의 대체 교육이 아니다.¹⁰³⁾ 오히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군사력은 무엇인지,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군비경쟁의 속성에 대해 열린 토론을 요청한다. 동시에 군축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평화 담론은 안보 담론과 병행되어야 한다. 적정 국방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안보 방향 및 담론에 관한 국민설득 노력 및 공감대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안보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비밀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 학자를 국방 분야 분석 및 연구에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서 개방된 분위기에서 국방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솔직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세 번째 함의는 평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대상은 20대와 30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였다.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근거는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혹은 인식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103) 이언 해리스·메리 모리스, 『평화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pp. 56~57, pp. 110~113.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은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사회 전반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전생애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줄이고 평화 지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갈등조정 메커니즘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유인(incentive) 부여 시스템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정부 및 민간 단위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담론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역시 필요할 것이다.

Ⅲ

심층 분석: 남한주민을 중심으로

박형인·권영미·최훈석 (성균관대학교)

1. 평화와 전쟁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우익권위주의를 중심으로

박형인(성균관대학교)

핵심 요약

주요결과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평화에 대해 우호적이고 전쟁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
- 성격이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신경증과 성실성의 영향이 두드러졌음.
- 대인관계반응성 중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 역시 평화에 대한 태도 및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
-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적 관심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우익권위주의가 전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실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정책적 시사점

- 평화 실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조금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개개인의 기질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음을 시사함.
- 우익권위주의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함.

요약

본 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격, 대인관계반응성에서의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성격은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특질이 포함되었다.

기초 분석 결과, 1,000명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평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전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외향성에 있어서는 너무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지 않고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고하였다. 타인에 대한 친절을 나타내는 우호성과 질서 정연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내는 성실성은 약간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불안정한 정서 반응을 측정하는 신경증의 평균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상상력과 창의력과 관련이 깊은 경험에의 개방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간과 비슷한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공감적 관심을 보고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익권위주의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의 성향이 보고되었고, 개인 간 편차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심층 분석에서는 성격,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각 준거변수를 설명하는 모형에 이들 일곱 가지 예측변수를 다 함께 투입하여, 다른 예측변수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 예측변수가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연령과 월수입을 가장 먼저 모형에 투입하여, 연령과 월수입의 예측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데 이어, 이들 두 기초정보를 평균으로 맞추었을 때 성격,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를 조사하였다.

평화에 대한 태도의 심층 분석 결과, 연령과 월수입은 평화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격은 연령과 월수입을 통제하고 8%의 설명량을 보였고, 외향성과 신경증이 낮고, 우호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평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방성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아가 공감적 관심이 높고 우익권위주의가 낮을수록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갖는 관계가 공감적 관심에 따라 달라졌다. 공감적 관심이 낮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아졌지만, 공감적 관심이 높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의 심층 분석 결과, 역시 연령과 월수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성격은 7%의 추가 설명량을 보였으나, 대부분은 성실성과 신경증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외향성, 우호성, 그리고 개방성의 예측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 월수입, 성격을 통제한 후, 공감적 관심은 6%의 추가 설명량을 보였고, 공감적 관심이 낮을수록 전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더해, 우익권위주의는 1%의 추가 설명량을 보였고,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전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우익권위주의와 전쟁에 대한 태도는 성실성에 의해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성이 낮을 경우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성실성이 높을 경우 우익권위주의가 높아짐에 전쟁에 대한 태도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성이 높은 개인들은 성실성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여, 전쟁에 대해서 대체로 비우호적이었다.

가. 연구 배경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루어진 2018년 4월 27일을 전후하여 대내외적으로 종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이 곧 한반도의 통일은 아니며, 통일 이전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남한 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의견이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 조사에서는 국민 중 74.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¹⁰⁴⁾ 이는 1994년에 91.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¹⁰⁵⁾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한 현시점의 이면에 남한 내 통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⁰⁶⁾ 즉, 사회적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⁷⁾

나아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가능한 통일의 유형으로는 크게 한 축의 흡수와 양축의 연합이 있는데,¹⁰⁸⁾ 우리 국민이 통일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통일의 접근

104) “국민 74.4% “통일 필요”...올해 들어 7.7%p 하락,” 『연합뉴스』, 2016.9.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133200014.HTML>> (검색일: 2018.8.24.).

105) 통일연구원, “1994년 여론조사: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kinu.or.kr/www/jsp/prg/stats/PollPopup.jsp?no=2&qNum=33>> (검색일: 2018.8.24.).

106) Andrew S. Millar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cial-Reunification Feasible?,” *Korea Observer*, vol. 49, no. 2 (2018), pp. 191~217.

107) *Ibid.*, pp. 191~217.

108) *Ibid.*, pp. 191~217.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평화와 전쟁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각 개인이 전반적으로 평화나 전쟁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수(criterion)로 하여, 한 개인 내 각 준거변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예측변수(predictor)로 성격(personality), 대인관계반응성(interpersonal reactivity), 그리고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를 살펴보았다.

한 개인이 보이는 여러 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¹⁰⁹⁾ 환경은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성 and 변경이 가능한 반면, 고유한 개인 특성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구에서 예측변수로 사용하는 성격과 대인관계반응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우익권위주의는 하나의 구체적인 태도이면서 또 다른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런 개인차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그만큼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많음을 뜻한다. 반대로 개인차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다면, 태도가 결정된 이후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09) Richard D. Arvey et al., "Job Satisfaction: Environmental and Genetic Compon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4, no. 2 (1989), pp. 187~192.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그리고 우익권위주의 각각이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¹¹⁰⁾ 인간의 희로애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고,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해외의 결과가 국내에도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른 한편,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세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해외 이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세 범주의 예측변수를 동시에 연구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세 범주의 예측변수 중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사용한 연구는 세 범주의 예측변수가 갖는 독특한 역동을 알아내기가 힘들다. 다수의 예측변수들이 동시에 하나의 준거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역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고, 대인관계반응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성격과 대인관계반응성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많다면, 성격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난 후 대인관계반응성이 고유하게 평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양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인관

110)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William Eckhardt and Norman Z. Alcock,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ar/Peace Attitudes," pp. 105~116;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LoS ONE*, vol. 12, no. 9 (2017), pp. 1~18.

계반응성보다는 성격이 평화에 대한 태도의 더 주요한 예측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둘을 함께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동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로, 복수의 예측변수 중 중복되는 특성을 제외하고 남은 각 예측변수의 고유한 특성 중 준거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량을 부가적인(additive) 효과라고 한다면, 두 개의 예측변수의 서로 다른 조합이 준거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량은 상호작용(interactiv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반응성과 우익권위주의가 모두 높은 사람과 대인관계반응성은 낮으나 우익권위주의만 높은 사람은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 효과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별을 보인다.

나. 기초 분석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는 각각 여섯 개의 문항들로 측정을 하였고, 그중 절반은 반대되는 개념을 측정한 후 응답치를 역으로 바꾸어 분석을 하였다. 최종 점수는 각 참가자 별 여섯 문항 응답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문항 합산 / 6), 가능한 총 범위는 1.00점부터 9.00점까지이다.

먼저 평화에 대한 태도는, “국가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는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 문항 세 개와,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평화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 문항 세 개로 측정하였다. 아래 <표 III-1>을 보면, 평화에 대한 태도는 평균 6.00점으로 중앙값인 5.00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준편차는 1.09점으로 응답자 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가능한 최소값이 1.00점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최소값은 2.33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쟁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의 세 문항과,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의 세 역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III-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응답자 평균은 3.67점으로 중간값인 5.00점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는 1.29점으로 비교적 편차가 컸고, 전체 범위 역시 넓게 나타났다.

<표 III-1> 평화/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화에 대한 태도		2.33 - 9.00	6.00	1.09
전쟁에 대한 태도		1.00 - 9.00	3.67	1.29

요컨대, 응답자들은 국가 간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평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에 대한 응답자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평화에 대해 비교적 동일한 수준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와 비슷

하게,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줄 수 있는 이익보다 재앙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태도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개인 별 입장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이들 두 태도 변수들을 준거변수로 놓았을 때 이들의 잠재적 예측변수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성격, 대인관계반응성,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포함되었다.

(1) 성격(Personality)

나라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섯 가지의 상위 성격 특질(trait)을 보인다는 것이 관찰된 후, 이 다섯 가지 특질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유형이라는 의미로 5요인 모형(five-factor model)이 개발되었다.¹¹¹⁾ ‘성격 5요인’이라고 불리는 이 다섯 가지 특질에는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그리고 경험에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 포함된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친화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우호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정도이다. 성실성은 양심을 따르면서 부지런하고 꼼꼼한 측면을 포함한다. 신경증은 세상이 위협적이고 통제 밖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데, 다른 요인들이 긍정적인 개념인 것에 맞추기 위해 반대 극단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극, 변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하고, 줄여서 개방성으로도 많이 불린다.¹¹²⁾

111) Robert R. McCrae and Oliver P. John,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pp. 175~215.

112)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pp. 47~65.

기본 성격 특질은 유전적인 영향을 토대로 형성된다.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적 기질(disposition)을 바탕으로 한다.¹¹³⁾ 따라서 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질은 그 사람의 나이, 출생지, 거주지,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정환경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보다도 먼저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 연구는 5요인 모형에 속하는 성격을 측정하여 이탈리아 투표자들 중 중도좌파가 많이 보이는 성격과 중도우파가 많이 보이는 성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¹¹⁴⁾ 즉, 기질을 바탕으로 한 기본 성격 특질이 개인의 정치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성격이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¹¹⁵⁾ 이 연구에서는 신경증, 우호성 등의 성격이 평화나 전쟁을 나타내는 관념(ideology)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관념으로는 군사력의 증강, 국가주의 등을 포함하는 군국주의(militarism)와 해외 구조, 평화에 대한 책임, 국가 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등이 있었다.¹¹⁶⁾ 그렇지만 이 연구는 1970년에 학술지에 출판된 서구 연구이므로 2018년의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특히, 성격 5요인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이전의 연구로, 신경증과 우호성 외 다른 성격은 5요인 모형과 연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113) Kerry L. Jang,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rn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pp. 577~591.

114) Gian V. Capara, Claudio Barbaranelli, and Philip G. Zimbardo, "Personality Profiles and Political Parties," pp. 175~197.

115) William Eckhardt and Norman Z. Alcock,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ar/Peace Attitudes," pp. 105~116.

116) *Ibid.*, pp. 105~116.

더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기본 성격이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격은 간편형 한국어 Big Five Inventory(BFI)로 측정하였다.¹¹⁷⁾ 이 측정도구에서는 각 하위 성격을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세 문항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0점부터 5.00점이다.

외향성은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이다”는 두 문항과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는 한 개의 역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II-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외향성 평균 점수는 3.01점으로 중앙값인 3.00에 근접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평균 성격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우호성은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사려 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II-2>와 같이 평균 점수는 3.55점, 표준편차는 0.5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이 우호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성실성은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9점(표준편차 0.59점)이었고, 실제 응답치를 바탕으로 한 범위는 2.00점부터 5.00점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117)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pp. 47~65.

〈표 III-2〉 성격 5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1.00 - 5.00	3.01	0.61
우호성		1.67 - 5.00	3.55	0.54
성실성		2.00 - 5.00	3.59	0.59
신경증		1.00 - 5.00	2.56	0.69
개방성		1.33 - 5.00	3.19	0.64

신경증에는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쉽게 침울해지는 사람이다”의 세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III-2〉를 보면 이 세 문항의 평균은 2.56점(표준편차 0.69점)으로, 응답자들은 약간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의 측정에는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 “나는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가 사용되었다. 〈표 III-2〉와 같이 개방성의 평균은 3.19점(0.64점)이었고, 응답치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범위는 1.33점부터 5.00점으로, 중간과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 높은 편에 속하였다.

(2) 대인관계반응성(Interpersonal Reactivity)

광의의 개념인 공감(empathy)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¹¹⁸⁾ 초기의 학자들은 공감을 인지적인 반응으로 개념화하는 학파와 정서적인 반응으로 개념화하는 학파로 나누었으나, 이후에는 공감이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multi-dimensional)적인 개인차 요인으로 통합되었다.¹¹⁹⁾

118) Mark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p. 113~126.

다차원적인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대인관계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가 있다. 원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두 요인인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 지향적인 정서와 불행한 사람에 대한 걱정을 측정한다.¹²⁰⁾ 개인적 고통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에 대한 자기 지향적인 정서를 측정한다.¹²¹⁾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잘 배려한다.¹²²⁾ 공감적 관심은 정서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북한과 같은 상대방의 처지를 더 고려하고자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고통을 높게 보고하는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사회불안이 높으며,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높다.¹²³⁾ 개인적 고통이 높은 사람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고, 동시에 특유의 수줍음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자면,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과 같은 대인관계반응성이 특정 정치적 견해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표현하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과 덴마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심이 평화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 전쟁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119) *Ibid.*, pp. 113~126.

120) *Ibid.*, pp. 113~126.

121) *Ibid.*, pp. 113~126.

122) *Ibid.*, pp. 113~126.

123) *Ibid.*, pp. 113~126.

며, 개인적 고통은 전쟁에 태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¹²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은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공감적 관심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었다.¹²⁵⁾ 요컨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는 경험 자료들이 있지만, 연구된 국가나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인관계반응성의 두 하위요인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의 예측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국내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는 해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앞선 해외 연구들이 모두 서구에서 실시되었음에도 결과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가 현저히 다른 한국에서는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대인관계반응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 및 전쟁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III-3〉 공감적 관심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감적 관심		2.00 - 5.00	3.72	0.60

원래 계획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각각 세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인적 고통의 경우, 개별 척도의 기본 수치

124)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125)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p. 1~18.

인 세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가 너무 낮게 나와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감적 관심은, 역문항 한 개를 포함한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역문항을 넣었을 때 내적합치도가 낮게 나와서 이를 제외한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나는 곤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와 “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는 두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0점부터 5.00점까지이다. <표 III-3>을 보면, 공감적 관심의 평균은 3.72점(표준편차 0.60점)이었고, 실제 응답에서의 최소값은 2.00점부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공감적 관심은 높은 편에 속하였다.

(3)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마지막으로, 우익권위주의는 지배(dominance) 및 복종(submission)과 관련된 성격요인에서 출발한다.¹²⁶⁾ 우익권위주의자들은 지위가 확립된 권위자들과 이들이 지지하는 사회규범에 복종한다. 우익권위주의의 주요 특징은,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그리고 권위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이다.¹²⁷⁾ 관습주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의 고수로 정의되고, 권위적 공격성은 규범 위반자에 대한 공격적 정서이며, 권위적 복종은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종속을 일컫는다.¹²⁸⁾

우익권위주의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여

126) Bob Altemeyer,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pp. 47~92.

127)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p. 863~872.

128) Anna M. M. Rattazzi, Andrea Bobbio, and Luigina Canova,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 (2007), pp. 1223~1234.

러 가지 기존 사회가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익권위주의는 정치적 경향성(political orientation)과 강한 상관관을 보였다.¹²⁹⁾ 따라서 우익권위주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문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자료에서는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수로 이미 연구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덴마크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부적인 상관관을 보였고, 전쟁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¹³⁰⁾ 또한, 불어권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는 약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나 전쟁에 대한 태도와는 강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¹³¹⁾

우익권위주의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여덟 문항은 우익권위주의를 측정하고, 일곱 문항은 그 반대의 내용을 측정하여 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급진적이며 비도덕적인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통적 방식과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는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역겨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신문을 검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세워온 장식을 고려한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세대가 이룩한 우리

129) *Ibid.*, pp. 1223~1234.

130)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131)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p. 1~18.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와 성적 문란함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진정한 시민의 의무는 우리사회를 내부로부터 오염시키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가 포함되었다. 또한, 역문항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사회는 전통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자유로운 사상가가 필요하다”, “비전통적 가치와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심을 보인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우리사회는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악하거나 위협하지 않다”, “정부에 도전하는 소위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의존해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쁜 책들을 검열하기보다는 인정하는 편이 더 낫다”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합리성과 휴머니즘으로 대한다면 우리사회의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가 포함되었다. 이 모든 문항들의 평균 점수로 우익권위주의의 점수를 계산하였고, 가능한 전체 범위는 1.00점부터 7.00점이었다.

〈표 III-4〉 우익권위주의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1.13 - 6.53	4.02	0.46

〈표 III-4〉에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은 4.02점으로 중앙값인 4.00점에 근접하였고, 표준편차도 0.46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응답 자료에서의 점수 범위는 1.13점부터

6.53점으로 극단값이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우익권 위주의의 관점에서는 중도의 성향을 보였다.

다. 심층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도 각각의 잠재적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인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성격,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잠재적 예측변수 모두가 평화에 대한 태도 혹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에 함께 투입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예측변수는 무엇이고, 모든 예측변수가 공동으로 각 준거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얼마인지를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각 개인의 기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포함된 정보는 각 개인의 연령과 월수입이다. 즉, 연령에 따라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월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는 여러 개의 예측변수로 한 개의 준거변수를 설명하는 최적의 공식(equation)을 찾는 분석방법이다.¹³²⁾ 각 예측변수의 계수가 얼마인지가 산출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예측변수와 해당 예측변수가 서로 겹치는 변량(variance)을 제외하고 난 후의 고유한 설명량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 계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예측변수이다. 또한, 모든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준거변수

132) Jacob Cohen et al.,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3), pp. 64~100.

의 변량(%)이 산출되어 나온다.

마지막으로 예측변수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검사하였다.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라고도 하는데,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 관계가 다른 예측변수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¹³³⁾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익권위주의가 평화나 전쟁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로 연구가 되었지만, 우익권위주의와 평화 혹은 전쟁에 대한 태도 간 관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¹³⁴⁾ 예를 들면, 표본에 따라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고,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¹³⁵⁾ 즉, 관계의 강도가 표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의 유의도 수준과 별개로 관계의 부호도 정적(+) 관계를 보인 경우와 부적(-) 관계를 보인 경우가 혼재해 있었다.¹³⁶⁾ 정적 관계는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높다는 의미이고, 부적 관계는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익권위주의와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 간 관계가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및 전쟁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조절효과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¹³⁷⁾ 따라서 마지막 분석 단계에서는, 우

133) Reuben M. Baron and Davi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1986), pp. 1173~1182.

134)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p. 1~18.

135)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136) *Ibid.*, pp. 673~693.

익권위주의가 평화 및 전쟁에 대한 태도와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 관계가 성격이나 공감적 관심과 같은 다른 예측변수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1) 평화에 대한 태도

현재의 연령이나 자라난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지 모른다. 또한, 현재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욱 평화를 바랄지도 모른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연령과 월수입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표 III-5>에 나타난 첫 번째 단계의 결과를 보면, 연령이나 월수입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선형적 관계를 갖지 못했다.

<표 III-5> 평화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1	연령	0.00	< .00	.00	.00
	월수입	0.00	.04		
2	연령	0.00	.00	.08***	.08***
	월수입	0.00	.04		
	외향성	-.012*	-.07*		
	우호성	0.31***	.15***		
	성실성	0.22**	.12**		
	신경증	-.017**	-.11**		
	개방성	0.07	.04		

137)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p. 1~18.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3	연령	0.00	< .00				
	월수입	0.00	.03				
	외향성	-0.13*	-.07*				
	우호성	0.23**	.11**	.02***	.10***		
	성실성	0.18**	.09**				
	신경증	-0.18***	-.12***				
	개방성	0.09	.05				
	공감적 관심	0.26***	.15***				
연령	0.00	.02					
월수입	0.00	.03					
외향성	-0.15*	-.08*					
4	우호성	0.21**	.10**	.01**	.11***		
	성실성	0.17**	.09**				
	신경증	-0.18***	-.12***				
	개방성	0.08	.05				
	공감적 관심	0.27***	.15***				
	우익권위주의	-0.23**	-.10**				
	연령	0.00	.01				
	월수입	0.00	.03				
5	외향성	-0.13*	-.08*	.01*	.12***		
	우호성	0.19**	.09**				
	성실성	0.19**	.10**				
	신경증	-0.18***	-.12***				
	개방성	0.08	.05				
	공감적 관심	0.26***	.15***				
	우익권위주의	-0.30***	-.13***				
	우익권위주의 × 우호성	-0.01	< .00				
	우익권위주의 × 성실성	-0.18	-.05				
	우익권위주의 × 신경증	-0.19	-.06				
	우익권위주의 × 공감적 관심	0.40**	.10**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기본적인 성격 특질에 따라 평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III-5>의 두 번째 단계 결과를 보면, 연령과 월수입을 통제한 후,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수록, 또한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았다. 다시 말해, 외향적이고 신경질적인 개인은 평화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반면, 우호적이거나 성실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즉, 특질적으로 우호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평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컸다. 그렇지만 경험에의 개방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다섯 가지의 성격 특질은 다 함께 평화에 대한 태도 중 8%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령, 월수입,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그리고 개방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량 중 2%가 공감적 관심에 의해 설명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감적 관심의 계수는 정적인 부호를 갖고 있었으므로,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공감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평화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컸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우익권위주의는 추가적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함에 있어 1%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높으면 평화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익권위주의자들에게는 평화가 최우선의 가치가 아닐 수 있음이 암시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첫째로,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가 우호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우호성은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인 특질을 나타내며,¹³⁸⁾ 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개인 성격으로 인하여 두 변수 간 관계가 우호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¹³⁹⁾ 비슷하게,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가 우호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은 평화를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지만, 우호성이 높다면 그 강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성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실성은 일관되고 근면하여 신뢰할 수 있는 특질을 측정한다.¹⁴⁰⁾ 또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질서정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¹⁴¹⁾ 따라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 야기할 혼돈과 무질서를 피하고자 할 것이고, 우익권위주의가 똑같이 높더라도 성실성이 낮은 사람보다 평화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셋째로, 우익권위주의와 신경증의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을 하였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경향이 있다.¹⁴²⁾ 따라서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신경증 수준까지 높으면 부정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익권위주의만 높은 사람에 비해서 우익권위주의와 신경증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더 평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138) Lewis 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1990), pp. 1216~1229.

139) Jiwon Jang and Hyung In Park, "Interaction of Demand, Control, and Person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17, no. 3 (2017), pp. 109~136.

140) Lewis 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p. 1216~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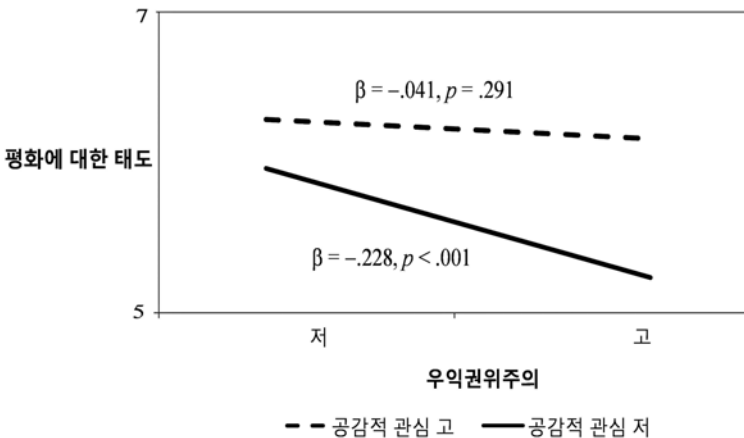
141) *Ibid.*, pp. 1216~1229.

142) *Ibid.*, pp. 1216~1229.

마지막으로, 우익권위주의와 공감적 관심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에 대한 걱정을 하는 대인관계반응성을 나타낸다.¹⁴³⁾ 우호성과 비슷한 논리로,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부적 관계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외향성과 개방성의 조절효과는 조사하지 않았다. 외향성과 개방성은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갖는 효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정치사회적인 사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질이 아니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은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기는 하였지만,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림 Ⅲ-1〉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143) 강일 외,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8권 5호 (2009), pp. 352~358.

한편, 우익권위주의와 공감적 관심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연령 및 월수입을 통제하고도 일곱 가지의 예측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고, 네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작용 효과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공감적 관심의 수준에 따라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¹⁴⁴⁾ 이와 같은 구체적 조절효과 검정을 단순기울기차이검정(simple slope difference test)이라고 한다. <그림 III-1>을 보면, 공감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유의한 부적 관계가 관찰되었지만,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공감적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우익권위주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일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에게서는 평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공감적 관심이 낮은 경우에는 우익권위주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화에 대한 태도가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월수입, 개방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반면,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공감적 관심, 우익권위주의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외향성, 신경증, 우익권위주의가 낮고, 우호성, 성실성,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 이전 단계에서는 유의했던 예측변수들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후에 투입된 변수들이 이전에 투입된 변수들의 유

144) Jacob Cohen et al.,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pp. 64~100.

의도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우익권위주의와 평화에 대한 태도 간 부적 관계는 그러나, 공감적 관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우익권위주의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평화에 대한 태도를 보였고, 공감적 관심이 낮은 사람은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아졌다.

이들 변수들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 전체 변량은 12%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로, 성격이나 대인관계반응성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실질적 예측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 특질은 개인의 유전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기질변수이므로, 이는 평화에 대한 태도가 적게나마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암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머지 88%의 변량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개인 특성이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예측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더욱 중요한 예측변수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2) 전쟁에 대한 태도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 역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6>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연령과 월수입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전쟁을 경험했던 60대들은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가정하였지만, 연령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의 결과여서,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는 세대나 경제적 상황과는 결정적 관계가 없음이 암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우호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낮게 나왔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호전적인 태도가 높게 나왔다. 그렇지만 외향성이나 개방성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외향성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향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이 전쟁에 대한 태도와 갖는 관계의 방향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갖는 관계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다. 이들 다섯 가지 성격 특질들은 전쟁에 대한 태도의 변량 중 7%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공감적 관심이 추가되었을 때, 공감적 관심은 이전에 투입된 다른 예측변수들이 설명하고 난 7%의 변량과 겹치지 않는 고유한 변량 중 6%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공감적 관심이 추가되고 난 후, 이전 단계에서는 유의했던 우호성이 더 이상 유의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네 번째 단계에서 우익권위주의는 추가로 1% 변량을 더 설명하였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익권위주의는 정적인 회귀계수를 보였으므로,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전쟁에 더 우호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예측변수에서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외향성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이 단계에서는 회귀계수가 증가하면서 유의하게 변화되었다. 외향성이 높아질수록 전쟁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외향성이 높아질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물론 단계에 따라서

특정 변수의 계수와 유의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각 변수의 예측력은 함께 투입되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난 후의 고유한 설명량에 의해 결정된다.¹⁴⁵⁾ 따라서 새롭게 변수가 투입되면, 기존 변수가 새로운 변수와 갖는 관계에 의해 회귀계수의 강도가 변화하게 되고, 보통은 이전보다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처럼 이전보다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가끔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를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라고 한다.¹⁴⁶⁾

〈표 III-6〉 전쟁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1	연령	< 0.00	< .00	.00	.00
	월수입	< 0.00	-.01		
2	연령	0.00	-.01	.07***	.07***
	월수입	0.00'	.00		
	외향성	0.12	.06		
	우호성	-0.26**	-.11**		
	성실성	-0.23**	-.11**		
	신경증	0.29***	.16***		
	개방성	-0.06	-.03		
	연령	< 0.00	.00		
3	월수입	0.00	.01	.06***	.13***
	외향성	0.13	.06		
	우호성	-0.09	-.04		
	연령	< 0.00	.00		

145) *Ibid.*, pp. 64~100.

146) Delroy L. Paulhus et al.,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39, no. 2 (2004), pp. 303~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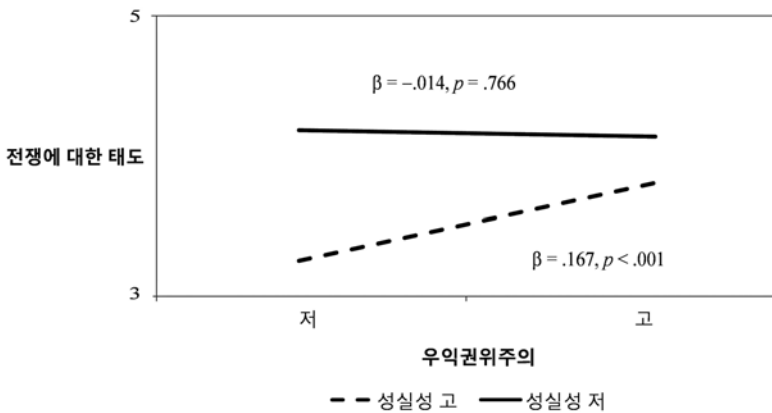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4	성실성	-0.15*	-.07*	.01***	.14***
	신경증	0.33***	.18***		
	개방성	-0.09	-.05		
	공감적 관심	-0.55***	-.26***		
	연령	< 0.00	-.03		
	월수입	0.00	.01		
	외향성	0.16*	.08*		
	우호성	-0.07	-.03		
	성실성	-0.15*	-.07*		
	신경증	0.33***	.18***		
5	개방성	-0.09	-.05	.01*	.15***
	공감적 관심	-0.56***	-.26***		
	우익권위주의	0.33***	.12***		
	연령	< 0.00	-.02		
	월수입	0.00	.02		
	외향성	0.16*	.08*		
	우호성	-0.06	-.02		
	성실성	-0.15*	-.07*		
	신경증	0.32***	.17***		
	우익권위주의 × 우호성	0.01	.00		
우익권위주의 × 성실성	0.43**	.11**			
우익권위주의 × 신경증	0.06	.02			
우익권위주의 × 공감적 관심	-0.04	-.01			

*p < .05, **p < .01, ***p < .001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였다. 이 네 가지 상호작용을 검토한 이유는 평화에 대한 태도의 심층 분석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즉,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그리고 공감적 관심이 우익권위주의와 전쟁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표 III-6〉을 보면, 평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호성이나 신경증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익권위주의와 공감적 관심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결과이다. 대신에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성실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 성실성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III-2〉에 제시되어 있다.¹⁴⁷⁾ 그림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에게서는 우익권위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전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역시

147) Jacob Cohen et al.,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pp. 64~100.

상승하였으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실성이 낮으면 우익권위주의 수준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태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전쟁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는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종합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월수입, 우호성, 그리고 개방성은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호성이 성격요인들만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유의한 예측변수이다가 공감적 관심이 투입됨에 따라 유의하지 않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요인들만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외향성이 우익권위주의의 투입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투입된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 모두 전쟁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예측변수였다. 외향적일수록, 신경질적일수록, 그리고 우익권위주의자일수록 전쟁을 지지하는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실하고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전쟁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전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반적인 관계는 성실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실할수록 자신의 우익권위주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우익권위주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전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도 증가하였다. 반면, 성실하지 않으면 우익권위주의와 관계없이 전쟁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때, 성실성이 낮은 개인들이 성실성이 높은 개인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은 전쟁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월수입,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공감적 관심, 우익권위주의,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항은 다 함께 1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예측변수

는 공감적 관심이었다. 즉, 공감적 관심은 다른 변수들과 겹치는 변량을 제외하고도 단독으로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 다음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신경증이였다. 즉,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공감적 관심과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예측변수임이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변량의 15%만을 설명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 소결

본 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가 성격,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한 성격, 대인관계반응성의 일부인 공감적 관심, 그리고 관습과 규범에 대한 복종을 내포하는 우익권위주의가 모두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먼저 이들 변수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평화에는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전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격에서 중도 경향을 보였으나,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성실성과 우호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은 예측변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우익권위주의는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 결과, 성격, 공감적 관심, 그리고 우익권위주의는 모두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섯 가지 유형의 기본 성격 특질이 모두 이들 태도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었고, 신경증과 성실성이 두 태도 변수들을 모두 설명하는 공통된 성격요인이었다. 공감적 관심은 평화에 대한 태도의 2%를 설명하는 반면, 전쟁에 대한 태도의 6%를 설명하여, 단독 요인으로

는 전쟁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반면 우익권위주의는 준거변수인 두 가지 태도 모두 1%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성격과 공감적 관심이 설명하고 남은 변량 중 추가 설명량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 및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비교적 강력한 예측변수였다고는 하지만, 이 관계들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었다.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갖는 부적 관계는 공감적 관심에 따라 변화되었다. 공감적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우익권위주의가 전쟁에 대한 태도와 갖는 정적 관계는 성실성에 의해 달라졌다. 성실성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이러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성실성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존재는 이전 해외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와 평화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갖는 관계가 표본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던 현상을 일부 설명한다.¹⁴⁸⁾

본 분석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와서 분석 결과가 다른 한국인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개인적 고통의 경우 내적 합치도가 특히 낮게 나와서 분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8)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p. 673~693;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p. 1~18.

또한, 성격이나 공감적 반응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갖는 설명량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평화에 대한 태도나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결정적인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결정적인 예측변수를 밝혀 낼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육을 통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조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응답자들이 각각 다르게 정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는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¹⁴⁹⁾ 예를 들어, 평화나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조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접한 실체 없는 이미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에 따라서 응답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핵심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사방법의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에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본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방식의 통일 달성을 위한 기본 바탕이 어느 정도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평화에 대한 태도와 별개로 전쟁에 대한 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평균적으로는 전쟁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응답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었고, 이는 개인마다 입장 차이가

149) Steve M. Jex, Terry A. Beehr, and Cathlyn K. Roberts, "The Meaning of Occupational Stress Items to Survey Respond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5 (1992), pp. 623~628.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별개로,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자면, 전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소량이나마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의 일부는 유전적 기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조성을 통한 태도 변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성격과 대인관계반응성이 이들 태도를 결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되, 그 합의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익권위주의가 평화를 지양하고 전쟁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나 호전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익권위주의 수준을 확인하고, 만약 우익권위주의가 높으면 이를 먼저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낮아진다면,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합의가 더 용이할 수 있다.

한국인의 사회적 통일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지만,¹⁵⁰⁾ 통일 이후의 성숙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본 결과는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전반적인 태도들을 살펴보고 그 태도들의 선행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였다.

150) Andrew S. Millar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cial-Reunification Feasible?," pp. 191~217.

2.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사회지배경향성,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중심으로

권영미(성균관대학교)

핵심 요약

주요결과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전반적으로 찬성,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태도 지님.
-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함.
- 사회지배경향성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낮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방식에 찬성함.
-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 경쟁적 피해자 의식 증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함.
-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경쟁적 피해자 의식 감소,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함.

정책적 시사점

-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다차원적 인식을 시사함.
-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통일 및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반영함.
- 개인의 가치관 같은 개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함.
-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함.
- 개인의 가치관과 북한 및 남북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

요약

본 장에서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를 설명 및 예측하기 위해 예측변수인 사회지배경향성,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국력 가치)를 포함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포함한 기초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응답 없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태도를 보고하였다. 사회지배경향성은 평균적으로 척도의 중간점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높고,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낮았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은 척도의 중간점에 가깝게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평균은 척도의 중간점보다 낮게 나타나, 남북관계를 인식할 때 남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남북 모두 고통을 경험했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두 가지 가치에 있어서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모두 비교적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다른 방식을 참고하여 두 가치들 각각을 강하게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심층 분석을 위해 우선 전체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예측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각 변수가

준거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상대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변수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변수들 간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는 서로 역의 관계로 나타나, 한쪽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다른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준거변수들 간의 관계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 간에도 약하거나 중간 강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는데, 북한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클수록, 또는 남북관계에서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이용하여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더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길수록,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낮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성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는데,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낮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강하게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협력을 통한 방식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다루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의 가치관/세계관 → 북한에 대한 인식 →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의 순차적인 관계로 묶어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는 “사회지배경향성 →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이중매개 과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집단 또는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해 개인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연구 배경

(1) 통일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평화 달성의 관점

본 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각각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 및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¹⁵¹⁾ 통일에 대한 상당한 이론적·

151) 박주화·이민규·조원빈,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34~140;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pp. 167~206;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집 1호 (2012), pp. 101~138; 변창구, “한국의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남북한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end state)로서의 통일에 초점을 두면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일 정도로 오랜 민족의 염원이자 당위로서 통일을 인식해왔지만, 통일은 그 언젠가 이루어야 할 저 미래의 ‘결과’인 것이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기준을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로 규정하고 있다.¹⁵²⁾ 다시 말해, 통일된 상태뿐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그 방식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이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수립되고 이행된다면,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태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똑같이 높게 느끼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통일을 이루는 ‘평화적’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남북한이 서로 협의하여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남한이 더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취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통일전략』, 제11권 3호 (2011), pp. 173~209;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외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pp. 35~50;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pp. 29~63;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pp. 167~184;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177~204;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 (2013), pp. 153~182.

152) 최윤철, “평화통일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연구』, 제39권 2호 (2010), pp. 289~317.

긍정적인 국민들 간에도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대 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통일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한반도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 및 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통일 관련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가) 평화의 정의와 역설적 관점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에서의 ‘평화’는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평화는 바람직한 것이고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종종 대치되는 전쟁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평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 때문에 평화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¹⁵³⁾ Galtung을 비롯한 학자들은 평화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조화, 정의, 평등과 같은 사회의 긍정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를 전자의 방식으로 정의하는 경우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평화 유지(peacekeeping) 또는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복구(peace restoring)를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이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및 문화를 형성하는 평화 구축(peace building)을 의미한다.¹⁵⁴⁾ Galtung은 평화 역시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들’로 간주되며, 이

153) David P. Barash and Charles P.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7), p. 4

154)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 167~191; 김보람, “커버스토리: 다시, 평화를 향해,” 『유네스코뉴스』, 2018.7.4.,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45/562> (검색일: 2018.8.24.).

목표들은 종종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¹⁵⁵⁾ 이는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입장은 침예하게 대립해왔다. Boulding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의 주류 보수층 사이에서는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더 심각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철되어 왔으며, 이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같은 원칙과도 일관된다.¹⁵⁶⁾ 이러한 원칙들은 현재에도 여러 국가들과 집단들의 군사 행동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나 집단과 같은 상위 수준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 수준에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서의 역설(paradox)은 존재할 수 있다. 스스로 반폭력주의자라고 지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영화 속에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다양한 무기를 구비하고 악당을 처단하는 주인공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악당의 폭력으로 인해 파괴된 평화가 영웅의 정당한 공격에 의해 복구되었음을 통쾌하게 여길 것이다. 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 때문에, 자신을 반폭력주의자로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또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대상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¹⁵⁷⁾ 이러한 역설적인 예시는 평화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표상(representation)은 평화와 전쟁에 대한 개인의 일반

155)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pp. 167~191.

156)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1959), pp. 120~131.

157)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pp. 177~202.

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평화를 달성하는 두 가지 방식 - 협력 또는 군사력 - 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과 무력(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이 한 연속선상의 정반대의 위치에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비교적 독립적인 태도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폭력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는 찬성하지만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간의 공격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더 강한 힘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전자의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후자의 방식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표인 평화 상태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는 사람의 경우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객체로서가 아닌 상호 관계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들에서는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¹⁵⁸⁾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부정의 양 극단값을 가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하게

158) 신울,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2호 (2010), pp. 69~92;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호 (2014), pp. 30~58;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pp. 35~50; 윤광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전우영·조인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pp. 167~184.

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들(예: 협력 대상, 경계 대상)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북한은 긍정적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대상이거나 한 가지 유형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다중적이고 복잡한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¹⁵⁹⁾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이자 목적은 객체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역동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한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것이다.

(가) 대인지각과 북한에 대한 인식

사회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 대상이 사물인 경우(사물 지각)와 사람과 같은 사회적 대상(대인 지각)일 때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¹⁶⁰⁾ 사물이 대상일 때 사람들이 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이 지각의 대상이 될 때에는 더 복잡하고 주관적이며 가변적인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남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고정된 개체, 또는 상징적 자극으로 인식되는 대상이기보다는 복잡 미묘하고 양가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쉽고 명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상이다.

첫 번째 이유로, 사물 지각과는 다르게 대인 지각은 겉으로 드러

159) 박주화·이민규·조원빈,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134~140;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p. 187~215.

160) Susan Fiske and Shelley Taylor,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3r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2017)

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다양한 속성들—예를 들면 의도, 태도, 목표 등—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 과정에는 북한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공식적인 행보를 관찰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의도나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는 복잡한 인지 처리가 수반된다.

둘째, 사물이 가진 특징에 비해 사회적 대상은 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가적이거나 모순적인 태도를 유발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단일한 개체로 인식되기보다 국가로서의 북한, 정부, 북한주민 등 다양한 요소들의 구성체로 인식되며, 각 요소들에 대한 느낌과 태도가 복잡하게 결합된다. 이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반면 북한 동포와 북한의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가정적이고, 정직하며, 희생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⁶¹⁾

셋째, 사물 지각은 지각자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인 것에 반해, 대인 지각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적인 인식 과정을 거친다. 북한은 남한이 지각하는 대상인 동시에, 남한을 관찰하는 지각자이기도 하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적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일 것인 반면, 북한이 남한을 갈등 대상으로 여긴다고 믿는 사람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161) 전우영,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2호 (1999), pp. 219~232.

마지막으로, 사물에 비해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며, 특히 사회적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에 따라 주관적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서로를 굴복시켜야 하는 적으로 여기기도 했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며, 갑작스러운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관계에 냉기가 서리기도 했다. 최근에 진행된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더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북한을 볼 때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의 이미지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¹⁶²⁾

(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을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지각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력 못지않게 남한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 및 양측 간에 발생(가능)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일방향적인 인식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장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와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두 변인을 추가로 탐색하였다.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162)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p. 187~215.

보는 정도는 ‘제로섬 게임에 대한 믿음(Belief in a Zero-Sum Game: BZSG)이라는 변인을 남북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원래의 변인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¹⁶³⁾ 이 개념은 행동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한정된 자원을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갈등 상황 및 선택을 다루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출발한 개념이다.¹⁶⁴⁾ 양측의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사람일수록, 양측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한쪽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쪽이 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높고, 협동 대신 경쟁을 택하는 행동 경향성을 나타냈다.¹⁶⁵⁾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얻는 이득이 곧 남한의 손해이며, 남한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 필요하다면 무력을 통해 북한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러한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협력을 통해 양측에게 최선이 되는 결과를 얻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163)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164) John Von Neumann and Oskar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p. 46~51.

165) Joanna Różycka, “Wiara w życie jako grę o sumie zerowej: wyznaczniki i konsekwencje społeczne [Zero-Sum Game Belief: Determinants and Social Con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Polish Academy of Sciences, Warsaw, 2008) quoted in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때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¹⁶⁶⁾ 남북관계에서 양측이 얻게 될 이득 구조에 대한 지각과 남한이 얻게 될 잠재적 이득에 대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두 번째 변인은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으로, 이 변인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닌, 고질적인 집단 간 갈등을 연구한 사회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차용한 개념이다.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이란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 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그동안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경험해왔다고 양측이 서로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갈등(intractable conflict)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¹⁶⁷⁾ 이 현상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명시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게 피해를 입힌 갈등 관계보다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오면서 양측이 서로에게 해를 가해 온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유형의 갈등 관계를 겪어 온 실제 집단들 -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¹⁶⁸⁾ 칠레의 찬-피노체트 대통령 집단과 반-피노체트 집단,¹⁶⁹⁾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¹⁷⁰⁾

166) 박주화·이민규·조원빈,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212~223.

167) Masi Noor,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pp. 481~495.

168) 위의 글, pp. 481~495.

169) Masi Noor et al., “On Positive Psychological Outcomes: What Helps Groups with

-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연구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강하게 가질수록 내집단(자신이 속한 집단)이 외집단(상대 집단)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고, 내집단의 책임을 부인하며, 상대 집단을 용서하거나 화해하려는 경향이 낮아졌다. 실제로는 양측 모두 서로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내집단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외집단을 공격해도 된다고 정당화하고, 내집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집단이 고통받아온 만큼 외집단을 쉽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공격한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전쟁을 시작으로 분단된 세월 동안 무력 충돌로 인해 양측이 서로에게 피해를 입혀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쟁과 분단의 발발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관여했다는 점¹⁷¹⁾에서 남북 모두 원하지 않는 피해를 경험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개념을 접목시키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남한이 입은 고통과 피해가 북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기보다는 과거의 고통을 되갚아주기 위해 무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남북한 모두 이 갈등 관계로 인

a History of Conflict to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pp. 819~832.

170)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pp. 867~877.

171) 주봉호, "한반도 분단의 성격: 대내외적 요인," 『통일전략』, 제10권 3호 (2010), pp. 321~354.

해 고통받아왔다고 지각하고, 양측의 고통과 피해를 함께 복구하기 위해 양 측 간 화해와 같은 평화로운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다는 선행연구¹⁷²⁾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북한에 대한 신뢰가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즉,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북한에 비해 남한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3) 개인 특성 요인

(가) 사회지배경향성

집단 간 갈등 및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적 태도 및 이념적 신념을 반영하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와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을 다루어왔다. 이 두 가지 변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정치적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변인들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념 및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태도, 인지 및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간주되어 왔다.¹⁷³⁾ 우익권위주의는 권력을 지닌 존재에 복종하는 태도, 사회 내 소수집단과 외집단에 대해 보이는 공격적인 지배 성향, 보수적 가치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 및 이념을 예측하기 때문에 최근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172) Masi Noor et al., "When Suffering Begets Suffering: The Psychology of Competitive Victimhood Between Adversarial Groups in Violent Conflicts," pp. 351~374.

173) 홍기원·이종택,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2호 (2010), pp. 1~25.

탐색 대상이 되었다.¹⁷⁴⁾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개인의 태도로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들이 평등하지 않다고 믿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상위의 서열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이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들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서열 차이가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⁷⁵⁾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치-경제적 보수주의(political-economic conservatism), 민족주의(nationalism), 애국주의(patriotism),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anti-Black racism)와 같은 이념을 강하게 지지하였고, 군사계획(military programs) 정책은 지지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⁷⁶⁾

사회지배경향성을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이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¹⁷⁷⁾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나,¹⁷⁸⁾ 북한 관련 연구에서는 이 변인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에서 발견된 사회지배경향성의 효과가 본 연구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174)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p. 187~215.

175)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pp. 741~763.

176) *Ibid.*, pp. 741~763; Felicia Pratto,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2006), pp. 271~320.

177) 양계민,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pp. 59~79.

178) 황세영·강정석·강혜자,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2017), pp. 181~206.

국민들 중에서도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보다는 무력 또는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을 개인 특성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나)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대 국력에 대한 가치

본 장에서 다루는 두 번째 개인 특성 요인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가치 변인으로, 특히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이와 구분되는 국력에 대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Rokeach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바람직하게 여기는 행동들에 대한 신념으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Rokeach의 가치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는 10개 차원의 가치 차원들을 구분하였는데,¹⁷⁹⁾ 김혜숙은 Schwartz의 가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북한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¹⁸⁰⁾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평등, 소속감, 사회정의 등)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한 반면, 권력 가치(사회적 권력, 권위, 사회적 인정)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raithwaite는 사람들의 정치 관련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 14가지의 가치들을 연구한 결과 더 상위 수준의 독립적인 가치인

179) Shalom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pp. 1~65.

180)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pp. 35~50.

안전(security)과 조화(harmony)로 수렴된다는 것을 발견하고,¹⁸¹⁾ 이후 가치균형모델(value balance model)을 통해 안전과 조화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정치적으로 좌파 또는 우파의 특정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¹⁸²⁾ 안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힘과 질서(국력: national strength and order)를 기준으로, 조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제적 조화와 평등(international harmony and equality)을 기준으로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Braithwaite의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결과를 발견했다.¹⁸³⁾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는 아직까지 북한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나아가 남북 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인으로 본 장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국력(안전) 가치를 중요한 목표로 보는 사람들에 비해 국제적 조화와 평등(조화)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전쟁보다는 상호 간 협력과 같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평화를 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이 양극단의 위치에서 대립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Braithwaite는 이 두 가지 가치 역시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¹⁸⁴⁾ 즉, 두 가

181)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182)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Balance Model of Political Evaluations," pp. 223~247.

183) *Ibid.*, pp. 223~230.

184)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지 가치 중 한 가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두 가치를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들 간 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변인을 측정할 때에도 양극 척도를 사용하거나 범주 변인으로 취급하는 대신 두 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4) 요약

본 장에서 다루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요약해보자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및 남북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북통일정책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어떤 방식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평화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개인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다.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는 개념적으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 실제로 두 방법을 모두 지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독립적으로 두고 각각 측정 후 분석했다. 또한, 두 방식에 대한 태도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사회지배경향성,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의 효과를 분석했다.

나. 기초 분석

앞서 밝혔듯이, 본 절에서는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각각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먼저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역문항),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역문항), “상호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역문항),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적대적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여섯 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술문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9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중립, 9=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 문항이 모두 공통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점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alpha = .283$), 다섯 번째 문항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역문항)를 제외한 다섯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역문항), “국제적 갈등은 상대국가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역문항), “저개발 국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의 이익이 보장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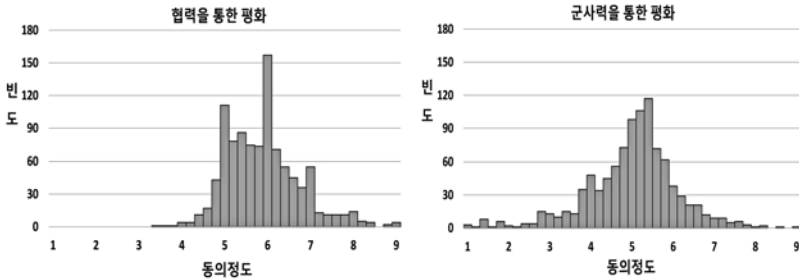
는 방식으로 국제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역문항), “평화를 위해 국가 간, 사람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 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9점 척도를 이용해 각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했으며, 여섯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표 III-7〉에 제시했듯이, 두 방식에 대한 태도 모두 최대값이 9점으로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이 있었으며, 평균은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5.01점,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5.81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응답의 분포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는데,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의 최소값은 1점인 것에 반해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최소값은 3.33점이었다. 즉,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반면에 군사력을 수단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표준편차 역시 각각 1.10과 0.85로, 〈그림 III-3〉의 분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유사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태도가 나타났다.

〈표 III-7〉 군사력/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1.00 - 9.00	5.01	1.10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3.33 - 9.00	5.81	0.85

〈그림 III-3〉 군사력/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응답 분포



(1)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사회지배경향성은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선호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개인차 변수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의 우열함을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우수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높은 서열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배경향성은 정치적 이념 및 사회정치적 정책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주의 같은 이념이나 군사계획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공감이나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⁵⁾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Ho 등이 지배성향(dominance)과 반평등주의(anti-egalitarianism)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¹⁸⁶⁾ 지배성향의 하위차원

185)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pp. 741~763.

186)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pp. 1003~1028.

에 해당하는 여덟 문항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주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특정 집단이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은 하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 집단이 상위에 있고 어떤 집단은 하위에 있는 식의 집단 간 서열이 분명한 것이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냥 열등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위에 있는 집단 사람들도 상위에 있는 집단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역문항), “어떤 한 집단도 사회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역문항), “하위에 있는 집단도 그들의 처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역문항),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쁜 원칙이다”(역문항)로, 집단 간 위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측정한다. 반평등주의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여덟 문항은 “집단 간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집단이 똑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의란 모든 집단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핵심 목표가 모든 집단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집단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역문항), “우리는 각 집단이 동일한 삶의 조건을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역문항), “어떠한 노력을 들일지라도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삶에서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역문항), “집단 간 평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역문항)로, 공공연한 방식 보다는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권력이나 자원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들을 선호함으로써 집단 간 불평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응답자들은 16문항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중립, 7=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여 응답했다.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배성향

과 반평등주의의 두 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16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취합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III-8〉에 제시된 것처럼 응답자들의 사회지배경향성은 평균이 3.37점으로 척도의 중간점인 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19와 5.81로, 사회지배경향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응답은 없었으며, 표준편차는 0.66으로 응답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사회지배경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지배경향성		1.19 - 5.81	3.37	0.6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지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저지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을 가지고 있다.¹⁸⁷⁾ 한국사회의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산층 또는 빈곤층으로 지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¹⁸⁸⁾ 극소수가 고소득층으로서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 간 불평등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저지위 집단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회지배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187) Jim Sidanius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ti-Egalitarianism and the Political Psychology of Gender: An Extension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0, no. 1 (2000), pp. 41~67.

188) "중산층 10명 중 6명꼴 은퇴 후 빈곤층 될 것," 『연합뉴스』, 2017.1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082700008.HTML>> (검색일: 2018.8.23.).

(2)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의 측정은 국제 관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며, 이 이미지가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볼딩(Boulding)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⁸⁹⁾ 남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즉 북한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90년대부터 통일연구원에서는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다섯 가지 범주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으나, 보다 정교한 측정을 위해 이상신은 다섯 가지 이미지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고 동의 정도를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¹⁹⁰⁾ 또한, 다섯 가지 이미지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한 쪽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묶이지 않는 ‘경쟁 대상’ 이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이미지들을 지원/협력 대 경계/적대 유형으로 범주화했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에 대해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각각으로 얼마나 강하게 인식하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적대 대상과 경계 대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원 대상과 협력 대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각각 묶였으며,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에 네 문항 각각과 두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189)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pp. 120~131.

190)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p. 187~215.

〈표 III-9〉 북한에 대한 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원 대상		1.00 - 11.00	6.36	2.60
협력 대상		1.00 - 11.00	7.52	2.19
경계 대상		1.00 - 11.00	6.73	2.32
적대 대상		1.00 - 11.00	6.02	2.33
지원/협력 대상 (1요인)		1.00 - 11.00	6.94	1.95
경계/적대 대상 (2요인)		1.00 - 11.00	6.38	2.18

북한에 대한 인식은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최소값 1점과 최대값 11점, 표준편차 2 이상으로, 응답이 넓은 범위에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6.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남한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반해, 북한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을 적대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낮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3)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제로섬 게임에 대한 믿음(Belief in a Zero-Sum Game: BZSG)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제로섬 게임에 대한 믿음이란 개인들 또는 집단들이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한 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개인의 경향

성을 의미한다.¹⁹¹⁾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문항들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배려한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의 4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중립, 7=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여 응답했다.

〈표 III-10〉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1.00 - 7.00	4.10	1.14

〈표 III-10〉에 제시된 것처럼, 응답자들이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경향은 최소값 1점부터 최대값 7점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4.10점으로 척도의 중간점인 4점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다.

(4)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¹⁹²⁾이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첨예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상대 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고 양측이 서로 경쟁적으

191)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pp. 525~548.

192) Masi Noor,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p. 481~495.

로 주장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내용을 남북 관계에 적용하여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피해자이다”(역문항),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역문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 사람이 겪은 트라우마가 북한 사람이 겪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하다”, 4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했고,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중립,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했다. 높은 점수의 응답일수록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각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의 응답일수록 남한과 북한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지각을 반영한다.

〈표 III-11〉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1.00 - 6.75	3.35	0.87

〈표 III-11〉을 보면, 응답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점과 6.75 점이며, 표준편차는 0.87로 응답의 분포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의 평균은 3.35점으로 척도의 중간점인 4점보다 낮았다. 즉, 응답자들은 남북관계의 오랜 갈등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남북 간 갈등과 무력 충돌로 인해 남한과 북한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무력 충돌에 대해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남한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남북 간 관계와 역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국제적 조화와 평등, 또는 국가의 힘과 질서

마지막 예측변수로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Braithwaite¹⁹³⁾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상위 수준의 독립적인 가치인 안전(security)과 조화(harmony)로 수렴되며, 전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국가의 힘과 질서(국력: national strength and order)를 기준으로, 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제적 조화와 평등(international harmony and equality)을 기준으로 정치적 행동을 결정한다. 두 가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지만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들 간 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14문항 중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타인의 행복한 삶”, “국제적 협력”, “사회적 진보와 개혁”,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경제적 평등의 향상”, “자연 환경의 보존”의 가치를 포함하고, 국력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의 위대함”, “국가의 경제적 발전”, “법치”, “국가 안보”를 포함하여, 10가지 가치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7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7=거의 전적으로 이 기준으로 결정)로 응답하도록 했다.

1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두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는데(설명량

193)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53.09%), 국제적 조화와 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 문항이 “국력” 요인에 포함되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존” 문항을 제외한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구성된 내용과 일관되게 2요인(설명량 55.08%)이 산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적 조화와 평등 요인에 포함된 5문항을 합산하고 국력 요인에 포함된 4문항을 합산하여 각각 평균값을 계산했다.

〈표 III-12〉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들은 정치적 행동을 결정할 때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평균 5.29점, 국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평균 5.51점으로, 두 가치에 대한 의존 모두 중간점인 4점보다 높았다. 두 가치 모두 최대값이 7점이지만 최소값이 각각 2.80점과 2.25점인 점, 그리고 표준편차가 1점 이하로 나타난 것을 보아 응답자들의 두 가치를 행동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비교적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의 평균 및 표준편차(N= 1000)

변수	통계치	최소값 -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국제적 조화와 평등		2.80 - 7.00	5.29	0.73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국력		2.25 - 7.00	5.51	0.81

한편, Braithwaite는 가치 균형 모델(value balance model)을 통해 독립적인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정치적으로 좌파 또는 우파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⁴⁾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Braithwaite는 국제적 조화와

194)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Balance Model of Political Evaluations,” pp. 223~247.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각각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고-저 수준 집단을 나누었으며, 두 가치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고-고 집단, 전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고-저 집단, 후자를 더 중요시하는 저-고 집단, 두 가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저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라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의 중앙값인 5.20점과 국력 가치의 중앙값인 5.50점을 기준으로 각 가치에서의 고-저를 구분하였으며, 두 가치에서의 중요도 평가를 통합하여 고-고, 고-저, 저-고, 저-저 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네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 두 가치에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III-13>에 제시하였다.

<표 III-13>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의 집단 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국력 가치
조화와 평등 가치 - 고	국력 가치 - 고	5.99 (0.40)	6.23 (0.39)
	국력 가치 - 저	5.64 (0.27)	5.17 (0.45)
조화와 평등 가치 - 저	국력 가치 - 고	4.82 (0.43)	6.05 (0.34)
	국력 가치 - 저	4.68 (0.47)	4.75 (0.54)

다. 심층 분석

본 절에서는 준거변수인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예측변수인 사회지배경향성,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및 국력 가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먼저,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적 예측변수들이 실제로 준거변수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측변수들 간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측 변수들과 준거변수를 포함한 매개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

(1) 상관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여부 및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r)라는 값을 계산하여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상관계수가 양(+)
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의 값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의 값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관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1 사이로,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들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절대값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변수들이 서로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보다 작으면 약한 상관관계, 0.7보다 크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 상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A변수와 B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 변수가 관련이 있다는 의미일 뿐,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다른 변수가 그 영향을 받는 결과인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표 III-14〉에 아홉 개의 변수들 간의 일대일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상관계수를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준거변수인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 간 상관계수는 $-.31$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⁵⁾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 지원 대상 및 협력 대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을 부정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고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가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부정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국력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일수록 역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측변수들 간에도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 - 지원/협력 대 경계/적대 - 간의 상관

195) 상관분석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반대 방향의 기술도 가능하다. 즉,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 달성 방식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계수는 -.28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수준 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이로운 결과는 곧 남한에게 해로운 결과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관련 이슈를 논의할 때 북한을 독립적이고 상징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남한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4〉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N= 1000)

변수	1)	2)	3)	4)	5)	6)	7)	8)
1)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2)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31**							
3) 사회배경향성	.19**	-.42**						
4)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	-.18**	.11**	.01					
5)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적대)	.30**	-.18**	.08**	-.28**				
6)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지각	.25**	-.24**	.13**	-.18**	.44**			
7)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28**	-.34**	.29**	-.09**	.25**	.51**		
8)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18**	.31**	-.39**	.08*	-.11**	-.17**	-.30**	
9) 국력 가치	-.02	.19**	-.31**	-.07*	.06	-.03	-.21**	.57**

*p < .05, **p < .01

예측변수들 중 개인차 변수로 취급할 수 있는 변수에는 사회지배 경향성과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언뜻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는 두 가치가 사회지배경향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이 결과는, 두 가치들 간의 상관계수가 .57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Braithwaite가 주장했듯이,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는 서로 독립적인 가치이지만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치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둘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¹⁹⁶⁾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둘 중 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다른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을 보인다. 앞서 <표 III-13>에 제시했듯이, 두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5.3%, 둘 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36.9%로, 한쪽 가치를 다른 가치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불균형’을 보이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27.8%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와 사회지배경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검증한 선행연구는 없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탐색적으로 네 집단의 사회지배경향성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고 네 집단의 사회지배경향성 점수를 <표 III-15>에 제시하였다.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모두를 중요하게 여긴 집단(고-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지배경향성 점수가 나타났으

196)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며, 두 가치를 모두 덜 중요하게 생각한 집단(저-저)에서 가장 높은 사회지배경향성 점수가 나타났다. 두 가치 중에서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가 국력 가치에 비해 사회지배경향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⁹⁷⁾

〈표 III-1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및 국력 가치를 조합한 네 집단에서의 사회 지배경향성 평균

		국력 가치	
		고	저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고	3.04 (0.65)	3.24 (0.68)
	저	3.54 (0.55)	3.68 (0.52)

(2) 회귀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관분석은 두 변수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알려주지만 특정 변인이 원인이 되고 다른 변인이 결과가 되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 다루는 예측변수들이 실제로 준거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발생하는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예측변수들 간에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예측변수들이 준거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는데, 중다회귀분석은 예측변수들 간의 공통된 설명량을 제외한 각 변수의 고유한 설명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수들의 상대적인 예측력 또는 설명력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197) 네 집단 간 사회지배경향성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post-hoc tests)을 실시한 결과, 저-고 집단과 저-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집단들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측변수들에 더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연령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에 추가하였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군국주의(militarism)와 화해(peacemaking) 방법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지만,¹⁹⁸⁾ 폭력/비폭력적 수단에 대한 선호나 익숙함 등에서 여전히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연령에 따른 전쟁의 경험 유무 역시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탐색적인 목적으로 분석에 추가하였다. 예측변수들 중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과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국제적 조화 및 평등/국력 가치)를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 또는 신념과 같은 개인차 변수로서 취급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지원 및 협력 대 경계 및 적대)을 분석에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와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순서로 본 장에서 다루는 두 준거변수 각각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에 제시한다.

(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을 먼저 투입하였다. <표 III-16>의 첫 번째 단계에 제시된 결과처럼, 성별과 연령은 각각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 Kenneth E. Vail and Matt Motyl, "Support for Diplomacy: Peacemaking and Militarism as a Unidimensional Correlate of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Attitudes," pp. 29~57.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Vail 등¹⁹⁹⁾이 발견한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군사력을 수단으로 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두 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했을 때, 연령 변수보다는 성별 변수가 더 큰 변량(variance)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차 변수인 사회지배경향성과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국력 가치를 추가로 투입하여 이전 단계에서 검증한 성별과 연령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추가된 예측변수들의 고유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표 III-16>의 두 번째 단계의 결과를 보면, 추가된 세 예측변수들 모두 준거변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 간에 상하위계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을수록,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Pratto 등²⁰⁰⁾의 연구에서 발견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군사계획정책에 찬성하는 경향과도 일관된다. 반면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군사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국력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군사력의 사용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은 호오

199) *Ibid.*, pp. 40~45.

200)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pp. 741~763.

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태도가 반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표 III-1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의 종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1	성별	-.22**	-.10**	.02***	.02***
	연령	.62*	.08*		
2	성별	-.22**	-.10**	.06***	.08***
	연령	.05*	.07*		
	사회지배경향성	.27***	.16***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30***	-.20***		
	국력 가치	.19***	.14***		
	성별	-.20**	-.09**		
3	연령	.05*	.06*	.08***	.15***
	사회지배경향성	.25***	.1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20***	-.13***		
	국력 가치	.11*	.08*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	-.06**	-.11**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적대	.12***	.23***		
4	성별	-.19**	-.09**	.03***	.18***
	연령	.04	.05		
	사회지배경향성	.19***	.11***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16**	-.10**		
	국력 가치	.12*	.09*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	-.06**	-.10**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적대	.09***	.18***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03	.04		
	경쟁적 피해자 의식	.21***	.16***		

*p < .05, **p < .0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추가하였고, 두 변수 모두 준거변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남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대상 또는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반대하는 결과를 보였고, 반면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 또는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두 예측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고 생각할수록, 무력을 사용한 평화 달성 방식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차 변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18%의 변량을 설명했다. 예측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대상으로의 인식이었다. 북한을 경계할 대상, 또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남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예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현 상태를 유지할 바에는, 북한에 맞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으로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잘 예측하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을수록 자기 집단이 상

대 집단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²⁰¹⁾ 마찬가지로,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어왔다고 생각할수록, 남한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무너진 형평성을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남한이 사용하는 군사력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개인차 변수 역시 준거변수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잠재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 북한이 과거에 남한에 행했던 공격에 대한 인식이 군사력 사용의 지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차 변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회귀 모형에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III-17〉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1	성별	-.12*	-.07*	.01*	.01*
	연령	-.03	-.05		
2	성별	-.11*	-.06*	.20***	.21***
	연령	-.03	-.04		
	사회지배경향성	-.45***	-.3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23***	.19***		
	국력 가치	-.03	-.03		

201) Masi Noor,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p. 481~495.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3	성별	-.11*	-.07*		
	연령	-.02	-.04		
	사회지배경향성	-.45***	-.3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19***	.16***	.02***	.23***
	국력 가치	<.00	<.00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	.03*	.07*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적대	-.04***	-.11***		
4	성별	-.12*	-.07*		
	연령	-.02	-.03		
	사회지배경향성	-.40***	-.31***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15**	.12**		
	국력 가치	-.01	-.01	.03***	.26***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	.03*	.06*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적대	-.02	-.05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04	-.06		
경쟁적 피해자 인식	-.16***	-.17***			

*p < .05, **p < .01, ***p < .001

〈표 III-17〉의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연령은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별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두 준거변수에서의 성별의 효과를 통합해보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있다기보다는,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남성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

해서든 평화를 이루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를 위해 <표 III-18>에 남녀 집단 각각의 군사력/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변량분석(ANOVA) 결과, 두 변수 모두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차 변수인 사회지배경향성과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국력 가치를 추가로 투입하여 성별과 연령 변수를 통제된 후 추가된 예측변수들의 고유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표 III-17의 두 번째 단계를 보면, 추가된 세 예측변수들 중 사회지배경향성과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만 준거변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은 모두 평등하며 집단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을수록,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 역시 동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18> 군사력/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통계치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5.12	1.11	4.91	1.09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5.88	0.87	5.75	0.84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수를 추가하였고, 두 변수 모두 준거변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지원 대상 또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 대상 또는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두 예측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는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 역시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과 마찬가지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고 생각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경향이 낮아졌다. 다시 표현하자면,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경험했다고 인식할수록,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처치 방법으로써 상대 집단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감소시켰을 때 상대 집단을 더 용서하게 되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⁰²⁾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차 변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의 26%의 변량을 설명했다. 예측변수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성이었는데, 다양한 사회집단들은 모두 평등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을수록,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예측력이 높은 변수는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다.

202)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pp. 867~877.

(3) 변량분석: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및 국력 가치의 조합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개인차 변수 중 사회지배경향성은 두 준거변수를 예측 가능한 방향과 일관되게 잘 예측하는 반면,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두 가지 가치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적었으며 비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두 가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관계이며, 두 가치를 모두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²⁰³⁾ 두 가치를 각각 강하게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지에 따라 네 조건(고-고, 고-저, 저-고, 저-저)을 조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I-19〉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국력 가치의 조합: 집단 별 군사력/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조화와 평등 가치 - 고	국력 가치 - 고	4.85 (1.23)	6.07 (0.87)
	국력 가치 - 저	4.80 (1.30)	6.07 (0.93)
조화와 평등 가치 - 저	국력 가치 - 고	5.38 (1.00)	5.65 (0.78)
	국력 가치 - 저	5.11 (0.86)	5.53 (0.73)

가치 조합 조건을 독립변수로,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합 조건에 따라 두 변수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찬성하는 태도에서는 저-고 집단과 저-저 집단이 고-고 집단과 고-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가 높거나 낮은 집단들 내에서는 국력 가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203)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는데, 이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강하게 지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국력 가치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찬성하는 태도에서는 고-고 집단과 고-저 집단이 저-고 집단과 저-저 집단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강하게 지지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고, 국력 가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매개분석

본 장에서 다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지만,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한 후 몇 가지의 변수들을 추려내어 매개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순한 인과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경우,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본 절에서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순차적 이중매개(serial double mediation)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model 6)를 사용하였다.

매개분석에 포함할 변수들은 “개인의 세계관 → 북한에 대한 인식 →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한 태도”의 틀 안에서 선정하여 여러 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개인이 가진 세계관은 다른 개인, 집단, 사건, 상황 등을 해석하는 개인의 인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개인의 태도 및 선호,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⁰⁴⁾ 본 장에서 다룬 예측변수들 중 사회지배경향성과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가치가 바로 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변수에 해당된다. 이상신은 북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혀냈다.²⁰⁵⁾ 즉, 우익권위주의가 낮을수록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진 반면,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이나 가치 등의 변수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 간의 상관관계가 여러 차례 검증된 것으로 미루어보아,²⁰⁶⁾ 본 장의 두 예측변수도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대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을수록 집단 간 용서와 화해가 낮았고, 상대 집단에 대한 자기 집단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²⁰⁷⁾ 이에 근거하여, 북한을 믿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믿을 수 없고 항상 경계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에서의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 국가 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4)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205)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갈등," pp. 187~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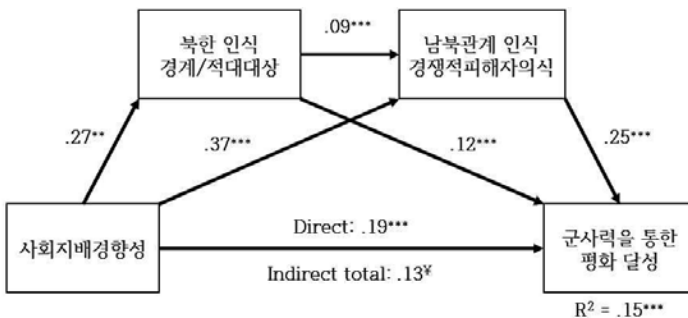
206) Bo Ekehammar et al., "What Matters Most to Prejudice: Big Five Persona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r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no. 6 (2004), pp. 463~482.

207) Masi Noor,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p. 481~495.

(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

먼저, “사회지배경향성 →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III-4>에 각 변수들 간의 회귀계수와 간접효과(매개변수들을 거쳐서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효과)의 크기 및 유의도를 제시했다. 사회지배경향성은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대상으로서의 인식을 예측하는데, 즉 응답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사회지배경향성은 또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아졌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높아질수록 군사력을 수단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지배경향성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했지만, 두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사회지배경향성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간의 이중매개모형



** $p < .01$, *** $p < .001$; ¥ 표시는 신뢰구간 95% 범위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했음을 나타냄.

그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순서를 바꾸어, “사회지배경향성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 →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사회지배경향성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모두 유의했지만, 사회지배경향성이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대상으로서의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지배경향성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마찬가지로 사회지배경향성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했지만, 사회지배경향성이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대상으로서의 인식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림 III-4>에 제시한 이중매개모형이 변수들 간의 관계나 이론적인 설명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보인다. 매개 과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즉 사회집단 간 우열을 가리고 불평등한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을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예측하는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에서도 독립변인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을 투입하여 “사회지배경향성 → 북

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관계가 유의한지 먼저 검증하였다. 특히 사회지배경향성은 중다회귀 결과에서도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먼저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했지만, 사회지배경향성이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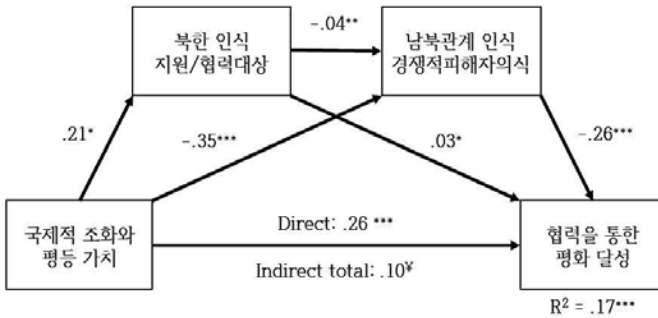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순서를 바꾸어 “사회지배경향성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지배경향성이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다회귀에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적 잘 설명한 예측변수인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사회지배경향성 대신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 → 경쟁적 피해자 의식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는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대상으로서의 인식은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가 협력을 통한 평화 달

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두 매개변수를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에 각 변수들 간의 회귀계수와 간접효과(매개변수들을 거쳐서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효과)의 크기 및 유의도를 제시했다.

<그림 III-5>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간의 이중매개모형



* $p < .05$, ** $p < .01$, *** $p < .001$; ¥ 표시는 신뢰구간 95% 범위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했음을 나타냄.

결과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보다는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가 더 적절한 독립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5>에 제시된 매개 과정을 풀이해보면, 개인이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북한을 지원해줘야 하는 또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북한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질수록 남북관계에서 남한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 고통을 겪어왔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로 상대 집단을 자신의 집단과 같은 피해자 집단이라고 인식하도록 하거나 같은 가해자 집단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등 동일한 정체성(identity)을

형성시켜주었을 때,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낮아지고 상대 집단을 더 용서하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²⁰⁸⁾ 즉, 북한을 남한과 같이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며,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과거의 남북 간 전쟁과 물리적 충돌이 두 국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인식하게 되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향이 아닌 양측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 소결

본 장에서는 군사력 또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각각의 방식에 대한 태도를 사회지배경향성, 북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및 국력 가치의 변수들이 예측할 수 있는지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 다룬 변수들은 크게 개인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변수들(사회지배경향성,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경쟁적 피해자 의식),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개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개인차 특성 몇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가치, 신념, 인지, 감정, 태도, 행동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8)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pp. 867~877.

본 장에서 준거변수로 다룬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는 언뜻 서로 상반된 태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강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양극단에 위치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두 방식 모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차이는 긍정적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방식(협력)을 고수할 것인가, 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방식(군사력)을 정당화할 것인가로 볼 수 있다. 두 변수가 측정하는 심리가 서로 정반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변수를 설명하는 예측변수나 심리적 설명 기제(mechanism)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 준거변수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두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수는 서로 동일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계/적대 대상)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 반면,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는 사회지배경향성, 경쟁적 피해자 의식,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또한 개인의 가치관/세계관,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 간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이중매개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본 분석은 어디까지나 탐색적인 목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분석에 포

함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들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매개 과정에서의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관/세계관 → 북한에 대한 인식 →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 평화/전쟁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의 관계가 반복 검증된다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조정(interven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합의를 지닌 시도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다룬 연구 문제 및 분석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하였듯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차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통일) 방식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를 각각 측정했을 때 두 점수 간 약한 수준의 역상관($r = -.31$)이 나타나, 평화적 방식을 선호할수록 힘에 의한 방식을 덜 선호하는 경향성이 없지는 않지만 두 개념이 일차원 선상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닌 비교적 독립적 차원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두 가지 평화 달성 방식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양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두 차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서로 다른 심리적 요인들(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 →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대상 인식 → 낮은 경쟁적 피해자 의식 →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 사회지배경향성 →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대상 인식 → 높은 경쟁적 피해자 의식 →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의 관계가 밝혀졌다는 것은, 평화 달성을 위한 ‘평화적’ 과정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촉진 변수와 저해 변수에 모두 개입(intervention)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통일

에 대한 찬성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나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평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나 ‘평화’ 담론에 따라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개인적 특성(사회지배경향성, 가치관)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경쟁적 피해자 의식)을 거쳐 두 가지의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응답에서는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낮았고(11점 기준 평균 6.02)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평균 7.52)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상호 간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 수준이 측정 척도상의 중간점(1~7점 척도상에서 4점)보다 낮은 편으로(평균 3.35), 남북한 갈등 관계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더 입어왔다는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²⁰⁹⁾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화해 의도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통일)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상기하였다시피 남북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행사를 지지하는 태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개인적 특성들의 조형뿐만 아니라, 남북

209) 경쟁적 피해자 의식 수준의 응답 점수가 낮다는 것은 남북 양측 모두 피해와 고통을 경험해왔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양측에서 공동의 가해자/피해자로서의 정체성 지각, 가해자로서의 사과와 피해자로서의 용서를 통한 집단 간 신뢰 및 우호적 관계 구축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를 해석하는 교육 및 정책기관 등에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남북한 갈등의 역사 속에서 양측이 서로 공동으로 어떤 가해/피해를 겪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추론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비롯한 향후 남북한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한이 일방적으로 경계,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이 가능한 관계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상호인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지배경향성,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세계관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및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심층 분석에서 실시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하여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와는 독립적으로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신념 등이 남북한 관계와 통일, 평화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의 효과 및 기제를 밝히는 것은 해당 심리 요인의 속성과 작동 원리에 따라서 향후 남북한 관계나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유관/확장된 장면들에서도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즉, 북한 또는 남북관계와 같은 비교적 추상적 차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남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또는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남북한 관련 사건이나 정책, 나

아가 남북한 관계를 넘어선 평화에 대한 인식 등을 예측하는 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심리적 기제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한 여러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군집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심리적/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하위 집단(군집) 간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통합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들을 포함하는 심리 요인들이 남북한 관계 및 평화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들 간의 선후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일반 국민들의 태도나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남북 화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문화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최훈석(성균관대학교)

핵심 요약

주요결과

- 화해 태도는 ‘중립/부정적’이 다수이고 화해 행동의도는 매우 낮음.
-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임.
- 한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확실할수록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음.
-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할수록 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음.

정책적 시사점

- 남북화해와 연합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한민족 정체성 고양 및 민족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성이 요구됨.
- 개인주의 가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함.

요약

본 장에서는 응답자들의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문화적 지향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남북화해 태도와 행

동의를 분석하였다. 사회정체성은 남한사회의 사회정체성 구조를 반영하여 상위위계에 위치하는 한민족 정체성과 하위위계의 남한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각에 연합된 정체성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문화적 지향성은 가치지향성(개인주의-집단주의)과 자기개념(독립적-상호의존적)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초 분석 결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평균은 중간점보다 높았으나 남북화해에 대해서 확실히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남북 화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를 지닌 응답자 역시 소수였다. 사회정체성에서는 남한 정체성을 한민족 정체성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높은 반면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다수는 개인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의 자기정의 및 인식에 해당하는 자기개념에서는 개인의 독특성과 개체성을 강조하는 독립적 자기개념과 타인과의 유사성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거의 균등한 빈도로 관찰되었다.

심층 분석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인 반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셋째,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남북화해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한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강했으며,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우세할수록, 그리고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개념이 조합되었을 때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북화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실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화해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긍정적 결과를 인식함으로써 남북화해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민족공동체와 공동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사회의 서구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개인주의 가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관이 건전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의 문화 사회화가 요구된다.

가.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심리학 및 유관 분야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태도와 행동의도에 초점을 두고 남북화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화해 행동의도를 분석한다.²¹⁰⁾ 특히,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는 집단 간 화해(intergroup reconciliation)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변수이다. 이는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화해와 관련된 긍정적 신념과 정서를 보유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210) Icek Ajzen,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1), pp. 27~58.

실행할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²¹¹⁾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집단 간 갈등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토대로 응답자들의 사회정체성과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한다.²¹²⁾ 이와 더불어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이 집단 간 심리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관점을 토대로 응답자들의 문화적 지향성과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기반을 두어 정의되는 정체성을 말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정체성에서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하도록 동기화되며, 내집단의 긍정적 특징을 통해 자기를 정의함으로써 자존감을 경험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지지 증거를 축적하였으며 집단 간 갈등, 편견과 차별의 이해 및 해소는 물론 집단 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²¹³⁾ 사회정체성은 한국처럼 민족정체성(한민족)과 국가

211) 집단 간 화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Linda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212) Henri Tajfel,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pp. 65~93; Henri Tajfel and John Turner,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2nd edition (Chicago: Nelson-Hall, 1986), pp. 7~24.

213) Marilynn Brewer and Masaki Yuki, "Culture and Group Processes," in *Culture and Group Processes*, eds. Masaki Yuki and Marilynn Bre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14; Ching Wan and Jia Yu, "A Knowledge-based Account of Cultural Identification," in *Culture and Group Processes*, eds. Masaki Yuki and Marilynn Bre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66~92.

정체성(남한)이라는 이중 사회정체성(dual social ident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태도를 다룬 최근 연구에서 개념적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²¹⁴⁾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상위위계에 위치하는 한민족 정체성과 하위위계에 위치하는 남한 정체성을 각각 측정하여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위에서 논의한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은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각각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연합된 개인의 사회정체성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이 하나의 실체로서 얼마나 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해당하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역시 집단 간 심리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한민족 구성으로서 그리고 남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은 응답자들이 한민족 또는 남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 동일시, 애착, 및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성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이나 국가정체성과는 달리,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가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서 지니고 있는 특징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확실한지에 따라서 정체성 불확실성(identity uncertainty)을 경험한다.²¹⁵⁾ 따라서, 민족정체성이나 국가정체성은 개인이 한민족 또는 남한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강한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한다(“나는 한민족의 일원인가?”, “나는 남한 사회의 일원인가?”). 반면에 정체성 불확실성

214)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vol. 37, Issue. 3 (2016), pp. 341~350.

215) Michael A. Hogg, “Uncertainty-Identity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2007), pp. 69~126.

은 한민족 또는 남한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얼마나 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지를 말한다(“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얼마나 확실한가?”,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얼마나 확실한가?”).²¹⁶⁾

이처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각 사회범주에 연합된 불확실성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를 각각 상세화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장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과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사회정체성과 문화적 지향성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회정체성과 문화적 지향성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사회정체성은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의 특정 집단 및 그 집단에 자신이 속해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에 연합되어 있는 정서적 애착을 말한다. 반면에 문화적 지향성은 한 사회에서 공유된 지식, 가치, 세계관,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가치, 세계관에 대한 개인의 내면화를 수반한다. 사회정체성은 하나의 실체로서 특정 집단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반영하는 반면, 문화적 지향성은 한 사회에서 집합적으로 공유된 신념, 가치, 관습에 대한 내면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체성과 문화적 지향성은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에 해당한다.²¹⁷⁾

216)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p. 341~350.

217) Marilyn Brewer and Masaki Yuki, “Culture and Group Processes,” pp. 1~14; Ching Wan and Jia Yu, “A Knowledge-based Account of Cultural

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심리학 및 유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세계관을 말한다.²¹⁸⁾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수준에서 국가 간 심리와 행동을 비교하는 것뿐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 다양한 하위문화를 비교분석하거나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된다.²¹⁹⁾ 많은 연구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의 인지, 감정, 사회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²²⁰⁾ 특히, 남북관계, 평화와 전쟁, 통일에 관한 인식 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과 전체 사회공동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지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의 핵심 구성요소는 개인이 이익과 집단/공동체의 이익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른 가치 지향성(value orientation)과 개인이 자기를 정의할 때 자기의 고유성과 개체성이 강조되는지 아니면 타인과의 유사성과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지를 반영하는 자기개념(self-concept)으로 대분할 수 있다.²²¹⁾ 즉,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Identification,” pp. 66~92.

218) 문화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Geert Hofstede, *Cultural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Harry Triandis and Michelle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s. Paul A. M.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E. Tory Higgi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2), pp. 498~520.

219) Marilyn Brewer, “Bringing Culture to the Table,” *Research on Managing Groups and Teams*, vol. 9 (2006), pp. 353~365.

220) Harry Triandis and Michelle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498~520.

221) Hoon-Seok Choi et al., “The Joint Impact of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and Independent Self-Representation on Group Creativity,” *Group Processes*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지에 해당하는 동기적 지향성을 말한다. 반면에 개인의 자기개념은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구분된다. 독립적 자기개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중요시하고, 상황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기개념이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한 사람들은 상호작용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집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자신을 정의할 때 남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중요시하고 상호작용 대상이나 상황의 영향에 민감하다.²²²⁾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의 2차원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을 개념화한 이론모형을 토대로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을 각각 측정하여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²²³⁾

나. 기초 분석

(1)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본 절에서는 남북화해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및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조

and Intergroup Relations, vol. 21, no. 1 (2018), pp. 37~56.

222) Hazel Markus and Shinobu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no. 2 (1991), pp. 224~253; Susan Cross, Erin Hardin, and Berna Gercek-Swing, "The What, How, Why, and Where of Self-Constru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5, no. 2 (2011), pp. 142~179.

223) Hoon-Seok Choi et al., "The Joint Impact of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and Independent Self-Representation on Group Creativity," pp. 37~56; Hoon-Seok Choi and Hyun Euh,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018), pp. 1~20.

사에서 남북화해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호의적 태도 3문항과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갚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남북 간 화합은 의미가 없다” 등 부정적 태도 3문항 등 총 6개 문항(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중립’, 7점=‘매우 동의한다’)으로 조사하였다. 세 개의 부정적 태도 문항들은 역채점하였다. 분석은 6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였으며(Cronbach’s $\alpha=.57$), 점수가 높을수록 남북화해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20〉에서 보는 대로, 남북화해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 4.15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73으로 응답자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6.67이었으며 정규분포에 거의 근접하였다(편포도 .01).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평균을 ‘부정적 태도’(1점~3점), ‘중립’(4점), ‘호의적 태도’(5점~7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부정적 태도는 29.97%, 중립은 30.15%, 그리고 호의적 태도는 39.88%로 나타나서 호의적 방향의 태도가 많기는 하지만, 부정적 태도 역시 전체의 3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0〉 남북 간 화해에 대한 인식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 태도	중립	호의적 태도
남북화합에 대한 태도		4.15	.73	29.97%	30.15%	39.88%

이 결과로부터,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이 남북화해에 대해 호의적인 방향의 태도를 보이지만 척도의 최고점이 7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직 확실히 우호적인 방향의 태도가 조형되어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된 응답자의 행동의도는 “통일을 위해 경제적 부담(예: 세금인상 등)을 진다”,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본다”, “북한 문화체험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시도해본다”,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에 정기적 기부를 한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혀 행동할 의향이 없다’, 4점=‘중립’, 5점=‘매우 행동할 의향이 있다’)으로 조사하였으며, 4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Cronbach’s $\alpha=.78$).

〈표 III -21〉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의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의도없음	중립	의도있음	
남북화합 행동의도	2.85	.81	35.85%	33.98%	30.17%	

〈표 III-21〉에서 보는 대로, 남북화해를 위한 응답자들의 행동의도는 평균 2.85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표준편차는 .81로 응답자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앞의 남북화해에 대한 신념과 인식에서 응답자들이 다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비는 결과이다.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5점이었으며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29).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평균을 ‘의도 없음’(1점~2점), ‘중립’(3점), ‘의도 있음’(4점~5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의도 없음은 35.85%, 중립은 33.98%, 그리고 의도 있음은 30.17%로 나타나서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응답자 자신이 할 의도는 ‘없음’ 방향의 응답이 우세했다. 앞의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r=.38$)을 보여, 남북화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화해에 필요한 행동을 할 의도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

자들이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호의적인 신념과 인식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 간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의도는 없거나 중립 쪽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예측변수

본 절에서는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예측변수로서 한민족 정체성, 남한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그리고 문화적 지향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 사회정체성: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나 남북화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는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민족 정체성은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합니까?”,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등 4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점=‘전혀 아니다’, 9점=‘매우 그렇다’), 이 4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93$). <표 III-22>에서 보는 대로, 응답자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 평균은 6.41로 나타나서 중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1.40으로 응답자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평균점수의 범위는 1.50점에서 9점이었으며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했다(편포도=-.83).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1~4점), ‘보통’(5점), ‘긍정’(6~9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긍정’ 응답이 평균 75.20%로 다수였고, ‘보통’과 ‘부정’은 각각 평균

14.98%와 9.83%로 소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한민족 정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부정	보통	긍정
한민족 정체성		6.41	1.40	9.83%	14.98%	75.20%

남한 정체성은 정체성 지각의 주체를 민족이 아닌 국가로 하여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귀하는 귀하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등 4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점=전혀 아니다, 9점=매우 그렇다), 이 4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88$). 〈표 III-23〉에서 보는 대로, 응답자들이 남한 구성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국가정체성 평균은 7.04로 중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표준편차 1.15로 응답자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였고(편포도 -.88),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9점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1~4점), ‘보통’(5점), ‘긍정’(6~9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긍정’ 응답이 88.33%로 절대다수였고, ‘중립’과 ‘부정’은 각각 8.15%와 3.52%로 소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남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민족 정체성보다 남한 정체성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r=.46$)을 보여, 어느 한쪽 정체성이 강할수록 다른 한쪽 정체성도 강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 남한 정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부정	보통	긍정
남한정체성		7.04	1.15	3.52%	8.15%	88.33%

(3)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과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본 조사에서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귀하는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마음에 떠올릴 때 아래와 같은 느낌이 얼마나 됩니까?: 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분명하지 않은” 등 3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 9점=매우 강하게 느낀다), 이 3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α .93). 〈표 III-24〉에서 보는 대로, 응답자들이 지각한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평균 5.12로 중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서 다소 불확실하다고 느꼈으며 표준편차 1.75로 응답자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였고(편포도 -.45),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9점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확실함’(1~4점), ‘보통’(5점), ‘불확실함’(6~9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불확실함’은 45.53%, ‘확실함’은 34.50%, 그리고 ‘보통’은 19.97%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 절반에 가까운 경우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확실한 정체성을 지각하는 경우는 3분의 1 수준이었다.

〈표 III-24〉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불확실	보통	확실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5.12	1.75	45.53%	19.97%	34.50%

다음으로,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귀하는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마음에 떠올릴 때 아래와 같은 느낌이 얼마나 됩니까?: 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분명하지 않은” 등 3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 9점=매우 강하게 느낀다), 이 3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95$). <표 III-25>에서 보는 대로, 응답자들이 지각한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평균 4.65로 중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서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1.97로 응답자 간 차이는 다소 있었다.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거의 근접하였고(편포도 -.06),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9점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불확실하지 않음’(1~4점), ‘보통’(5점), ‘불확실함’(6~9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불확실함’은 36.87%, ‘확실함’은 46.63%, 그리고 ‘보통’은 16.50%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 약 3분의 1 정도는 불확실성을 느끼는 반면, 다수는 확실성을 느끼는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5>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불확실	보통	확실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4.65	1.97	36.87%	16.50%	46.63%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과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한 국민으로서보다는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여($r=.61$), 어느 한쪽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다른 한쪽 정체성도 불확실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간에 약한 부적

상관($r=-.25$), 한민족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간에도 약한 부적 상관($r=-.27$)이 관찰되어 정체성과 정체성 불확실성은 개념적으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남한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r=-.18$)이 있었고,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4) 문화적 지향성: 가치지향성과 자기표상

본 조사에서 가치지향성은 개인목표 대 집단목표 우선성과 경쟁 대 협동 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할 때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택하고, 해당 방향으로 동의 정도를 1점(다소 동의)부터 3점(매우 동의) 사이에서 표시하였다. 협동/경쟁 지향성은 집단 성공의 원동력이 ‘구성원 간 협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택하고, 해당 방향으로 동의 정도를 1점(다소 동의)부터 3점(매우 동의) 사이에서 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자기개념은 개인의 자기 정의에서 독특성 지각 대 유사성 지각, 그리고 상황에 걸친 일관성 대 가변성을 묻는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은 스스로에게 ‘주위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이 중요한지’를 택하고, 해당 방향으로 동의 정도를 1점(다소 동의)부터 3점(매우 동의) 사이에서 표시하였다. 또한 자신이 ‘함께 있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종종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택하고, 해당 방향으로 동의 정도를 1점(다소 동의)부터 3점(매우 동의) 사이에서 표시하였다.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을 측정한 문항들은 모두 6점 척도로 변환하여 가치지향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그리고 자기개념의 경우 독립적 자기개념을 의미하도록 점수를 산출하였다. 가치지향성을 측정한 두 문항 간 상관($r=.30$)과 자기개념 두 문항 간 상관($r=.12$)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분석에는 해당 변수의 문항 평균을 이용하였다.

먼저 가치지향성에서의 결과는 <표 III-26>과 같다. 응답자들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나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다소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1.01로 응답자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45).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6점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양분하면 ‘개인주의 가치지향성’(1점~3점)은 32.90%, ‘집단주의 가치지향성’(4점~6점)은 67.10%였다.

<표 III-26> 가치지향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개인주의 가치지향	집단주의 가치지향
가치지향성		4.00	1.01	32.90%	67.10%

다음으로 자기개념에서의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응답자들의 평균은 3.57로 독립적 자기개념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표준편차는 .97로 응답자 간 차이가 적었고,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였고(편포도 .29). 평균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6점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1점~3점)과 ‘독립적 자기개념’(4점~6점)으로 양분하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49.50%, ‘독립적 자기개념’은 50.50%로 나타나서 두 가지 자기개념이 거의 동등하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7〉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률(N = 1000)

변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독립적 자기개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자기개념		3.57	.97	50.50%	49.50%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 간 상관은 .08에 불과했으며, 이는 두 변수가 개념적으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이론모형과 일관된 결과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2차원 분류에 따라서 응답자들을 분류하면 〈표 III-28〉과 같다. 응답자들 가운데 개인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을 지닌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전체의 14.80%였고, 개인주의 가치지향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보다 약간 많은 28.10%였다.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21.00%,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36.10%였다.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조합이 가장 많고 개인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 조합이 가장 적은 것은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대인간 연결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문화임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가치지향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조합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의 조합처럼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이 양방향으로 혼재된 경우도 20%~28%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일방향적인 집단주의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다소 우세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기개념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거의 균등하게 공존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후 심층 분석에서 보듯이 문화적 지

향성을 구성하는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두 변수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효과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28〉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 분류(N = 1000)

	독립적 자기개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개인주의 가치지향	148 (14.80%)	281 (28.10%)
집단주의 가치지향	210 (21.00%)	361 (36.10%)

다. 심층 분석

이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변수인 사회정체성(한민족/남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한민족/남한), 가치지향성(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자기개념(독립적/상호의존적)과 준거변수인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에 예측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이 모형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예측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서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역동을 탐색하였다. 끝으로, 응답자들의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의 조합이 [사회정체성-남북화해 태도-행동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1)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에서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정체성 이론을 적용하여 집단 간 갈등 및 화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²²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할수록 갈등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을 보인다. 따라서 갈등상황에서 내집단이 외집단에 입힌 피해보다 외집단이 내집단에 입힌 피해를 과장해서 지각하고, 내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외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보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한사회에 대해 강하게 동일시하고, 그에 따라서 갈등 상대방인 북한과의 화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집단 간 관계에서 상위 공동범주화(superordinate categorization)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²²⁵⁾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를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하지 않고 두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 때는 집단 간 화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촉진된다.²²⁶⁾ 즉,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을 외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과 공동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면 집단 간 화해에서 사회정체성의 부정적

224) Anca Miron, Nyla Branscombe, and Monica Biernat, "Motivated Shifting of Justice Standar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6 (2010), pp. 768~779; Nyla Branscombe et al.,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and Content*, eds.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Oxford: Blackwell, 1999), pp. 35~58; 포괄적 논의는 Linda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를 참조.

225) John Dovidio et al., "Recategor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Common In-Group Identity and a Dual Identity," in *The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Group Processes, Intergroup Relations, and Helping* eds. Stefan Stürmer and Mark Snyder (Oxford: Wiley-Blackwell, 2010), pp. 191~207.

226) John Dovidio, Samue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1 (2009), pp. 3~20.

효과가 경감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공동범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민족 또는 남한이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서 얼마나 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지에 관한 정체성 불확실성이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한을 내집단으로 그리고 북한을 외집단으로 지각하기보다는 남북을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간에 정적 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이 높을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추론이 가능하다. 즉, 앞에서 논의한 대로 만약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각 사회범주에 연합된 불확실성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를 상세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의 두 가지 핵심 변수에 해당하는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은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인 가치지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²²⁷⁾ 개인주의 가치지향성은 집단의 목표 성취나 번영보다는 개

인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고 협동보다 경쟁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집단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동과 조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남북 간 반목과 경쟁을 종식시키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신장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개인의 희생도 어느 정도 수반됨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집단의 번영과 발전에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예상은 개인주의 가치지향성의 경우 남북화해가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한 남북화해를 지지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낮고, 개인의 심리적/물질적 비용과 손해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닐 것이라는 추론과도 일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간에 정적 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변수인 자기개념 중 독립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중요시하며 스스로를 타인과는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 지각하고 정의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자기를 인식하고 정의할 때 타인과의 유사성이 중요시되고, 타인과 분리된 개체로서가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지각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일련의 선행연구들²²⁷⁾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하면 스스로를

227) Harry Triandis and Michelle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498~520.

228) Susan Cross, Erin Hardin, and Berna Gercek-Swing, "The What, How, Why, and Where of Self-Construction," pp. 142~179.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지각하고 집단 규범이나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우세하면 자신의 내적 신념이나 태도보다는 자신이 속한 중요한 사회범주나 관계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외적 행위 규범에 민감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자기개념의 주요 차이를 남북 간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남북 화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수용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해소하는 일련의 심리상태를 수반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남북 간 갈등과 반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공고화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평가, 북한토대에 대한 적개심에서 탈피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에 관한 개인의 신념으로 조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남북화해 및 통일에 관해서 남한사회에 절대적으로 우세하거나 지배적인 사회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태를 감안할 때 특히 그러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한민족 정체성, 남한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가치지향성, 및 자기개념을 예측변수로, 그리고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예측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남북화해 태도의 12%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29>에서 보는 대로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이 낮을

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나서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예상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남북을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남한 정체성 및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의 경우 예상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성취나 번영보다는 집단의 성공과 번영을 중시할수록, 그리고 타인과는 차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중시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된 자기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설명량
한민족 정체성	.08***	.16***	
남한 정체성	-.02	-.03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08***	-.10***	.12***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01	.04	
가치지향성+	.11***	.16***	
자기개념++	.08***	.11***	

***p < .001

+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기개념

이 결과는 이중 사회정체성에서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민족정체성 및 민족정체성 불확실성이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국가정체성 및 국가정체성 불확실성보다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정체성 변수들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을 구성하는 핵심변수인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 역시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남북화해 행동의도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실행할 의도를 예측할 목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귀분석의 1단계에 한 민족 정체성, 남한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가치지향성, 및 자기개념을 투입하고,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표 III-30>에서 보는 대로, 1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남북화해 행동의도의 4%를 설명하였다. 개별 변수들을 보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즉, 남한과 북한을 한 민족이라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수록,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할수록, 그리고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할수록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높았다. 반면에 남한 정체성 및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1단계 투입변수들이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변량 중 11%를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추가로 설명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화해에 필요한 행위를 실행할 의도가 높았다.

〈표 III-30〉 남북화해 행동의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 = 1000)

단계	예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단계별 설명량	전체 설명량
1	한민족 정체성	.05*	.09*		
	남한 정체성	-.03	-.04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05**	-.11**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00	-.01	.04***	.04***
	가치지향성+	.03	.04		
	자기개념++	.07*	.08*		
2	남북화해 태도	.40***	.36***	.11***	.15***

*p < .05, **p < .01, ***p < .001

+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함

++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함

(3)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사회정체성, 남북화해 태도 및 남북화해 행동의도 간의 관계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범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범주들은 고정적인 특징들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정의적 속성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있는 중요한 사회범주의 정의적 속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일 때 사람들은 사회정체성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한다.²²⁹⁾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파생된 정체성-불확실성 모형²³⁰⁾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토대로 성립된 모형이다. 첫째,

229)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p. 341~350.

230) Michael A. Hogg, "Uncertainty-Identity Theory," pp. 69~126.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연합된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즉, 사회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정체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따라서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대한 동일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된다. 둘째, 다양한 사회범주들 가운데 실체성(entitativity)이 높은 사회범주일수록 개인이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실체성이 높을수록 분명하게 정의된 원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원형적 속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산층’이라는 사회범주보다는 ‘서울 사람’이라는 사회범주가 실체성이 높게 지각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공동운명을 지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 사회정체성에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는 자신을 ‘서울사람’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중산층’으로 동일시하는 것보다 정체성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정체성-불확실성 모형은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정체성이 각각 다른 수준에서 층소(nested)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한국인들의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의도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²³¹⁾ 상위 수준의 한민족 정체성과 하위 수준의 남한 정체성, 그리고 각 정체성에 연합된 불확실성 간에 보상(compensation) 관계를 탐색하였다. 여기서 보상관계란 사람들이 어느 한 수준의 사회범주에서 정체성 불확실성을 경험하면 다른 수준의 사회범주에 강하

231)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p. 341~350.

게 동일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정체성 단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킴을 말한다. 따라서 남한 정체성에 불확실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에 불확실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남한 정체성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문제 단면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 결과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의도도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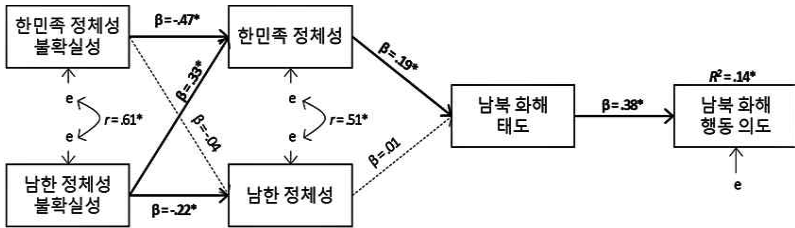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이 강할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높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가설과 달리,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남한 정체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보상관계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한민족과 남한이라는 두 가지 사회정체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남한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한민족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남한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과 정체성 불확실성, 그리고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화해 행동의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새롭게 모형검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한민족과 남한이라는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상위 및 하위수준 사회정체성 간에 보상적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두 수준의 사회정체성이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의도를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²³²⁾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불확실성과 사회정체성 간의 보상관계가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남북화해 태도가 정체성과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은 AMOS(version 20)를 사용했으며,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과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이 각각 한민

232) *Ibid.*, pp. 344~348.

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를 예측하는 경로,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이 남북화해 태도를 예측하고, 다시 남북화해 태도가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 경로모형은 남북화해 행동의도의 14%를 설명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III-6〉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사회정체성,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경로분석



〈그림 III-6〉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불확실성 이론과 일관되게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은 낮았고,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남한 정체성이 낮았다. 둘째, 앞에서 논의한 보상관계 가설과 일관되게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한민족 정체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남한 정체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²³³⁾

둘째, 한민족 정체성은 남북화해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했고, 남북화해 태도는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한민족 정체성-남북화해 태도-남북화해 행동의도의 경로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남한 정체성은 남북화해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남한 정체성-남북화해 태도-남북화해 행동의도 경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233) *Ibid.*, pp. 341~35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이라는 이중 구조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정체성-불확실성 이론에서 도출한 보상관계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한민족 정체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으나,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남한 정체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상위범주 정체성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하위범주 정체성에도 불확실성을 유발하기 때문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이 남한 정체성에 비해서 역사가 길고 더 분명한 정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위범주 불확실성-상위범주 정체성의 방향으로만 보상관계가 나타나고 반대 방향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²³⁴⁾ 이는 ‘한민족-남한’과 같이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보상관계에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북화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화해 행동의도를 조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민족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동일시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문화적 지향성과 남북화해 태도 및 남북화해 행동의도 간의 관계

집단 간 갈등 해소 및 화해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서구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사회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집단 간 화해와 갈등 해소를 저해하는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²³⁵⁾ 이 방면의 연구에 따르면, 외집단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

234) *Ibid.*, pp. 341~350.

235) Henri Tajfel,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pp. 65~93; Henri Tajfel and John Turner,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pp. 7~24.

간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위협과 더불어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차별 행동을 정당화하고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며,²³⁶⁾ 이러한 경향성은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강한 구성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²³⁷⁾ 국내에서 보고된 집단 간 관계 연구 역시 서구의 추세와 동일하게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²³⁸⁾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집단 간 화해에 방해가 되는 ‘억제요인’에 초점을 두고 집단 간 갈등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즉,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 수준이 높을 수록 외집단과의 갈등해소 및 화해를 저해하는 방향의 심리 및 행동 특징 조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를 철회하는 것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일시를 철회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직접적인지, 건전한 집단 간 관계

236) Sonia Roccas, Yechiel Klar, and Ido Liviatan,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4 (2006), pp. 698~711.

237) Bertjan Doosje et 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Group-based Guilt: The Effects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vol. 9, no. 3 (2006), pp. 325~338.

238) 김범준,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2), pp. 1~18; 안미영·김혜숙·안상수,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집단과 지역 집단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제2호 (2004), pp. 107~135.

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논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사람들의 문화적 지향성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지향성과 집단 내 및 집단 간 행동의 관계를 상세화하기 위해 최근 제안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상승효과모형을 기반으로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의 조합효과를 탐색하였다.²³⁹⁾ 이 모형은 서구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분법적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집단심리 연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적 지향성으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주장은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도출한 두 가지 가정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개인주의-집단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특질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처한 환경 및 수행해야 할 과업 상황 등에 따라서 상대적 우세성이 결정된다.²⁴⁰⁾ 둘째,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수반하며, 이 하위 요소들은 서로 일정 수준 상관은 있지만 독립적인 구성개념이다.²⁴¹⁾

239) Hoon-Seok Choi et al., "The Joint Impact of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and Independent Self-Representation on Group Creativity," pp. 37~56; Hoon-Seok Choi and Hyun Euh,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240) Ying-yi Hong et al.,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7 (2000), pp. 709~720; Daphna Oyserman,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2, no. 1 (2011), pp. 164~214.

241) Marilyn Brewer and Ya-Ru Chen, "Where(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vol. 114, no. 1 (2007), pp. 133~151; John Wagner, "Utilitarian and Ontological Variations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in Organizational*

이 두 가지 이론적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의 하위 요소들 가운데 두 가지 핵심 성분인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의 조합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의 기초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본 조사에서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어서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의 조합에 따라서 가치-자기개념의 일치성(개인주의 가치-독립적 자기, 집단주의 가치-상호의존적 자기)과 비일치성(개인주의-상호의존적 자기, 집단주의-독립적 자기)이 모두 유의미하게 분류됨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는 이론모형에서는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은 개념적으로 독립적이며,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집단 간 갈등해소 및 화해에 촉진적 효과를 지닌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가치지향성이란 ‘집단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통상 집단주의 가치가 우세할 때는 개인주의 가치가 우세할 때에 비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몰입과 심리적 애착이 강하다.²⁴²⁾ 이 원리를 갈등을 수반하는 집단 간 맥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집단주의 가치가 우세하면 내집단의 긍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지와 행동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고 전개된 내집단의 오류를 교정하고 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내집단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방향의 심리와 행동이 우세하게 나

Behavior, vol. 24 (2002), pp. 301~345; Siğdem Kağıtçıbaşı,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pp. 403~422.

242) Harry Triandis and Michelle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498~520.

타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예상은 집단주의 가치의 순기능적 측면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 가치의 핵심은 단순히 내집단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무조건 집단의 긍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보다는 내집단의 발전과 성숙에 대한 관심과 염려, 그리고 집단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에도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²⁴³⁾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 외집단과의 화해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외집단에 대한 용서와 수용, 그리고 내-외집단 관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및 행동 특징은 개인주의 가치가 우세할 때보다는 집단주의 가치가 우세할 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의 기초 분석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는 결과로부터도 추론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집단주의 가치는 건강한 집단 간 관계를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면 집단 간 맥락에서 단순히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단일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생산적인 시도가 아니며, 집단주의 가치가 집단 간 갈등해소 및 화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상승효과모형에 근거하여 남북 갈등 상황에서 집단주의 가치가 유발하는 심리 및 행동특징은 개인의 자기개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독립적 자기개념은 개인이 관여된 사회관계나 환경맥락과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개인의 자기-정의를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자신이 관여된 사회관계나 환경

243) Hoon-Seok Choi and Hyun Euh,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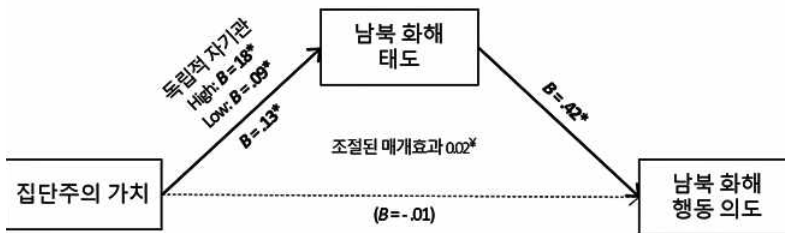
맥락이 자기-정의 및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방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²⁴⁴⁾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한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우세한 사람들에 비해서 해당 문제에 관한 맥락-독립적 사고(context-independent)를 하고 타인의 영향이나 집단 규범에 민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태도,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개념은 기존 관습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적 사고를 보이고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변화와 혁신에 수용적인 태도를 촉진한다.²⁴⁵⁾ 이를 집단 간 갈등 상황에 적용하면, 독립적 자기가 우세한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가 우세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내-외집단 갈등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집단 간 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강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앞서 논의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효과는 독립적 자기개념과 조합되었을 때 순기능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상승효과가 유발되어 집단 간 갈등해소 및 화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44) Susan Cross, Erin Hardin, and Berna Gercek-Swing, "The What, How, Why, and Where of Self-Construal," pp. 142~179.

245) Jack Goncalo and Barry Staw,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Group Creativ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100, no. 1 (2006), pp. 96~109; Ulrich Kühnen, Bettina Hannover, and Benjamin Schubert, "The Semantic-Procedural Interface Model of the Self: The Role of Self-Knowledge for Context-Dependent versus Context-Independent Mode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0, no. 3 (2001), pp. 397~409; Shinobu Kitayama, Sean Duffy, Yukiko Uchida, "Self as Cultural Mode of Being," in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eds. Shinobu Kitayama and Dov Cohen (New York: Guilford Press, 2010), pp. 136~17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지향성이 남북화해 태도를 매개로 남북화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개인의 자기개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model 8)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독립변수, 남북화해 태도는 매개변수, 남북화해 행동의도는 준거변수에 해당하며, 독립적 자기개념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남북화해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상정하였다. 즉, 집단주의 가치-남북화해 태도-남북화해 행동의도의 매개경로를 조절변수인 독립적 자기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7〉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남북화해 태도, 행동의도 간 매개경로에서 자기개념에 따른 조절효과



독립적 자기관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High	집단주의 가치 → 남북화해 태도 → 남북화해 행동의도	.04 ^a	0.01	0.06
Low	집단주의 가치 → 남북화해 태도 → 남북화해 행동의도	.07 ^a	0.05	0.11

- a. ^ap < .05 (two-tailed)
b. ()는 '남북화해태도'를 통제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함
c. *는 신뢰구간 95% 범위에서 효과가 유의했음을 나타냄

분석 결과, 〈그림 III-7〉에서 보는 대로 집단주의 가치는 남북화해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도 높았다. 그리고 남북화해 태도

가 집단주의 가치-남북화해 행동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주의 가치는 남북화해 태도를 통해서 행동의도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예상과 일관되게 이러한 관계는 사람들의 우세한 자기개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의 효과는 독립적 자기개념 점수가 높은 경우(회귀계수=.18) 낮을 때보다(회귀계수=.09) 더 강하게 나타났다.

라. 종합논의

본 장에서는 집단 간 갈등 및 갈등해소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알아보고, 화해 태도와 화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응답자들의 사회정체성과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착안하여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 그리고 각각의 정체성에 연합된 불확실성을 모두 측정하여 사회정체성-사회정체성 불확실성-화해 태도 및 화해 행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집단 간 심리 및 행동에서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의 역할을 강조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기관에 따른 화해 태도와 화해 행동의도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화해 및 통일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정체성 관점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남북화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립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는 남북화해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나 적극적 지지태도가 마련되어있지 못하며, 특히 개인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수반하는 화해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미약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화해를 위한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화해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지식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서 남북화해에 관한 국민적 담론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남북화해에 따라서 기대되는 구체적인 긍정적 결과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의 예측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먼저 사회정체성에 대한 분석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 정체성을 모두 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가지 사회정체성 중 하위위계에 위치하는 남한 정체성이 상위위계에 위치한 한민족 정체성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추세와 일관되게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높은 반면,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낮았다. 또한 심층 분석 결과로부터 하위위계에 위치한 남한 정체성이 강력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반면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낮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파편화, 과도한 개인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화해를 위한 정책과

정부 주도의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민족공동체와 공동 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응답자들의 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화해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가치 지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다수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는지에 해당하는 자기개념에서는 개인의 고유성 및 개체성을 강조하는 독립적 자기개념과 타인과의 유사성 및 연결성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거의 동일한 빈도로 관찰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가치지향성에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집단주의 가치를 신봉하지만 개인의 자기인식에서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가치지향성과 자기개념에 따른 응답자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에는 집단주의 가치를 신봉하면서 독립적 자기관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주의 가치를 신봉하면서 독립적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이 남북 화해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치 지향성과 자기관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중요한 점은 심층 분석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성취와 번영보다는 집단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는 사람들일수록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남북화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의도의 조형이 시급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구화와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심층 분석 결과에서 관찰된 또 다른 주요 결과는 응답자들의 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일련의 연구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독립적 자기개념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비해 자기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행위를 실행하는 상황맥락이나 집단범주의 영향을 덜 받으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는 자기인식 및 정의에 있어서 고유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장기간 지속되어온 갈등 상황에 고착되지 않고 집단 간 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방향의 신념과 태도가 조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심층 분석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개념은 남북화해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적 방향으로 상승효과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관이 건전한 방향으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향의 문화사회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끝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화해 행동의도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위들을 실행할 의도를 조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화해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태도를 확고히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남북화해의 필요성과 남북화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결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북화해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남북화해 및 통일에 관한 담론에서는 소위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논의들은 남북화해와 통일을 ‘경제위기’, ‘통일 후 사회문화

통합문제’ 등 다분히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남북화해와 통일이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화해와 통일에 따른 구체적인 득과 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화해 및 통일에 관한 학술 및 실용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 등 정책 입안 시 국민들이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일방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북지원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가 대체로 중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의 남북화해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는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태도가 우세하고 대북 태도 역시 유화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 국민들의 대북 태도 역시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면 국민 여론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북한과 남북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정권의 대북정책의 변화 폭도 줄어들 수 있다.²⁴⁶⁾

둘째, 국민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민족공동체와 공동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에 ‘한민족공동체’라는 분명한 정신 표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이질감 해소

246) 이러한 시사점을 제안한 익명의 토론자에게 감사한다.

를 위한 일련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 통일교육 및 사회 통일교육 등 기존 통일교육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심각한 인종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유관분야의 전문 학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인종편견과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방송과 문화산업에 도입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주의 가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방향으로 문화변동의 축이 기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미래 통일사회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현재 사회의 중심축인 고학력 전문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의 개인주의화는 필연적으로 국가나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관심이나 심리적 몰입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래 통일한국에 요구되는 새로운 문화상을 정립하고, 가정과 학교,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 재설계 및 사회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IV

심층 분석: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이민규 (경상대학교) ·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1. 성격유형에 따른 평화와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 탐색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비교

이민규(경상대학교)

핵심 요약

주요결과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해 성격 5요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네 가지 유형의 군집이 추출됨.
- 성격군집에 따라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협력 또는 군사력),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견됨.
- 유사한 성격프로파일이라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협력 또는 군사력)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관찰됨.

정책적 시사점

- 성격요인이 한반도의 전쟁, 평화, 평화 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됨.
- 전쟁 및 평화에 대한 교육이 획일화된 방식을 벗어나 성격유형집단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을 다루는 개인의 역량개발에 있어 성격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남한주민 집단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전쟁과 평화 및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격 5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남·북한 각각 네 가지 유형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으며, 남·북 유사 프로파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군집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등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남한주민 집단에서 군집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등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세 번째, 남·북한 각각에서 유사한 프로파일을 보인 군집을 묶어 유사 군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최상형 집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보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등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네 번째, 평범형 집단은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등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남북한 집단 각각에서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전쟁과 평화 및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남북한 집단의 차이가 아닌 성격요인에 따른 것을 것이며, 따라서 성격요인은 한반도의 전쟁 및 평화와 평화 달성 방식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성격이 한반도의 전쟁 및 평화와 평화 달성 방식의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한반도의 전쟁, 평화에 대한 교육을 성격유형집단에 따라 차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세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을 다루는 인사선발 또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실무자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연구 배경

2018년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협력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던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희망과 경계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적대국 간 평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희망과 경계의 양가적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²⁴⁷⁾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핵심적 과제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 간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비난, 강압, 협박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결국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되며 대북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제2장의 기초 분석과는 달리 본 장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에 초점을 두었다.

247) Herbert C. Kelman,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Process and its Vicissitudes: Insights from Attitud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no. 4 (2007), pp. 289~291.

1990년 중반부터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9월 통일부 기준 입국자 수는 32,741명이며,²⁴⁸⁾ 물리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평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평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태도와 평화 달성 방법을 달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한주민 집단의 성격특성에 따른 평화 및 평화 달성 방법에 대한 태도를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폭력의 부재’로 이해되지만 평화는 국제차원에서 정의로운 인류공동체, 사회적 차원에서 구조적 폭력의 제거, 개인적 차원에서 마음의 고요까지 망라한다.²⁴⁹⁾ 북한사회에서 억압과 빈곤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성격은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⁵⁰⁾ 또한 성격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안정적인 개인의 행동양식들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

24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18.10.15.).

249) 송인경, “도덕과 평화감수성 교육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 3~5.

250) Jerry Phares,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Charles E. Merrill, 1988), pp. 1~5.

국가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섯 가지의 상위 성격 특질(trait)을 보인다는 것이 관찰된 후, 이 다섯 가지 특질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유형이라는 의미로 5요인 모형(five-factor model)이 개발되었다.²⁵¹⁾ ‘성격 5요인’이라고 불리는 이 다섯 가지 특질에는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경험에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 포함된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것이 특성이다. 친화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우호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정도이다. 즉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성실성은 양심을 따르는 정도와 부지런하고 꼼꼼한 정도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며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이다. 정서적 안정성은 반대 극단인 신경증(neuroticism)으로도 불리는데,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극, 변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하고, 줄여서 개방성으로도 많이 불린다.²⁵²⁾

기본 성격 특질은 유전적인 영향을 토대로 형성된다.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적 기질(disposition)을 바

251) Robert R. McCrae and Oliver P. John,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pp. 175~215.

252) 이해련, “성격 5요인 모형(Big Five)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 2~10.

탕으로 한다.²⁵³⁾ 따라서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 사람의 나이, 출생지, 거주지,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정환경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보다도 먼저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²⁵⁴⁾과 권위주의²⁵⁵⁾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즉, 기질을 바탕으로 한 기본 성격 특질이 개인의 정치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성격이 전쟁과 평화 관련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²⁵⁶⁾ 구체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가 처벌성과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 처벌성과 책임감은 각각 성격요인의 외향성 및 낮은 신경증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이는 외향성과 신경증과 같은 성격요인이 전쟁 및 평화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lumberg 등은 우호성과 개방성이 전쟁에 대한 태도와 부적으로 상관되고 평화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²⁵⁷⁾

특히 우호성은 분쟁 상황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심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⁵⁸⁾ 우호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분노나 짜증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발현되는 성격적 특성으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연대감, 공감에 낮은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 정서적 반응

253) Kerry L. Jang,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rn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pp. 577~591.

254) Gian V. Capara, Claudio Barbaranelli, and Philip G. Zimbardo, "Personality Profiles and Political Parties," pp. 175~197.

255) Bill E. Peterson, Kimberly A. Smirles, and Phyllis A. Wentworth,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pp. 1202~1216.

256) William Eckhardt and Norman Z. Alcock,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ar/Peace Attitudes," pp. 105~116.

257) Herbert H. Blumberg et al., "Personality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s Peace and War,"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9, no. 1 (2017), pp. 13~23.

258) William G. Graziano and Nancy Eisenberg,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pp. 795~824.

성이 높으며 도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강압이나 힘에 의한 압력에 대한 저항이 강하며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분쟁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²⁵⁹⁾

성격요인이 화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다른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에 앞서 기본적인 성격 특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각 종속변수에서 성격의 5요인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을 제외하고 난 후에도 우익권위주의 등의 다른 변인들이 실질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면 이들 독립변수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다른 독립변수가 성격요인을 넘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면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등 변인의 일정 부분이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기초 분석

성격요인에 따라 전쟁과 평화 및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John 등²⁶⁰⁾이 제안한 44문항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15문항(5점 척도)으로 간편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5요인 성격을 측정하였다.²⁶¹⁾ 측정된 성격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하여 4가지 군집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들에 할당되는 비계층적 군집화(k -means)를 사용하였는데, 군집의 수를 2, 3, 4, 5로 나누어 각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군집계수의 비율이 현저

259) William G. Graziano et al.,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 \times 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4 (2007), pp. 583~599.

260) Oliver P. John and Sanjay Srivastava,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pp. 102~138.

261)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pp. 47~65.

하게 변화하는 지점과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양호한 4개의 군집을 선택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거리측정 방법으로 자승화된 유클리디언 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를, 군집화 방법은 평균결합 방식(average linkage)을 사용하였다.

군집에 따른 각 성격 5요인 척도들의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성격요인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군집 분석을 한 후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태도와 평화에 대한 태도 및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분류된 군집들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 및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집하여 각각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 달성 방식(협력, 힘, 통일)을 측정하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및 평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평화 달성 방식(협력, 힘, 통일)에 대한 문항은 각각 5문항, 6문항, 8문항, 8문항,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9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군집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4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 5요인 자료를 군집분석 한 결과 유사한 특징을 소유하는 집단 내의 응집성과 집단 간의 분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총 4개의 군집을 추출하였다. 4개 군집의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군집들 간의 평균 점수를 변량분석 및 사후 비교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군집

군집 1(혼란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33%에 해당하는 132명의 자

료가 포함되었고, 성실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이 높으나 외향성이 낮은 집단으로 사교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 유형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집단으로 혼란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평범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18.75%에 해당하는 75명의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다섯 가지 성격요인들의 점수가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평범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성취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26%에 해당하는 104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성실성과 우호성 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경향, 책임감, 조직성, 성취 지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 군집을 성취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최상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22.25%에 해당하는 89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군집은 신경증 척도 점수가 낮고 다른 성격 척도들은 모두 점수가 높아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와 긴장상태를 잘 극복하고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상상력, 미적 감수성, 내면의 느낌에 대한 수용성, 지적 호기심,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 긍정 정서를 가지는 경향성, 친밀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 군집을 최상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IV-1〉 북한이탈주민의 군집별 성격 5요인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척도	군집별 평균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혼란형 군집 1 ($n=132$)	평범형 군집 2 ($n=75$)	성취형 군집 3 ($n=104$)	최상형 군집 4 ($n=89$)			
성실성	4.26(.53)	3.06(.68)	3.94(.46)	4.44(.51)	105.58	.000	1=4)3)2
신경증	3.92(.47)	3.12(.73)	2.59(.69)	2.47(.61)	132.51	.000	1)2)3=4
우호성	4.27(.61)	2.95(.56)	4.00(.52)	4.36(.56)	107.67	.000	4=1)3)2
개방성	3.94(.59)	2.89(.56)	3.10(.69)	4.37(.51)	123.18	.000	4)1)3=2
외향성	2.94(.63)	2.78(.53)	2.50(.65)	3.45(.78)	34.50	.000	4)1=2)3

(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전쟁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2>에 제시하였다.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가지 문항 중 성격 군집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었다. 군집 1(혼란형)의 평균은 5.86(SD=3.28), 군집 2(평범형)의 평균은 6.19(SD=2.93), 군집 3(성취형)의 평균은 6.98(SD= 2.84), 군집 4(최상형)의 평균은 6.98(SD=2.93)로 나타났으며 군집 3(성취형)이 군집 1(혼란형)보다, 군집 4(최상형)가 군집 1(혼란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i>df_b/df_w</i>	<i>MS_b/MS_w</i>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3.26 (2.85)	3.27 (2.69)	2.90 (2.47)	3.34 (3.01)	3/996	3.83/ 7.64	.50	.682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4.83 (2.36)	4.13 (1.83)	4.28 (2.22)	4.46 (2.60)	3/996	9.91/ 5.27	1.88	.132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5.86 (3.28)	6.19 (2.93)	6.98 (2.84)	6.98 (2.93)	3/996	35.26/ 9.17	3.85	.010	3)1, 4)1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6.14 (3.19)	6.77 (2.77)	7.02 (2.91)	6.98 (2.99)	3/996	19.47/ 8.98	2.17	.091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6.14 (3.24)	6.91 (2.67)	7.09 (2.81)	7.00 (3.05)	3/996	22.46/ 8.92	2.52	.058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91 (3.04)	3.83 (2.71)	3.26 (2.69)	3.63 (3.14)	3/996	9.01/ 8.49	1.06	.366	

(다)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3>에 제시하였다.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3개 문항이었다. 먼저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군집 3(성취형)의 동의수준이 군집 2(평범형)의 동의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에 대해서는 군집 1(혼란형)의 평균(5.68)이 군집 2(평범형)의 평균(4.55)보다 유의하게 높다.

<표 IV-3>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8.13 (1.80)	7.48 (1.97)	8.20 (1.44)	8.12 (1.74)	3/396	9.27/ 3.01	3.08	.027	3)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68 (2.59)	4.55 (2.54)	5.01 (2.51)	5.28 (2.86)	3/396	22.33/6.88	3.24	.022	1)2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4.35 (3.18)	4.04 (3.00)	3.48 (2.86)	4.08 (3.29)	3/396	14.91/9.56	1.56	.199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7.93 (1.96)	7.25 (2.30)	7.88 (1.91)	7.81 (2.12)	3/396	8.25/ 4.21	1.96	.119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8.05 (1.71)	7.73 (1.83)	8.00 (1.64)	7.82 (1.95)	3/396	2.16/ 3.14	.69	.560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5.93 (3.08)	5.92 (2.75)	4.67 (2.81)	5.27 (3.11)	3/396	37.62/8.74	4.31	.005	1)3, 2)3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에서 군집 1(혼란형)의 평균은 5.93(SD=3.08), 군집 2(평범형)의 평균은 5.92(SD=2.75), 군집 3(성취형)의 평균은 4.67(SD=2.81), 군집 4(최상형)의 평균은 5.27(SD=3.11)로 나타났다.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2(평범형)가 군집 3(성취형)보다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라) 성격 군집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협력을 통한 달성과 관련된 태도와 인식을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4>에 제시하였다. 8개 문항 중 통계적으로 군집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2개 문항이었다.

첫 번째 문항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로 군집 1(혼란형)의 평균은 7.44(SD=1.99), 군집 2(평범형)의 평균은 7.01(SD=2.08), 군집 3(성취형)의 평균은 6.41(SD=2.60), 군집 4(최상형)의 평균은 7.26(SD=2.32)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i>df_v/df_w</i>	<i>MS_v/MS_w</i>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7.54 (2.25)	6.95 (2.22)	7.06 (2.49)	7.01 (2.62)	3/396	8.36/ 5.73	1.46	.22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7.50 (2.09)	6.97 (2.01)	7.38 (2.10)	7.22 (2.56)	3/396	4.83/ 4.80	1.01	.389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70 (2.78)	4.65 (2.46)	5.53 (2.72)	5.07 (2.94)	3/396	20.77/7.54	2.76	.042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7.44 (1.99)	7.01 (2.08)	6.41 (2.60)	7.26 (2.32)	3/396	22.04/5.07	4.35	.005	1)3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6.37 (2.58)	5.41 (2.50)	5.77 (2.52)	6.20 (2.79)	3/396	17.73/6.75	2.63	.050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5.14 (2.90)	5.05 (2.24)	4.94 (2.78)	4.79 (3.09)	3/396	2.35/ 7.84	.30	.826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7.09 (2.38)	7.07 (2.20)	7.46 (2.14)	6.96 (2.65)	3/396	4.82/ 5.52	.87	.455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7.21 (2.12)	5.99 (2.59)	7.02 (2.32)	6.53 (2.87)	3/396	27.82/5.97	4.66	.003	1)2 3)2

군집 간 차이를 보인 두 번째 문항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로 군집 1(혼란형)의 평균은 7.21(SD=2.12), 군집 2(평범형)의 평균은 5.99(SD=2.59), 군집 3(성취형)의 평균은 7.02(SD=2.32), 군집 4(최상형)의 평균은 6.53(SD=2.87)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혼란형)이 군집 2(평범형)보다, 군집 3(성취형)이 군집 2(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성격 군집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8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5>에 제시하였다. 8개 문항 중 한 개의 문항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에서 군집 1(혼란형)의 평균은 4.83(SD=3.04), 군집 2(평범형)의 평균은 3.97(SD=2.38), 군집 3(성취형)의 평균은 3.69(SD=2.71), 군집 4(최상형)의 평균은 3.33(SD=2.77)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1(혼란형)이 군집 4(최상형)보다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i>df_v/df_w</i>	<i>MS_v/MS_w</i>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5.73 (2.96)	5.37 (2.78)	5.21 (3.07)	5.16 (3.26)	3/396	7.71/ 9.13	.84	.470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6.31 (2.45)	5.44 (2.55)	6.18 (2.60)	5.58 (3.05)	3/396	18.07/7.02	2.58	.054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6.14 (2.71)	5.91 (2.46)	6.12 (2.69)	5.69 (3.08)	3/396	4.41/ 7.55	.59	.625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45 (2.71)	4.65 (2.37)	5.40 (2.70)	4.49 (3.06)	3/396	24.28/7.45	3.26	.022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4.83 (3.04)	3.97 (2.38)	3.69 (2.71)	3.33 (2.77)	3/396	47.13/7.72	6.11	.000	1)3, 1)4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5.54 (2.89)	5.41 (2.49)	5.13 (2.81)	4.88 (3.17)	3/396	8.90/ 8.19	1.09	.35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78 (2.90)	5.89 (2.50)	6.03 (2.64)	5.79 (3.14)	3/396	1.45/ 7.96	.18	.909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7.25 (2.75)	7.15 (2.25)	7.58 (2.45)	7.26 (2.62)	3/396	3.37/ 6.52	.52	.671	

(바) 성격 군집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14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6>에 제시하였다. 14개 문항 중 군집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6개 문항이었다.

<표 IV-6>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별 통일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4.84 (.55)	4.59 (.82)	4.83 (.53)	4.83 (.48)	3/396	1.25/ .35	3.54	.015	1)2 3)2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2.67 (1.55)	2.47 (1.30)	2.16 (1.13)	2.15 (1.35)	3/396	7.05/ 1.94	3.63	.013	1)3 1)4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2.59 (1.50)	2.43 (1.23)	2.14 (1.31)	2.12 (1.42)	3/396	5.68/ 1.93	2.95	.033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42 (1.48)	3.52 (1.31)	3.05 (1.40)	3.27 (1.59)	3/396	4.03/ 2.12	1.90	.129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4.35 (.91)	4.08 (.85)	4.21 (.86)	4.33 (.99)	3/396	1.36/ .81	1.66	.172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4.70 (.665)	4.48 (.80)	4.68 (.60)	4.61 (.85)	3/396	.87/ .52	1.69	.170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4.21 (1.09)	4.12 (1.00)	4.16 (1.12)	4.25 (1.16)	3/396	.27/ 1.20	.22	.882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2.69 (1.46)	2.53 (1.22)	2.33 (1.33)	2.43 (1.39)	3/396	2.80/ 1.87	1.49	.216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0 (1.44)	3.08 (1.25)	2.85 (1.39)	2.91 (1.50)	3/396	.95/ 1.98	.48	.696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4.08 (1.30)	4.00 (1.17)	4.16 (1.22)	3.98 (1.46)	3/396	.67/ 1.66	.40	.752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4.40 (.98)	4.08 (.88)	4.47 (.82)	4.48 (.83)	3/396	2.87/ .79	3.63	.013	3)2, 4)2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17 (1.50)	3.44 (1.26)	2.88 (1.40)	2.81 (1.58)	3/396	7.11/ 2.07	3.44	.017	2)3, 2)4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 상관없다.	2.41 (1.49)	2.39 (1.26)	1.83 (1.16)	1.94 (1.12)	3/396	9.23/ 1.70	5.45	.001	1)3, 2)3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2.75 (1.44)	2.67 (1.21)	2.22 (1.34)	2.04 (1.34)	3/396	11.80/ 1.83	6.46	.000	1)3, 1)4, 2)4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에서 군집 1(혼란형)과 군집 3(성취형)이 군집 2(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위험만 없다

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지지도는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1(혼란형)이 군집 4(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에서는 군집 3(성취형)이 군집 2(평범형)보다, 군집 4(최상형)가 군집 2(평범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에서는 군집 2(평범형)가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2(평범형)가 군집 4(최상형)보다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에서는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2(평범형)가 군집 3(성취형)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두렵다”에 대해서는 군집 1(혼란형)이 군집 3(성취형)보다, 군집 1(혼란형)이 군집 4(최상형)보다, 군집 2(평범형)가 군집 4(최상형)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2) 남한주민에 대한 군집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1,000명의 남한주민의 성격 5요인 자료를 군집분석 한 결과 유사한 특징을 소유하는 집단 내의 응집성과 집단 간의 분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총 4개의 군집을 추출하였다. 4개 군집의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는 <표 IV-7>에 제시하였다. 군집들 간의 평균 점수를 변량분석 및 사후 비교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군집

군집 1(최상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21%에 해당하는 210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남한주민 집단의 군집 1(최상형)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군집 4(안정형)와 유사한 프로파일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군집을 최상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고립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22.2%에 해당하는 222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군집 2(고립형)는 개방성과 외향성이 낮고, 나머지는 평균 범주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변화나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고립형/현실유지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평범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32.7%에 해당하는 327명의 자료가 포함되어있고, 다섯 가지 성격요인들의 점수가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군집 2(고립형)와 유사한 프로파일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평범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안정형)에는 전체 응답자 중 24.1%에 해당하는 241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군집은 신경증 척도 점수가 낮고 다른 성격 척도들은 모두 평균범주에 속해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군집을 안정형 성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IV-7〉 남한주민의 군집별 성격 5요인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척도	군집별 평균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최상형 군집 1 ($n=132$)	고립형 군집 2 ($n=75$)	평범형 군집 3 ($n=104$)	안정형 군집 4 ($n=89$)			
성실성	4.09(.46)	3.51(.55)	3.25(.50)	3.71(.50)	127.40	.000	1)4)2)3
신경증	2.08(.53)	2.87(.49)	3.08(.49)	1.97(.40)	355.77	.000	3)2)1=4
우호성	4.01(.46)	3.57(.54)	3.34(.48)	3.39(.42)	94.35	.000	1)2)3=4
개방성	3.86(.44)	2.62(.54)	3.33(.50)	2.95(.42)	271.14	.000	1)3)4)2
외향성	3.47(.60)	2.35(.41)	3.22(.41)	2.95(.46)	233.74	.000	1)3)4)2

(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8>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성격유형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컸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점수를 보면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의 동의정도는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 군집 2(고립형), 군집 4(안정형)보다 높았으며, 군집 4(안정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문항인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에서는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 군집 4(안정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i>df_v/df_w</i>	<i>MS_v/MS_w</i>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3.58 (2.41)	4.13 (2.22)	4.89 (2.06)	4.10 (2.30)	3/996	73.39/ 4.97	15.77	.000	3)1, 3)2, 3)4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4.71 (2.41)	4.76 (1.94)	5.21 (1.79)	4.44 (1.91)	3/996	29.39/ 3.97	7.40	.000	3)1, 3)4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7.39 (1.73)	7.02 (1.63)	6.43 (1.65)	6.82 (1.77)	3/996	41.70/ 2.86	14.59	.000	1)3, 1)4, 2)3, 4)3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7.53 (1.68)	7.19 (1.54)	6.37 (1.58)	6.98 (1.67)	3/996	64.52/ 2.61	24.69	.000	1)3, 1)4, 2)3, 4)3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7.44 (1.62)	7.04 (1.55)	6.36 (1.61)	6.92 (1.60)	3/996	53.24/ 2.55	20.95	.000	1)3, 1)4, 2)3, 4)3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44 (2.30)	3.93 (1.97)	4.71 (1.92)	3.95 (2.07)	3/996	74.97/ 4.22	17.79	.000	3)1, 3)2, 3)4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에 대한 분석 결과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 군집 4(안정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전쟁 정당화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 군집 4(안정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에서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 군집 4(안정형)보다, 군집 2(고립형)는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는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에 대한 지지도는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 군집 2(고립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9>에 제시하였다.

<표 IV-9>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df_b/df_w	MS_b/MS_w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7.28 (1.39)	6.99 (1.27)	6.73 (1.22)	7.07 (1.30)	3/996	13.76/ 1.66	8.31	.000	1)3, 4)3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48 (2.25)	5.36 (1.91)	5.66 (1.76)	5.32 (1.92)	3/996	6.98/ 3.77	1.85	.137	

	군집 <i>M(SD)</i>				<i>df_b/df_w</i>	<i>MS_b/MS_w</i>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이다.	3.69 (2.31)	3.87 (1.97)	4.85 (1.98)	4.12 (2.12)	3/996	72.91/4.35	16.78	.000	3)1, 3)2, 3)4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7.18 (1.44)	6.96 (1.36)	6.57 (1.36)	6.92 (1.44)	3/996	17.03/ 1.95	8.75	.000	1)3, 2)3, 4)3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6.40 (1.87)	6.19 (1.60)	6.27 (1.32)	6.08 (1.73)	3/996	4.23/ 2.59	1.63	.181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6.41 (1.40)	6.34 (1.45)	6.02 (1.32)	6.29 (1.31)	3/996	8.10/ 1.86	4.36	.005	1)3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 문항은 4개였다. 먼저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의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범형 군집이 다른 세 집단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다.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에 대해 군집 1(최상형)의 동의 정도가 군집 3(평범형)의 동의 정도보다, 군집 2(고립형)의 동의 정도가 군집 3(평범형)의 동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격 군집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태도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을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8개 문항 중 군집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5개였다.

<표 IV-10>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7.14 (1.42)	6.91 (1.17)	6.51 (1.28)	6.70 (1.20)	3/996	19.14/1.61	11.92	.000	1)3, 1)4, 2)3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6.91 (1.44)	6.67 (1.31)	6.33 (1.33)	6.71 (1.41)	3/996	16.01/1.89	8.49	.000	1)3, 2)3, 4)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31 (2.18)	5.11 (1.74)	5.30 (1.61)	5.29 (1.91)	3/996	2.15 /3.39	.632	.59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6.33 (1.58)	5.89 (1.62)	5.87 (1.37)	5.80 (1.46)	3/996	12.83/2.24	5.72	.001	1)2, 1)3, 1)4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4.56 (2.14)	5.05 (1.70)	5.39 (1.62)	5.00 (1.79)	3/996	29.55/3.23	9.15	.000	2)1, 3)1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3.58 (2.11)	4.23 (1.75)	4.84 (1.78)	4.32 (1.81)	3/996	69.26/3.43	20.17	.000	3)2=4)1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6.30 (1.63)	6.28 (1.47)	6.07 (1.26)	6.09 (1.44)	3/996	3.65 /2.05	1.78	.150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85 (1.74)	5.91 (1.43)	5.81 (1.30)	5.60 (1.59)	3/996	4.31 /2.26	1.91	.12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에서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 군집 4(안정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에서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를 지지하는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2(고립형), 군집 3(평범형), 군집 4(안정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군집 2(고립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에 대한 분석 결과 군집 3(평범형)의 동의 정도가 군집2(고립형)와 군집 4(안정형)의 동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군집 2(고립형)와 군집 4(안정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성격 군집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 방식에 대한 태도

군집에 따른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8개 문항 중 한 문항을 제외하고 7개 문항에서 군집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 IV-11〉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4.88 (2.12)	5.36 (2.02)	5.70 (1.79)	5.35 (2.13)	3/996	28.67/ 3.99	7.19	.000	3)1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4 (2.17)	5.49 (1.78)	5.47 (1.55)	5.16 (1.79)	3/996	13.03/3.25	4.01	.008	1)4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4.96 (2.35)	4.85 (1.99)	5.39 (1.65)	4.87 (1.95)	3/996	18.69/ 3.84	4.86	.002	3)2,3)4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5 (1.78)	5.50 (1.49)	5.40 (1.51)	5.18 (1.65)	3/996	12.61/2.56	4.93	.002	1)4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4.27 (2.07)	5.07 (1.83)	5.14 (1.68)	5.14 (1.78)	3/996	40.22/3.32	12.11	.000	2)1, 3)1, 4)1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4.19 (1.95)	5.23 (1.59)	5.35 (1.47)	4.91 (1.64)	3/996	63.45/ 2.72	23.34	.000	2)1, 3)1, 4)1, 3)4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15 (2.16)	5.35 (1.89)	5.40 (1.59)	5.44 (1.79)	3/996	3.64/ 3.36	1.08	.356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6.76 (1.71)	6.77 (1.55)	6.16 (1.63)	6.47 (1.68)	3/396	22.77/ 2.69	8.45	.000	1)3,2)3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에서는

군집 3(평범형)이 군집 2(고립형), 군집 4(안정형)보다 군사력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군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에 대한 지지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4(안정형)보다 높았으며,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에 대해서는 군집 2(고립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군집 3(평범형)이 군집 1(최상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에 대한 분석 결과 군집 2(고립형), 군집 3(평범형), 군집 4는 군집 1(최상형)보다 군집 3(평범형)은 군집 4(안정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2(고립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바) 성격 군집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12>에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군집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2> 남한주민의 성격 군집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군집 <i>M(SD)</i>				df_b/df_w	MS_b/MS_w	<i>F</i>	<i>p</i>	사후검증 <i>p</i>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3.76 (.96)	3.73 (.96)	3.68 (.85)	3.60 (.95)	3/996	1.10/ .85	1.30	.274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3.27 (1.18)	3.37 (1.04)	3.16 (1.06)	3.51 (1.09)	3/996	6.21/ 1.18	5.25	.001	4)3

	군집 $M(SD)$				df_b/df_w	MS_b/MS_w	F	p	사후검증 $p < .05$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3.12 (1.02)	3.00 (1.02)	3.10 (.86)	3.17 (.85)	3/996	1.18/ .87	1.36	.255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69 (.96)	3.63 (.95)	3.51 (.90)	3.77 (.84)	3/996	3.49/ .83	4.22	.006	4)3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43 (.95)	3.15 (.91)	3.27 (.90)	3.08 (.98)	3/996	5.23/ .87	6.02	.000	1)2, 1)4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3.03 (.97)	2.88 (.96)	3.04 (.94)	2.91 (.92)	3/996	1.65/ .90	1.84	.139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3.58 (.93)	3.39 (1.02)	3.25 (.97)	3.37 (.94)	3/996	4.62/ .93	4.97	.002	1)3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3.25 (.98)	3.50 (.85)	3.39 (.82)	3.56 (.85)	3/996	3.96/ .76	5.24	.001	2)1, 4)1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9 (1.02)	3.64 (.91)	3.51 (.83)	3.68 (.80)	3/996	3.96/ .78	5.08	.002	2)1,4)1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3.27 (.99)	3.33 (1.01)	3.31 (0.95)	3.20 (1.10)	3/996	.90/ 1.02	.89	.451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3.48 (.91)	3.29 (.95)	3.26 (.90)	3.22 (.85)	3/996	2.84/ .81	3.51	.015	1)3, 1)4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30 (.93)	3.38 (.90)	3.30 (.89)	3.43 (.83)	3/996	.98/ .79	1.25	.292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3.10 (1.01)	3.33 (.93)	3.19 (.83)	3.32 (.87)	3/996	2.82/ .82	3.46	.016	2)1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2.71 (.99)	2.92 (.98)	3.01 (.87)	2.73 (.94)	3/996	5.52/ .88	6.29	.000	3)1,3)4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에 대해서는 군집 4(안정형)가 군집 3(평범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에 대해서 안정형(군집 4)의 동의 정도가 평범형(군집 3)의 동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2(고립형)보다, 군집 1(최상형)이 군집 4(안정형)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에 대해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의 명제에 대해서는 군집 2(고립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군집 4(안정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군집 2(고립형)의 동의 정도가 군집 1(최상형)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으며 군집 4(안정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에 대해서는 군집 1(최상형)이 군집 3(평범형)보다, 군집 1(최상형)이 군집 4(안정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 상관 없다”에서는 군집 2(고립형)가 군집 1(최상형)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군집 3(평범형)이 군집 4(안정형)보다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 심층 분석

심층 분석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군집 중 공통적으로 관찰된 최상형 군집과 평범형 군집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최상형 성격유형의 차이

(가)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표 IV-13〉에 제시한 대로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 문항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가 관찰된 문항은 없었다.

〈표 IV-1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3.58(2.41)	3.34(3.01)	.68	.499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4.71(2.41)	4.46(2.60)	.80	.426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7.39(1.73)	6.98(2.93)	1.24	.217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7.53(1.69)	6.98(2.99)	1.63	.105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7.44(1.62)	7.00(3.05)	1.30	.197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44(2.30)	3.63(3.14)	-.51	.614

(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남북 최상형 성격유형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남한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

〈표 IV-14〉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7.28(1.38)	8.12(1.74)	-4.45	.0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48(2.25)	5.28(2.86)	.59	.558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이다.	3.69(2.31)	4.08(3.29)	-1.02	.308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7.18(1.44)	7.81(2.12)	-2.56	.012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6.40(1.87)	7.82(1.95)	-5.91	.000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6.41(1.40)	5.27(3.11)	3.34	.00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남한주민의 동의 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남북 최상형 성격유형의 협력을 통한 달성과 관련된 태도와 인식을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5>에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는 최상형 북한이탈주민의 태도가 남한주민에 비해 평화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먼저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5>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7.14(1.42)	7.01(2.62)	.446	.656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6.91(1.44)	7.22(2.56)	-1.09	.277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31(2.18)	5.07(2.94)	.700	.485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6.33(1.58)	7.26(2.32)	-3.45	.001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4.56(2.14)	6.20(2.79)	-4.96	.000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3.58(2.11)	4.79(3.09)	-3.38	.001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6.30(1.63)	6.96(2.65)	-2.17	.032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85(1.74)	6.53(2.87)	-2.07	.041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수준이 남한주민의 동의 수준보다 높았다. 반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의 지지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지 수준보다 높았다.

(라)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남·북 최상형 성격유형의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8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16>에 제시하였다. 8개 문항 중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3개였다. 전반적으로 최상층 성격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상층 성격의 남한주민보다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긍정적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았다. 반면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남한주민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3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가깝게 남한주민의 동의 수준보다 높았다.

〈표 IV-16〉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4.88(2.12)	5.16(3.26)	-7.37	.462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4(2.17)	5.58(3.05)	.45	.657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4.96(2.35)	5.69(3.08)	-2.0	.048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5(1.78)	4.49(3.06)	3.63	.000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4.27(2.07)	3.33(2.77)	2.90	.004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4.19(1.95)	4.88(3.17)	-1.90	.06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15(2.16)	5.79(3.14)	-1.74	.084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6.76(1.71)	7.26(2.62)	-1.65	.102

(마) 통일에 대한 태도

최상형 성격유형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상형 성격유형의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모든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최상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3.76(.96)	4.83(.48)	-12.88	.000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3.27(1.18)	2.15(1.35)	7.23	.000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3.12(1.02)	2.12(1.42)	6.01	.000

	군집 $M(SD)$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69(.96)	3.27(1.59)	2.32	.022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43(.95)	4.33(.99)	-7.33	.000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3.03(.97)	4.61(.85)	-14.07	.000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3.58(.93)	4.25(1.16)	-5.30	.000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3.25(.98)	2.43(1.39)	5.09	.000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9(1.02)	2.91(1.49)	2.78	.006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3.27(.99)	3.98(1.46)	-4.17	.000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3.48(.91)	4.48(.83)	-9.00	.000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30(.93)	2.81(1.58)	2.74	.007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 상관없다.	3.10(1.01)	1.94(1.19)	8.55	.000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2.71(.99)	2.04(1.34)	4.25	.000

(2) 평범형 성격유형의 차이

(가)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남·북 평범형 성격유형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묻는 6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8>에 제시하였다. 최상형 성격유형에서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평범형 성격유형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전쟁에 대해 긍정적이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8〉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전쟁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4.89(2.06)	3.27(2.69)	4.90	.000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5.21(1.79)	4.13(1.83)	4.70	.000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6.43(1.65)	6.19(2.93)	.70	.487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6.37(1.58)	6.77(2.77)	-1.22	.228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6.36(1.61)	6.91(2.67)	-1.69	.095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4.71(1.92)	3.83(2.71)	2.68	.009

(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최상형 성격유형에서와 같이 평범형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에 대한 태도가 평범형 남한주민의 평화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관찰되었다(〈표 IV-19〉).

(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남북 평범형 성격유형의 협력을 통한 달성과 관련된 태도와 인식을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20〉에 제시하였다. 평범형 성격 군집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표 IV-1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6.73(1.22)	7.48(1.97)	-3.16	.00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66(1.76)	4.55(2.54)	3.61	.000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이다.	4.85(1.98)	4.04(3.00)	2.23	.028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6.57(1.36)	7.25(2.30)	-2.46	.016
한반도 평화는 우리사회에 최고의 삶의 질을 가져다준다.	6.27(1.32)	7.73(1.83)	-6.56	.000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6.02(1.32)	5.92(2.75)	.32	.749

〈표 IV-2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6.51(1.28)	6.95(2.22)	-1.65	.10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6.33(1.33)	6.97(2.01)	-2.66	.009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30(1.61)	4.65(2.46)	2.17	.033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5.87(1.37)	7.01(2.08)	-4.55	.000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5.33(1.62)	5.41(2.50)	-0.72	.942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4.84(1.78)	5.05(2.24)	-.873	.383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6.07(1.26)	7.07(2.20)	-3.79	.000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81(1.30)	5.99(2.59)	-.573	.568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의 명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수준이 남한주민의 동의 수준보다 높았다.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정도는 남한주민의 동의 정도보다 낮았다. 또한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정도 역시 남한주민에 비해 높았다.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라)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 중 남북 평범형 성격유형의 힘을 통한 평화 달성에 대한 8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21>에 제시하였다. 최상형 성격유형과는 달리 평범형 성격유형은 다소 모순적인 반응이 관찰되었다. 평범형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더 호의적이었다.

〈표 IV-21〉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5.70(1.80)	5.37(2.80)	.97	.333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47(1.55)	5.44(2.55)	.11	.912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5.39(1.65)	5.91(2.46)	-1.74	.086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40(1.51)	4.65(2.37)	2.60	.011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5.14(1.68)	3.97(2.38)	4.04	.000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5.35(1.47)	5.41(2.49)	-.22	.829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40(1.59)	5.89(2.50)	-1.62	.108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6.16(1.63)	7.15(2.25)	-3.60	.001

(마)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14개 문항들의 평범형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22〉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이 남한주민의 응답보다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라. 소결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남한주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들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태도와 평화 달성 방법이 달라지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주민 집단 1,000명과 북한이탈주민 400명의 성격 5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네 가지 유형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 이후 남한주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 집단 간 비슷한 유형의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집단끼리 각각 최상형 집단과 평범형 집단으로 명명하여 남·북 최상형, 평범형 집단 간 전쟁 및 평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평화 달성 방식(협력, 힘, 통일)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IV-22>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범형 성격유형 간 통일에 대한 태도 차이

	군집 <i>M(SD)</i>		t	p
	남한 군집 1	북한 군집 4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3.68(.85)	4.59(.82)	-8.37	.000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3.16(1.06)	2.47(1.30)	4.28	.000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3.10(.86)	2.43(1.23)	4.47	.000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51(.90)	3.52(1.31)	-.08	.938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27(.90)	4.08(.85)	-7.11	.000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3.04(.94)	4.48(.80)	-12.30	.000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3.25(.97)	4.12(1.00)	-6.98	.000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3.39(.82)	2.53(1.22)	5.79	.000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1(.83)	3.08(1.25)	2.85	.005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3.31(.95)	4.00(1.17)	-5.39	.000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3.26(.90)	4.08(.88)	-7.17	.000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30(.89)	3.44(1.26)	-.90	.372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 상관없다.	3.20(.83)	2.39(1.26)	5.24	.000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3.01(.87)	2.67(1.21)	2.32	.023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군집 1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기에 혼란형 성격집단으로, 군집 2는 다섯 가지 성격요인들의 점수가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고 있었기에 평범형 성격집단으로, 군집 3은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경향, 책임감, 조직성, 성취 지향성이 높은 특성을 지녔기에 성취형 성격집단으로, 군집 4는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잘 극복하고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상상력, 미적 감수성, 내면의 느낌에 대한 수용성, 지적 호기심,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 긍정 정서를 가지는 경향성, 친밀성이 높은 특성을 지녔기에 최상형 성격집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힘을 통한 평화 달성,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의 각 군집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쟁에 대한 태도 1문항, 평화에 대한 태도 3문항,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3문항, 힘을 통한 평화 달성 2문항,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 6문항에서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과 군집은 <표 IV-23>에 제시되었다.

<표 IV-23>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성격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 요약

문항		성격군집 <i>M(SD)</i>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전쟁에 대한 태도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5.86 (3.28)	6.19 (2.93)	6.98 (2.84)	6.98 (2.93)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8.13 (1.80)	7.48 (1.97)	8.20 (1.44)	8.12 (1.74)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68 (2.59)	4.55 (2.54)	5.01 (2.51)	5.28 (2.86)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5.93 (3.08)	5.92 (2.75)	4.67 (2.81)	5.27 (3.11)

문항	성격군집 $M(SD)$				
	혼란형	평범형	성취형	최상형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70 (2.78)	4.65 (2.46)	5.53 (2.72)	5.07 (2.94)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7.44 (1.99)	7.01 (2.08)	6.41 (2.60)	7.26 (2.32)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7.21 (2.12)	5.99 (2.59)	7.02 (2.32)	6.53 (2.87)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45 (2.71)	4.65 (2.37)	5.40 (2.70)	4.49 (3.06)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4.83 (3.04)	3.97 (2.38)	3.69 (2.71)	3.33 (2.77)
통일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4.84 (.55)	4.59 (.82)	4.83 (.53)	4.83 (.48)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2.67 (1.55)	2.47 (1.30)	2.16 (1.13)	2.15 (1.35)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4.40 (.98)	4.08 (.88)	4.47 (.82)	4.48 (.83)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17 (1.50)	3.44 (1.26)	2.88 (1.40)	2.81 (1.58)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 상관없다.	2.41 (1.49)	2.39 (1.26)	1.83 (1.16)	1.94 (1.12)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2.75 (1.44)	2.67 (1.21)	2.22 (1.34)	2.04 (1.34)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군집 3, 4가 군집 1보다 더 높아,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2보다 더 높아, 한국의 최우선 과제가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2보다 더 높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 2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자신들의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ANOVA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사후분석을 통해서도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에 보다 더 높아,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이 남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 3이 군집 2보다 더 높아,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군사적 동맹에 기반 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ANOVA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사후분석을 통해서도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 4보다 더 높아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평화로운 남북관계 유지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는 문항에서 군집 1이 군집 2보다 더 높고, 군집 3이 군집 2보다 더 높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위협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서 군집 1이 군집 3과 군집 4보다

더 높아, 전쟁의 위험만 없을 경우에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는 문항에서 군집 3이 군집 2보다, 군집 4가 군집 2보다 더 높아, 통일의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는 문항에서 군집 2가 군집 3과 군집 4보다 더 높아, 자신이 통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는 문항에서 군집 1이 군집 3보다, 군집 2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분단 유지에 대해 상관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는 문항에서 군집 1이 군집 3, 군집 4보다, 군집 2가 군집 4보다 더 높아, 통일이 된 다음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집단에서 군집 1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군집 4와 유사한 프로파일 형태를 보였으므로 최상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개방성과 외향성이 낮아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녔기에 고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군집 2와 유사한 프로파일 형태를 보였으므로 평범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신경증이 낮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특성을 지녔기에 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힘을 통한 평화 달성,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의 각 군집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쟁에 대한 태도 6문항, 평화에 대한 태도 4문항,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5문항, 힘을

통한 평화 달성 7문항,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 9문항에서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과 군집은 <표 IV-24>에 제시되었다.

<표 IV-24> 남한주민 집단에서 성격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요약

문항	성격군집 $M(SD)$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전쟁에 대한 태도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3.58 (2.41)	4.13 (2.22)	4.89 (2.06)	4.10 (2.30)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4.71 (2.41)	4.76 (1.94)	5.21 (1.79)	4.44 (1.91)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 할 수 없다.	7.39 (1.73)	7.02 (1.63)	6.43 (1.65)	6.82 (1.77)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7.53 (1.68)	7.19 (1.54)	6.37 (1.58)	6.98 (1.67)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7.44 (1.62)	7.04 (1.55)	6.36 (1.61)	6.92 (1.60)
평화에 대한 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44 (2.30)	3.93 (1.97)	4.71 (1.92)	3.95 (2.07)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7.28 (1.39)	6.99 (1.27)	6.73 (1.22)	7.07 (1.30)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이다.	3.69 (2.31)	3.87 (1.97)	4.85 (1.98)	4.12 (2.12)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7.18 (1.44)	6.96 (1.36)	6.57 (1.36)	6.92 (1.44)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6.41 (1.40)	6.34 (1.45)	6.02 (1.32)	6.29 (1.31)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7.14 (1.42)	6.91 (1.17)	6.51 (1.28)	6.70 (1.2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6.91 (1.44)	6.67 (1.31)	6.33 (1.33)	6.71 (1.41)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6.33 (1.58)	5.89 (1.62)	5.87 (1.37)	5.80 (1.46)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4.56 (2.14)	5.05 (1.70)	5.39 (1.62)	5.00 (1.79)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3.58 (2.11)	4.23 (1.75)	4.84 (1.78)	4.32 (1.81)

	문항	성격군집 $M(SD)$			
		최상형	고립형	평범형	안정형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4.88 (2.12)	5.36 (2.02)	5.70 (1.79)	5.35 (2.13)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4 (2.17)	5.49 (1.78)	5.47 (1.55)	5.16 (1.79)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4.96 (2.35)	4.85 (1.99)	5.39 (1.65)	4.87 (1.95)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5 (1.78)	5.50 (1.49)	5.40 (1.51)	5.18 (1.65)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4.27 (2.07)	5.07 (1.83)	5.14 (1.68)	5.14 (1.78)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4.19 (1.95)	5.23 (1.59)	5.35 (1.47)	4.91 (1.64)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6.76 (1.71)	6.77 (1.55)	6.16 (1.63)	6.47 (1.68)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3.27 (1.18)	3.37 (1.04)	3.16 (1.06)	3.51 (1.09)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69 (.96)	3.63 (.95)	3.51 (.90)	3.77 (.84)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43 (.95)	3.15 (.91)	3.27 (.90)	3.08 (.98)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3.58 (.93)	3.39 (1.02)	3.25 (.97)	3.37 (.94)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3.25 (.98)	3.50 (.85)	3.39 (.82)	3.56 (.85)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9 (1.02)	3.64 (.91)	3.51 (.83)	3.68 (.80)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3.48 (.91)	3.29 (.95)	3.26 (.90)	3.22 (.85)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되도록 상관없다.	3.10 (1.01)	3.33 (.93)	3.19 (.83)	3.32 (.87)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	2.71 (.99)	2.92 (.98)	3.01 (.87)	2.73 (.94)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1, 2, 4보다 높아,

전쟁이 남북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1과 4보다 더 높아, 남북 간 전쟁의 결과의 긍정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과 4보다 더 높았으며, 군집 2와 4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과 4보다 더 높았으며, 군집 2와 4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전쟁이 서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보다 군집 1과 2와 3이 더 높았으며, 군집 4보다 1이 높아, 전쟁의 이익보다 전쟁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1과 2와 4보다 더 높아, 정의 실현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과 4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한국의 최우선 과제가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 2, 4보다 군집 3이 더 높아,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보다 군집

1, 2, 4가 더 높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보다 군집 1이 더 높아,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 4보다 더 높았으며, 군집 2가 3보다 더 높아, 남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보다, 군집 1, 2, 4가 더 높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2, 3, 4보다 더 높아,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보다 군집 2와 3이 더 높아, 남북 갈등이 상호 사회문화의 이해와 소통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보다 군집 2와 4가 더 높았으며, 군집 2와 4보다 군집 3이 더 높아, 평화를 위한 수단이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1보다 더 높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4보다 더 높아,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3이 군집 2와 군집 4보다 더 높아,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4보다 더 높아, 군사적 동맹에 기반한 집단적인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2와 군집 3과 군집 4가 각각 군집 1보다 더 높아,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2와 군집 3과 군집 4가 각각 군집 1보다 더 높게, 군집 3이 군집 4보다 더 높아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는 문항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보다, 군집 2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군집 4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전쟁의 위험만 없을 경우에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는 군집 4가 군집 3보다 더 높아, 경제문제를 통일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예: 통일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군집 1이 군집 2, 4보다 더 높아, 통일과 관련된 곳의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군집 1이 군집 3보다 더 높아, 한국의 경우 통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군집 2, 4가 군집 1보다 더 높아,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집 2, 4가 군집 1보다 더 높아, 한국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 경제력이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는 군집 1이 군집 3, 4보다 더 높아, 통일의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는 군집 2가 군집 1보다 더 높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분단 유지에 대해 상관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는 군집 3이 군집 1, 4보다 더 높아, 통일 이후의 상황에 두려워하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힘을 통한 평화 달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 최상형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6문항,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3문항,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3문항, 힘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5문항이 남·북 최상형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과 군집은 <표 IV-25>에 제시되었다.

<표 IV-25> 남북 최상형 성격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요약

	문항	문항별 $M(SD)$	
		남한	북한
전쟁에 대한 태도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3.58 (2.41)	3.34 (3.01)
	우리는 남북 간 전쟁의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4.71 (2.41)	4.46 (2.60)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7.39 (1.73)	6.98 (2.93)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7.53 (1.68)	6.98 (2.99)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7.44 (1.62)	7.00 (3.05)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44 (2.30)	3.63 (3.14)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5.48 (2.25)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이다.		3.69 (2.31)	4.08 (3.29)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7.14 (1.42)	7.01 (2.62)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6.91 (1.44)	7.22 (2.56)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5.31 (2.18)	5.07 (2.94)

	문항	문항별 $M(SD)$	
		남한	북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4.88 (2.12)	5.16 (3.26)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74 (2.17)	5.58 (3.05)
힘을 통한 평화 달성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4.19 (1.95)	4.88 (3.17)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15 (2.16)	5.79 (3.14)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6.76 (1.71)	7.26 (2.62)

전쟁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남북한 최상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형 집단의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음을 나타낸다.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최상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문항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상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두 문항에서 태도에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데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평화보다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한 최상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문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항 그리고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상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세 문항에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남북의 협력 강화가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주민 간 협력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한 최상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항과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상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다섯 문항에서 힘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강한 군사력 유지라는 것에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 통제기구 설치 및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는 것에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평화 실현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 달성 방식에 대한 차이(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힘을 통한 평화 달성,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 평범형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3문항,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1문항,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4문항, 힘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5문항 그리고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2문항이 남·북 평범형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평범형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과 군집은 <표 IV-26>에 제시되었다.

<표 IV-26> 남북 평범형 성격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요약

문항		문항별 $M(SD)$	
		남한	북한
전쟁에 대한 태도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6.43 (1.65)	6.19 (2.93)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6.37 (1.58)	6.77 (2.77)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6.36 (1.61)	6.91 (2.67)
평화에 대한 태도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6.02 (1.32)	5.92 (2.75)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6.51 (1.28)	6.95 (2.22)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5.39 (1.62)	5.41 (2.50)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4.84 (1.78)	5.05 (2.24)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81 (1.30)	5.99 (2.59)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5.70 (1.80)	5.37 (2.80)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5.47 (1.55)	5.44 (2.55)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5.39 (1.65)	5.91 (2.46)

	문항	문항별 $M(SD)$	
		남한	북한
통일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5.35 (1.47)	5.41 (2.49)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40 (1.59)	5.89 (2.50)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3.51 (.90)	3.52 (1.31)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30 (.89)	3.44 (1.26)

전쟁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남북한 평범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문항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도 전쟁의 재앙을 능가할 수 없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범형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세 문항에서 태도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싸움이라도 생각하며 남북 간 전쟁의 어떤 이익보다 재앙이 더 크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평범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범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문항에서 태도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한 평범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문항

과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 목적이므로 수단이 다소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범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네 문항에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남북의 협력 강화가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갈등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 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수단이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한 평범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항과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남북이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력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범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다섯 문항에서 힘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강한 군사력 유지라는 것에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을 감축하고 공동의 군사 통제기구 설치 및 평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는 방

법에 대해서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에서 남북한 평범형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문항과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범형 집단 성격 프로파일 형태를 보이는 두 집단이 위 두 문항에서 통일을 통한 평화 달성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문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되더라도 본인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평화인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성격 유형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모든 성격 유형에서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평범형 성격집단을 대상으로 가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때때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모든 유형의 성격집단에서 모두 보통 수준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평화교육 표적 집단으로 혼란형 성격집단을 삼을 수 있다. “삶에서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교육 표적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혼란형 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이 항목의 점수가 높은 혼란형 성격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개선 교육은 성취형 성격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에 전쟁

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표적 집단으로 혼란형 성격이 적절할 수 있다.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의 경우, “군사적 동맹에 기반 한 집단적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집단은 최상형 성격집단일 수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적절한 집단은 혼란형 성격집단일 수 있다. 또한 남한주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 군집 중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집단이 전쟁과 평화 및 평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문항이 많았다. 이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인적 변인 때문이 아니라 성격 5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라 전쟁 및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성격유형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평화 인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성격유형집단에 따른 평화 인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평화인식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성격유형에 따른 평화인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소요 시간,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북관계 및 협력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평화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협상역량을 개발할 때 성격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격이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평화, 전쟁, 통일의식에 주는 영향

현인에(이화여자대학교)

핵심 요약

주요결과

- 북한이탈주민은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남한주민보다 높음. 그러나 남한 거주기간과 교육은 이를 약화시킴.
-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높고 화합의식은 약함.
-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은 남북문제 해결에서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고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수단을 선호했음.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북관계 인식에서 부의 경향을 나타냈음.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남한주민보다 낮고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남한주민보다 높았음. 평화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 선호도에서는 남한주민과 큰 차이가 없었음.

정책적 시사점

- 북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높을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해결에서 주요한 장애가 될 것임.
- 북한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통일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나타냄. 그러나 군사적 방법을 더 선호함.
- 북한은 내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이나 실천에서는 남한과 협력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짐. 따라서 북한의 이해관계를 자극하고 그를 이용하여 다른 문제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느리지만 남북관계가 진척됨에 따라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이 약화될 것임.

요약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전쟁과 평화,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한주민과 비교 고찰해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 북한 인식과 남북관계 인식, 전쟁과 평화, 통일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만들어 측정하고 남한주민과 비교했다.

기초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았다. 그런데 사회지배경향성과 상반되는 평등주의 의식도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의 영향과 함께 남한 정착 요구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인식과 남북관계 인식이 남한주민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전쟁과 평화의식도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인식에서도 남한주민보다 전쟁 선호도가 더 높고 평화에 대한 요구는 더 낮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접해서는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북한을 경제/적대 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남한주민보다 낮았고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남한주민보다 높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평화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을 선호하는 정도도 남한주민과 비슷했다.

심층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북한과 남북관계 인식, 전쟁과 평화, 통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심층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남북 갈등 원인을 북한에서 찾는 정도가 높았고 북한과 화합하려는 의식이 낮았다. 둘째,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와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강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통일을 추진하려는 요구와 강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통일을 보류하려는 요구와 강한 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남북문제 해결에서 전쟁의 필요성과 군사적 수단을 방도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평화의 필요성과 평화적 방법 선호에는 영향이 없거나 부의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사회지배경향성은 우익권위주의 성향보다 낮지만 전쟁의 필요성과 군사적 수단 선호에는 정의 영향을, 평화적 방법 선호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찾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다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성향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북한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높은 통일 추진 요구와 연관되므로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북한은 내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남한과 협력을 지향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실천에서는 북한의 이해관계를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이에 따른 문제들도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북한의 변화와 세대교체 과정을 통해 약화될 것이다.

가. 연구 배경

최근 남북, 북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과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담당자인 남북주민의 평화의식은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남한주민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평화의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난 기간 북한에서는 평화에 대한 논의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수정주의 사상으로 낙인찍고 전쟁의식만 일면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계급사회에서는 사회의 기본 계급들 사이의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노동자 농민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이다.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피착취계급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사회제도는 청산되고 새로운 진보적 사회제도가 서게 된다.

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무장력이며 전쟁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전쟁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선진계급이나 집단이 벌이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혁명가들은 정의의 전쟁은 지지하지만 부정의의 전쟁은 반대하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제국주의자들이 그것을 강요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 현시대에 와서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에 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제국주의 평화전략은 뒤집어 놓은 전쟁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들이 감히 침공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²⁾

전쟁과 평화에 관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 간 평화 실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북한주민의 전쟁과 평화, 통일에 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예측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독

262)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5)의 '전쟁', '평화적 공존', '계급투쟁'의 정의.

재체제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세뇌와 조직적 통제를 체제 유지의 기본수단으로 하여왔다. 북한주민은 어린 시기부터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선동수단을 통해 수령관 집단주의 계급의식으로 꾸준히 세뇌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조직 생활을 통해 이를 체질화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이 기본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북한주민의 평화와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민자의 정치적 재사회화 이론 중의 하나인 저항 이론에 의하면 정치적 경향은 삶의 이른 시기에 형성되며 일단 형성되면 안정되어서 변화에 저항하므로 잘 변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어 떠난 사람일수록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에서의 재사회화는 강한 리더십이나 소수자의 인권 부정과 같은 러시아 이민자들의 정치 문화의 기본 속성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⁶³⁾ 북한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근본적인 가치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권위주의적 정치 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고찰하면서 북한에서 체득한 권위주의적 사고가 북한이탈주민의 보수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은 북한주민의 의식과 적지 않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의 특징과 그것이 평화와 전쟁, 통일 의식과 태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북한주민의 전쟁과 평화의식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263) Michael Philippov and Anna Knafelman, "Old Values in the New Homeland: Political Attitudes of FSU Immigrants in Israel," *Israel Affairs*, vol. 17, no. 1 (2011), p. 54.

나. 기초 분석

(1)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성향

(가) 우익권위주의 성향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의 평균값을 구하고 비교했다. 그에 의하면 평균값에서 북한이탈주민은 4.54, 남한주민은 3.99로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성향이 유의미하게($t=17.103^{***}$) 높았다(<표 IV-27>).

<표 IV-2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우익권위주의 성향 비교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4.54	3.99	.58	.46	17.103	.000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익권위주의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했다. 우익권위주의 문항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대부분 탈락하고 요인 분석(0.4 이상)과 신뢰도 분석(.647)을 통하여 선별된 문항 4개만의 평균값을 구하고 우익권위주의로 명명했다. 선별된 문항은 “C. 전통적 방식과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E.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는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G.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역겨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신문을 검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I.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세워온 장식을 고려한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세대가

이룩한 우리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이다. 문항 수는 적지만 우익권위주의의 주요 특징인 관습주의, 권위적 공격성, 그리고 권위적 복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우익권위주의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데 의하면 연령(9.609^{***})이 높을수록, 여자(2.605^{*})가 남자보다, 남한 거주기간(-3.616^{***})이 짧고 학력(-2.472^{*})이 낮을수록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8〉). 그러나 남한주민은 연령(5.049^{***})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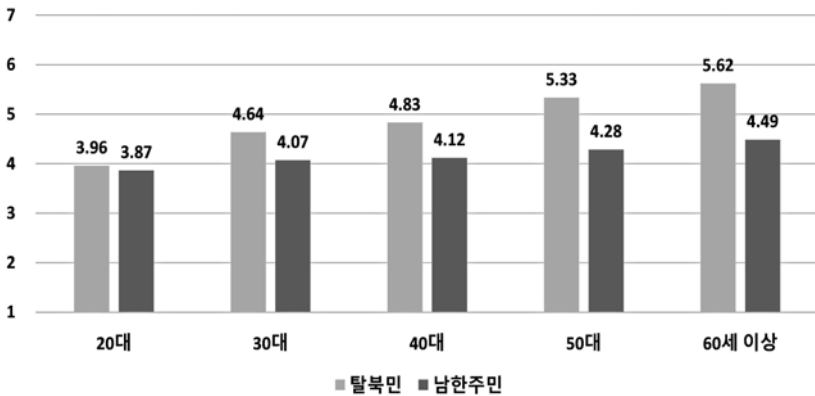
〈표 IV-28〉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상수)	.354		8.978	.000		(상수)	.238		16.031	.000	
성별	.126	.117	2.605	.010	.978	성별	.059	.015	0.478	.633	.979
연령	.004	.438	9.609	.000	.949	연령	.002	.186	5.049	.000	.700
최종 학력	.066	-.112	-2.472	.014	.963	최종 학력	.053	-.068	-1.827	.068	.688
남한 거주 기간	.013	-.165	-3.616	.000	.945						
R=.470, R2=.221, 수정된 R2=.213, F=28.060, 유의확률=.000						R=.232, R2=.054, 수정된 R2=.051, F=18.881, 유의확률=.00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연령대별 우익권위주의의 변화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20대와 60대의 차이(1.66)는 남한주민의 차이(0.62)보다 배 이상으로 크다. 따라서 20대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차이(0.09)가 크지 않았으나 점차 차이가 커져 60대 이상에서는 차이

(1,134)가 벌어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체득한 우익권위주의적 성향이 남한에 와서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익권위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하는 정도는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1> 참조).

<그림 IV-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연령별 우익권위주의 비교



(나) 사회지배경향성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회지배경향성 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해 지배주의와 평등주의 변수를 만들고 평균값을 구했다. 그리고 지배주의와 평등주의 문항(R)을 합쳐 사회지배경향성 변수를 만들었다(공통성=.45, 신뢰도=.7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을 비교한 데 의하면 사회지배경향성의 평균값은 북한이탈주민 3.0, 남한주민 2.88로 북한이탈주민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지배주의와 평등주의 요인으로 분류해서 고찰한 데 의하면 평등주의 값은 북한이탈주민 5.23, 남한주민 4.69로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표 IV-29〉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 비교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	p
	북한이탈주민 (n=400)	남한주민 (n=1000)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사회지배경향성	3.00	2.88	.76	.67	2.608	.009
지배주의	3.23	2.95	.91	.79	5.245	.000
평등주의	5.23	4.69	.97	.78	10.00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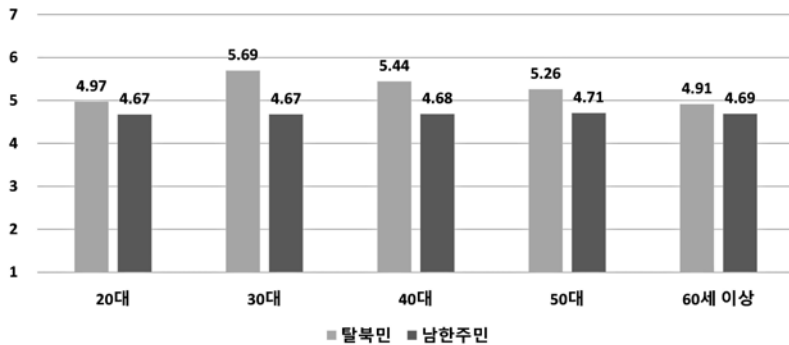
사회주의는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는 주민들이 생산수단과 국가 주권의 소유자로 평등한 사회라고 강조해왔으며 교육·보건 등에서 사회적 시책을 통해 주민들의 평등을 보장해왔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은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남한주민보다 더 낮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평등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동유럽 권위주의자들은 좌파적인 경제원칙을 지지하지만 평등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이 좌파적인 원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²⁶⁴⁾

북한이탈주민의 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북한의 평등주의 전통과 연관이 있지만 한편 남한 정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집단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264) Bart Duriez, Alain Van Hiel, and Malgorzata Kossowska,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The Importance of the Sociopolitical Context and of Political Interest and Involvemen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2 (2005), pp. 314~316.

는 각 집단이 동일한 삶의 조건을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와 같이 평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항이므로 정착자의 입장에서 높은 동의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평등주의 값이 취업 장벽에 많이 부딪히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연령별 평등주의 성향 비교



사회지배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데 의하면 연령($t=3.928^{***}$)은 사회지배경향성을 강화했고 학력($t=-3.430^{**}$)은 사회지배경향성을 약화시켰다(〈표 IV-30〉). 그러나 남한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남한주민과 달리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북한에서 형성된 성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30〉 사회지배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상수)	0.235		12.391	0.000	
성별	0.084	-0.036	-0.726	0.469	.912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연령	0,003	0,196	3,928	0,000	.898
남북 최종학력	0,044	-0,170	-3,430	0,001	.900
남한 거주기간	0,009	0,015	0,303	0,762	.813

R=.248, R2=.062, 수정된 R2=.052, F=6.492, p=.000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갈등 원인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대부분 북한에 있다”,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을 해하려 하는 존재들이다” 문항들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갈등원인 변수를 만들었다(신뢰도 .831).

그리고 북한을 화합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 화합에 관한 문항들 가운데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묶인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 세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고 화합 변수를 만들었다(공통성 .441, 신뢰도 .546).

분석에 의하면 남·북한 갈등의 책임을 북한에서 찾는 정도는 북한이탈주민(5.4)이 남한주민(4.6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북한에 대한 화합의식은 북한이탈주민(3.6)이 남한주민(4.21)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높은 것은 그곳을 등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서 실제 폭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 의하

면 러시아 이민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 받은 고통이 팔레스타인 독재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²⁶⁵⁾

〈표 IV-3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북한 인식 비교

	평균값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측)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남북 갈등 원인	5.40	4.69	1.58	1.18	8.125	0.000
북한화합	3.60	4.21	1.44	0.91	-7.936	0.000

한편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보다 북한을 지원 대상, 협력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더 낮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것이다(〈표 IV-3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북한 지도부는 나쁘지만 북한주민들은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이다. 북한의 본질에 대한 평가는 지도부 중심,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는 주민 중심으로 기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IV-3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북한 이미지 비교

	평균값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측)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지원 대상	6.55	6.36	3.75	2.60	0.913	0.362
협력 대상	7.94	7.52	3.43	2.19	2.269	0.024
경계 대상	5.51	6.73	3.75	2.32	-6.067	0.000
적대 대상	5.01	6.02	3.74	2.33	-5.041	0.000

265) Kristen Eichensehr, "Soviet Stumbling Block? The Impact of Russian Immigration on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Michig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2003), p. 101.

(나) 남북관계 인식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조사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제로섬 관계 인식 변수를 만들었다.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는 북한이탈주민(4.65), 남한주민(4.10)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았다. 그리고 남북 분단과 갈등이 남북에 준 피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항을 각각 남한 피해의식, 공동 피해의식 문항으로 만들고 남한 피해의식과 공동 피해의식(R)을 합쳐서 경쟁적 피해자 의식 변수를 만들었다.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은 북한이탈주민(4.70)이 남한주민(4.2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공동 피해라는 의식은 북한이탈주민(4.61)이 남한주민(5.51)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므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은 북한이탈주민(4.05)이 남한주민(3.3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IV-33>).

<표 IV-33> 북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

	평균값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측)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제로섬 관계	4.65	4.10	1.68	1.14	5.987	0.000
경쟁적 피해자 의식	4.05	3.35	1.17	0.87	10.780	0.000
남한피해 의식	4.70	4.22	1.47	1.28	5.756	0.000
공동피해 의식	4.61	5.51	2.31	1.00	-7.578	0.000

(3) 전쟁과 평화,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한반도에서 전쟁의 필요성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았다. 그를 위하여 전쟁 필요성에 관한 문항 [(A, F)+R(D, C, E)]과 평화의 중요성에 관한 문항[(A, D, E)+R(B, C, F)]을 묶어서 전쟁필요, 평화중요 변수를 만들었다. 두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데 의하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하게 차이났다.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7.16)이 남한주민(7.50)보다 더 낮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6.51)이 남한주민(5.59)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4>). 북한이탈주민은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더 강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전쟁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평화를 덜 선호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는 그와 반대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 노력에 대한 인식 문항을 요인 분석으로 묶어서 [(A, B, O)+R(E, C, F)] 평화적 방법 변수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대한 인식 문항을 요인 분석으로 묶어서 [(A, C, E)+R(D, B)] 군사적 방법 변수를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적 노력과 군사력 강화에서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34>).

<표 IV-34>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 비교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양측)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전쟁 필요	7.16	7.50	3.59	2.80	-1.711	0.088
평화 중요	6.51	5.69	1.43	0.92	10.555	0.000
군사적 방법	4.88	4.89	1.61	0.97	-1.48	0.882
평화적 방법	5.87	5.79	1.43	0.91	1.115	0.22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일 의지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 의지가 높았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통일을 적극 추진하자는 문항(B, M, C, D, H)들과 적절하게 봐가면서 하자는 문항(F, E, K, A),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J, N)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각각 통일 추진, 통일 보류,

통일 포기 변수로 만들고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고찰한 데 의하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추진 의지가 남한주민보다 높고 통일보류 의사는 낮았다. 그런데 통일 포기 의사는 남한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35>).

<표 IV-3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일의지 비교

	평균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측)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통일 추진	4.51	3.30	0.54	0.64	36.065	0.000
통일 보류	2.54	3.34	1.01	0.66	-14.685	0.000
통일 포기	3.25	3.07	1.02	0.75	3.212	0.001

다. 심층 분석

(1) 우익권위주의와 전쟁·평화·통일의식과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북한, 남북관계 인식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그에 의하면 우익권위주의는 남북 갈등 원인을 북한에서 찾고 남북화해 의식을 강화하며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피해 인식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분단과 전쟁은 남북공동의 피해라는 인식에는 부의 영향을 남북화해 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6>).

〈표 IV-36〉 우익권위주의와 북한 남북관계 인식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표준화 오류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표준화 오류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상수)	0.427		4.295	0.000		0.319		7.020	0.000	
갈등 원인	0.046	0.140	2.432	0.015	0.617	0.029	0.168	4.644	0.000	0.586
화해 의식	0.061	0.190	3.579	0.000	0.726	0.045	0.060	1.707	0.088	0.627
제로섬	0.044	0.139	2.387	0.017	0.599	0.034	0.327	8.041	0.000	0.462
전쟁 남한피해	0.044	0.233	4.542	0.000	0.776	0.026	0.094	2.695	0.007	0.625
전쟁 공동피해	0.028	0.159	3.145	0.002	0.795	0.027	-0.077	-2.703	0.007	0.947
	R=.441, R2=0.195, 수정된 R2=0.185, F=19.075, 유의확률=.000					R=.491, R2=0.241, 수정된 R2=0.237, F=63.020, 유의확률=.000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한반도에서 전쟁, 평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우익권위주의는 한반도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t=2.751^{**}$)했고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약화($t=-3189^{**}$)시켰다.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평화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평화적 방법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군사적 방법은 강화($t=4.980$)했다.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평화적 방법은 약화했고 군사적 방법은 강화했다(〈표 IV-37〉). 전쟁·평화인식과 방법에 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의 영향은 남한주민보다 약했다. 그 원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설문조사 문항이 낮았던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비교하기 위해 같은 문항을 택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따라서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담는 데 제한이 있는 것 같다.

〈표 IV-37〉 우익권위주의가 전쟁 평화인식과 방법에 주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표준편차	베타	t	유의확률	표준편차	베타	t	유의확률
전쟁 필요	(상수)	0.742		6.969	0.000	0.81		42.073	0.000
	우익권위주의	0.142	0.137	2.751	0.006	0.142	0.309	10.249	0.000
	R=.137, R2=0.019, 수정된 R2=0.016 F=7.566, 유의확률=.006c					R=.309, R2=0.095, 수정된 R2=0.094 F=105.474, 유의확률=.000			
평화 중요	(상수)	0.590		25.160	0.000	0.184		28.953	0.000
	우익권위주의	0.113	-0.158	-3.189	0.002	0.032	-0.196	-6.304	0.000
	R=.158, R2=0.025, 수정된 R2=0.022, F=10.169, 유의확률=.002c					R=.196, R2=0.038, 수정된 R2=0.037, F=39.090, 유의확률=.000c			
평화적 방법	(상수)	0.298		19.887	0.000	0.127		53.682	0.000
	우익권위주의	0.057	-0.009	-0.177	0.859	0.029	-0.250	-8.145	0.000
						R=.250 R2=0.062, 수정된 R2=0.051 F=66.340, 유의확률=.000			
군사적 방법	(상수)	0.326		10.118	0.000	0.138		29.697	0.000
	우익권위주의	0.062	0.242	4.980	0.000	0.032	0.183	5.894	0.000
	R=.242, R2=0.059, 수정된 R2=0.056, F=24.805, 유의확률=.000					R=.183, R2=0.034, 수정된 R2=0.033, F=34.739, 유의확률=.000c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통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데 의하면 통일추진($t=5.032^{***}$) > 통일보류($t=4.550^{***}$) > 통일 포기($t=3.293^*$)의 순으로 통일의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통일포기($t=7.659^{***}$) > 통일보류($t=2.320^*$)로 통일의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통일추진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의지의 강화와 연관되지만 남한의 우익권위주의는 통일 지양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IV-38〉).

〈표 IV-38〉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통일이지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0,576		2,051	0,041	0,313		9,081	0,000
통일 추진	0,112	0,241	5,032	0,000	0,050	0,008	0,237	0,812
통일 보류	0,062	0,227	4,550	0,000	0,048	0,078	2,320	0,021
통일 포기	0,060	0,161	3,293	0,001	0,040	0,243	7,659	0,000
	R=.362b, R2=0.131, 수정된 R2=0.125 F=19,923, 유의확률=.000c				R=.262b, R2=0.069, 수정된 R2=0.066 F=25,528, 유의확률=.000c			

(2) 사회지배경향성과 전쟁·평화·통일 의식과 태도

사회지배경향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과 평화 선호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은 평화가 우선이며 평화적 방법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부의 영향($t=-4.720^{***}$), ($t=-2.585^{***}$)을, 전쟁이 필요하며 군사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태도에 정의 영향($t=4.373^{***}$) ($t=3.98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도 북한이탈주민과 방향이 같았으나 양적관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문조사 문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39〉).

〈표 IV-3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배경향성이 평화와 전쟁에 주는 영향

종속변수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전쟁 필요	(상수)	0,716		5,751	0,000	0,351		6,160	0,000
	사회지배경향성	0,232	0,214	4,373	0,000	0,118	0,443	15,623	0,000
		R=.214b, R2=0.046, 수정된 R2=0.043 F=19,119, 유의확률=.000c				R=.443b, R2=0.197, 수정된 R2=0.196 F=244,084, 유의확률=.000c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종속변수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평화 우선	(상수)	0.284		27.455	0.000	0.120		58.637	0.000
	사회지배 경향성	0.092	-0.230	-4.720	0.000	0.041	-0.343	-11.529	0.000
	R=.230, R2=0.053, 수정된 R2 =0.051 F=22.282, 유의확률=.000c					R=.343, R2=0.118, 수정된 R2 =0.117 F=132.910, 유의확률=.000c			
평화적 방법	(상수)	0.289		22.821	0.000	0.114		65.611	0.000
	사회지배 경향성	0.094	-0.129	-2.585	0.010	0.038	-0.434	-15.235	0.000
	R=.129b, R2=0.017, 수정된 R2 =0.014 F=6.683, 유의확률=.000					R=.434, R2=0.189, 수정된 R2 =0.188 F=232.099, 유의확률=.000			
군사적 방법	(상수)	0.323		11.253	0.000	0.130		28.483	0.000
	사회지배 경향성	0.104	0.196	3.986	0.000	0.044	0.281	9.251	0.000
	R=.196b, R2=0.038, 수정된 R2 =0.036 F=15.889, 유의확률=.000c					R=.281, R2=0.079, 수정된 R2 =0.078 F=85.583, 유의확률=.000c			

라. 소결

위의 분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 체류한 기간이 오래므로 북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갈등의 원인을 북한에서 찾고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며 북한에 대한 용서를 남한주민보다 못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남한주민보다 더 강했고 남북문제 해결에서 전쟁을 더 지양하고 평화적 방법을 선호하는 데서 남한주민과 차이가 없었으며 통일 추진 의지가 더 높았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평화에는 부의 영향을, 전쟁 선호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가 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남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통일을 보류하는 경향과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북한주민의 통일 의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전쟁과 평화, 통일 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통일문제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보다 북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더 높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남북관계와 북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처럼 북한주민의 우익권위주의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쟁이 더 결정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진척에서 이러한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통일을 적극 추진하려는 경향과 관계가 높다. 남한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보이는 통일 의지보다 북한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보이는 통일 의지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적으로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 남한주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비록 북한주민들과 간부들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아도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중심으로 다른 문제도 곁들여 풀어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는 남한 거주연한이 길어지면서 약화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적은 사람은 빨리 변화한다. 이는 남북교류가 진척되고 세대가 바뀔에 따라 북한의 우익권위주의도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V

.....

결론

박주화 (통일연구원)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 지향성,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심리적 정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 연구를 바탕으로 ‘분단의 심리’를 탐색하고, ‘분단의 심리’의 전환을 위해 ‘화해(reconciliation)의 심리’와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틀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심리’를 탐색하였다.

고질화된 분쟁(intractable conflict)은 분쟁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승리하지 못했거나 평화적 합의를 위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을 지칭한다. 첫째, 고질화된 분쟁은 장기적(protracted)이다. 둘째, 고질화된 분쟁은 폭력적(violent)이다. 셋째, 고질화된 분쟁은 총체적(total)이다. 넷째, 고질화된 분쟁은 개인과 집단의 삶에 있어 중심적(central)인 역할을 한다. 다섯째, 고질화된 분쟁은 제로섬 관계(zero-sum relation)이다. 여섯째, 고질화된 분쟁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irresolvable) 분쟁이다. 마지막으로 고질화된 분쟁은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demand extensive investment) 분쟁이다.

고질화된 분쟁에서 사는 개인들은 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종의 심리적 적응기제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기제의 특징, 즉 고질화된 분쟁의 심리는 내집단의 목표가 정당하다는 신념,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보에 대한 강조,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우월적 의식, 피해자 의식, 적대 집단의 인간성을 부정, 국가에 대한 애정, 충성, 희생을 강조, 집단의 결속을 강조, 집단의 최종적 목표로서 평화를 설정하는 것이다. 고질화된 갈등 하에서의 평화는 일상과 유리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평화이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성취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고질화된 분쟁의 해결의 핵심은 화해이다. 화해는 정치적, 제도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 이후 과거 적대적 집단 간 새로운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평화적 관계의 지속에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적대적 집단의 지위와 인간성,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적대 집단이 국가라면 상대국의 존재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 즉 국가로서의 지위, 자주권,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내집단에 대해서도 자신의 집단이 피해자이고 우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태도 변화는 집단 간 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공통의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적 관계에 대한 도덕가치,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덕적 가치를 생성해야 한다. 적대 국가의 실존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집단의 피해자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제로섬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를 직시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내러티브, 신화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진실 규명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경험과 시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공공 보건, 환경, 의사소통, 교육, 과학,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양측의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상호 협력은 각각의 사회적 필요와 목표, 평등과 호혜(equality and reciprocity)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고질화된 분쟁 사회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화 지향성과 화해를

위한 심리적 지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이 평화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본 단어연합과제의 분석 결과와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인들이 고질적인 분쟁 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비둘기가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이 평화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였다. 남한주민들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 개인의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관계, 사회적 질서, 마음의 평온, 관계, 폭력, 폭력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관계, 긍정적 정서, 공공 권리, 물리적 안정, 상징, 폭력의 부재, 폭력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평화는 비둘기라는 인식은 우리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것이다. 평화를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은 분쟁과 갈등이 고질화, 일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본 연구는 평화에 대한 표상과 더불어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역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평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소 놀라운 결과는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평화 지향성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평화를 피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상한다는 단어연합과제 결과를 고려한다면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평화

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평화에 대한 태도를 ‘평화맹’이라고 지칭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한반도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심리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를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 지표인 제로섬 관계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강했다. 남북관계에서 누가 더 피해자인가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주민이 더 큰 피해자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화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아직까지는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한 인식 변화, 나에 대한 인식 변화,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준점으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화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격, 타인 지향적인 정서와 불행한 사람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 그리고 수직적 관계, 권력에 의한 강제적 문제 해결 경향성, 관용에 대한 저항 경향성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평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신경증이 낮고, 우호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평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방성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아가 공감적 관심이 높고 우익권위주의가 낮을수록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적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공감적 관심과 우익권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갖는 효과가 공감적 관심에 따라 달라졌다. 공감적 관심이 낮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낮아졌지만, 공감적 관심이 높은 개인은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외향성, 우호성, 그리고 개방성의 예측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감적 관심이 낮을수록,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전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우익권위주의와 전쟁에 대한 태도는 성실성에 의해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성이 낮을 경우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성실성이 높을 경우 우익권위주의가 높아짐에 전쟁에 대한 태도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성이 높은 개인들은 성실성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여, 전쟁에 대해서 대체로 비우호적이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사회지배경향성),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정도, 북한에 대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군사력 또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는데, 북한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클수록, 또는 남북관계에서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이용하여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더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길수록,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낮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성과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었는데,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 낮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강하게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제적 조화와 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협력을 통한 방식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와 남북화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문화적 지향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남북화해 태도와 행동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의 남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인 반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남북화해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화해 행동의도도 높았다. 셋째,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남북화해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한 정체성이 불확실할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강했으며,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우세할수록, 그리고 독립적 자기개념이 우세할수록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개념이 조합되었을 때 남북화해 태도가 긍정적이고, 화해 행동의도가 높았다.

넷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평

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성격유형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분단 유지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같은 성격유형이라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가 관찰된 것은 출신 지역과 성격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의 특징과 그것이 평화와 전쟁 통일의식과 태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사회지배경향성의 하위 지표인 평등주의는 남한주민보다 높았다. 이는 북한식 평등주의 교육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학력, 특히 북한에서의 학력, 성별, 남한 거주기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질화된 분쟁 이론을 고찰하고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질화된 분쟁 개념에 기반한 평화 담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질화된 분쟁이 말하는 평화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다. 고질화된 분쟁 속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과 같은 기존의 평화 담론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적극적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평화맹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평화를 이해하는 폭이 좁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평화를 남북관계에 투영하여 생각해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대부분이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의식에 기반을 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생각해야만 하는(should) 평화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의 평화인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평화라는 단어를 통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주민들이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즉 소극적 평화에 더 민감한 것은 북한의 동원체제가 주민들에게 체화시킨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동원의 문화가 지배적일 때가 있었지만,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평화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남한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 담론과 관련된 또 다른 함의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 남북화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성향, 가치, 우익권위주의, 남한 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성격까지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선천적 기질이라고 여겨지는 성격조차도 평화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소 과장하자면 평화인식 조차도 선천적인 것인가? 평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평화 담론의 폭과 깊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평화 담론의 활성화는 보다 효과적인 평화교육으로 귀결될 것이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화관은 같아야 하는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적대의

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남북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교육일 것이다. 이를 확장하면 통일교육, 평화교육도 모두가 유사한 생각,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전된 인식의 체계를 존중하는 평화문화와 평화이해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단순히 교과 과정의 개편 혹은 증편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유토피아적, 상징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다. 평화교육의 기본적 가정은 ① 갈등과 폭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② 갈등과 폭력을 전환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은 분단과 6·25 전쟁이 야기한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한국사회가 평화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갈등과 폭력에 대한 교육이다. 갈등과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화교육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인식이 장기간에 걸친 분쟁과 폭력, 즉 고질적인 분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평화롭지 않지만 평화롭다고 인식하는 일종의 자기기만(self-deception)의 사회에서 평화교육은 고통스럽지만 자기 노출(self-disclosure)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분쟁을 넘어 극히 고질적인 분쟁 사회인 한국의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쟁과 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평화의 편익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

가 없다. 현재 한국 평화교육의 과제는 한국사회가 갈등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야 한다.

상징으로서의 평화가 생활로서의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우리 삶에 내재된,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분단의 폭력들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이다. 평화교육이 자칫 불편하고 거북한 교육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남북의 화해, 용서, 경쟁적 피해자 의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제로섬 인식은 분단의 폭력과 갈등이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영역들이다.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의 원인, 그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과 폭력의 구조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남북 간의 합의와 경제 협력도 한국의 손해로 인식되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윈-윈(win-win)합의와 경제적 협력 속에서 북한의 이익은 한국의 손해로 인식되며 이는 한국의 이익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제로섬 인식은 일반적으로 '악마화'의 소산이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용인하고 당연시했던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고찰과 반성이 없는 한 남북기본합의서 1장 1조가 규정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평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평화교육은 단순히 남북 공존·공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남북의 공존·공영이 한반도 평화라는 정당성을 강변해서도 안 된다. 제로섬 인식이라는 폭력적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상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로섬 인식의 근원과 그 결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직시가 평화교육의 시작인 것이다. 제로섬 인식이 아닌 윈-윈 인식의 사

례들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 이후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함의는 평화교육은 안보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군사력 사용을 통한 평화 유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고려한다면 우리 국민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의 대체 교육이 아니다.²⁶⁶⁾ 오히려 평화교육은 안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군사력은 무엇인지,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군비경쟁의 속성에 대해 열린 토론을 요청한다. 동시에 군축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평화 담론은 안보 담론과 병행되어야 한다. 적정 국방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안보 방향 및 담론에 관한 국민설득 노력 및 공감대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안보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비밀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 학자를 국방 분야 분석 및 연구에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서 개방된 분위기에서 국방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솔직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66) 이언 해리스·메리 모리스, 『평화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pp. 56~57, pp. 110~113.

평화교육과 관련한 세 번째 함의는 평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대상은 20대와 30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였다.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근거는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혹은 인식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평화교육은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사회 전반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전생애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평화 담론을 형성·확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통일·평화교육센터의 설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²⁶⁷⁾ 통일·평화교육센터는 한반도 평화 담론과 평화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화 등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의 연관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 담론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평화교육은 그 기반이 취약하다. 정부, 학교교육, 시민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다양성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관성의 부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평화교육의 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다.

평화교육의 핵심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통일·평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267) 박광기 외, 『한반도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54.

의사소통 체계 속에서 평화교육 행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개정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9월 14일 시행)에 따라 공무원 통일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기존의 학교 중심의 통일교육이 성인 대상 교육으로 확장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이수할 수 있는 평화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을 이수한 시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통일·평화교육의 제도적 확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교육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교육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과 더불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평화교육 이론 및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 할 것이다. 통일·평화 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주화·이민규·조원빈.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이언 해리스·메리 모리스 지음. 박정원 옮김. 『평화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3.

이호재·오택섭·최상용·안문석.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Azar, Edward E.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s: Theory and Cases*. Hampshire: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Barash, David P. and Charles P.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8.

Bar-Tal, Daniel. "Collective Memory of Physical Violence: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Violence." In *The Role of Memory in Ethnic Conflict*, edited by Ed Cairns and Mícheál D. Ro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_____. "Reconciliation as a Foundation of Culture of Peace." In *Handbook on Building Cultures of Peace*, edited by Joseph de Rivera. New York: Springer, 2008.

Bar-Tal, Danie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 _____ .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ar–Tal, Danie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Baumeister, Roy F. and Stephen Hastings. “Distortions of Collective Memory: How Groups Flatter and Deceive Themselves.”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James W. Pennebaker, Dario Paez, and Bernard Rimé. Mahwah, N.J.: Lawrence Erlbaum, 1997.
- Branscombe, Nyla,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and Content*, edited by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Oxford: Blackwell, 1999.
- Brewer, Marilynn. “Intergroup Relations.” In *Advanced Social Psychology: The State of the Science*, edited by Roy F. Baumeister and Eli Fink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Brewer, Marilynn and Masaki Yuki. “Culture and Group Processes.” In *Culture and Group Processes*, edited by Masaki Yuki and Marilynn Bre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Cohen, Jacob, Patricia Cohen, Stephen G. West, and Leona 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3.

Coleman, Peter T. "Conclusion: The Essence of Peace? Toward a Comprehensive and Parsimonious Model of Sustainable Peace." In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edited by Peter T. Coleman and Morton Deutsch. New York: Springer, 2012.

Dovidio, John, Samuel Gaertner, Nurit Shnabel, Tamar Saguy, and James Johnson. "Recategor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Common In-Group Identity and a Dual Identity." In *The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Group Processes, Intergroup Relations, and Helping*, edited by Stefan Stürmer and Mark Snyder. Oxford: Wiley-Blackwell, 2010.

Festinger, Leon.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Fiske, Susan and Shelley Taylor.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3r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2017.

Graziano, William G. and Nancy Eisenberg.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edited by Robert Hogan, John Johnson, and Stephen Briggs. New York: Academic Press, 1997.

Hofstede, Geert. *Cultural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John, Oliver P. and Sanjay Srivastava.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 Lawrence A. Pervin and Oliver P. John. New York: Elsevier, 1999.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Conflict Resolution: A Cognitive Perspective." In *Preference, Belief, and Similarity*, edited by Eldar Shafir. London: MIT Press, 2003.
- Kelman, Herbert C.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edited by Arie Nadler,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Kiss, George R. "An Associative Thesaurus of English: Structural Analysis of a Large Relevance Network," In *Studies in Long Term Memory*, edited by Alan Kennedy and Alan Wilkes. London: Wiley, 1975.
- Kitayama, Shinobu, Sean Duffy, and Yukiko Uchida. "Self as Cultural Mode of Being." In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Shinobu Kitayama and Dov Cohen. New York: Guilford Press, 2010.
-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 Mack, John E. "The Psychodynamics of Victimization among National Groups in Conflict." In *The Psycho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oncepts and Theories*, edited by Vamik D. Volkan, Demetrios A. Julius, and Joseph V. Montvill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0.
- Mnookin, Robert H. and Lee Ross. "Introduction." In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edited by Kenneth Arrow, Robert H. Mnookin, Lee Ross, Amos Tversky, and Robert Wilson. New York: Norton & Company, 1995.

- Nadler, Arie.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ited by Linda R. Trop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_____. "Post Resolution Processes: An Instrumental and Socio-Emotional Routes to Reconciliation." In *Peace Education Worldwide: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edited by Gavriel Salomon and Baruch Nevo.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2.
- Noor, Masi,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ospects for Intergroup Reconciliation: Social-Psychological Predictors of Intergroup Forgiveness and Reparation in Northern Ireland and Chile." In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From Violent Conflict to Peaceful Co-Existence*, edited by Arie Nadler, Thomas Malloy, Jeffrey D. Fish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Normand, Linn. *Demoniz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 Barrier to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 Nowak, Andrzej, Robin R. Vallacher, Lan Bui-Wrzosinska, and Peter T. Coleman. "Attracted to Conflict: A Dynamical Perspective on Malignant Social Relations." In *Understanding Social Change: Political Psychology in Poland*, edited by Agnieszka Golec and Krystyna Skarżyńska. Hauppauge: Nova Science Publishers Ltd, 2006.
- Phares, Jerry.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1988.
-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 Ross, Lee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7, edited by Mark P. Zanna. New York: Academic Press, 1995.
- Rouhana, Nadim N. "Key Issues in Reconciliation: Challenging Traditional Assumptions on Conflict Resolution and Power Dynamics."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 Schwartz, Shalom.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edited by Mark P. Zanna. New York: Academic Press, 1992.
- Tajfel, Henri and John Turner.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Chicago: Nelson-Hall, 1986.
- Triandis, Harry and Michelle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Paul A. M.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E. Tory Higgi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2.
- Tropp, Linda R.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Von Neumann, John and Oskar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 Wan, Ching and Jia Yu. "A Knowledge-based Account of Cultural

Identification.” In *Culture and Group Processes*, edited by Masaki Yuki and Marilynn Bre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 논문

- 강 일·기선완·김성은·정범석·황지희·송지은·김지웅.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8권 5호, 2009.
-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 김범준.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지』. 제16권 1호, 2002.
-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집 1호, 2012.
-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제99권, 2013.
-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제32권 1호, 2011.
-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 남상희. “정치성향의 세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 평화』. 제3권 1호, 2011.
- 변창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통일전략』. 제11권 3호, 2011.
-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 2013.
- 송인경. “도덕과 평화감수성 교육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신 율.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2호, 2010.
- 안미영·김혜숙·안상수.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집단과 지역 집단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2호, 2004.
- 양계민.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 윤광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1호, 2015.
-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 이혜련. “성격 5요인 모형(Big Five)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3호, 2011.
-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

- 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 전우영.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2호, 1999.
-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호, 2014.
- 주봉호. “한반도 분단의 성격: 대내외적 요인.” 『통일전략』. 제10권 3호, 2010.
- 최윤철. “평화통일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연구』. 제39권 2호, 2010.
- 홍기원·이종택.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2호, 2010.
- 황세영·강정석·강혜자.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2017.
- 황지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제17권 1호, 2009.
- Aiken, Nevin T. “Learning to Live Together: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2, 2010.
- Ajzen, Icek.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1.
- Altemeyer, Bo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 Arvey, Richard D., Thomas J. Bouchard, Nancy L. Segal, and Lauren M. Abraham. “Job Satisfaction: Environmental and

- Genetic Compon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4, no. 2. 1989.
- Baron, Reuben M. and Davi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1986.
- Bar–Tal, Danie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 _____.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 Bizumic, Boris, Rune Stubager, Scott Mellon, Nicolas Van der Linden, Ravi Iyer, and Benjamin M. Jones. “On the (In) 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 Blatz, Craig W., Karina Schumann, and Michael Ross. “Government Apologies for Historical Injustices.” *Political Psychology*, vol. 30, no. 2. 2009.
- Blumberg, Herbert H., Ruth Zeligman, Liat Appel, and Shira Tibon–Czopp, “Personality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s Peace and War.”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9, no. 1. 2017.
- Boulding, Kenneth E.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1959.
- Braithwaite, Valeri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Bulletin*, vol. 23, no. 4, 1997.
-
- _____. "The Value Balance Model of Political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89, no. 2, 1998.
- Brewer, Marilyn. "Bringing Culture to the Table." *Research on Managing Groups and Teams*, vol. 9, 2006.
- Brewer, Marilyn and Ya-Ru Chen. "Where(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vol. 114, no 1, 2007.
- Brounéus, Karen. "The Trauma of Truth Telling: Effects of Witnessing in the Rwandan Gacaca Courts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4, no. 3, 2010.
- Capara, Gian V., Claudio Barbaranelli, and Philip G. Zimbardo. "Personality Profiles and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1, 1999.
- Choi, Hoon-Seok, Sunju Cho, Jung-Gil Seo, and Myriam Bechtoldt. "The Joint Impact of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and Independent Self-Representation on Group Creativit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vol. 21, no. 1, 2018.
- Choi, Hoon-Seok and Hyun Euh.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018.
- Cohrs, J. Christopher, Barbara Moschner, Jürgen Maes, and Sven Kielmann.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War."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3, 2005.
- Cross, Susan, Erin Hardin, and Berna Gercek-Swing. "The What,

- How, Why, and Where of Self-Constru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5, no. 2. 2011.
- Davis, Mark. H.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1983.
- Doosje, Bertjan, Nyla Branscombe, Russell Spears, and Antony Manstead.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Group-based Guilt: The Effects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vol. 9, no. 3. 2006.
- Dupuis, Erin C. and Ellen S. Cohn. “A New Scale to Measure War Attitudes: Construction and Predictors.” *Journal of Psychological Arts and Sciences*. 2011.
- Duriez, Bart, Alain Van Hiel, and Malgorzata Kossowska.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The Importance of the Sociopolitical Context and of Political Interest and Involvemen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2. 2005.
- Eckhardt, William and Norman Z. Alcock.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ar/Peace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81. 1970.
- Eichensehr, Kristen. “Soviet Stumbling Block? The Impact of Russian Immigration on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Michig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2003.
- Ekehammar, Bo, Nazar Akrami, Magnus Gylje, and Ingrid Zakrisson. “What Matters Most to Prejudice: Big Five Persona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r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no. 6. 2004.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 for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 Gibson, James L.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2004.
- Goertz, Gary and Paul F. Diehl. "Enduring Rivalries: Theoretical Constructs and Empirical Patter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1993.
- Goldberg, Lewis 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1990.
- Goncalo, Jack and Barry Staw.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Group Creativ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100, no. 1, 2006.
- Graziano, William G., Meara M. Habashi, Brad E. Sheese, and Renée M. Tobin.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 \times 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4, 2007.
- Grossman, Guy, Devorah Manekin, and Dan Miodownik. "The Political Legacies of Combat: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mong Israeli Ex-Combata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9, no. 4, 2015.
-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Kristin E. Henkel, Rob Foels, and Andrew L. Stewart.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 Holsti, Ole R.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among American Leaders."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 Hong, Ying-yi, Michael W. Morris, Chi-yue Chiu, and Verónica Benet-Martínez.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7, 2000.
- Jagodić, Gordana Kuterovac. "Is War a Good or a Bad Thing? The Attitudes of Croatian, Israeli, and Palestinian Children toward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35, no. 6, 2000.
- Jang, Jiwon and Hyung In Park. "Interaction of Demand, Control, and Person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17, no. 3, 2017.
- Jang, Kerry L.,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rn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4, no. 3, 1996.
- Jarymowicz, Maria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 Johnson, Melissa Jean. "Attitudes toward Achieving Peace: A Measur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Peace through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Attitudes with Affective, Coping, Personality, and Gender Correl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0.
- Jex, Steve M., Terry A. Beehr, and Cathlyn K. Roberts. "The Meaning of Occupational Stress Items to Survey Respond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5, 1992.

- Jung, Jiin,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 Kağitçibaşı, Çiğdem.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6, no. 4. 2005.
- Kelman, Herbert C. "The Interdependence of Israeli and Palestinian National Identities: The Role of the Other in Existential Conflic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 _____.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Process and its Vicissitudes: Insights from Attitud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no. 4. 2007.
- Kertzer, Joshua, Kathleen E. Powers, Brian C. Rathbun, and Ravi Iyer.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2014.
- Kriesberg, Louis. "Intractable Conflicts." *Peace Review*. vol. 5, no. 4. 1993.
- Kühnen, Ulrich, Bettina Hannover, and Benjamin Schubert. "The Semantic-Procedural Interface Model of the Self: The Role of Self-Knowledge for Context-Dependent versus Context-Independent Mode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0, no. 3. 2001.
- Maoz, Ifat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5. 2005.
- Markus, Hazel and Shinobu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no. 2. 1991.
- McCrae, Robert R. and Oliver P. John.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vol. 60, no. 2. 1992.
- Millard, Andrew S.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cial-Reunification Feasible?.” *Korea Observer*, vol. 49, no. 2. 2018.
- Miron, Anca, Nyla Branscombe, and Monica Biernat. “Motivated Shifting of Justice Standar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6. 2010.
- Noor, Masi, Rupert Brown, Roberto Gonzalez, Jorge Manzi, and Christopher Alan Lewis. “On Positive Psychological Outcomes: What Helps Groups with a History of Conflict to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no. 6. 2008.
- Noor, Masi, Rupert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 Noor, Masi,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Arie Nadler. “When Suffering Begets Suffering: The Psychology of Competitive Victimhood between Adversarial Groups in Violent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6, no. 4. 2012.
- Oyserman, Daphna.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2, no. 1. 2011.

- Paulhus, Delroy L., Richard W. Robins, Kali H. Trzesniewski, and Jessica L. Tracy.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39, no. 2. 2004.
- Peterson, Bill E., Kimberly A. Smirles, and Phyllis A. Wentworth.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no. 5. 1997.
- Philippov, Michael and Anna Knafelman. "Old Values in the New Homeland: Political Attitudes of FSU Immigrants in Israel." *Israel Affairs*, vol. 17, no. 1. 2011.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2006.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 Roccas, Sonia, Yechiel Klar, and Ido Liviatan.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4. 2006.
- Różycka-Tran, Joanna,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 Shnabel, Nurit,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Shnabel, Nurit, Arie Nadler, Johannes Ullrich, John F. Dovidio, and Dganit Carmi.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8. 2009.

Sidanius, Jim, Shana Levin, James Liu, and Felicia Pratt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ti-Egalitarianism and the Political Psychology of Gender: An Extension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0. 2000.

Stagner, Ross. “Some Factors Related to Attitude toward War, 1938.”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6, no. 1. 1942.

Staub, Ervin. “Reconciliation after Genocide, Mass Killing, or Intractable Conflict: Understanding the Roots of Violence, Psychological Recovery, and Steps toward a General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6. 2006.

Tajfel, Henri.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13. 1974.

Tam, Tania, Miles Hewstone, Jared B. Kenworthy, Ed Cairns, Claudia Marinetti, Leo Geddes, and Brian Parkinson. “Postconflict Reconciliation: Intergroup Forgiveness and Implicit Bias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4, no. 2. 2008.

- Tessler, Mark and Jodi Nachtwey. "Islam and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Conflict: Evidence from Survey Research in the Arab Worl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5. 1998.
- Vail, Kenneth E. and Matt Motyl. "Support for Diplomacy: Peacemaking and Militarism as a Unidimensional Correlate of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Attitudes." *Peace and Conflict*, vol. 16. 2010.
- Van der Linden, Nicolas, Boris Bizumic, Rune Stubager, and Scott Mellon.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3. 2011.
- Van der Linden, Nicolas, Christophe Leys, Olivier Klein, and Pierre Bouchat. "Ar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idence to the Contrary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Scale." *PLOS ONE*, vol. 12, no. 9. 2017.
- Wagner, John. "Utilitarian and Ontological Variations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4. 2002.
- Zakrisson, Ingrid.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3. 기타자료

『연합뉴스』.

『유네스코뉴스』.

『조선대백과사전』.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